

인권정보자료실  
R1.1.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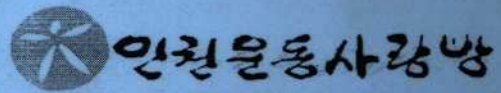
# 인권하루소식

(제2367호 ~ 제2485호)

합본 21호  
(2003년 7월 ~ 12월)

인권하루소식  
(제2367호 ~ 제2485호)

합본 21호  
(2003년 7월 ~ 1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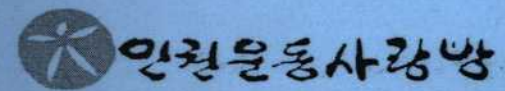


인권운동사랑방

110-522 서울시 종로구 명륜2가 8-29 3층  
전화 02-741-5363 팩스 02-741-5364



인권정보자료실  
R1.1.21



인권운동사랑방



· <주간인권흐름> (2003년 12월 15일 ~ 12월 22일)

**제2483호(2003. 12. 24)**

/256

- 1면 · 법무부 정벌· 계구 개선안 한계 많다 - 연속징벌· 가족수감 폐지...민간측 의견 제대로 반영 안해  
· 과병동의안, 끝내 국무회의 통과 - 비상국민행동, "국민 의사에 반하는 반민주적 결정" 비난
- 2면 ·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 거부권도 인권 - 영석고, "경례 거부자는 안 받는다"...헌법 기본권 우선돼야
- 3면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④ - 부안대책위 자원활동가 이경미 씨  
: "부안의 싸움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어요"

**제2484호(2003. 12. 25)**

/259

- 1면 · 인권활동가 30명 시위 도중 연행 - 국회 안 "4대 인권사안 통과 반대" 시위...밤늦게 모두 풀려나  
· 경찰조사에서 지문날인 거부하고도 풀려났다
- 2면 · <특집> '2003 겨울터널'을 지나는 사람들 ⑤ <끝> - 전국실직노숙자대책종교시민단체협의회 정은일 사무국장 : "복지대책은 걸음마 수준이고 편견의 벽은 강고합니다"

**제2485호(2003. 12. 27)**

/261

- 1면 · <2003년 중간사> 절망의 우물에서 길어올린 희망의 두레박
- 2면 · 이달의 인권(2003년 12월)
- 3면 · 만화로 보는 2003년 10대 인권 뉴스

**호외(2003. 12. 29)**

/264

- 1면 · <속보> 집시법 개악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인권하루소식

2003년 7월

(제2367호 ~ 제2388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7월 1일(화)

제 236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철도구조개악법, 본회의 통과

### 노동자들, 졸속 입법·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

"이들 법안은 철도 민영화의 중간 단계입니다. 철도가 민영화되면 요금 상승 등 국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것입니다."

6월 30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열린 '철도구조개악법 저지와 철도 강제진압 노무현정권 규탄 집회'에서는 철도노조 파업에 대한 경찰력 투입 등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철도노조 파업의 도화선이 된 '철도산업발전기본법'(안)과 '철도시설공단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심의 중이던 이 시간,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이번 공권력 투입과 법안의 졸속 상정은 노정간 4.20 합의의 전면 파기로 노무현식 개혁의 본질을 드러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4시경, 두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두 법안을 '철도구조개악법'이라 부르며 통과 저지를 외치던 3천여명의 노동자·농민들 사이에 일순 정적이 흘렀다. 끈이어 한·철레자유무역협정과 철도구조개악법을 상징하는 조형물에 불이 붙었고, 참가자들은 약법 통과를 규탄하며 국회로 향의 행진을 시작했다.

철도 민영화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 비판받아온 두 법안은 철도의 '시설'과 '운영'을 분리하고 고속철도건설과 관련한 부채 11조원을 새로 만들어질 공단에 전가시키고 있다. 두 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공사화·공단화 후 부문별 분할매각과 이에 따른 요금 인상이 예상되는 등 겉으로는 공사화를 지향하나 실제로는 철도 민영화의 사전단계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이에 앞서 지난 28일 새벽 4시, 철

도노조는 △두 법안의 국회통과 저지 △공공철도 건설 △철도노동자 생존권 사수 등을 내걸고 1만여 명의 조합원이 참여한 가운데 총파업을 선언했다. 그러나 경찰은 파업 시작 2시간 만인 새벽 6시, 서울·부산·대전 등 전국의 집결 거점에 경찰력을 투입, 조합원을 연행했고, 이후 흩어진 조합원들은 지금까지 산개투쟁을 벌이고 있다.

그러나 철도청은 30일 천환규 철도노조 위원장 등 121명의 노조간부들을

직위 해제키로 하는 등 징계절차에 돌입했으며, 정부도 지금까지 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이에 민주노총은 이날 집회 후 가진 기자회견을 통해 정부가 계속 대화를 거부하면 "참여정부 노동정책이 군사독재시절로 회귀한 것으로 간주하고 모든 역량을 동원해 국회를 통과한 법안의 재개정과 공공철도 건설을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오늘 1,500개 사업장이 참여한 가운데 중식 규탄집회를 여는 한편, 2일 금속연맹 10만명 연대파업, 5일 전국노동자 상경투쟁 등을 통해 강력한 대정부 투쟁에 돌입할 계획이다. (강성준)

◎ 인권이야기 필자 사정으로 한 주 쉽니다.

## 철도 공공성과 4·20 노사합의 저버린 정부

◎ 철도노조와 정부(철도청)의 4월 20일 합의 내용

: 철도개혁은 ▲철도산업 발전 및 공공성 강화, 국민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 향상에 주안점을 둔다. ▲철도의 공공성을 감안하여 기존 민영화 방침을 철회하고 대안을 모색하고 시설과 운영의 분리방안과 관련하여 열차안전에 밀접한 관련이 있는 유지보수 기능 등은 운영부문과 통합하는 등의 대안을 모색한다. ▲철도노조 등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와 공청회 등 사회적 합의를 거쳐 추진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쳐 관련법안이 성안될 경우 조속한 시기에 국회 통과를 위해 철도노사가 공동으로 노력한다.

그러나 철도노조는 6월 9일 이호웅(민주당)의원 등의 법안 발의, 17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상정, 27일 법사위 통과, 30일 국회 본회의 통과 등의 철도개혁(?)법안 통과 일정에서 4월 20일 합의한 '이해당사자와의 충분한 논의나 사회적 합의' 과정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공기업 민영화에 대해 현 정부는 지난해 대선과 인수위 시절 계속해서 '신중한 접근'이라는 입장을 취해왔다. 당시 임제정 인수위 위원장은 "철도 등 국가기간산업의 민영화는 공공성을 저해하고 민간 독점과 요금인상 등 부작용이 우려된다"면서 "관계법이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인 만큼 서두르지 않겠다"고 발언한 바 있다. 그러나 30일 국회를 통과한 철도관련 법안은 '공공성 저해, 민간 독점, 요금인상' 등 민영화의 부작용을 고스란히 담은 철도개혁의 시발점이라는 것이 철도노조의 주장이다. 더욱이 '신중한 접근'을 강조해왔던 정부가 노조와의 공청회나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기 위한 일말의 노력도 하지 않고 법을 통과시켜 이번 파업을 불러왔다는 점에서도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고근예)



# 이달의 인권 (2003년 6월)

## 흐름과 쟁점

### 1. 네이스, 불사조 되어 날아오르다

교육부는 고3에 한해서만 네이스 사용을 한시 허용한다는 전교조와의 공식 합의를 뒤집고 개별 학교에서 네이스 사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6/1). 이에 전교조는 교사대회를 열고 네이스 폐기를 촉구했고(6/2), 전교조 소속 정교사들도 네이스 관련 업무를 전면 거부하기로 했다(6/4). 이후 네이스 반대 투쟁은 교육계를 넘어 사회 전반으로 확산되어 갔다. 81년 이후 초중고 졸업생 44명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고(6/11), 인권활동가들은 네이스 강행 저지 단식농성에 들어갔다(6/18). 이런 상황에서 교육부는 일선 학교 대부분이 네이스를 '선택'했다고 발표했지만, 전교조는 학교장들이 네이스 선택을 '강요'한 것이라고 맞섰다(6/19). 이후 전교조가 네이스 폐기 촉구 연가집회를 열자(6/21), 교육부는 참가 교사들에 대한 교육청별 징계와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밝혔다(6/23). 장애인계 활동가 30명은 "장애인에게 네이스는 사회적 사형선고"라며 네이스 반대 선언을 내놓았고(6/24), 인권사회단체들은 국무총리실 주도로 일방 추진되고 있는 교육정보화위원회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했다(6/25). 이어 인권사회단체들은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인권활동가들은 일 단 단식을 접고 공대위를 통해 지속적 투쟁을 벌여나가기로 했다(6/27).

### 2. 보호감호제 폐해 속속 드러나

'사회보호법폐지를위한공대위'는 기자회견을 열고 사회보호법의 폐해를 고발했다. 이 자리에서 청송보호감호소 출소자들은 "사회보호법은 사회정착을 막는 걸림돌일 뿐"이라고 증언했다(6/3). 이후 공대위는 청송제2감호소 피감호자 616명 명의로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실태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의 93.79%가 소내 훈련과 작업이 사회정착에 도움이 안된다고 답했고, 감호기간 중 가족과괴를 경험한 사람도 응답자의 절반에 이르렀다(6/17).

### 3. 에바다 정상화, 한 걸음 더 앞으로!

경기도경이 에바다 농아원을 불법 점거하고 있던 최성창 전 이사장을 전격 연행하면서 에바다 정상화가 한발 더 앞당겨졌다(6/3). 그러나 구 재단측 졸업생들을 포함한 40여명이 에바다에 다시 난입해 집단폭력을 행사했다(6/7). 그럼에도 평택 검찰은 이들을 전원 불구속 처리했고(6/9), 이에 '에바다정상화를위한연대회의'는 평택 검·경의 미온적 수사태도를 규탄하며 이들에 대한 특별감찰을 요구했다(6/12). 한편 구 비리재단의 핵심 인사였던 양봉에 씨가 학교공금 횡령 혐의로 긴급 체포돼(6/25), 현재 불구속 수사를 받고 있다.

### 4. 경제자유구역이라는 '재앙'의 제도화

양대 노총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를 촉구했다(6/4). 이 가운데 대전시가 경제특구 지정 신청을 철회하고, 앞으로 경제자유구역법에 근거한 경제자유구역 신청을 하지 않겠다고 밝힘으로써 경제자유구역 폐기 투쟁에 중대한 성과를 남기게 됐다(6/12). 이후 민주노총과 전국민중연대 등 노동사회단체들이 노숙농성까지 감행했지만(6/16~17), 시행령이 결국 국무회의를 통과, 7월 1일부터 경제자유구역법은 시동을 걸었다(6/24).

### 5. 끝끝내 살아남은 산업연수생 제도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이 외국인 산업연수제도 철폐와 고용허가제 쟁취 등을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갔다(6/9).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대로 고용허가제 법안 처리는 결국 무산됐다(6/16). 이후 경제 5단체는 산업연수생 제도를 유지하는 조건으로 고용허가제 도입을 받아들일겠다고 밝혔다(6/20).

## 논평

- 가족수갑 사용은 '고문'이다(6. 14)
- 정부는 정보인권 보장 요구에 답하라(6. 21)
- 56만원을 '최저임금'이라 부를 수 없는 이유(6. 28)

## 인권이야기

- 이주영 - 에바다의 숙제(6. 3)
- 김철준 - 연예인의 인권은 무관심에서 출발한다(6. 17)
- 박영희 - "엄마가 장애인이나..."(6. 24)

## 인권정보자료

-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에 관한 한국정부 2차보고서 관련 자료집」(6. 6)
- 「소리없는 사형선고 사회보호법 - 인권의 무덤 청송보호감호소」(6. 13)
- 「원점에서 본 지적재산권」(6. 20)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인권위, 검찰 견제 역할 스스로 포기했다: 불공정 불기소처분 관련 진정받지 않기로...법률적 사고가 인권위 망쳐(6. 4)
- "466일간 가족수갑 채운 것은 인권침해: 인권위, 현재에 계구사용 관련 의견서 제출기로(6. 11)
- 유현 상임위원의 부적절한 소신 발언: 논쟁 그만하고 네이스 시행하자?(6. 11)
- 일회적 정벌 개선책 제시로는 안돼(6. 25)

## 특별 기고

- 김שמ - 학생의 눈으로 본 네이스 문제의 근본 원인(6. 25)

## 특집 - 국제 사회권 네트워크의 출범

- 〈상〉 사회권 옹호를 위한 국제적 연대의 출발 : 민중의 힘, 사회권 운동의 기초(6. 19)
- 〈중〉 유엔내 사회권, 어디까지 왔다 : 사회권 실현을 위한 유엔 특별보고관 활동(6. 21)
- 〈하〉 '위로부터의 세계화'와 인권운동(6. 26)

## 기획 - 7회 인권영화제를 돌아보다

- 〈상〉 최초 제작 지원, 이주노동자 옴니버스 전한 감동(6. 5)
- 〈하〉 도전에 직면한 '무료 상영' 원칙(6. 7)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7월 2일(수)

제 236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

### “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

1일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 마침내 발효됨에 따라, 한국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욱 크게 울려 퍼졌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는 이날 오전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아래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과 산업연수제도의 우선적 철폐를 통해 국내 거주 40만 이주노동자들의 인권을 보장할 것을 한국정부에 촉구했다.

'외국인노동자 의료공제회' 김미선 사무처장은 "오늘 전세계 50개 이상의 국가에서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발효를 축하하는 동시에 각국 정부의 협약 비준을 촉구하는 캠페인과 집회 등이 열리고 있다"고 소개한 뒤, "지금까지 이 협약을 비준한 나라들은 모두 이주노동자들이 해외에서 송금한 돈으로 먹고사는 송출국인 데 반해 고용국들이 비준을 기피하는 이유는 협약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을 '노동력이 아닌 사회적 실체'로 인정해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사무처장은 "한국정부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협약을 비준하고, 치욕적인 연수제도부터 철폐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대회에서는 정부의 산업연수제도 존존 방침에 대한 비판도 쏟아져 나왔다. 최근 정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와 한나라당의 반대에 부딪혀 고용허가제 법안의 6월 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산업연수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 실시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인권센터 양혜우 소장은 "씩어서 고름이 묻어나오는

상처에 악을 덕지덕지 바른다고 새살이 돋아나겠느냐"고 되물으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고용허가제 도입에 찬성하는 국민이 75%에 육박하고 있는데도 정부와 국회가 국민의 의식 수준을 뒤따라오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마석 '살림의 집' 소장 이정호 신부도 "현재 이주노동자를 둘러싼 상황은 정부와 국회와 기업이 고스톱을 짜고 치며 뒤에서 돈을 나눠먹고 있는 형국"이라면서 "이들 상습 도박단을 물리치는 투쟁을 계속 벌여나가자"고 말해 참가자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1990년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이주노

동자 권리협약은 '법적 지위에 관계없이'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누릴 수 있는 각종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협약은 20번째의 비준서 또는 가입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난 다음달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난 3월 14일 과테말라 정부가 20번째 비준서를 제출함에 따라 7월 1일 정식 발효되기에 이르렀다. 협약이 발효되면 10명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위원회가 설치되고, 협약 당사국 정부들이 제출한 협약 이행 보고서를 심사하게 된다.

유엔에 따르면, 지난 3월 현재 이주노동자나 난민 등 자국을 떠나 생활하고 노동하는 사람은 1억5천만. 이는 세계 인구의 2%에 달한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을 비준한 국가는 이집트, 필리핀, 스리랑카, 멕시코 등 22개국에 불과하다. (배경내)

## “미국과 불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

###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인권단체들, 미국 강요 거부 촉구

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을 맞은 1일, 인권단체들이 한국정부에 미국과 불처벌 협정을 체결하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했다. 이날은 미국이 한국정부에 제시한 협정 체결 최종시한이기도 하다.

미국은 지난해 7월 1일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 집단살해를 관할 대상으로 하는 국제형사재판소가 공식 출범하자 각국 정부를 압박, 위 범죄를 저지른 미국인을 재판소에 인도하지 않도록 하는 불처벌 협정을 차례로 체결해 국제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최근까지 미국과 이 협정을 체결한 국가는 모두 48개국. 이중 의회 비준절차까지 모두 끝마친 나라는 5개국이다.

이날 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13개 인권단체들은 발표한 성명서를 통해 "세계 여러

나라에서 여전히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가 수없이 저질러지고 있지만, 우리는 국제형사재판소를 통해 정의를 실현하고 이들 범죄를 점차 감소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고 있다"면서 "미국이 강요하는 불처벌 협정은 국제형사재판소의 기본 정신과 국제법 질서를 훼손하는 반인권적 협정"이라고 비판했다.

단체들은 또 한국정부가 이 협정의 체결에 호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까지 배출한 국가가 이러한 협정을 체결하는 것은 국제적으로 수치스러운 일"이라며 유엔과 외교통상부 장관에게 미국의 협정 체결 강요를 강력하게 거부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헤이그에 설치된 국제형사재판소는 최근 18명의 재판관과 검사를 모두 선출하고 업무를 개시했다. (배경내)



#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어

## '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

성매매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 강도를 높이는 한편, 성매매 피해 여성의 보호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성매매알선 등행위처벌및방지에관한법률'(아래 성매매방지법) 관련 공청회가 1일 오전 10시 국회에서 열렸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 주최로 개최된 이날 공청회에서는 지난해 9월 조배숙 의원(민주당)을 비롯한 여야 의원 86명이 발의한 성매매방지법(안)이 검토됐다. 기존의 '윤락행위등방지법'(아래 윤법)이 성매매 피해 여성을 처벌 대상으로 규정했던 것과는 달리 이 법안은 '인신매매나 물리력, 채무관계 등을 통해 성매매된 자'의 보호를 기본 방향으로 삼고 있다.

이는 2000년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이듬해 연이어 발생한 군산 개복동 화재참사를 통해 성매매 피해 여성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성매매를 둘러싼 조직적 폭력과 인신매매, 성적·경제적 착취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확산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공청회에는 법무부, 여성·시민단체, 법원, 연구기관 등을 대표한 6명의 진술인이 참석, '성매매방지법(안)'에 대한 각각의 입장을 밝혔다.

법무부 최재경 검찰 제2과장은 "성매매 관련 법률을 정비하는 것에 기본적으로 찬성한다"면서도 "성매매 여성의 주장에만 의거해 '성매매된 자'로 추정할 때, 처벌 모면을 목적으로 한 허위 주장이나 채류 연장을 목적으로 한 외국인 여성들의 법 악용 우려가 있다"면서 법안의 신중한 재검토를 요구했다.

반면 여성단체연합 성매매특별위원회 김현선 집행위원은 "포주와의 관계에서 성매매 여성은 약자일 수밖에 없으므로, 이들을 기본적으로 피해자로 바라보고 접근하지 않는 한 성매매는 근절할 수 없다"며 '성매매된 자'의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 배금자 변호사는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선불금 등의 명목으로 작성된 차용증은 무효임에도 불구하고 윤법법이 제정된 61년이래 40

여 년 동안 수사기관과 법원은 이들 여성들이 사기죄로 고소당하는 현실을 방치한 채 오히려 '성을 판 범죄자'로 만들어왔다"고 비판하고, "성매매 알선업자와 여성이 채무관계로 얽혀 있는 현실에서 선불금 때문에 성매매를 해야 하는 여성은 당연히 피해자, 즉 '성매매된 자'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배 변호사는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와 관련해 피해 여성들을 업주에 팔아넘긴 알선업자들이 모두 '징역 1년 정도에 집행유예'라는 경미한 처벌을 받았다"며 알선업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법 제정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법사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법

제정의 필요성과 시급성에 기본적인 공감을 표했다. 일부 의원들은 기존의 법 적용에서 검찰과 법원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피해 여성의 구조와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해 연내 법 제정이라는 희망적인 관측에 힘을 실어줬다. (고근예)

### 전교조 간부들 농성 돌입

'네이스 반대'를 내걸고 연가집회를 벌였다는 이유로 지난달 27일 체포영장이 발부된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등 간부 8명이 1일 오후 6시 명동성당 농성에 돌입했다. 이들은 "학생인권 보호를 요구하는 교사들을 사법처리 하는 것은 '강성 집행부'를 제거해 전교조를 '순화' 시키겠다는 비열한 의도"라며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배경내)

◎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 기사 넘쳐 쉽다

### 「아웃사이다」 발행인 임성환 씨, 병역거부 선언

####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제도적 억압에도 거부자 줄이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여전히 '반국가적 행위'로 치부되고 병역거부자들에게 대한 직·간접적 억압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양심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택하는 사람들이 꾸준히 늘고 있다. 지난 5월 김도형 씨의 병역거부 선언에 이어, 1일에는 임성환 씨가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는 모두 7명으로 늘어났다.

현재 격월간 「아웃사이다」의 발행인을 맡고 있는 임성환 씨는 "전쟁은 어떤 형태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인류공동체를 파괴하는 행위"이며 "군대의 일원으로 참가하는 것은 국가폭력에 동참한다는 것을 뜻하며 언제라도 부도덕한 조직적 살해에 동참할 의사가 있음을 밝히는 행위"라면서 어떠한 국가폭력과 전쟁에도 동참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다. 앞서 병역거부를 선택한 사람들과의 만남을 통해 결심을 하게 됐다는 임 씨는 "국가와 사회의 폭력에 맞서 더 많은 이들이 소신에 따라 병역거부에 동참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임 씨의 희망은 사회적 편견과 제도적 억압의 덫에서 여전히 자유롭지 못하다. 병무청은 곧 임 씨를 '병역기피자'로 고발할 계획이다. 지금까지 병역거부자들에게는 모두 실형이 선고되고 있으며, 지난 4월 대서면에서도 병역거부 양심수 1132명은 국방부의 반대로 모두 사면대상에 제외된 바 있다. 또 국회에서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역거부 다큐멘터리 제작을 지원한 것조차 '국가기관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일'이라며 문제삼고 있는 실정이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아래 연대회의) 최정민 집행위원장은 "인권존중과 평화정착을 위해 정부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대체복무제 시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법무부는 '소수종교 신봉 수용자들의 수용시설 내 종교집회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그간 법무부는 지난 1월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에게 수용시설내 종교집회를 보장하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에 대해 '수용 불가' 입장을 보여왔다. 이에 연대회의는 1일 성명서를 발표, 법무부의 입장 전환에 환영을 표했다. (박종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7월 3일(목)

제 236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하다

### 참교육학부모회, 체벌실태 발표...학생인권 보장 적극 나서기로

최근 네이스(NEIS) 문제로 인해 정보인권 등 학생 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이해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원시적 인권침해'라 할 수 있는 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2일 오전 11시,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아래 참교육학부모회)는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 상반기 상담사례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전화와 인터넷을 통한 상담사례 총 2백15건 중 교사 체벌에 관한 상담은 61건으로 전체 상담의 28%를 차지했다. 예년에 비해 폭력적 체벌 사례는 오히려 더 증가하고 있다는 게 참교육학부모회의 설명이다.

또 상담사례 가운데 학생들에게 심각한 육체적 상해를 입히거나 공포, 학교부적응, 우울증 등 각종 정신적 상처까지 안겨주는 심각한 체벌도 상당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만하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1학년 아이의 뺨을 6차례나 때리고 바닥에 쓰러진 아이의 등과 허리를 발로 밟은 다음 '집에 가라'고 내쫓은 사례, 여자아이를 때려 울렸다는 이유로 초등학교 2학년 남자아이를 바닥에 3차례나 내동댕이쳐 머리뼈 골절과 뇌출혈 등을 일으킨 사례, '집승처럼 맞은 후'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는 아이에게 자퇴까지 종용한 사례 등도 발표돼 충격을 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 자리에는 최근 체벌로 인해 심각한 피해를 입은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의 아버지 정성룡 씨가 경남 창원에서 달려와 자신의 경험을 생생하게 증언해 관심을 모았다. 전 씨는 "우리 아이처럼 맞는 아이가 또다시 생기지 말았으면 하는 바람

로 이 자리에 섰다"면서 담담히 피해 사실을 증언해나갔다.

"우리 아이는 지난 5월 수업시간 중 이유도 모르는 상태에서 담임선생에게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20차례나 무차별 폭행을 당했습니다. 턱관절 3주와 뇌진탕 2주의 진단을 받았고, 소아정신과 치료도 3개월이나 받아야 합니다. 주위의 만류로 담임선생이 공개사과만 하면 형사고발까지는 하지 않을 생각이었지만, 학교에서는 공개사과도 없이 보상금 1천만원을 주면서 '문제를 키우면 경남지역에서 애 학교 보낼 생각은 하지 마라'는 협박까지 했습니다. 결국 그 담임선생은 1개월 감봉조치만 받았습니다."

참교육학부모회 장은숙 상담실장은 "이처럼 대부분의 학교가 사건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아이를 중

심에 두고 생각하기보다는 교사를 보호하는 것 위주로 사건을 처리해 피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2차 가해를 가하고 있는 것도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참교육학부모회는 지난해 교육부가 교사의 체벌을 허용한다는 방침을 발표한 이후 이러한 폭력적 체벌이 더욱 증가하고 그 심각성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고 보고, 향후 체벌 금지와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사업에 적극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교육부가 제시한 체벌규정조차 무시하고 이뤄지는 체벌은 명백한 '불법적 폭력'으로 규정하고, 폭력 교사에 대해서는 민·형사상 대응을 펼칠 계획이다. 또 '교육적 체벌'을 허용하고 있는 현행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31조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제도의 정비 작업, 각 교육청에 학생인권 전담부서 설치 운동 등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기자회견을 마친 후 참교육학부모회는 법무법인 청지(대표 감지원)와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공동 대응을 벌여나가기로 했다. (고근예/배경내)

## 만화사랑방

이동수





<인터뷰>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김희수\* 상임위원

### “부족한 조사권한, 열정으로 돌파하겠다”

지난 1일 2기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아래 의문사위)가 공식 출범했다. 한 상임위원장과 2인의 상임위원, 6인의 비상임위원으로 구성된 2기 의문사위는 향후 1년간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의문사' 사건들에 대한 조사활동을 펼치게 된다. <인권하루소식>에서는 새로 임명된 김희수 상임위원을 만나 2기 의문사위의 과제와 전망에 대해 들어왔다.

김 상임위원은 6년간 검사로 재직하다 95년부터는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조폐공사 파업유도 사건'의 특별사수관, 울산구치소 구송우 씨 사망사건의 담당 변호사로도 활약한 바 있다.

■ 검사로 활동하다 변호사로 전업한 경력이 흥미로운데?

= 여러 계기들이 있었지만, 6년간 검사생활 하면서 '내 젊음을 바칠 만한 가치가 없는 조직'이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게 결정적 이유였다. 조폐공사 파업 유도 의혹사건을 조사하면서도 이 나라 검찰은 참으로 부끄러워할 줄 모른다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됐다. 지금은 검사생활의 경험이 위원으로서 조사활동을 지휘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 본다.

■ 조직 준비는 모두 끝난 상태인가?

= 위원 선임도 끝났고 조사관 62명도 이미 채용돼 교육을 받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무국장과 조사과장들이 공식 상태다. 적임자를 찾는 게 조직적으로는 우선적인 과제다.

■ 어떤 사건들을 조사하게 되나?

= 1기 의문사위에서 '조사불능'으로 처리한 30건의 사건은 자동으로 조사하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이들 사건은 관계 기관의 비협조로 인해 진실을 모두 밝혀내지 못한 경우다. 75년 의문사한 재야 지도자 장준하 선생 사건, 91년 노동운동의 분수령을 이룬 한진중공업 박창수 노조위원장 사건, 80년대 학생운동의 핵을 이룬 이내창 중앙대 안성 캠퍼스 총학생회장과 이철규 조선대 교지 편집장 사건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그 외 민주화운동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 결정'이 내려진 33건은 위원회가 조사 재개 결정을 내릴 경우 조사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2기 위원회는 새로운 진실을 발견할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모두 재조사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 무엇보다 '민주화운동'의 의미를 폭넓게 해석해 이들 사건에 접근할 계획이다.

■ 1기에서처럼 미흡한 조사권한이 진실 규명의 장벽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어떻게 돌파할 건가?

= 밖에서는 조사권 강화를 위해 법을 개정하자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법 개정은 위원회가 나설 몫은 아니라고 본다. 부족하더라도 주어진 권한을 열정을 갖고 충분히 활용하면서 조사활동을 펼쳐나가는 것이 위원회의 역할이다. 대통령도 적극 지원을 약속한 만큼 낙관적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다.

■ 대통령이 임명장 수여 자리에서 조사활동에 대한 적극 협조를 약속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인가?

###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

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교육정보위 불참 재확인

1일 오후 6시계부터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여온 전교조가 2일 오전 10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사법처리 방침 철회를 다시금 촉구했다. 현재 원영만 위원장 등 전교조 지도부 7명에 대해서는 체포영장이, 1명에 대해서는 경찰의 출두요구서가 발부된 상태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6월 21일 연가투쟁은 네이스의 시행 중단과 전면 재검토 약속을 헌신짝처럼 내동댕이친 정부를 규탄하기 위한 것이었는데도, 정부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전교조에 대한 비이성적 탄압을 자행하고 있다"면서 "대화와 타협이 실종된 패권적 노동정책은 우리 사회를 또다시 극한 대결로 몰아갈 것"이라 경고했다.

= 그렇다. '권력기관이 자료를 내놓지 않으면 청와대로 직접 가져 오라 해서 내가 직접 전해 주겠다'고까지 말했었다. 이처럼 대통령이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권력기관의 문서고를 좀더 쉽게 열 수 있지 않을까 싶다.

■ 얼마 전 법원이 위원회 결정과 반대로 한총련 김준배 씨를 폭행·사망케 한 혐의로 고발된 경찰에 대한 검찰의 무혐의 처분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등 법원도 암초로 작용하고 있는데?

= 무엇보다 법원의 의식이 바뀌어야 한다. 김준배 씨 사건의 경우, 사인에 대한 이견이 존재했던 점을 감안하더라도 적어도 '독직폭행'은 인정했어야 했다. 또 가해자가 밝혀진 경우에도 공소시효에 가로막혀 처벌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인데, 법원이 법 논리와 국제법을 충분히 활용한다면 시효 문제도 돌파할 수 있을 텐데, 이러한 문제에 눈을 감고 있어 아쉽다.

■ 1년이라는 기간으로는 63건의 진실을 밝혀내기에 부족한 것 같다

= 의문사위가 계속 기간을 연장하는 것보다는 포괄적 과거청산기구가 설치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옳다.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진실을 밝혀내겠다. (배경내)

전교조는 또 얼마 전 전남지역 교장단 수십 명이 주중 2박3일간 관광여행을 다녀온 것은 문제삼지 않으면서, 수업을 모두 끝내고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해 집회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해서만 무더기 징계위협을 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지적했다.

전교조는 향후 일주일간 명동성당 농성을 계속하는 한편, 16개 시도 지부와 지회 단위까지 비상체제에 돌입해 철야농성과 촛불집회, 전국 교사 서명운동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이날 전교조는 "국민적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구성되는 교육정보화위원회에는 참여할 수 없으며, 인권사화단체들과 함께 네이스 거부운동을 계속 벌여나갈 것"은 입장도 재확인했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특별 기고>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김혜진 집행위원장

##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

지난 1일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시행 5주년을 맞았다. 본지에서는 지난 5년간 이 법이 가져온 폐해가 무엇인지를 김혜진 씨를 통해 들어왔다. <편집자주>

나는 분노 없이 파견법 5년의 역사를 말할 수 없다.

97년 노동약법이 통과되었을 때만 해도 내 관심은 '정리해고제'에 있었지 이름도 생소한 '근로자파견제'에 있지 않았다. 98년 7월 1일 파견법이 시행되고 나서 2년이 지난 2000년에 와서야 나는 자본가들이 왜 93년부터 이 법을 만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지, 또 96년말 왜 날치기까지 하면서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다.

파견법이 처음 만들어졌을 때 어처구니없게도 그 이름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었다. 자본가와 정권은 이 법이 만들어지면 프리랜서로 일하고 싶어하는 전문가들의 취향을 만족시킬 수 있고, 2년이상 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될 수 있으며, 불법파견에 대해서도 규제할 수 있으니 1석 3조라고 떠들었다. 그러나 지난 파견법 5년 동안 우리가 본 현실은 그것이 아니었다.

일단 파견법에 의해 정규직 일자리를 박탈당한 노동자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전문가가 아니었다. 사무보조라는 이름의 젊은 여성노동자들, 실세 없이 전화에 매달려 있는 텔레마케터들, 나이 많은 청소용역 아주머니들, 간병인들, 홀대받는 운전직들이었다. 가장 낮은 곳에서 가장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어야 할 그 자리에서 정규직의 반도 안 되는 임금으로, 게다가 자신의 임금의 일부를 파

견회사에 헌납하면서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이미 이런 자리에서는 정규직을 뽑지 않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파견직이 된 노동자들이다.

또 2년이상 된 노동자들은 정규직으로 채용되는 것이 아니라, 길거리로 쫓겨났다. 방송사에서 오랫동안 근무해왔던 운전직 노동자들은 정규직 채용을 회피하는 방송사측에 의해 해고당했다. 간병인으로 일해왔던 길병원 제니엘 파견 노동자들도 2년이 되기 하루 전, 자신의 유일한 생계수단을 박탈당했다. SK 텔레콤 노동자들의 경우 파견에서 1개

월짜리 계약직으로, 또다시 파견으로 자기도 모르는 새 이리저리 다른 회사들에 고용계약서가 팔려나갔다. 지금도 파견노동자들은 2년에 한번씩 해고당한다. 삶의 불안정성이 그만큼 심해졌다.

불법파견을 규제할 수 있다고 떠들었으나 오히려 불법파견은 더욱 성행하고 있다. 대구 성서공단의 아세아시멘트 노동자들, 현대 모비스 노동자들, 미포조선 노동자들, 대우조선 노동자들, 한진면세점 노동자들... 셀 수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중간착취로 고통받아도 노동부는 불법을 제대로 조사할 생각도 않고, 불법파견이 명백해도 눈감아주고, 설령 불법파견 판정이 나와도 노동자들 계약해지 해버리면 그만이다. 누가 노동자들을 중간 착취할 권한을 주었는가? 누가 노동자들을 마음대로 폐기처분할 권한을 주었는가? (☞2면에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 대안을 찾아나선 반세계화 운동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

지은이: 세계화 국제포럼/ 옮긴이: 이주영/ 펴낸이: 필맥/ 2003년 7월/ 392쪽

자본의 세계화에 맞선 민중운동의 전략을 집대성한 자료가 출판됐다. 이 책은 2001년과 2002년, '대안의 세계는 가능하다'라는 주제로 브라질 포르투 알레그레에서 열린 세계사회포럼의 논의를 정리한 반세계화 진영의 보고서다.

저자 '세계화 국제포럼' 소속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지속가능한 사회를 창출하기 위한 규칙과 제도를 소개하며, 세계화에 반대해 싸운 다양한 운동현장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1998년 이후 캐나다의 시민사회가 다자간투자협정(MAI)에 대해 벌여온 '시민청문회' 활동, 피노체트가 축출된 이후 칠레에서 추진된 '지속가능한 칠레' 프로젝트, 문화적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주민 권리보호 운동, 브라질 쿠리티바시의 생태도시 실험 등이 바로 그것이다.

또한 이 책은 국제무역질서 속에서 기업의 '자유'가 아닌 '공정한 질서'를 구축하기 전략도 소개하고 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개인, 지역공동체, 국가 단위에서 경제활동의 우선 순위와 규칙을 스스로 결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어떠한 장치가 필요한지도 이 책에서 찾아볼 수 있다. 세계화 국제포럼은 브레튼우즈 체제를 폐쇄하고, 공정하며 지속가능한 국제 무역금융체제의 필수 규칙을 소개하며, 유엔 개혁과 새로운 제도를 제안하기도 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이 국회를 통과했고, 한미투자협정이 임박해 있는 이 즈음, 인권과 무역·경제·새로운 국제질서를 고민하는 사람에게 이 책은 세계화 반대운동의 성과를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최은아)



# "소리없이 하청 노조 탄압합니다", 포스코

## 계약 약관에 쟁의행위 금지 조항 뒤...관련 법제도 개선 뒤따라야

"소리없이 세상을 움직입니다"라는 광고로 유명한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그간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을 때, 하청업체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약관을 뒤 하청업체 노동자의 노동 기본권을 제한해 왔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그간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제시해 온 '협력 작업 계약 일반 약관'을 보면, 하청업체는 "노사간의 쟁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노사분규 등 내부사정으로 인하여 작업에 차질이 예상되면 도급인이 직접 수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작업을 수행"(제19조 쟁의행위 금지 등)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또 약관에서는 하청업체와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노동쟁의 발생"(제28조 계약해지 등 제재)을 명시해 두고 있기도 하다.

민주노총 금속연맹 산하 금속산업노동조합(아래 금속노조)은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이러한 약관을 악용해 하청업체의 노조활동을 탄압해 왔다고 주장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2001년 하청업체인 삼화산업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자, 삼화산업 사측은 작업의 일부를 자진 반납하겠다고 요청했고 포스코측은 이를 수락했다. 더 나아가 포스코측은 삼화산업에 공문을 보내 쟁의행위가 중단되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협박했고, 삼화산업은 이를 빌미로 노조에 다시 이 공문을 보내 계약이 해지될지 모르니 빨리 회사를 정상화시키라고 위협했다.

2003년 2월 설립된 태금산업지회에서 똑같은 수법이 사용됐다는 것이 금속노조의 설명이다. 교섭을 회피하던 사측에 맞서 지난 5월 28일 조합이 태업에 돌입하자, 사측이 이를 후에 작업을 포스코에 반납했고, 이어 직장폐쇄를 단행했다는 것. 태금산업지회 허형길 지회장은 "사측이 직장폐쇄를 단행했는데도 전체 직원 160명 중 50여명의 비조합원들은 제철소 안에서 여전히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며 "사측은 위장폐업을 즉각 중단하고 성실하게 교섭에 임하라"고 주장했다.

각계의 비판이 빗발치자, 포스코측은 지난달 19일 약관 19조를 삭제하고 28조를 "협력사의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로 수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삼화산업지회 정용식 수석부지회장은 "약관 변경은 눈기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말한다. 파업 등 노조 활동 자체가 귀책사유로 취급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정 수석부지회장은 "포스코측은 그동안 저질러온 불법에 대해 사과하고, 협력업체의 노사관계에 개입하지 않겠다고 약관에 분명히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이러한 포스코측의 '은밀한 노조 탄압'에 대응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민주노총 법률원의 서상범 변호사는 "이런 경우 포스코가 실제 사용 사업주이지만, 현행 법상 사업주는 아니기 때문에 부당노동행위로 규정받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윤애림 정책국장은 "사용 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그들이 사용자로서 전면적인 책임을 지도록 비정규직 관련 법제도가 전면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준)

(이면에서 이어짐) 이런 인신매매에 재미를 붙였는지, 자본가들은 이제 노동자들을 파견으로 쓰는 것도 모자라 파견업체를 차리려고 난리다. 중간착취까지 해서 돈을 더 벌어들일 심산이다. 맨 파워 같은 외국계 파견회사도 눈독을 들인다. 자본가들에게 파견이 얼마나 매력적인가? 파견노동자들을 일의 시키면 자신은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 이름만 달랑 있는 파견업체에게 모든 책임을 떠넘기면 된다. 노동자 한 사람씩 정규직으로 고용할 때 들어가는 임금보다 엄청난 싼 임금으로 노동자들을 부린다.

그러나 자본가들은 26개 대상업종만 파견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현행법이 문제라고 아우성친다. 빨리 모든 업종에 파견을 허용하자고 주장한다. 그렇게 되면 이제 업종과 기업의 규모와 기

업의 형태에 상관없이 노동자들은 2년 살이 노예생활을 감내하게 될 것이다. 정부와 자본은 이미 파견법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여왔다. 노사정위원회에서는 속칭 '공익위원'이라는 자들이 불법파견도 합법파견에 준해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그렇다면 도대체 합법과 불법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앞으로 파견법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한 논의를 하자고 말한다. 남의 생존을 놓고 책상머리에 앉아서 재단하는 자들은 파견노동자들의 고통을 똑똑히 들여다보아야 한다. 그러고도 그렇게 말할 수 있다면 그들은 이미 노동자를 노동자로 보지 않는 것이다.

또한 노사정위원회의 논의와 별도로 '경제자유구역법'을 통과시키면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는 파견법 대상 업종을 확대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업무에 '전문'이라는 말만 붙일 수 있다면 이제 마음대로 파견노동자들을 쓸 수 있다.

또한 파견노동자들이 2년마다 한번씩 짤리는 것이 안타까우니, 이제 3년으로 파견기간을 연장하자고 한다. 자기들도 2년마다 노동자들을 교체하려니 그동안 노동자들을 길들여놓았던 것이 안타까웠던 모양이다. 그러나 3년마다 짤리든, 2년마다 짤리든 노동자들의 신세는 하루살이 신세다.

지하철에서 예쁜 웃음을 지으며 "우리는 보보스 파견사원"이라고 외치는 광고 속의 노동자들을 볼 때마다 나는 그 웃음 뒤에 숨어있는 파견노동자들의 눈물을 본다. 인재를 키운다고 떠들어대는 '맨파워'사의 광고에서 낮은 곳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고통을 읽는다. 그리고 97년 총파업투쟁 때 정리해고와 근로자파견제를 막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사회에서 확대받아왔던 노동자들에게 적용되어 그들이 더 깊은 고통의 수렁으로 빠질 때, 마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외면해왔던 우리들의 뻔뻔함도.

그래서 파견법이 시행된 지 5년이 되는 지금 '파견법 철폐하라'고 목놓아 외치는 방송사 비정규노조 주봉희 위원장과 '불법파견 노동자들을 정규직화하라'고 외치는 인사이드코리아 동지들의 길을 따라서 우리 노동운동 진영 모두가 함께 하기를 원한다. 그것이 우리가 책임져야 할 우리의 과제이므로.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7월 5일(토)  
제 237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50년 정전체제를 평화체제로"

## 7월 '평화의 달' 선포...평화대회, 민간법정도 열릴 예정

한반도가 제2의 이라크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운동진영이 오는 7월 27일 정전협정 체결 50주년을 기점으로 현재의 불안정한 정전체제를 영구 평화체제로 바꾸어내기 위해 공동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다.

전국민중연대, 참여연대, 통일연대, 평화를만드는여성회 등 각계 단체들과 인사들은 4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대회 조직위원회'(아래 조직위원회) 결성 기자회견을 갖고, 7월을 '평화의 달'로 선포했다.

7.4 남북공동성명이 발표된 지 31주년을 맞이하기도 한 이 날, 조직위원회는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안팎의 정세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다"고 지적하면서, "최후의 이념대립과 민족분단의 현상이면서 반전·평화운동의 동력이 자발적·역동적으로 형성, 전개되고 있는 한반도에서 정전 50년을 평화체제로 바꾸어내고, 그리하여 21세기 세계평화와 민주주의 발전에 주춧돌을 놓는다는 새로운 각오로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행동에 힘차게 떨쳐 일어나자"고 제안했다.

이에 따라 조직위원회는 반전평화와 한반도 영구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다양한 행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조직위원회 상임운영위원장을 맡은 조희연 교수(성공회대 사회학)는 "7월 '평화의 달' 한달 동안 대중적인 반전평화 캠페인을 펼쳐나가는 한편, 오는 27일 '한반도 평화선언' 발표와 '정전 50년 한반도 평화대회' 개최도 함께 준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조직위원회는 전쟁과 냉전을

상징하는 6.25 전쟁기념일에 묻혀있던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 27일을 평화의 날로 제정하기 위한 운동도 함께 벌여나간다는 계획이다.

오는 25일 개최될 '한반도 핵문제에 대한 국제민간법정'도 주목할 만한 행사다. 법정은 남측 시민들이 재판부에 미국과 북한 양국이 벌이고 있는 공방에 대한 중재를 신청하고, 이에 따라 재판부가 시민중재인단과 국제중재인

단의 의견을 구해 북과 남, 미국, 국제사회 등에 대한 권고사항을 담은 중재를 선고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전국연합 오종렬 상임의장은 "그동안 늘 전쟁위험을 앞세운 독재자들에게 억압받다보니 우리 국민들이 전쟁불감증에 빠져 현 정세의 엄중함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하면서 "오는 7월 27일을 계기로 한반도에 평화의 탑을 세워내고, 전쟁의 위험을 견어내기 위한 행진에 온 국민과 세계가 동참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다.

현재까지 조직위원회에는 76개 단체와 175명의 개인이 참가하고 있으며, 참가자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배경내)

## <논평>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

6월말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에 중대한 변화를 읽을 수 있는 두 가지 사건이 터졌다. 철도파업이 선언된 지 2시간만에 경찰력을 투입한 것이 그 하나고,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것이 나머지 하나다. "구박만 받는 노동자들"과 "충분한 대화와 토론을 거쳐 납득할 수 있는 법과 원칙을 적용해 나가겠다"고 스스로 강조한 지 4개월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일어난 일이었다.

이 과정에서 평소 대통령님이 그리도 강조하던 '대화'와 '토론'은 없었다. 전교조와의 합의도, 철도노조와의 합의도 먼저 켜 것은 정부였다. 그런데도 연가투쟁에 참가한 교사 3천명을 중징계 하겠다고, 철도노조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엄포다. 철도노동자 624명은 이미 직위해제까지 당했다. 단체행동권이 라는 기본적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 '글로벌 스탠더드'라고 강변하면서 말이다.

두 사안이 정부가 말하듯 '강성 노동운동 지도부를 위한 투쟁'이 아니었음을 새삼 말할 필요도 없다. 정부의 졸속적인 철도 구조조정법안의 처리와 국민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의 강행을 저지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투쟁은 모두 국민의 부담과 인권에 관계된 문제였던 것이다.

우리는 '재계 쪽으로 기울어졌던 힘의 균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역설했던 노무현 정부가 보수언론과 재계가 부추기는 대로 노동운동을 불법시하는,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같은 길을 밟아가고 있는 데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 노동자들의 인권은 여전히 밑바닥을 맴돌고 있음에도 노동자들의 정당한 요구를 짓밟고 '구박'으로 일갈하는 현 정부의 노동정책에서 깊은 절망을 느낀다.

지금은 경찰력과 법으로 노동자들의 투쟁을 일시 잠재울 수 있을지 모르지만, 탄압이 노동자들의 저항을 중단시킬 수 없음을 노무현 정부는 똑바로 인식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는 다시 노동정책의 근저에 노동자의 인권을 놓아야 한다. 전교조 지도부에 대한 사법처리와 교사 징계 방침은 물론, 철도 노동자들에 대한 중징계와 손해 청구 방침은 당연히 철회되어야 한다.



# 대인지뢰 피해자, 배상은커녕 치료비조차 막막

## 피해자 2천여 명 이르러...특별법 제정 시급

지난 4월 28일 경기도 연천군 신서면에서 대인지뢰 폭발로 김정희(64세) 씨가 사망한 데 이어, 5월 2일 연천군 백학면에서 박정인(68세) 씨가 또다시 대인지뢰에 의해 왼쪽다리를 잃었다. 이렇게 올 상반기만 해도 벌써 2건의 대인지뢰 사고가 발생했지만, 정부는 대인지뢰 문제와 관련한 속시원한 해결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현재 대인지뢰 피해자는 2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이들 중 국가배상을 받은 사람은 고작 1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또 피해자들이 생계조차 이어나가기 힘든 상황에 처해있음에도 정부의 손해배상금은 고작 몇 백만원에 불과하다. 피해를 입은 고 이재연 씨의 부인 이점순 씨는 "30년 전 남편이 대인지뢰 사고를 당한 후 치료를 위해 있던 땅마저 팔고, 어렵게 생계를 꾸려왔다"며 "보상은 말할 것도 없고 치료비조차 보조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최근 대인지뢰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전향적인 판결이 나오고 있고 또 배상액도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대다수의 지뢰피해자들은 공소시효 등의 문제에 발목 잡혀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배상을 신청할 때 시효가 있는지도 모른 채 기간을 넘기는 경우가 다반사인 것이다. 또 정부는 대인지뢰 사고가 발생하면 '북한의 지뢰다', '지뢰가 아닌 폭발물에 의한 사고다', '경고판을 무시하고 지뢰지대에 들어가 사고를 당한 것이다' 등으로 발뺌하며 민간인 피해자에 대한 배상을 기피하고 있다.

이에 대인지뢰 피해자들과 인권·평화단체들은 대인지뢰 제거와 피해보상을 위한 법률 제정이 시급하다는 데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지난 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공청회에서도 '대인지뢰의 제거와 피해보상에 관한 법' 제정의 필요성이 다시금 확인됐다.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김숙임 대표는 "대인지뢰피해에 대한 정확한 실태 조사와 적절한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

현실에서 국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가 대인지뢰문제에 적극 나설 것을 요구했다.

한국대인지뢰대책회의 조재국 집행위원장은 "정부는 캄보디아나 에티오피아 등의 지뢰 제거와 피해자 보상을 위해 11억 원을 유엔신탁기금에 제공하면서, 정작 우리 지뢰 피해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의 이중성을 꼬집었다.

김다섭 변호사는 "대인지뢰 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특별법의 제정을 통해 공소시효가 지난 피해자들도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현재 사고의 입증 책임을 피해자에게 두고 있는 문제도 국가에 두도록 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대인지뢰 제거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김형오 의원(한나라당)은 "이제는 대인지뢰문제를 공개적으로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며 "올 정기국회에서 대인지뢰 제거 및 피해보상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종식)

### <바로잡습니다>

· 7월 4일자 '클릭 인권정보자료' 기사에서 "이 책은 ~세계사회포럼의 논의를 정리한 반세계화 진영의 보고서다"라는 문장은 "이 책은 '세계화 국제포럼' 소속의 19명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이 <대안 테스크포스>를 구성하고 3년간에 걸쳐 공동 토론과 연구작업을 벌인 결과를 모아놓은 반세계화에 대한 보고서"로 고치십시오.

· 7월 4일자 포스코 관련 기사에서 태금산업지회 지회장 성함은 '문양규'가 아니라 '허형길'입니다.

## 이주노동자들의 삶과 동행한 네 편의 영화

### 인권영화제 제작 지원 작품 <여정> 배급 앞뒀

지난 7회 인권영화제에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켰던 <여정>을 비디오로 만나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달 14일부터 인권운동사랑방을 통해 배급된다.

4편의 음니버스 영화 <여정>은 방글라데시에서 시작된다. 첫 번째 단편 <이주>는 이주를 준비하는 방글라데시 사람들의 이야기다. 감독 주현숙 씨가 방글라데시 이주노동자들의 고향, 다카에서 실감한 것은 '반복되는 이주'. 수원에서 7년 동안 살았다는 한 노동자는 다시 한국으로의 이주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느다란 실에 자신의 온 몸을 의지해 부유하고 있는 연과 같은 사람들. <이주>는 떠돌 수밖에 없는 이들의 상황을 카메라에 담았다.

한국 최초의 이주노동자 파업은 2002년 1월 마석 아모르가구에서 일어났다. 파업에 등장한 첫 번째 구호는 "돈 쥐! 돈 쥐! 아모르 아저씨, 돈 쥐!". "5만원 가불해서 밥 사먹으면 끝"인 이들은 상습적인 임금 체불에 일손을 놓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두 번째 작품인 <동행>은 파업 결과가 어찌 될지 몰라 불안해 하는 그들 편에 서서 협상중재자로 나선 부천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씨와 이주노동자들의 이틀 간의 동행을 섬세히 따라잡은 작품이다.

2002년 4월 분노한 이주노동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다. 이들은 '이주노동자'라는 이름으로 서서히 조직되고 있었다. 세 번째 작품인 <스탑 크랙다운>은 단속 추방에 항거하는 이주노동자들의 외침이 쩌렁쩌렁 울렸던 2002년 이주노동자 투쟁을 담았다. 그 중에서도 이들의 선봉장 역할을 했던 꼬빌과 비두, 이 두 사람의 용기와 헌신에 카메라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있다.

마지막 작품은 이주노동자들이 직접 만든 작품 <돌아가기 전에>. 미안마 출신 노동자들은 동료의 귀향을 축하하기 위해 모였다. 인터뷰 중심의 이 영화는 '한국' 사람이 만든 것과는 또 다른 정서를 전해준다는 평을 받았다. "고향에 돌아가고 싶나?"는 질문에 그들 중 하나는 "가끔 꿈에서 고향에 돌아간다고 답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악몽이다. 동료의 아픔을 수평적 시선에서 담아낸 마지막 이야기는 아마주어의 미숙함을 훌륭히 극복하고 있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7월 8일(화)

제 237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7년 노조탄압으로 정신질환까지

##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

조합원에 대한 식칼테러·똥물투척·집단 따돌림 등 부당노동행위로 악명 높은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중 10명이 정신질환 판정을 받아 충격을 주고 있다. 이들 중 9명은 7년에 걸쳐 벌어진 사측의 노조 활동 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고, 7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인정 신청을 냈다.

이에 앞서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노동건강연대 등 13개 단체는 공동대책위를 구성하고,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산재인정 △노동부의 특별근로감독과 책임자 구속·처벌 △문제를 방치한 노동부 관련자 문책 △사측에 의한 피해 보상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등을 요구했다.

98년 8월,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조합원 임시총회 당시 사측 구사대에 의한 폭행·똥물투척·식칼테러가 발생, 조합원 14명이 부상당한 채 병원에서 쫓겨난 바 있다. 그 후 관리자와 비조합원에 의한 업무 괴롭힘, 집단 따돌림은 물론 조합원의 잦은 부서 이동과 승진 제외, 상시적인 폭언·폭행이 이루어져왔다는 게 대책위의 설명이다. 이 과정에서 98년 180여명에 이르던 조합원이 19명으로 크게 줄었다.

신경·정신과 전문의 배기영 씨는 진단 결과 "조합원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우울이나 불안 반응을 보이는 등 적응장애를 보이고 있다"고 판정하고, "상당 기간 유해한 작업환경을 벗어나 전문적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권고했다. 특히 "기존에 치료를 받던 환자가 호전되다가도 노조와 연관된

압박을 받으면 상태가 악화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소견을 발표했다.

치료를 위해 현재 백병원에 입원 중인 김명희 청구성심노동조합 부지부장은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해 "청구성심병원에서는 조합원은 인간이 아니라 짐승"이라고 토로했다. 또 "병원 얘기만 나오면 가슴이 뛰고 몸이 떨리고 하루에도 몇 번씩 쓰러진다"며 터져 나오는 울음에 말을 잇지 못했다. 그러면서 김 부지부장은 "정년 퇴직

## "초국적 자본의 권리현장은 가라"

###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공대위 닷 올러

'초국적 자본을 위한 권리현장'이라 불리는 한미투자협정의 체결을 저지하기 위한 사회단체들의 공동대책위원회가 출범했다.

전국언론노조, 한국여성민우회 등 55개 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한미투자협정체결저지를위한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7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미투자협정을 '국가 주권을 포기하고 미국에 종속시키는 협정'이라고 규정, 협정 체결 시도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한미투자협정은 외자유치를 목적으로 환경, 노동, 교육 등의 각종 보호장치는 대폭 축소함으로써 외국 투자자들에게 최대의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서주원 사무총장은 "현재 국내에는 34개의 환경관련법이 있어 국내기업을 감시하고 환경을 보호하

까지 환자를 위해 일하기를 원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신승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지난 98년과 올해 청구성심병원 김학중 이사를 대표적인 악질 사용자로 선정해 구속·처벌을 촉구한 바 있다"고 소개하고, "이번 사건은 노동탄압이 노동자의 육체적 삶뿐만 아니라 정신까지도 무너뜨리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대위는 이번 산재신청을 계기로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측을 상대로 한 투쟁의 수위를 높여갈 계획이다.

한편 2000년 7월, 노동부 산업재해보상심사위원회는 LG전자 전 사원 정모 씨가 회사내 집단 따돌림·퇴직종용·격리근무 등에 의해 받은 스트레스를 산재로 인정한 바 있다. [강성준]

제2의 사상전향제,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 당연하다.



### 이창호의 인권이야기 ① 지옥의 묵시록 - 삼청교육

1980년 '서울의 봄'은 5월 18일 광주에서부터 유린되기 시작했다. 광주의 무고한 시민들을 학살한 전두환 일당은 7월 하순 국민을 협박하여 통일주체국민회의 출신 대통령에 취임하였다. 권력의 기반이 오로지 무력뿐이었던 그가 선택할 수 있었던 유일한 정책은 전체 국민을 공포정치 대상으로 삼는 것이었다. 그리하여 취임 직후, 신군부 집권 시나리오 가운데 하나인 소위 '삼청계획 5호'가 발동되었다.

이제 전 국민은 잠재적인 '광주의 폭도'로 간주되었다. 불량배 소탕이란 미명 하에 천인공노할 광주의 만행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였다. 국민들은 언제, 어디서, 누구에 의해 삼청교육대로 끌려갈지 모르는 불안과 공포 속에 떨어야 했다. 연일 텔레비전에서는 군부대에서 실시되는 혹독한 삼청교육의 현장을 방영했다. 다만 죽음의 현장은 은폐한 채로...

이 끔찍한 삼청교육의 폭력은 사회보호법의 제정으로까지 이어졌다. 피해자들은 또 다시 신군부에 의해 새로이 만들어진 지옥, '침송감호소'로 처박혀졌다. 그들은 사회를 더럽히는 불량배들이므로, 그들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것이야말로 '사회 정화'라는 명분으로...

그러나 과연 누가 사회를 어지럽힌 진짜 불량배였던가? 그들을 불량배로 몰고 죽음으로 내몰았던 신군부 일당이 역사의 법정에서 진짜 불량배로 낙인찍힌 지 이미 오래이다. 그런데도 아직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한은 풀리지 않고 있다. 아니 전혀 체계적인 진상규명조차 되지 않고 있다. 군부대로 끌려간 6만여 명 가운데 지금까지 밝혀진 것만 해도 54명이 현장에서 사망했고, 후유증으로 인한 사망자도 397명에 이른다. 반면 피해자나 유족들은 사망자가 1천여 명이 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국가권력이 초헌법적 권력을 발동하여 불량배로 지목한 사람들의 생명과 인권을 유린한 것이 사실임이 밝혀진 이상, 당연히 국가는 그 진상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 광주항쟁의 진상을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 것 이상의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진상을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난 다음에는 그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 가해자에게 엄중히 책임을 추궁하여야 한다. 책임 추궁에 공소시효를 내세워 방어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 삼청교육은 이미 5.18특별법이 예정하고 있었던 '현장 질서 파괴행위'임이 명백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왜 아직 삼청교육에 관한 특별법은 번번이 무산되고 있는가? 그 까닭은 그때의 가해자들이 아직도 우리 사회의 요소 요소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들은 군대와 경찰과 검찰과 국회의 일부에서 삼청교육 피해자들의 피맺힌 한을 더욱 더 깊게 증폭시키고 있다.

최근 광주지법은 정부가 배상 약속을 위반했으므로 삼청교육 피해자들에게 위자료 지급해야 한다는 선진적인 판결을 내놓았다. 하지만 약속 위반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하는데 그쳐서는 안된다. 정부가 배상 약속을 한 지 이미 15년이 흘렀다. 더 늦기 전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국가범죄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 대한 배상 약속을 이행해야 한다. (이창호 남은 경상대 법학교수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일 ~ 7월 7일)

1. 노조 때려잡는 게 글로벌 스탠다드?  
철도구조'계약법, 국회 통과...노조, 졸속 입법·경찰력 투입 강력 규탄(6.30)/ 건교부, 미복귀자 처벌 착수(6.30)/ '노조 때리기' 정치권 한목소리...여야, 노조 파업 비난(7.1)/ 철도노조, 파업 철회...업무복귀(7.1)/ 철도파업 중징계 재확인...정부 정책조정회의, "직위해제는 파면 아니다"고 해명(7.2)/ 민변, 철도파업 강경 대응 철회 촉구(7.5)/ 파업주도 철도노조 간부 2명 구속(7.7)

2. "전교조, 교실에서 꼼짝마!"  
전교조 전 집행부 5명에 지난해 연가투쟁 문제삼아 직위해제...체포영장 발부된 현 집행부 간부 7명, 명동성당 향의농성 돌입(7.1)/ "전교조 탄압해도 네이스 반대운동 계속한다"...전교조, 지도부 사법처리 중단 촉구(7.2)/ 윤덕홍 교육부총리, "연가투쟁 주동자 사법처리" 거듭 확인(7.4)/ 전교조 집행부 농성해제...연가투쟁 정당성 사법적 판단 통해 확인할 것(7.5)

3. 질기다 질겨, 산업연수제!  
유엔 이주노동자 권리협약 발효돼...한국정부 협약 비준하고 산업연수제도부터 폐지해야(7.1)/ 국회 환경노동위, 산업연수제 병행하는 '고용허가제 법안' 소위 회부...7월 임시국회서 통과될 듯(7.2)/ 경남외국인노동자상담소, 산업연수제 헌법소원(7.3)/ 한나라당, 7월내 법안 국회처리 가능 뜻 밝혀(7.6)

4. 21세기 교실에 원시 시대의 폭력이...  
학교내 원시적 체벌, 여전히 심각...참교육학부모회, 체벌 실태 발표(7.2)/ 창원지역 초등학교 과잉체벌 교사 구속...6차례에 걸쳐 학생들 폭행(7.2)/ 윤덕홍 교육부총리, "필요하다면 합의 통한 체벌 가능"(7.4)

5. "웬만해선 날 막을 수 없어"  
미, 이집트와 자유무역협정 중단...WTO제소, 공조거부에 보복(6.30)/ "미국과의 불치벌 협정 체결은 국제적 수치"...국제형사재판소 설립 1주년에 인권단체들, 미 협정 거부 촉구(7.1)/ 미, 불치벌 협정 체결 거부국에 군사원조 중단 밝혀(7.1)/ 미, 전세계 공격 가능 무기 개발 중(7.1)

6. 기타  
2기 의문사위 출범, 규명 안된 63건 재조사(7.1)/ '아웃 사이더' 발행인 임성한 씨, "전쟁·국가폭력 동참 못해" 병역거부 선언(7.1)/ 국회 법사위, 성매매방지법안 공청회 열여...피해여성 보호, 알선업자 처벌 강화' 방향에 공감 표시(7.1)/ 민주노총, 파견법 시행 5주년 맞아 기자회견 열여 파견법 철폐 요구(7.4)/ 외박 나온 의경, 고참 구타 못 이겨 자살(7.6)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7월 9일(수)

제 237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

### 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시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교육학부모회 등 43개 인권·교육·시민단체와 정당이 망라된 '네이스(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가 발족했다.

이날 오전 10시 발족 기자회견을 가진 공대위는 "네이스와 같은 중대한 인권침해 시스템을 강행하려는 정부에 맞서 범국민적 저항행동을 조직하고자 공대위를 결성했다"며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확산시키면서, 네이스는 물론 인권의 원칙을 거스르는 전자정부 구축 시도에 제동을 걸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지금까지 학부모, 교사, 인권단체, 지역대책위 등 개별 단원에서 분산돼 진행해 온 모든 네이스 반대운동 진영이 공대위를 중심으로 결집될 전망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비민주적 구성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는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대안으로 '올바른 교육정보화를 위한 정보인권위원회'를 구성, 인권의 원칙에 따른 교육 정보화의 가이드라인과 제도 개선 권고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졸업생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방적으로 네이스 시행 결정한 학교장 고발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전국 핫콜 이어달리기 △학생 정보인권 캠프 등도 진행된다. 또 '정보사회 세계정상회의' 준비를 위해 이달 중순 파리에서 개최되는 국제회의에서 네이스의 인권침해 문제를 국제사회에 알려내는 등 다양한 국제연대 활동도 함께 벌여나갈 예정이다.

특히 교육정보화위원회와 관련해 공대위는 "올바른 위원회 구성을 위해

여러 인권사회단체들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한 바 있으나, 이러한 요구를 무시한 채 지난 7월 1차 회의가 파행적으로 강행된 것을 강력히 규탄한다"면서, 위원회의 민주적인 구성을 거듭 촉구했다. 또 "한편에선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사법처리와 징계를 진행하면서 교육정보화위원회에 참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정부의 모순적인 태도를 꼬집었다.

최근 '네이스 문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교육정보화위원회의 방침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지적됐다. 공대위는 "인권기준에 따른 국가정책 판단에 있어 최고 권한을 가진 국가인권위원회가 이미 네이스의 인권침해요소를 밝힌 만큼, 교육정보화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개인정보영역 삭제 권고를 출발점으로 삼아 교육현장의 정보수집과 관리 전반에 관한 보다 심화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허혜영)

### '교육청, 네이스 선택 중용' 증거 드러나

#### 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8일 발족 기자회견에서 독단적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고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한 학교장들을 선별해 고발할 계획임을 밝히고, 1차 고발 예고자 명단을 발표했다. 고발 예고자 명단에는 서울 시내 10개 초·중학교의 학교장과 서울시교육청 장학사 등 교육관료 2명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이들이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11조(개인정보취급자의 의무) 위반을 비롯, 형법상의 직권남용죄(법 123조)와 강요죄(법 324조) 등을 적용해 고발할 방침이다.

공대위는 "이들 학교는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 수렴 없이 학교장 단독으로 네이스 시행을 결정하거나 협박, 수업권 침해 등으로 교사들에게 인증을 강요했다"고 설명했다. 수업시간에 교사를 불러내 인증을 강요하거나, 네이스로만 성적 처리를 하겠다며 성적표 발부를 지연시켜 그 책임을 미인증 교사에게 덮어씌우는 등의 방식으로 네이스를 강행했다는 것. 심지어 모 초등학교에서는 교육부가 삭제토록 한 건강기록부도 네이스로 이관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교육청이 각급 학교에 네이스 채택을 강요하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들도 함께 공개됐다. 서울시교육청 장학사가 모 고등학교 교감에게 보낸 이메일에는 "현재 한시적으로 NEIS, C/S, S/A, 수기 중에서 단위 학교별로 선택해 진행하고 있지만, 잠정적으로는 NEIS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7월 1일 서울시교육청 전문직 긴급 회의에서는 ...교장선생님, 교감선생님, 담당 장학사들의 설득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ID 등록율이 낮은 학교는 반드시 사유서를 제출하고, 이에 따른 결과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또 지난해에 있었던 강남교육청 관내 교감회의에서는 인증율을 기준으로 순위를 매겨 40등 이하 학교를 특별관리하기로 결정한 사실도 드러났다.

공대위는 이날 고발 예고된 학교장들이 네이스 시행 결정을 번복하지 않는 한, 일주일 내로 고발할 계획이다. (허혜영)



# "모멸적인 계구 사용으로 자살까지 생각한다"

## 국가인권위,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

"실제로는 손과 발에 각각 수갑과 사슬을 채운 뒤 손과 발을 몸 뒤로해서 이를 연결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사회자의 말에 청중은 모두 숨을 죽였다. 계구 사용 시연이 진행되는 20여분간, 공청회장에서는 카메라의 셔터 소리와 탄성만이 흘러나왔다.

8일 오후 2시 30분, 국가인권위원회 11층 배움터에서는 '구금시설내 계구 사용과 수용자의 인권'을 주제로 한 공청회가 열렸다.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공청회는 구금시설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계구 사용을 시연하는 것으로 포문을 열었다.

시범자의 손목에 금속수갑이 채워진 다음, 다시 팔에 포승이 채워졌다. 다음은 가죽수갑. 양쪽 손목에 가죽수갑이 채워지고 수갑에서 연결된 끈은 허리에 붙어 조여졌다. 다음은 사슬. 양팔에서 시작한 사슬은 손목을 에워싸고는 다리까지 이어져 온몸을 감쌌으며, 이들 사슬의 풀림을 방지하는 자물쇠만 무려 5개가 넘게 채어졌다. 사슬 착용 후 걸음조차 제대로 걷지 못하는 시범자를 두고 기자들은 한번만 다시 걸어달라는 주문을 연발했다.

시연이 끝난 뒤, 신양균 교수(전북대 법학)의 발표가 시작했다. 신 교수는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은 수용자에게 고문에 해당하거나 잔혹하고 비인도적이거나 굴욕적인 처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한다"며 "유엔 피구금지처우 최저기준규칙"을 비롯해 "유럽형사시설규칙" 등에서 이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우리 역시 계구의 종류와 사용요건, 기간을 보다 명확하게 법률로 정하고 의사에 의한 계속적인 관찰과 감독도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희 변호사는 "계구가 수용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사용 요건과 집행이 매우 엄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계구가 남용되거나 형벌로써 사용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계구 사용의 요건이 매우 포괄적이고도 모호한 점, 사용 기간에 대한 한계 설정이 없는 점 등이 계속

문제를 낳고 있다"며 "계구 중에 특히 사슬과 가죽수갑 등은 대표적 고문기구인 만큼, 이들의 사용은 반드시 재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슬, 가죽수갑은 고문기구 해당"

이에 대해 김안식 교정관(법무부 교정과)은 "교정시설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해 계구 사용은 불가피하다"고 전제한 뒤, "지난 6월 27일을 기준으로 전국 45개 교정시설에서 계구를 착용하고 있는 수용자는 95명이며, 이중 91.5%는 자살이나 자해 방지용으로 계구가 사용되는 등 법에 따라 매우 제한적으로 계구가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러한 김 교정관의 주장에

## 철도청, 파업하느라 수고했으니 쉬라구?

### 노조원 8천6백여명 대량징계...각계, 정부 강경탄압 비판

철도노조가 파업을 풀고 현장에 복귀했음에도 불구하고 파업 참가자들에 대한 정부의 강경 탄압이 계속되자,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등 각계 인권사회단체들은 8일 오전 10시 서울 청운동 청와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도노조와의 대화를 거부한 채 강경탄압으로 일관하고 있는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철도청은 최근의 철도파업과 관련해 이미 지난달 30일 미복귀 노조원 624명을 직위해제(징계 전 대기발령 상태)하고 1천여명에 대한 고소고발 조치를 단행한 데 이어, 7일에는 파업 노조원 가운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48명 모두를 중징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또한 철도청은 노조를 대상으로 내달 초 100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계획도 함께 밝혔다. 이에 따라 파면, 해임 등 사상 초유의 대량징계 사태는 물론, 대량 구속과 손해소송이 뒤따를 전망이다.

이에 대해 단체들은 "선 복귀 후 교

대해 올해 초 출소한 주용석 씨는 "교도소측은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계구를 사용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재소자들은 계구 사용으로 모욕감과 모멸감을 느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주 씨는 "교도소에 있을 때, 9월 초에 긴팔 옷을 입었다는 이유로 12일 동안 사슬에 묶여 대소변도 제대로 가리지 못하는 등 매우 모욕적인 일을 경험했다"고 털어놓고 "구금시설 내에서 계구가 매우 자의적이고 억압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공청회는 최근 광주교도소와 전주교도소가 한 수용자에게 무려 466일 동안이나 가죽수갑 등 계구를 사용한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계구 사용에 대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인식하에 국가인권위원회의 주최로 열렸다. (유혜정)

◎ [국가인권위 들여다보기]는 기사 넘처 내일자에 옮겨 실습니다.

섭'을 고집하며 아무런 대화도 진행하지 않았던 정부가 국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현장으로 복귀한 철도노조에 대한 무자비한 탄압을 거듭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가 철도노조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고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앞서 참여연대와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노동위원회 역시 지난 7일과 5일 각각 성명서를 내고, 정부의 대량징계 방침에 대한 강력한 우려를 표명했다. 민변 노동위원회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파업은 정부의 약속 파기로부터 비롯되었고 노조 스스로 파업을 철화한 사정 등을 참작할 때 노조와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와 손해배상 청구는 온당치 않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 신동호 대외협력부장은 "예상치 못한 탄압에 많은 조합원들이 노조를 뿌리뽑으려는 의도가 아니냐고까지 우려하고 있다"고 전하고, "현재 많은 수의 기관사들이 직위해제 당해 남은 기관사들이 하루도 못 쉬면서 운행을 하고 있는데다 대량징계 방침에 따른 불안까지 겹쳐 시민의 안전마저 위협받고 있다"고 말했다. (배경내)

## <성명서>

# 이 참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시켜야 한다

### - 법무부의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을 크게 환영하며

7일 법무부는 6회 정책위원회를 열어 가석방의 조건으로 준법서약서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1998년 사상전향제를 대체하면서 도입된 준법서약제를 도입 초기부터 반대해 온 우리는 법무부의 '당연하지만 때늦은 결정'을 지금껏 사상전향제의 폐지를 위해 싸워온 양심수들, 인권단체들과 더불어 환영한다.

법무부의 결정대로 가석방 심사 규칙이 개정되어 준법서약제가 사라진다면, 이는 1926년 치안유지법을 제정한 일제가 1933년 사법성 형사국장 통첩, 1936년 조선사상범보호관찰령을 잇따라 내놓으며 사상전향제를 도입한 이래, 무려 70여 년 동안이나 사상과 양심을 옥죄어 온 반인권적 제도를 폐지한 것으로서 실로 그 의미가 크다 하지 않을 수 없다. 아울러 이는 해방정국에서도 유지되다 1956년 분단 대한민국에서 또다시 본격적인 제도로 안착했던 사상전향제가 1998년 준법서약제로 변형되어 명맥을 유지하다 사실상 폐지되기에 이른 것이어서 그 의미는 더욱 중대하다고 볼 수 있다.

사상전향제는 폭력적으로 자신의 사상을 공안기관에 심사받고, 검증받아야 하는 굴종의 제도였다. 국법 준수 의지를 확인한다는 준법서약서도 본질적으로는 사상전향제를 이어받는 제도로 그간 한국 사회의 저급한 인권수준을 보여주는 비난의 대상이었다.

우리는 사상전향제가 자신의 사상을 지키고자 하는 수많은 양심수들에게 가했던 국가의 폭력을 기억한다. 그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고, 폭력에 굴종하여 마음에도 없는 사상 전향을 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또한 인권을 국정방점으로 설정한 지난 '국민의 정부' 하에서도 사상의 강제적 확인 제도인 준법서약제가 강요되었음도 기억한다. 김대중 정부 하에서 법무부가 나서서 국법 준수를 서약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했고,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조차 이런 정부의 입장을 옹호하는 합헌결정을 내렸던 사실은 우리 인권사에서 뼈아프게 반성해야 할 대목이다. 이는 사상·양심의 자유가 '침묵할 자유'를 넘어 적극적으로 자신의 양심을 추구할 자유이며, 어떠한 비상상황 하에서도 절대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가치라는 사실을 국가 권력이 앞서서 묵살해 온 우리 사회의 아픈 인권의 현주소였다.

이제 제도로서의 사상전향제는 준법서약제의 폐지와 함께 역사의 유물로 사라질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는 여전히 날개를 펴지 못하고 있다. 사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이 아직도 시퍼렇게 살아 양심수와 수배자들을 낳고 있으며, 보안관찰법이 다시 출소한 양심수들을 법의 이름으로 감시하고 있다. 아직도 정치인들을 비롯한 보수, 수구세력은 색깔론을 퍼뜨리며 사상검증을 하려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들은 끊임없이 국가의 시선을 의식해야 하는 자기검열의 족쇄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법과 제도, 문화가 모두 청산되어야만 근대 시민사회가 구축해온 사상·양심의 자유, 나아가 의사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는 민주사회의 기초를 놓게 될 것이다.

어떤 이유로도 인간의 사상과 양심은 침해될 수 없다. 이런 기본권을 침해하는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적 법제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행시켜야 마땅하다. 법무부가 근본적으로 우리 사회의 사상·양심의 자유를 확대하고자 한다면 준법서약제 폐지에 그치지 말고, 국가보안법과 보안관찰법의 폐지로까지 적극 나아가야 할 것이다.

2003년 7월 8일 인권운동사랑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7월 10일(목)

제 237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

### 한미‘투기’협정이 물고 올 악영향 짚는 토론회 열려

한미투자협정은 과연 경제적 실익을 가져올까? 9일 ‘한미투자협정저지위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와 ‘자유무역협정·WTO반대국민행동’이 공동 주최한 토론회 자리에 모인 각 분야의 전문가들은 ‘한미투자협정이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은 경제적·문화적 종속협정에 불과하다’고 입을 모았다.

최근 스크린쿼터 문제를 비롯해서 한미투자협정이 노동·환경·교육·문화 등 사회 각 분야를 관통하는 주요 사안으로 대두되면서 지난 7일 공동대책위가 꾸려진 데 이어, 이날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는 ‘한미투자협정의 문제점을 짚는 토론회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오전 ‘한미투자협정 저지와 스크린쿼터 지키기’ 영화인 결의대회를 가진 문화·영화계 인사들이 대거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주제발제에 나선 이해영 교수(한신대 국제관계학)는 “한미투자협정은 투자협정이 아닌 투기협정”이라며 협정의 체결이 외자유치에 따른 경제적 실익을 가져온다는 정부의 논리를 일축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인 직접 투자를 높일 수 있다며 한미투자협정 필요론을 내세우지만 이미 주식투자까지 포함하면 국내 외국인 투자비율은 GDP(국내총생산) 대비 6.4%로 결코 낮지 않은 수준이다. 문제는 이처럼 높은 외국인 자본이 대개 직접투자가 아닌 투기성 자본이라는 것.

이 교수는 “이 협정으로 들어오는 외국자본은 공장을 짓는 데가 아니라 M&A, 즉 안 굴러가는 공장을 헐값에 사들이는 데 쓰일 것이고, 이러한 투자(?)는 한국경제의 단물만 빨아먹는 투기성일 뿐”이라며 정부의 장밋빛 시나

리오를 허상이라 비난했다.

투자 아닌 투기 자본 대량 유입될 것

현재 한미투자협정의 표준안이 공개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 교수는 지난 94년의 표준안을 검토, △투자 개념의 포괄성 △투기자본에 대한 통제 불가 △외국자본에 대한 내국민·최혜국대우 △각종 규제에서의 제외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의 이용에 따른 사법주권 침해 등의 문제점을 짚기도 했다.

환경운동연합 여영학 변호사는 국내에서 고용, 환경 등의 문제가 발생해도 국내 사법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자국의 공해산업을 수출하는 외국자본에 대해 우리 정부가 규제를 하려고 해도 외국자본은 국제분쟁센터에 한국정부를 제소할 수 있고, 이 경우 과거 외국의 사례처럼 국제분쟁센터는 기업의 손을 들어주게

될 것”이라는 것이다.

여 변호사는 미국기업 에틸사와 캐나다 정부의 소송 사례를 예로 들며, “자국의 환경보호법에 의해 에틸사의 유해물질 수입과 운송을 금지했던 캐나다 정부가 ‘투자자 보호 조항’을 근거로 한 에틸사의 소송에서 패소하여 결국 수입금지조치를 취소했다”며 한미투자협정의 위험성을 역설했다.

또 전국언론노동조합 김광범 정책실장은 “협정이 체결되면 공중파나 지역 민영방송의 지분을 외국인이 장악해 외국인이 방송사 사장이 될 수도 있다”며 “여론을 만들어내는 언론을 외국인이 지배한다는 것은 정치, 입법, 행정 등 모든 분야를 넘겨주는 것과 마찬가지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스크린쿼터 축소는 깃털에 불과하며 한미투자협정 반대투쟁의 선두에 나서고 있는 영화·문화계 역시 경제논리로 밀어붙이는 이 협정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위험성에 의견을 같이했다.

한미투자협정 저지를 위한 영화인대책위와 사회단체 대책위는 앞으로 한미투자협정의 악영향을 알려내는 대국민 홍보에 주력할 계획이다. [고근에]

## 만화사랑방

이동수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놔야

### 14일 인권위의 적극적 결정을 기대하며

현재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전원위원회에서는 외국인보호소 내 인권 침해와 관련한 진정사건을 다루고 있다. 외국인보호소는 출입국관리법상 강제퇴거 대상에 해당하는 외국인들의 일시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수용시설로서, 빠르면 오는 14일 45차 전원위원회에서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13일 4명의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들은 경기도 화성 외국인보호소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들에 따르면, 화성 외국인보호소는 지난해 10월 당사자들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비디오폴을 강제 촬영했고, 이에 항의하던 나이지리아인 폴 씨를 독방에 강제 수용했다. 또 이들은 보호소 직원들의 폭언과 함께 짝배는 73일, 길게는 4개월 이상 보호소에 ‘장기 구금’한 것 역시 인권침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진정인 가운데는 ‘서울경인지역 평등노동 이주지부’의 껌벌, 비두 씨도 포함돼 있다. 이들은 국내에서 이주노동자 투쟁과 각종 집회를 주도했다는 이유로 출입국관리소에 의해 ‘표적 추방’의 대상으로 지목돼 지난해 9월 화성 외국인보호소에 수용된 바 있다.

애초 이 사건을 맡았던 제3소위원회는 정당한 이유없이 비디오폴을 촬영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데 의견을 모았으나, 법률이 아닌 ‘외국인보호규칙’으로 피보호자를 독방에 수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타당한가에 대해서는 합의에 이르지 못해 전원위원회로 결정을 이관했다.

한편 보호소 직원들의 폭언 행사 여부에 대해서는 증거자료가 없어 기각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장기구금에 대해서도 ‘임금체불 등에 따른 소송이나 구제절차가 진행중일 경우 퇴거시키지 않는 것’은 진정인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들을 송환이 가능할 때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한 법 규정의 문제는 국회입법사항이므로 조사대상이 아니라고 판단될 전망이다.

그러나 이 사안을 다루는 인권위의 자세에는 몇 가지 아쉬움이 발견된다. 우

선 진정이 제기된 지 무려 8개월에 이른 지금까지 결정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부천 외국인노동자의 집 이란주 사무국장은 “인권위가 빨리 움직이지 않으면 보호돼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장기간 감옥 아닌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며 외국인보호소내 진정사건에 대한 빠른 대응을 주문했다.

독방 격리수용 규정을 ‘규칙’에 두어야 하느냐, ‘법률’에 두어야 하느냐의 문제로만 접근하고 있는 것도 아쉽다. 독방에 수용될 경우 면회나 독서, 운동이 금지되는 등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 이루어지게 된다. 따라서 인권위는 규칙이나 법률이냐의 문제를 넘어 독방

수용의 요건과 제한조치의 타당성을 함께 검토해 관련 법령의 시정을 권고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권위는 이 사건의 처리에 멈추지 말고, 이 참에 외국인보호소내 인권실태에 관한 심층적인 조사를 벌여 포괄적인 정책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지난 2월 이주노동자들의 인권향상을 위해 인권위가 내놓은 정책권고에는 외국인보호소에 관한 내용이 빠져있었다. 대개의 다수인 수용시설이 그러하듯, 외국인보호소내 인권수준이 열악하다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이 문제에 인권위가 적극 나서야 한다.

아울러 보호소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권침해나 장기 구금에 따른 인권침해 시비는 대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추방정책으로부터 비롯되는 것들이다. 따라서 인권위가 이주노동자 강제 추방 정책에 대해서도 인권적 판단을 내놓을 것을 기대해 본다. [배경내]

## 탈성매매 위한 사회적 지원책 마련해야

### 피해여성 치료와 재활 지원센터, 인적·물적 토대 미흡

현재 성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은 대략 33만명. 10대부터 40대까지 연령대도 다양하다. 그러나 이들 여성들의 ‘탈성매매’ 문제는 피해여성 개인의 문제로 치부돼 제도적인 지원책이 거의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다.

이에 여성단체를 중심으로 성매매 피해 여성들에 대한 치료와 재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 마련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8일에는 ‘성매매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아래 한소리회) 주최로 심포지엄이 열려 성매매 피해여성의 ‘탈성매매’를 사회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이 논의됐다. 현재 ‘윤락행위등 방지법’에 의해 설치된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당수는 여성회관등 관련기관에 설치된 상담실 형태여서 성매매 집결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위치해 있다. 공식적인 39개 성매매 집결지 가운데 독립된 여성복지상담소가 설치된 곳은 3곳에 불과한 실정. 이에 따라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어려움을 당한다 하더라도 호소할 곳조차 마땅치 않다. 게다가 성매매 여성들에 대한 서비스가 ‘관리’ 중심으로 이뤄져 여성들의 참여나 호응도도 낮은 것이 사실이다.

한국여성개발원 변화순 선임연구위원은 “그동안 이들 상담소는 성매매 문제를 여성 개인의 문제로 바라보고 탈성매매 가능성을 낮다고 판단해 정형화된 프로그램을 수행해 온 측면이 있다”며 △현장상담소 설치 △경찰 수사 단계에 대한 적극적 개입 △법률상담 △심리치료 △직업교육 등을 통해 탈성매매를 도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민호 서울시 여성정책과장은 “현장 경험이 많은 민간단체가 주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에 따라 재활지원센터나 쉼터 등을 민간에 위탁해 운영토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행정 및 재정적인 지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시는 우선 5대 성매매 밀집지역 중 상대적으로 성매매 종사 여성들이 많은 성북구 월곡지역에 상담소를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한소리회 유영남 공동대표는 “피해여성들이 안전한 장소에서 치료받고 재활을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들이 갖춰져야 하며, 이들 여성들이 상처를 극복하고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평택경찰에 얻어맞은 '에바다'

### 편파 수사이다 에바다공대위 관련자에 폭행까지

'에바다 평택 공대위' 집행위원장 김은원 씨가 평택경찰서(서장 한창호)에서 조사를 받던 도중 경찰관 2명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에바다 구재단측을 비호해 온 평택 경찰의 편파성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김 집행위원장은 지난 7일 '주거침입' 혐의로 평택서 수사2계에 소환됐다. 김 집행위원장에 따르면, 수사를 맡은 윤모 경사는 처음부터 반말로 심문했고 "반말하지 말라"고 항의하는 그에게 "폭바라 앉아라", "이 새끼가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등의 폭언을 퍼부었다. 이후 윤 경사는 김 집행위원장의 목살을 잡고 목을 비트는 등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고, 옆에 있던 고모 경장도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이 말하는 '주거침입'이란 지난 5월 28일 민주 이사진이 에바다 농아원에 진입할 당시 김 집행위원장을 비롯한 지역 노동자들과 학생 1백여 명이 함께 농아원에 들어간 것을 말한다. 구재단 측의 농아원 불법점거 상태가 계속 이어지면서 구성된 지 1년 반이 지나도록 농아원에 출입조차 못했던 민주 이사진은 이날 진입에 성공, 에바다 정상화의 계기를 마련했다.

에바다복지회 김철준 이사(법무법인 다산 대표 변호사)는 공대위 관계자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데 대해 어이없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 이사는 "이번에 소환장을 받은 김씨 등 16명은 시설 점유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사장의 요청으로 방문증을 패용하고 자원 봉사자 자격으로 들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 그럼에도 평택경찰이 이들을

주거침입 혐의로 수사하는 것은 공대위에 대한 선입견과 불공정한 법 집행의 산물이라는 게 김 이사의 해석이다.

평택 경찰의 편파성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지난해 2월 경찰은 에바다학교 권오일 교사와 당시 에바다복지회 사무국장이었던 남정수 씨가 구재단측에 의해 폭행을 당했을 때도 수방관했다. 같은 해 7월 16일에는 합법적인 권한을 가지고 들어간 이사진과 대학생들을 농아원 밖으로 강제로 끌어내 빈축을 사기도 했다.

지난 5월 에바다 진입 시 민주 이사진이 법원으로부터 '출입금지 가처분' 결정을 받은 최성창 전 이사장의 퇴거를 요청했을 때도 평택 경찰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6월 7일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농아원에 불법 난입한 구 재단측 인사들에 대해서도 미온적인 수사로 일관, 결국 전원 불구속 처리되도록 했다. "평택경찰은 최성창의 경찰인가"라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다.

김씨는 "폭행사건 이후에 윤 경사로부터 사과와 함께 문제를 키우지 말아 달라는 청탁 전화를 받았다"며 "평택 경찰은 믿을 수 없어, 당일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경찰관 처벌 △평택 경찰서장의 공개사과와 배상 (☞2면에 계속)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 자료목음

최근 법무부에 의해 폐지 결정이 내려진 준법서약제는 98년 사상전향제를 대신에 도입된 이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서약을 거부하는 감옥내 양심수들의 처우를 악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해왔다. 아래는 준법서약제 5년의 역사와 이 제도의 문제점을 되돌아볼 수 있는 자료를 묶어놓은 것이다.

#### ● 성명서

- 준법서약제 도입 반대 성명(민변/ 민가협·민주법연·인권운동사랑방, 1998)
- 준법서약서 철회를 위한 한총련 명동성당 농성단 성명(1998)
-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 환영 성명(인권운동사랑방/ 민가협, 2003)

#### ● 폐지운동 사례

- 의정부교도소 김동석 씨 단식농성 사례(1998)
- 목포교도소 최진선 씨 단식농성(1999)
- 준법서약서 관련 감옥 내 양심수 처우: 정명기 씨 사례(1999)
- 준법서약서 폐지를 요구해온 가석방자 송계호 씨 재수감 사건(1999)

#### ● 주요 참고자료

- 준법서약제 헌법소원(1999) / 헌법재판소 합헌 결정문(2002)
- 준법서약서와 전향서 - 그 종이 한 장의 의미(박원순, 1998)
- 준법서약제, 그 이후(김삼석, 1998)
- 준법서약제의 반인권성(1999, 「김대중정부 1년 국가보안법 보고서」)
- 준법서약서에 대한 고찰(이금옥, 1999, 「민주법학 15호」) [최은아]

## 미 패권전략에 종속된 안보전략 안된다

### 한미동맹관계 조정·MD체제 참여 논란...자주적 안보전략 마련해야

최근 주한미군 재배치를 비롯한 한미 동맹관계의 조정과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미사일방어체제)에의 참여 등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10일 한미연합방위체제와 MD의 문제점을 살펴보는 세미나가 열렸다. 평화네트워크 주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서는 MD의 기본적인 개념과 문제점을 짚어보고 한미연합방위체제의 성격과 문제점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현재 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는 NMD(국가영토에 대한 미사일 방어체제)와 TMD(주어진 작전지역에서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방어체제)를 포괄하는 것으로, 전반적인 미사일 방어 체제를 지칭한다.

미국이 MD를 구축하면서 내세운 공식적인 이유는 북한을 비롯한 적성 국가들의 미사일 위협을 방어하고 중국과 러시아로부터의 우발적인 미사일 발사 위협에 대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의 MD 구축전략은 세계패권 전략 중 하나라는 데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는 "MD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익을 보장하고, 우주공간을 군사적 선점함으로써 국제사회에 대한 지배권을 강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반도에서도 북핵 문제를 빌미로 우리 정부의 MD참여가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MD참여는 자칫 미국과의 군사적 종속관계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전세훈 씨(조지타운대 국가안보 석사과정)는 "한미연합방위체제는 작전 통제권이 전·평시로 이원화되는 기형적인 구조를 여전히 갖고 있고, 수직적 개념으로 이뤄진 연합방위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이 필요하다면 북한을 선제 공격한다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사정에 비춰볼 때, 우리의 MD체제 참여는 '방어'를 목적으로 하는 우리 안보전략과 상충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MD구축에 소요되는 엄청난 비용으로 우리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전쟁 위기까지 조성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백3, 이지스 전투함, 스탠더드 미사일 등 MD 관련 무기체제의 도입 비용만 6조~7조 원, 운영·유지비를 합할 경우 20조 원 안팎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평화네트워크 정옥식 대표는 "국방비 증액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미국의 필요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다"며 "미국의 안보전략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냉전적 관점을 벗어나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포괄하는 우리의 안보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대표는 "자주적인 안보전략의 수립과 작전 계획이 가능한 방향으로 군 개혁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전시작전권 환수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종식)

(이면에서 이어짐) △최 전 이사장 비호 중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한편, 폭행에 가담한 것으로 알려지고 경장은 기자회견의 전화 통화에서 "전화로는 확인해줄 수 없다"며 답변을 피했다.

(강성준)

## '제국'을 바라보는 7개의 시선

### 폭력과 억압 장치 고발하는 <옵니버스 제국> 제작 막바지

'제국'은 과연 어떤 모습인가? 현재 제작중에 있는 <옵니버스 프로젝트-제국>은 독립영화 진영의 젊은 감독 8명이 생각하는 '제국'의 양상과 본질을 총 7편의 단편영화로 표현해내고자 한다. 7편의 작품이 바라보는 '제국'은 초국가적인 지배체제를 형성하고 있는 다국적 기업과 국제기구들, 미국이 주도하는 패권적 세계질서, 일상 곳곳에서 마주칠 수 있는 가부장적 시선에 이르기까지 범주가 넓다. 프로듀서인 최진성 감독은 "개인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모든 장치가 제국의 산물"이라고 말한다.

모두 "폭력과 억압에 대해 알레르기 지냈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각 감독이 드러내고 싶은 제국의 모습은 다소 상이하다. <빅 브라더>의 최현정 감독은 예비 신혼부부를 촬영하는 사진기자의 시선에서 권력의 질서를 기록한다. 뿐만 아니라 사진기자의 시선을 해석하고 있는 카메라를 든 감독 자신의 시선까지 성찰하려고 시도한다.

<백큐멘터리>와 <그들만의 월드컵>을 통해 인권영화제와 만났던 최진성 감독은 전쟁에 관한 이야기를 다룬다고 한다. 조지 부시는 물론 노무현, 후세인, 빈 라덴, 김정일 등 "우리를 불편하게 만드는" 세계의 권력자들을 풍자하겠다는 것. 윤성호 감독은 <산만한 제국>을 통해 단편적이라 취급하기 쉬운 사회 현상들이 실은 고리에 고리를 물고 통합적인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음을 픽션과 논픽션을 오가며 추적한다. 가령 '하이 서울 페스티벌과 보아를 키운 이수만의 사이', '이라크 침공과 네이스 시스템의 사이'를 고찰하면서 세계화의 질서가 투영된 크고 작은 지형도를 들추어 낼 생각이다.

<매향리로 돌아가는 먼길>에서 전쟁과 폭력, 군사주의의 황포를 고발했던 고안원석 감독은 비슷한 맥락에서 <해...우산을 쓰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만들고 있다. "한국에 들어와 있는 미국의 핵" 문제를 다루면서 무장한 세계화의 핵심인 미 군사주의의 폭력을 예기하기 위해서이다.

장건재 감독은 <싸움에 들게 하지 마소서>에서 폭력이 되풀이되고 있는 학교를 '제국'의 하나로 상정해 그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고, 김곡·김선 감독은 한국 사회의 이주노동자 문제를 실험적인 다큐멘터리로 표현한다. 김동명 감독은 인간의 욕망이라는 차원에서 '제국'에 접근할 생각이다.

<옵니버스 프로젝트-제국>은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실험영화, 극영화, 다큐멘터리, 뮤직 비디오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고정화되어 있는 기존의 영화 형식과는 다른 면모를 선보인다고 한다. 막바지 작업이 한창인 이 작품은 올 9월과 10월쯤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이진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

### 유가족들, 교도소 가혹행위 의혹 제기

수감중인 미결수가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9일 새벽 2시 20분 경 영등포교도소에 수감중인 미결수 안모 씨(31세)가 화장실 창살에 목이 매인 채 발견돼 병원으로 옮겼으나 사망했다.

10일 법무부는 "안씨가 자신의 거실 화장실 철창에 속옷으로 만든 끈을 이용하여 목을 땄다"며, "1심 재판에서 15년이라는 중형선고에 이어 2심을 앞두고 여죄사건 조사에 따른 불안감과 교도소의 처우 불만으로 자살한 것으로 추정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안씨의 가족들은 "안씨가 미결수이고, 2심 재판을 이틀 앞둔 지금 자살할 리가 없다"며 안씨의 죽음에 의문을 제기했다. 더욱이 가족들은 죽은 안씨 몸에 군데군데 멍 자국이 있다며 교도소 측의 가혹행위 여부를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영등포 교도소 최윤수 보안과장은 "8일 안씨가 경찰의 추가조사를 받다가 조사를 거부하고 독방을 요구했을 때 안씨에게 수갑을 채운 것은 사실"이라며, 그러나 "거실 입실을 거부하는 안씨에게 수정(수갑)을 채우는 것은 합법적인 조치였다"고 밝혔다. 최 과장은 "심리적 불안 상태에 있는 수용자를 사고발생의 우려가 있는 독방에 수용할 수 없어 안씨를 설득해서 진정시킨 상태에서 혼거방에 입실시켰다"고 설명했다. 안씨 몸의 멍 자국에 대해서도 "가슴의 멍은 심폐소생술 때문에 생긴 것이고 다른 멍 자국은 시신에 나타나는 시반"이라며 가혹행위 의혹에 대해 강력히 부인했다.

안씨는 유서에서 "(교도관이) 독거를 부탁하는 날 목하면서 강제로 수갑을 채우고 혁수정을 채우려 했다"며 "집

승 같은 대접을 받았다"고 호소하며 가족들에게 검찰 고소를 부탁했다. 이에 유가족들은 교도소 측의 가혹행

위 여부에 대한 철저한 진상 조사를 요구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한 상태이다.

안씨가 죽음에 이르게 된 데에 대한 유가족들과 교정당국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부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안씨 부검은 12일 오전 10시에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 의해 진행될 예정이다. (☞2면에 계속)

## <논평>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

꽃다운 젊은 목숨들이 최근 잇따라 세상을 떠났다. 고참의 폭력에 시달리던 의경이 '최후의 선택'이라며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 가 하면, 고참에게 맞아 의식불명 상태에 빠져있던 전경이 끝내 목숨을 잃었다. 이들의 죽음은 폭력경찰의 대명사로 자리잡은 '전투경찰'이 그들 내부에서 또 하나의 '전투'를 일상적으로 치르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잇따라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경찰은 몇몇 지휘 책임자를 직위해제하고 가해자로 지목된 고참들을 구속하는 한편, 대원들에 대한 정신교육과 관리체계를 강화하겠다고 대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이는 '뿌리'를 건드리지 않는 미봉책에 불과하다. 이런 식으로는 결코 차가운 주검의 행렬을 멈출 수 없다.

'뿌리'는 바로 의무병들로 시위진압부대를 창설·유지하는 제도 자체에 있다. 죽은 이들은 모두 시위진압 현장에 일상적으로 동원돼 왔다. 고사리 손까지 모인 촛불집회와 노동자들의 파업현장, 민중들의 투쟁의 현장에는 지금도 이들 '진압군'의 폭력이 난무하고 있다.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고자 입대한 의무병들이 '치안보조'라는 명목으로 헌법적 권리를 유린하는 전투로 내몰리고, 군기를 잡아 전적을 높이려는 지휘자들의 폭력에 또다시 시달리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군인들을 일상적 '시위 진압'에 동원되는 전경으로 강제 차출하는 것은 시민에 대한 폭거일 뿐 아니라 이들 의무병들의 양심의 자유도 침해한다. 70년 박정희 정권 하에서 대간첩 작전 수행을 목적으로 제정된 전투경찰대설치법은 75년 경비업무, 80년 치안보조업무를 슬그머니 끼워 넣는 식으로 기형적으로 개정돼 왔다. 이후 정권은 87년 이한열과 91년 강경대 등의 죽음과 현역 전경들의 양심선언이 이어지자, 시위진압부대를 의경으로 점차 대체해나가는 '묘책'을 떠올렸다.

헌법적 권리의 행사인 집회·시위에 대한 진압을 '실전'이라고 표현한 한 의경의 말은 징병제에 의해 입대한 젊은이들이 '진압군'이 되어 자신의 이웃과 친구들을 향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 기막힌 현실을 섬뜩하면서도 간명하게 드러내준다. 국방의 의무에는 '시민을 향한 전쟁'이 결코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의무병들로 구성된 시위진압부대를 폐지하지 않는 한, 전·의경 내부의 폭력의 사슬도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광범위한 실태조사에 들어가기로 한 국가인권위원회도 이러한 뿌리에 접근한 개선책을 내놓을 것을 기대한다.

# 노조탄압 7년, 180명 노조원이 19명 된 시연

청구성심병원 폭언·폭행·감시·집단 따돌림의 실상

서울 은평구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노동자 중 10명이 심한 스트레스를 겪은 뒤 발생하는 적응장애 진단을 받고 이중 9명이 산재 인정 신청을 냈다. (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들이 스트레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하는 것은 7년 간이나 지속된 사측의 노동조합 탄압이다.

### 노동조합에 대한 악선전

이명 청구성심노조 교섭위원은 "2000년 7월 입사 당시, 중간 관리자로부터 병원이 적자인데 이는 노동조합 때문이라며 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신입사원 수련회와 입사 후 부서장 주관의 1주일 훈련기간부터 집중적으로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듣기도 했다. 노조에 따르면 각 부서 책임자가 직원들에게 "모든 일에 모든 것을 부정으로 일삼는 노조, 밖의 힘에만 의지하는 노조를 믿고 여러분의 직장 생활을 걸 것입니까?"라는 글을 읽어 주며 조합 탈퇴를 종용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 집단 따돌림과 감시

수간호사 중 유일한 조합원인 임우숙 씨는 수간호사 회의 때마다 따돌림을 당한다고 호소했다. "조합원들의 병동 배치 등 중요한 결정은 나 없이 소집된 비공식 회의에서 한다"며 "수간호사 고유의 행정업무 외에 다른 병동에서는 평 간호사가 하는 임상 차트 업무까지 배정 받았다"고 말했다. 임 씨는 또 "작년 6월 남편과 함께 우연히 어느 음식점에 들어갔다가 간호부 회식 장면을 목격했다"며 "조합원들에게는 회식 사실을 알리지도 않는 등 왕따시키고 있다"고 어이없어 했다.

한편 임 씨는 "98년부터 CCTV를 조합 사무실 앞에 설치해 사무실 출입자들을 체크해 왔다"고 소개하고 이에 항의하자 카메라 방향을 복도 쪽으로 돌려놓기만 한 채 여전히 감시하고 있

다고 설명했다. 조합원 김모 씨는 "환자 치료 중에도 동료 보조원이 커튼 뒤에서 수시로 감시하고 있다"며 "2002년 8월에는 물을 마시다가 미처 컵을 치우지 못하고 환자를 치료했는데, 5분만에 다른 층 사무실의 진료지원 부장이 '왜 물 마신 컵을 지지분하게 치우지 않고 책상 위에 올려놓느냐'며 전화했다"고 당시의 섬뜩함을 전했다.

이런 탄압 결과, 한때 180여명에 이르렀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었고, 지난 3년여 사이 노조 신규 가입자가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노조의 설명이다.

### 폭언·폭행과 업무 비협조

또 노조에 의하면, 99년에는 야간 근무자에게 인사하러 온 한 조합원을 관리자 4명이 둘러싸고 "너 여기 뭐 훔치러 왔지", "이 병신새끼,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등의 폭언을 하며 얼굴을 때리고 멍살을 잡아 내동댕이쳤다는 것이다. 이에 겁에 질린 조합원이 112에 신고했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쌍방 과실로 처리되었다. 그런가 하면 아침 친절조회 시 관리자가 조합원에게 귓속말로 "개새끼 죽인다", "씨발놈아 까불면 죽인다"며 아무 이유 없이 모욕감을 주기도 했다는 것이다.

이명 노조 교섭위원은 "조합에 가입하기 전에는 친절했던 관리자들이 이제는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 않는다"며 "같이 근무하는 비조합원에게 환자 투약 상황 등 업무상 중요한 질문을 해도 마치 없는 사람 취급하듯 대답하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이에 따른 업무 지연을 보고 관리자들은 경위서를 요구해 해고 요건을 만들려 했다는 것이 그녀의 주장이다.

서울 ○병원 서모 간호사는 "우리 병원 노조도 탄압을 받지만 청구성심병원처럼 심각한 수준은 아니다"며 "노동조합에 대한 거부감을 업무로 연결시키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가 환자들과 병원에 고스란히 돌아

가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해결책은?

노조원들은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산재 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져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노무법인 참터의 김태영 노무사는 "90년대 말부터 부서 동료 또는 직장 상사로부터 받은 스트레스에 의해 생긴 적응장애에 대해 산재로 인정되기 시작했다"며 "이번 사건은 개인적 이유가 아니라 노조를 탄압할 목적으로 폭언·폭행과 집단 따돌림이 일상적으로 발생했으므로 산재 인정 가능성이 높다"고 희망적인 전망을 피력했다.

하지만 산재 인정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다. 정상은 보건의료노조 노동안전보건국장은 "산재 인정도 중요하지만 요양 후에 조합원들이 노조 탄압 없는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사태를 이 지경까지 몰고 간 이사장의 구속과 처벌, 사태를 방지해 온 노동부 책임자 문책 등 근본적인 원인 제거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청구성심노조 이선우 지부장 역시 "탄압이 있을 때마다 노조의 법적 대응으로 사측의 부당노동행위를 인정받아 왔지만, 벌금 정도로는 사측의 태도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며 산재인정과 더불어 경영진 교체 등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노조측이 밝힌 탄압 사례에 대해, 청구성심병원 측은 "사실과 다르다"며 "아직 병원의 공식 입장은 정해지지 않았고, 추후 근로복지공단으로 제출할 반박보고서에 실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성준)

(☞1면에서 이어짐) 인권운동사랑방 유혜정 활동가는 "교도소 내 사망 사건이 올해 알려진 것만 6건에 이른다"며, "자살 여부를 떠나서 재소자 사망 사건에서 국가 책임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근교에)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F) 02-741-5364 ·천리안) rights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http://www.sarangbang.or.kr

## 전산시설 노동자는 파업 제와?

### 기본권 제한하는 노동법 개악안 국회 제출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금지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돼, 헌법상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정동영(민주당), 안택수(한나라당) 등 여야 국회의원 30명이 지난 9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제출한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아래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작업'을 규정하는 제38조 2항에 '전산시설의 손상을 방지하기 위한 작업'을 추가하도록 하고 있다.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동법 제91조 1항)이 부과된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구종태(민주당) 의원 측 비서관은 "지난 6월 조흥은행 파업 시 노조의 전산실 가동 중단 경고로 국가 전체 은행망이 마비될 위기를 겪지 않았느냐"며, "은행·철도·가스·발전 등 국가기간산업의 경우 파업으로 인해 전산망이 마비되면 복구 불가능한 혼란이 우려된다"고 법안 취지를 소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기존의 제38조 2항은 쟁의 기간 중 가동을 멈추면 이후 쟁의가 타결되더라도 심각한 손해가 예상되는 중요 작업 시설에 한해서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개정안의 추가 조항은 전산시설 노동자의 파업을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헌법으로 보장된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위원장 이용득) 유선기 정책국장은 "지

난 조흥은행 파업 때도 파국은 막기 위해 필수인력이 전산실에 남아 있었다"며 "파업 중 전산실 운영 부분은 노사간 단체협약에 규정되는 경우가

## "산재 인정도 못받고 4년간 병원 전전"

### 근골격계 질환 여성노동자, 산재 불인정 항의 1인 시위

"팔이 아파서 손을 올리는 일은 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병원 진단을 받으러 서울에 온 걸요"

지난 4년 간 산재신청 승인을 위해 합겹게 싸워 온 김명진(29) 씨는 오늘부터 삼성 SDI 부상공장 앞에서 '강제 사직 종용에 대한 항의'와 '산재 불인정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인다.

93년 삼성 SDI 입사 후, 98년 구조조정으로 사내기업(주)정우전자에 재입사 했던 김 씨는 99년 8월 회사를 그만둔 뒤 당시 회사가 산재신청을 이유로 사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을 전전하면서 알게 된 병명은 '근막통증후군'이라는 근골격계 질환. 99년 김 씨의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은 '재해경위의 인과관계가 미진하고 유사 사업장의 발병 가능성이 인정되기 전에는 산재로 단언할 수 없다'는 자문의의 소견을 이유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온 몸에 기운이 없고 팔과 목, 머리 등이 아파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었다는 김 씨는 아르바이트로 병원비를 충당, 직업병 전문의를 찾아다녔다고 말했다.

그러나 올 5월 또 다시 김 씨의 산재신청이 반려됐다. 공단은 김 씨 사건

많으므로 법률로 규정할 것이 아니라 노사자율로 해결하는 것이 옳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위원장 곽태원) 고윤남 정책기획부장 역시 "개정안대로라면 시행령·시행규칙에서는 '전산시설'의 정의가 더 넓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증권·보험·각종 협동조합 등 산하노조 대부분의 사업장에 전산시설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전산 노동자들의 (2면에 계속)

이 4년 전에 이미 다른 것일 뿐 아니라, 99년에 '근막통증후군'이었다면 그 이후 현재까지 일을 계속하지 않았으니 다 나왔어야 한다며, '근막통증후군'으로 볼 수 없다고 통보한 것이다. 통증으로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김 씨는 공단의 산재신청 반려에 어이없어 했다. 더욱이 당시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던 공단이 이제 와서 '왜 재신청을 하지 않았냐'며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분통을 터뜨렸다.

김 씨를 진단한 원진녹색병원 임상혁 노동건강연구소장은 "김 씨가 작업하던 사업장 구조 사진만 보더라도 작업환경이 얼마나 열악한지를 알 수 있다"며, "환자가 발생해도 무책임하게 방치하고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지 않는 회사도 문제이고, 산재를 인정하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의 무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임 소장은 99년에 이미 직업병으로 인정을 받던 근막통증후군을 산재로 인정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행위를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김 씨는 1인 시위와 함께 공단을 상대로 한 산재불인정 책임을 묻는 행정소송도 진행할 예정이다. 김 씨는 "그 동안 힘들었지만 이제부터 싸움의 시작이라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고근에)

2003년 7월 15일(화)

제 237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이주영의 인권이야기

###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

"완쾌된다 해도 병원으로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 무슨 이야기인지 의아스러울지도 모르겠다. 완쾌됐는데, 병원에 돌아가야 하다니? 이것은 병원에서 일하다 병에 걸리고 만 청구성심병원(서울 은평구 소재, 이사장 김학중) 노동자들이 이야기다. 얼마 전 한 활동가가 전화를 해,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산재를 신청한다는 소식을 전했다. 노조원 19명 중 10명이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 '수면장애' 등의 정신질환 판정을 받았고, 그 중 9명이 산재 요양을 신청한다는 것이었다.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도 기가 찬데, 그 이유가 노조 활동에 대한 오랜 탄압 때문이란 설명을 들으니 섬뜩한 느낌마저 들었다.

청구성심병원의 노조 탄압이 큰 말썽을 빚으며 사회적 이목을 끌기 시작한 것은 지난 1998년의 일이었다. 당시 병원 측은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는 노조원들에게 동물을 퍼붓고 집단 폭행을 가했다. 노사정위원회의 중재 아래 병원 측은 폭력 책임자를 처벌하고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기로 약속했으나, 약속 이행은커녕 그 해 말 도리어 10명의 노조원들이 해고를 당했다. 그 후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괴롭힘은 일상이 되었고, 그 고통에 슬한 조합원들이 노조 탈퇴는 물론 심지어 병원까지 그만두었다.

이제 남은 조합원은 19명. 이들이 조합원이란 이유로 당한 차별과 탄압의 목록은 길고도 길다. 편파적으로 승진 대상에서 배제당하고, 일방적인 배치에 빈번하게 부서를 이동해야 했다. 노조 활동은 일상적으로 CCTV를 통해 감시당했고,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원우회도 가입할 수 없었다. 조합원들은 보다 과중한 업무에 시달렸고, 병원 쪽의 인간질에 관리자와 비조합원들로부터 따돌림에, 욕설까지 들곤 했다. 사람들은 이럴 때 '정신병에 걸리지 않는 것이 다행'이라고들 말한다. 그러나 불행히도 조합원들 여럿은 정신질환 증세를 보이는 지경에 이르러야 말았다.

무엇이 이렇게 병원을 비인간적으로 몰아가는 것일까? 일단 부당노동행위를 일삼는 관리자들이 병원에서 손을 떼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문제의 핵심에는 민간 병원의 상업성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 지역주민의 건강보다는 수익에 눈 먼 병원 입장에서, 병원 운영에 사사건건 개입하는(?) 노조는 눈엣가시일 뿐이다. 병원이 개인의 재산인 양 독단적 운영을 고집할 때, 인간적 병원이란 기대하기 힘들다. 비영리 법인인 민간병원들을 공적으로 지원하고 민주적으로 개입하고 통제하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지역주민, 환자의 건강권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병원, 일하는 사람들이 환자의 치료와 요양에 전념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자는 것이다. 청구성심병원의 조합원들도 이런 것을 요구해왔다.

그리고 지금 9명의 조합원들은 병가 중이다. 이들은 상태가 좋아져도 병원에 돌아가는 것이 무섭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그들에게 전하고 싶다. "어서 건강 회복하세요. 감시와 탄압 속에서 지켜온 여러분들의 투쟁이 '인간적인 병원'을 만들기 위한 투쟁이었음을 우리는 압니다. 기운 내세요." (이주영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8일 ~ 7월 14일)

1. 군대, 그 안에서 벌어지는 죽음의 전쟁  
'훈련'보다 내무반 '뭍서리'...전·의경 구타사고 상반기 160건(7.7)/ 부대 복귀 앞두고 투신자살...'고참 성추행 괴로워했다'(7.10)/ 천주교 인권위 전역(140)·현역사병(232) 조사, 이 중 9% '병영서 성추행 당했다'(7.11)/ 대대장이 이등병 성추행...한달 새 10여 차례, 중령 구속(7.13)/ 군복무 중 구타로 정신병 앓던 20대 자살(7.14)

2. '반쪽짜리' 준법서약서 폐지  
법무부 정책위, 준법서약서 내달 폐지 의결(7.7)/ 인권단체, 준법서약제 폐지 결정에 환영의 뜻...'보안관찰자 서약도 없어야'(7.8)/ 준법서약제 폐지 '반쪽짜리' 불과... 해외 체류 인사 준법서약서 받을 방침(7.9)

3. 네이스, 네 이놈 게 섰거라!  
전교조 연가투쟁 356명 징계(7.7)/ '네이스 법 정비 안한 채 강행'...49개 법·시행령·규칙 개정 필요 불구, 일부 고쳐(7.7)/ '정보인권 수호 대장정 시작됐다'...43개 단체,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 발족(7.8)/ '교육청, 네이스 선택 종용' 증거 드러나...공대위, 네이스 일방 강행하는 학교장·장학사 고발 예고(7.8)

4. 한반도 위기 부추기는 미국  
'전쟁반대 민족공조' 제안...장관급회담 김령성 단장 '핵문제 남북과 협의 뜻'(7.10)/ 클린턴 '북핵 '메가 딜'로 타결'...핵 포기 대가, 체재보장·식량원조 등 일괄타결 촉구(7.12)/ '미, 북 정권붕괴 작전계획 수립'...미 주간지 '럼스펠드 국방, 군사령관들에 지시'(7.13)

5. 기타  
철도파업 8천명 중징계...철도청, 손배소송도 내(7.7)/ 택경찰, 편파 수사에 예바다 공대위 관련자 폭행까지(7.7) 청구성심병원 노동자 9명, 집단 산재신청(7.7)/ 한미투자자 정 지지를 위한 공대위 닷 올려(7.7)/ 국가인권위, '구급실내 계구 사용과 인권' 공청회 열어(7.8)/ '청계천 복원 설계 대책'...노점상들 서울시청 앞 시위(7.9)/ '스크린쿼터 축소'는 것털에 불과...한미'투기'협정이 물고 울 악영향 짙는 토론회 열려(7.9)/ 감옥 사망사건 또 발생...유가족들, '혹행위 의혹 제기(7.10)/ 철도노조 '180명 중징계' 반발...당장징계 철회, 고소고발 중지 촉구(7.11)/ 새만금 반대 흥단 2명 폭행 당해(7.12)

(31면에서 이어짐) 단체행동권이 박탈되는 등 파업권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법안 통과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한편 이번 노동조합 개정안의 제출 배경을 지난 5월 화물연대 파업 이후 '국가위기관리를위한특별법'이 추진되는 등 헌법에서 보장한 기본권을 제한하려는 움직임의 연장선상으로 보고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성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국회, 이주노동자 인권유린 외면

### 산업연수제 존속시키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통과

15일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제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돼 산업연수제도의 폐지를 요구해 온 노동·인권단체들의 비판이 높아지고 있다.

산업연수생제도는 외국 인력을 노동자가 아닌 연수생 신분으로 규정함으로써 감금노동, 사업장 내 폭행, 임금체불 등 인권유린 문제를 야기해 그동안 노동·인권단체로부터 폐지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 때문에 15일 국회의 고용허가제와 산업연수생제도 병행 실시 결정은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착취와 인권유린 문제를 그대로 방치하는 반인권적 결정이라는 비난이 거세다.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 정진우 공동대표는 "병행실시는 출신국도 같고 하는 일도 거의 같은데, 누구는 노동자로서 권리를 갖고 누구는 학생과 유사한 연수생의 지위를 갖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는 결국 외국인력 제도의 파행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2003년 3월 31일을 기준으로 체류기간 3년 미만인 사람은 최장 2년 간, 3년 이상 4년 미만인 사람은 일단 출국 후 재입국 해 출국 전 체류기간과 합해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취업이 보장된다. 하지만 4년 이상 불법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강제 출국 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법이 시행될 경우, 현재 10만여 명의 이주 노동자들이 강제 출국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는 영세기업의 인력난을 심화시키는 물론, 무엇보다 강제 단속 과정에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

평등노동조합 이주노동자지부의 사멸 타과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불안에 떨지 않을 수 있도록 구제를 통해 모든 불법 체류 이주노동자들을 합법화시켜야 한다"고 밝혔다. 본인이

이주노동자이기도 한 사멸 씨는 "일부 이주노동자만을 합법화하는 제도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부연했다. 덧붙여 "사업장 이동의 자유와 노동3권을 보장하는 노동허가제도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15일 성명서를 발표, "병행실시는 이주노동자와 노동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이주노동자의 인권과 노동권을 온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허가제가 실시되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박종식]

## 장애인에게 달린 교육의 문 연다

### 14개 단체, '장애인 교육권 연대' 출범시켜

장애인 교육권 확보를 위해 장애인·교육·학부모 단체가 나섰다. 15일 오전 11시,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한국농어인협회 등 14개 단체는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교육권연대'를 출범시켰다.

이날 출범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 도경만 집행위원장은 "장애 유아 98%가 교육기관이 없어서 교육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초·중등 교육역시 시설과 교사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고등교육은 어느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다"며 장애인 교육권 보장의 초라한 현실을 폭로했다. "장애인의 무상·의무 교육을 보장하고 있는 특수교육법 등은 현실에서 사문화된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장애인참교육서울부모회 박인용 준비위원도 "정부가 예산타령을 하며 보낸 지난 수년 동안 장애인은 고동 속에서 하루하루 보내야 했다"며 "유아부터 성인에 이르기까지 장애인의 교육권 실현을 위해서 이제 교사, 학부모, 장애인들이 직접 문제를 제기하고 싸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자리에 참석했던 노들장애인야학의 이정민(37) 씨는 장애인 교육의 현실을 생생하게 증언해 주목을 받았다. 이씨는 "친구들보다 3년 늦게 초등학교에 갔지만, 휠체어를 타고는 교실의 좁고 높은 문턱을 넘어 다닐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또 "학교장들은 내게 다른 학교에 다닐 것을 요구하거나 입학조차 거절해 결국 초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했다"며, "취업을 해서 돈도 받고 친구도 사귀고 그들에게 밥도 사주고 싶었지만, 초등학교조차 받지 못한 나는 취업은커녕 기본적인 사회활동도 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았다. "장애인 교육의 문제는 결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책임이며, 교육을 받고자 하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교육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씨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장애인교육권연대는 △장애인 교육의 공공성을 담보하는 의무교육 현실화 △교육부 내 장애인교육지원과 설치 △통합교육 기반 마련을 위한 예산 확보 △특수교육기관의 교사 확보와 보조원 배치 △성인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법적 규정 등을 요구하며, 이를 위해 100만인 서명운동과 공청회 등의 활동을 벌여 나갈 계획을 밝혔다. [고근에]

2003년 7월 16일(수)

제 237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어다보기

##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 국가회의 잘못된 수사관행을 뿌리뽑기 위해 검찰과 정면으로 맞서고 있다. 지난해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사건'(아래 사망사건) 관련 인권위가 직권남용·불법체포 혐의로 고발한 담당검사 홍아무개 씨 등 10명과 수사를 의뢰한 4명에 대해 최근 서울지검이 전원 '무혐의' 처분을 하자, 인권위는 14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서울고검에 항고키로 결정했다.

사망사건 직후 검찰은 홍씨 등을 가혹행위에 대해서만 기소한 바 있다. 이에 인권위는 직권조사 등을 통해 홍씨 등을 직권남용 및 불법체포 혐의로 대해서도 고발조치 및 수사의뢰를 했던 것이다. 직권남용, 불법체포, 가혹행위는 잘못된 수사관행의 대명사로서 각각 형법 제123~125조에 해당한다.

인권위의 항고 결정은 이번이 처음으로, 잘못된 수사관행을 근절하기 위한 인권위의 강력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사망사건에 대해 직권남용·불법체포죄까지 적용할 수 없는 입장이다. 가혹행위 등에 의한 자백 위주의 수사관행을 대체할만한 과학적인 수사기법을 충분히 개발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권위는 사망사건 관련 홍씨 등을 무혐의 처분한 검찰의 논리를 세밀히 검토하고, 이에 대한 반박논리를 치밀하게 짤 필요가 있다.

△범죄혐의의 상당성, 긴급한 체포의 필요성 - 인권위는 피해자들의 자백 이외에는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으며, 피해자 장아무개 씨의 경우 검찰이 체포 3일전에 소재를 파악하고 있는 등 체포영장을 청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히 있었기 때문에 긴급체포의 필요성이 없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검찰은 고양경찰서 내 사기록, 마포경찰서 살인미제사건기록 등을 통해 범죄가능성이 농후했으며, 피해자 장씨는 도주 중이고 다른 피해자들은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는 등 긴급체포가 필요했다고 판단한다.

△불법체포의 고의성 - 또한 검찰은 홍씨 등이 직권을 남용해 피해자들을 체포·감금하려 한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한다.

△형사절차 위반의 효력 - 인권위는 검찰이 피의사실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는 등 위법한 절차에 의해 피해자들을 긴급체포한 후 신체의 자유를 박탈했기 때문에 불법체포·감금에 해당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검찰은 형사소송법 등 형사절차에 대한 위반 사실만으로 형법에 해당하는 불법체포·감금죄를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직권남용의 해석 - 피해자들은 긴급체포 후 외부와 격리된 채 폭행·가혹행위를 당해 변호인 조력권, 체포직

부심 청구권, 진술거부권의 행사를 방해 당했다. 이에 인권위는 홍씨 등이 사건의 진실발견만을 앞세워 피해자들에게 보장된 권리행사를 방해했기 때문에 직권남용의 혐의가 있다고 해석한다. 반면 검찰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는 '구체화된 권리의 현실적인 행사가 방해된 경우'에만 성립한다고 주장한다. 즉 가혹행위로 인해 결과적·반사적으로 피해자들의 권리행사에 어려움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이 곧바로 직권남용죄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특별규정 문제 - 형법상 가혹행위로 인해 사람이 다치거나 죽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아래 특가법) 위반죄가 적용된다. 따라서 홍씨 등은 형법이 아닌 특가법에 의해 기소됐다. 이를 두고 검찰은 특가법(특별규정)에 의해 기소된 경우 별도의 직권남용죄(일반규정)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한 인권위의 입장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다. [범용]

## "인권은 머리가 아닌 생활로 깨닫는 것"

### 8월 11-13일, 어린이 인권캠프 개최

"인권은 보고 느끼며 익혀나가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인권은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보고 느끼고 생활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자신의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깨달을 수 있는 곳이 인권캠프라고 말해주고 싶어요." 올해도 어김없이 참가 신청을 한 호준(13)의 대답이다.

인권운동사랑방이 주최하는 어린이 인권캠프가 올 여름으로 5회 째를 맞이한다. 올해 캠프는 8월 11일부터 13일까지 2박 3일 동안 초등학교 4·5·6학년들을 대상으로 충남 조치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린다.

어린이 인권캠프는 아이들이 서로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인권이 멀리 있는 어려운 얘기가 아니라, 아이들의 옆에서 자신을 그리고 우리를 지켜주는 것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번 캠프에서는 나이와 학년으로 인해 생기는 위계질서를 없애기 위한 대안적인 방법으로 언니, 형 등의 호칭 대신 아이들이 스스로 별칭을 만들어 부르게 된다. 인권과 친구가 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는 'Q&A'를 통해 각 질문이 아동권리협약의 어떤 조항과 관련이 있는지 찾아보고, 자신들의 권리가 무엇인지 알아본다. 또한 동화 속에서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찾아보고 인권이 보장되는 이야기로 다시 구성해 역할극을 하며, '기자'가 되어 인권신문을 만들어 보기도 한다.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인권체험마을에서는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을 이해하고 연대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이주노동자들이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기 위한 방법은 무엇인지, 새만금 갯벌에 살고 있는 생명들과 그것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람들이 간척사업으로 어떤 일을 겪고 있는지, 우리 주변의 생활 공간이 장애인을 얼마만큼 배려하고 있는지 등을 놀이와 그림, 노래 등을 통해 체험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이들의 인권이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캠프 마지막 밤에는 인권잔치가 벌어지며, 인권 저금통 등 기념품을 만드는 시간도 마련돼 있다. [김영원]

<캠프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인권교육실 김영원 02-741-5363>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학살 규명은 최소한의 국가 책무”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한국전쟁 전후 발생한 민간인 학살에 대해 국가차원의 해결책 마련을 권고했다.

16일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해 “전국적 규모의 진상조사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국가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국회의장과 국무총리에게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결정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과 관련한 대부분의 사건 전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고, 잘못된 공권력 행사로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의혹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며 “의혹해소와 억울한 희생자의 명예회복은 국가의 최소한의 책무”라고 주장했다.

특히 과거 거창사건이나 제주 4·3사건 등 일부 지역 사건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됐지만, 이처럼 일부 사건에 대한 개별적 법 제정만으로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생의 실재를 파악하고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개별법으로는 국가의 진상규명에 대한 책무를 방기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며 통합특별법 제정을 권고하기로 한 것이다.

그동안 진상조사와 희생자의 명예회복 운동을 벌여왔던 민간운동 진영은 일단 환영의 뜻을 보였다.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이창수 특별법쟁취위 위원장은 “국가기관이 공식적으로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의 문제를 중대한 인권문제로 인정했다는 것에 의미를 둘 수 있는 결정이었다”며 “과거청산의 문제를 현재의 중요 인권문제로 인

식”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위원장은 “정부나 국회의 권고 이행여부를 주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데 그동안 인권위의 역할이 미흡했다”며 “권고 결정에 대한 이행점검을 계속하여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김학철 진상규명특위 위원장은 “인권위에서 권고가 이행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과거 청산에 대한 인권위의 여러 권고를 망라해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학살에 대한 법 제정을 정부나 민간이 추진할 수 있도록 인권위가 일회성 권고만 할 것이 아니라 필요하다면 2차, 3차 권고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법제개선담당관실 손두진 사무관은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희

2003년 7월 17일(목)  
제 237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생과 관련한 법이 현재 국회에 계류중인 상태라며 당장 법 제정을 촉구하는 것에 조심스러워하면서도 “이후에 상황을 주시하며 관련부처 등에 법 제정을 촉구하고, 법 제정 후에는 시행령도 계속 모니터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가인권위원회가 북과공작원과 삼청교육 관련자에 대한 조사와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제정을 권고하는 등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권고를 해왔지만, 관련 법은 아직까지 마련되지 않고 있다. 권고와 더불어 인권위의 적극적인 후속 대응이 요구되는 시점이다. (고근예)

### 아홉번째 반딧불이

-이주노동자 관련 4편의 옴니버스

#### < 여정 >

때 : 7월 23, 24일 (수·목)

장소 : 광화문 아트큐브

시간 : 저녁 7시 30분 (1회 상영)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전·의경 구타 사망, “국가에서 책임져야”

유가족 및 인권단체 경찰청 항의, 인권위에 대책 마련 촉구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아래 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원회는 16일 오전 11시 서대문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전·의경 구타 및 사망사고에 대한 근본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유가족을 비롯해 인권단체 활동가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 군가협의 이영숙 공동회장은 “매년 300여명의 젊은이들이 군대 내에서 사망하고 있고, 상관에 의한 구타와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의 인권침해 행위 역시 매우 증가하고 있다”며 “사태의 심각성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사태해결에 적극 나서지는커녕 사건을 축소, 은폐하거나 조속한 종결에만 급급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천주교인권위원회의 오창래 조사실장은 2001년 8월부터 2003년 7월까지 약 2년 간 천주교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대내 사망사건 총 106건 중 85%인 91건이 자살로 처리됐던 점을 지적하면서 “군·경의 초동수사가 상당히 미흡하게 진행되고 있고, 유가족들이 납득할 수 없는 수많은 의문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 당국은 진상규명에 매우 소극적”이라며 의혹이 있는 모든 사망사건에 대한 전면적 재수사를 촉구했다.

이들은 군대 내 구타 및 사망사고와 관련해 △군대 내 수평적 구조 구축 △민간인이 운영하는 상담실 개설 등의 인권보호 장치 마련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가족의 구체적 권한 명시 △사고에 대한 정확한 보고 및 사건의 은폐 혹은 축소 기도에 대한 엄중 징계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을 마친 유가족 등은 최기문 경찰청장을 방문하고 대책마련을 촉구하는 항의서한을 전달하려고 했으나 경찰들의 저지로 정문 앞에서 한동안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결국 항의서한을 민원실에 접수한 유가족들은 오후에 국가인권위원회를

방문,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된 군대내 구타 및 사망사고에 대한 엄정처리 및 군대 내 인권침해에 대한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이들은 김창국 위원장 면담을 시도하며 이날 오후 늦게까지 위원장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다.

한편 올 3월부터 ‘군인의 전화’를 통한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 천주교인권위는 올 한해 모두 21건의 피해상담이 접수됐으며 이중 5건은 군대내 구타사건이라고 밝혔다. 이 사건들 가운데 3건은 피해자의 상해상태가 정신분열까지 진행됐다. 특히 전·의경에서 발생한 한 사건의 경우 소속 전경대에서 구타를 당해 다른 전경대로 전출된 대원이 새로 배치된 부대에서 채 1주일도 지나지 않아 다시 구타 및 가혹행위를 당해 정신분열증세로 병원에 입원하는 등 군대내 구타사고는 이미 위험수위를 넘은 지 오래다. (유해정)

##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구속영장 청구

연가집회와 관련, 검찰에 자진출두 해 조사를 받던 전교조직원노동조합(아래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에 따라 원 위원장은 영등포경찰서에 구금된 상태다.

지난달 21일 전교조가 정부의 네이스 강행에 철회를 요구하며 벌인 연가집회와 관련해 검찰이 ‘업무방해 혐의’로 16일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

전교조는 “연가는 법에 규정된 교사들의 권리이고, 대체·보강 수업으로 수업결손이 거의 없었다”며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를 계기로 발생한 갈등에 대해 정부와 검찰이 무리하게 법 적용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연가집회는 정부의 네이스 실행 번복이라는 ‘약속파기’로 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원 위원장에 대한 구속방침이 철회되지 않는다면 정보화위원회나 정책자문위원회의 참여 등 정부와의 모든 대화를 유보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벌여 나가겠다고 경고했다. (고근예)

### 클릭 인권정보자료

#### 이주노동자와 함께 행복한 삶을... 『지붕 위의 꾸마라 아저씨』

지은이: 조대현 외 9명/ 펴낸이: 문공사/ 2003년 6월/ 181쪽

한국에 체류중인 이주노동자의 삶을 아이들의 시선으로 엮어낸 ‘이주노동자 인권동화’가 출판됐다. 이 책은 이주노동자가 한국에 와서 겪은 갖가지 사연을 실화를 바탕으로 동화라는 형식으로 그려내고 있다. 각각의 이야기가 끝난 후에는 동화 속 주인공의 출신 나라에 대해 간략한 소개를 곁들여 이주노동자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있다.

조대현 씨 등 열 명의 동화작가가 풀어나온 인권동화는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어설픈 동정이나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대신 우리에게 ‘이주노동자와 친구하기’란 어떤 것인지 자연스럽게 느끼고 알게 해준다. 또한 한국 사회에서 이주노동자가 처한 노동조건, 문화·언어적 어려움을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학교에 다니고 싶지만 불법체류 노동자라는 부모의 신분으로 초등학교 졸업장 대신 수료증을 받은 몽골 어용일흔의 이야기,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불법체류라는 조건 때문에 당당하게 치료를 요구할 수 없었던 네팔 아저씨의 이야기, 이웃집 어린 아이를 몰고다녀 보면서 태국에 두고 온 어린 딸을 그리워하다 도둑으로 몰린 탁신 찻나와의 이야기 등등. 이 책에 등장하는 사례는 우리 주변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세밀화’ 같다. 미래에 대한 희망을 잃지 않고 현재의 고단한 삶을 이겨내고 있는 이주노동자에게 가까운 이웃이 되기 위하여 지금, 아이들과 함께 ‘인권동화’를 읽자.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노무현정부 첫 국보법 사건

### 건대생 2명 구속...〈자본론〉까지 이적표현물 지목

소위 '참여정부' 출범 후 최초의 국가보안법 사건이 터졌다. 이전 정권 시기에 '이적단체' 가입 혐의로 수배됐던 한총련 대의원이 현 정부 출범 이후 구속된 사례는 종종 있었지만, 현 정부 하에서 한총련과 관련 없는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이 터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게다가 〈자본론〉과 같이 쉽게 구할 수 있고 꽤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읽어 봤을 만한 책이 이적표현물로 지목돼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1일 건국대 법대 학생회장 김종근 씨와 같은 학교 축산대 김용찬 씨는 스스로를 "홍제동 사람들"이라고 밝힌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돼 홍제동 대공분실로 연행됐다. 14일 이들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고무·찬양(1항), 이적표현물 제작·배포(5항) 혐의로 구속됐다. 김종근 씨에게는 폭행·화염병사용·집시법 위반 혐의가 추가됐다.

두 학생의 구속 사유는 △〈맑스를 위하여〉, 〈자본론〉,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서적 소지 △〈메이데이 참가단 자료집〉, 〈빈민활동 교양자료집〉 제작·배포 등이다. 구속된 두 학생은 일상적인 학내 활동과 함께 지난해 7월 서울 안암1동 강제철거 반대투쟁에 주도적으로 참여해 왔다. 특히 김종근 씨에게 추가된 폭행 등의 혐의는 당시 석파이프와 낫, 화염병을 들고 나타난 3백여 명의 철거용역에 저항하기 위해 10여 명의 지역주민들과 함께 연대 투쟁을 전개한 것과 관련돼 있다.

18일 홍제동 대공분실 앞에서 전국민중연대 주최로 열린 구속 규탄 기자회견에서, 김종근 씨의 법대 후배 이호영 씨는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책은 시중 서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책"이라며

2003년 7월 19일(토)

제 238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제일 많은 교보문고를 구속하라!"는 피켓도 등장해 관심을 끌었다.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조영선 변호사는 "학생들이 제작·배포·소지한 출판물은 자유민주주의 기본질서에 대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고 볼 수 없다"며 "이들을 구속한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와 언론·출판의 자유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200여 인권사회단체로 구성된 '국가보안법폐지국민연대' 김성란 사무총장도 "정부가 보안법의 개정·폐지 작업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성준)

### 〈논평〉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됐다. 전교조 교사들이 집단 연가를 내고 교육행정정보시스템(네이스) 도입에 반대하는 집회에 참가하도록 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경찰과 검찰은 교원노조설립법 상 금지된 '쟁의행위 주도'란 꼬리표를 붙였다.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도 맞장구를 쳤다. 교사의 노동3권을 보장하라는 국제인권기구와 노동기구의 권고에는 눈감고, 귀 막았다.

단결권, 단체교섭권뿐 아니라 파업권 역시 교원에게도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권리란 사실은 우리 사회에서 일종의 금기에 속한다. 교원에게 단결권을 보장해 주겠다고 만든 교원노조 설립법조차 '일체의 쟁의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제한규정을 두어, 사실상 단결권마저 무력화시켰다. 더구나 전교조 교사들의 집단 연가는 엄격히 따지면 '쟁의행위'라 할 수도 없는 것이었다. 그럼에도 그런 제한적인 법에서조차 보장하고 있는 연차휴가를 토요일에 사용한 것마저 '불법'이라 도장찍고 나니, 어느새 구속 사유로 돌변해버리고 말았다.

이처럼 노조 혐오증에 눈 벌건 우리 사회의 비상식적인 현실을 익히 알면서도 교사들이 '굳이' 집단 연가투쟁을 벌인 이유는 무엇인가? 당사자의 동의도 없이 학교 밖으로 학생들의 개인 정보를 유출하고 집중시키는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서였다. 그것도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가 교육부의 약속 파기로 두 차례나 물거품이 된 후였다.

전교조를 두고 짐짓 엄한 어조로 '불법행위' 운운하는 경찰·검찰이나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은 법적 근거도 없이 네이스를 강행하고자 하는 교육부에 대해선 일언반구 말이 없다. 그들의 기준은 법전이 아니다. 단지 보수 여론에 장단맞출 뿐이다. 전교조를 범법 집단으로 낙인찍어 그들이 노리는 것은 무엇인가. 네이스 반대 투쟁의 도덕성을 훼손시키려는 것인가. 바른 말도 교육 현장을 '어지럽히는' 교사들의 힘을 약화시키려는 것인가.

법 집행을 가장한 탄압으로 교육 민주화의 대세를 되돌릴 수는 없다. 네이스 반대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시킬 수도 없다. 학생인권,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은 더 강한 물줄기가 되어 흐를 것이다. 원영만 위원장을 석방하라.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란 새로운 죄명을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면.

##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 특수고용직 노동자들, 하반기 노동3권 쟁취 결의대회 열어

"내 하루를 살아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

북상한 장마전선의 영향으로 여름비가 서울 시내를 적신 18일 오후 1시, 청와대 근처 청운동사무소 앞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힘찬 노래 소리가 울려 퍼졌다. 민주노동운동의 역사와 함께 해온 노래 '철의 노동자'의 가사만큼 이들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심정을 잘 표현하고 있는 말은 없는 듯, 노래를 부르는 노동자들의 목소리에는 절박함이 묻어났다.

민주노총 특수고용대책회의(의장 정종태) 주최로 열린 이날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결의대회'에는 쏟아지는 빗줄기에도 전국건설운송노조, 화물연대, 전국학습지산업노조, 골프장경기보조원 노조 등 전국의 특수고용직 노조 간부 60여명이 함께 했다. 특수고용대책회의는 지난해 구성된 이래 지금까지 22차례에 걸쳐 회의를 진행해 오면서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공동투쟁 방안을 모색해 왔다.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 '허울썩은 사장님'이 아니라 근로기준법과 노동관계법, 사회보험법 등의 적용을 받는 노동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하반기 입법투쟁의 중요성이 거듭 강조됐다.

민주노총 홍준표 부위원장은 "올 들어 특수고용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 때마다 비가 내렸는데, 우리들의 절실한 요구가 비가 되어 내리는 듯하다"며 말문을 연 뒤, 현 정부의 태도를 강력 규탄했다. 홍 부위원장은 "노무현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우선 과제로 공약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입법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을 배제한 상태에서 지난 5월말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들이 마련한 보호법안이 매우 기만적인 법안인 만큼,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으로 올 하반기 노동3권을 반드시 쟁취해 내자"고 격려했다.

노사정위원회 공익위원안이란 '유사근로자의 단결활동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에게 단체조

직권, 교섭권, 협약체결권 등을 부여하겠다는 방안을 말한다. 이는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의 노동자성은 인정하지 않은 채, 이들을 '유사 근로자'로 규정하고 노동3권이 아닌 임의단체의 설립권과 단체교섭권만을 부여한다는 것이어서 지난 2000년 특수고용직에 대해 노동3권과 임금, 해고 등의 근로기준법 일부 조항을 적용하기로 한 정부의 '준근로자 보호방안'에 비해서도 훨씬 후퇴한 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조합원 전원 해고 위협과 용역장패를 동원한 사측의 폭력에도 불구하고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하나의 단일노조를 설립, 73일간의 파업 끝에 지난 12

### 창살 안에 갇힌 '정보인권 보장 요구'

#### 전교조위원장 끝내 구속...전교조, 현 정부 지지 철회 선언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이 끝내 구속됐다. 지난 1989년 전교조 창립 이후 현직 위원장이 구속된 것은 초대 윤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 원영만 위원장이 네이스 반대 집단 연가투쟁을 주도한 것과 관련 업무방해 혐의로 17일 결국 구속되자, 전교조는 18일 서울 영등포동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정부의 개혁에 대한 모든 기대와 지지를 철회한다고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법률로 규정된 정당한 교원의 권리를 이용한 연가집회를 불법으로 매도하는 것은 전교조에 족쇄를 채우기 위한 '탄압'을 위한 탄압"에 불과하다"며 원 위원장을 구속한 정부를 강력 규탄했다.

전교조는 또 "원 위원장이 지난 15일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고, 도주의 의사나 증거인멸의 가능성도 없는 상황에서 구속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동원한 것은 위원장 개인에 대한 부당한 억압의 차원을 넘어 '전교조 활동 전체에 대한 비열한 탄압'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현 정부의 모든 대화나 협의기구에 대한 참여를 유보하겠다고 밝혔다.

일 사측으로부터 노조활동을 인정받은 전북 익산CC 노조 민효준 위원장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된 투쟁으로 승리를 쟁취할 수 있었다"며 연대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지난 1월 레미콘 기사들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대법 판결에도 불구하고 지난 5월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노동자성을 인정하는 판결을 얻어낸 전국건설운송노조, 지난해 입단협을 아지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부위원장의 단식농성이 일주일 넘게 계속되고 있는 재능교육교사노조, 올 들어 특수고용직 노동자 투쟁의 선봉에 나서고 있는 운송하역노조 화물연대 등도 하반기 노동3권 쟁취를 위한 연대 투쟁의 결의를 다졌다.

대회가 진행되는 도중 특수고용대책회의는 노동3권 보장을 촉구하는 서한을 청와대에 전달하기도 했다. (배경내)

향후 전교조는 장혜옥 수석부위원장을 직무대행으로 하는 비상체계를 가동, 현 정부가 포기한 교육개혁에 적극 나서는 한편, 더욱 강하고 튼튼한 교원노조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다짐했다. 또 오는 20일 오후 1시 서울 세종문화회관 뒤편에서 위원장 석방을 요구하는 전국단위 집회를 개최하고, 매주 수요일 저녁 전국 주요 도시에서 전교조 탄압 규탄과 인권 수호를 위한 촛불집회도 열어나갈 계획임을 함께 밝혔다.

전교조 위원장의 구속 소식이 알려지자, 이는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기 위한 요구를 탄압하는 것에 다름 아니라며 위원장의 석방을 요구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서를 내 "원영만 위원장을 구속한 것은 네이스 도입 과정에서 국민의 사생활과 인권을 보호하라는 정당한 목소리를 탄압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참여연대도 성명에서 "전교조의 연가투쟁 강행은 네이스를 폐기하자는 다면 교육부의 합의가 일방적으로 깨어진 데 따른 것이었는데도 전교조에 대한 일방적인 사법 처벌을 이야기하는 것은 사태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이번에 안되면 또다시 쫓긴다”

###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법무부앞 포승 시위

“이번에 안되면 5년을 또 기다려야 할지 모릅니다.” 지지부진한 한총련 수배해제와 합법화 논의를 보다 못한 전국의 수배자 가족들이 다시 나섰다. 21일 오후, 전국 각지에서 상경한 한총련 수배자 가족 등 150여명은 법무부 과천청사 앞에서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연좌시위를 벌였다. 2년째 수배중인 오선임 씨(2002년 동국대 사범대 학생회장)의 아버지 오세필 씨는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라는 높은 분 말씀에 희망을 품고 살아왔으나 수배해제가 이루어질 기미가 안 보인다”며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생업도 쫓겨치고 상경했다”고 각오를 밝혔다. 이들은 연세대 앞 천막에서 철야농성을 하면서 23일까지 상경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연좌시위에 앞서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열린 사전행사에서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대책위’ 감위원 집행국장은 “5월 13일 대법원이 지난해 10기 한총련에 대해 이적규정 판결을 내렸고, 올해 합법화 논의가 진행된 이후에도 24명의 수배자가 연행돼 대부분이 구속됐다”고 말했다. 그는 “문재인 민정수석, 강금실 장관 면담 등 해볼 것은 다해 보고 참을 만큼 참았다”며 정부가 7월 말까지 수배 해제 문제를 정리할 것을 요구했다.

5년 동안이나 수배생활을 하다 지난 4월 30일 체포된 박제민 씨(2000년 경기대 총학생회장·서총련 의장)의 어머니 김성옥 씨는 “새 정부가 대대적인 사면이라고 선전한 첫 사면일 직후에 아들이 연행돼 결국 징역 5년을 구형 받았다”며 “정부는 곧 수배해제

된다는 말을 흘리면서도 뒤에서는 학생들을 연행하고 있다”며 분개했다. 연행 학생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5월초 삭발까지 했던 김 씨는 “여기 모인 엄마들에 비하면 구치소에서나마 아들 얼굴을 볼 수 있는 나는 차라리 행복한 편”이라고 덧붙이기도 했다. 올해 한총련 11기 대의원이 된 단국대 김진희 총학생회장도 “한나라당 등

수구·반통일 세력의 눈치를 보다 합법화 결정이 늦어지게 되면 예년처럼 8월 초에는 나도 수배자가 될지 모른다”며 절박한 심정을 드러냈다. 23일까지 이어지는 수배자와 가족들의 상경투쟁은 △연세대 앞 노상감옥 시위 △청와대 앞 ‘신문고 올리기’ 시위(22일 오전 11시 30분) △민가협·민변 주최 ‘한총련 수배자 인권 실태 조사보고’(23일 오전 10시·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장) △국가보안법 폐지국민연대 등 인권사회단체 주최 ‘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합법화 촉구 대회’와 ‘수배 해제 기원 108배’(23일 오후 1시·연세대 정문) 등으로 이어질 계획이다. [강성준]

## “하청업체 직장폐쇄 뒤에는 원청이 있다”

###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노동자들, 한달 넘게 고단한 투쟁 벌여

“입사 13년차 노동자가 지난 5월 받은 임금은 총 68만9천여원, 원청인 포스코 광양제철소 노동자에 비하면 3분의 1 수준입니다.” 지난 한 달 동안 길거리에서 힘겨운 싸움을 벌여온 포스코 광양제철소 하청업체 삼화산업노조 교육부장 안지훈 씨의 설명이다. 삼화노조는 이러한 차별을 없애자고 주장하다 회사의 ‘직장폐쇄’로 지난달 길거리로 쫓겨났다. 안 씨는 “그간 회사측과 합의를 이루지 못한 사항에 대해 노조가 회사측 안을 수용하기로 했는데도, 회사가 계속 직장폐쇄로 버티고 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처럼 ‘노조에 대해 회사가 직장폐쇄로 버틸 수 있는 것’은 바로 원청인 포스코 덕분이라는 게 이들의 설명이다. 평상시에는 하청업체 사정으로 생긴 업무차질에 발끈해 온 포스코가 삼화노조의 쟁의가 시작되자, 하청업체에 업무 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포스코에 인력과견만 하는 삼화산업의 경우, 직장을 폐쇄해도 큰 손해가 없을 뿐더러 원청에서 업무부하까지 조절해 주다 보니 노조와 성실한 교섭에 나설 이유가 없다. 하청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쟁의행위 금지 조항을 약관에 포함시켜 비판을 받아온 포스코가 이번에는 이렇게 하청업체의 ‘직장폐쇄’를 은근히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예는 포스코의 또 다른 하청업체 태금산업에서도 발견된다. 태금산업노조 허형길 지회장은 “올 2월 설립된 노조가 노조활동 보장과 여름휴가를 요구하자, 회사가 이를 무조건 거부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5월 28일 노조에서 쟁의를 시작하자, 회사는 일주일도 채 안된 6월 4일에 직장폐쇄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허 지회장은 “원청은 하청업체 노조가 쟁의에 들어가면 쟁의를 이유로 계약이 파기될 수 있다는 협박공문을 하청업체 측에 보내 노조를 압박하고, 이후에 하청업체가 직장폐쇄 결정을 하면 인력을 투입시켜 노조의 쟁의를 무력화시킨다”고 비판했다. 이처럼 원청이 회사의 직장폐쇄를 은근히 도와주고 (☞2면에 계속)

## ● 김철준의 인권이야기 ● 의경 구타의 악순환 끊으려면...

지난 6일 수원 남부경찰서 소속 최모 의경이 고참의 구타에 못 이겨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뭐라 표현할 수 없는 짜증과 답답함이 아직도 내 온몸을 뒤돌고 있다.

2년 전에도 수원남부경찰서 소속의 한 의경이 시민단체의 게시판에 경찰서 내에서 자행돼온 구타의 실상과 조직적인 은폐를 낱낱이 폭로하고 도움을 호소한 적이 있다. “이번에도 이런 문제점들이 개선이 안된다면...또 다시 형식적인 조사를 한다면...5월의 어느 날 경찰청 앞에서 분신자살을 할 것입니다.”

당시 수원의 인권사회단체들은 진상조사단을 구성하고 비밀리에 피해 의경을 찾아내 제보내용이 모두 사실임을 밝혀냈다. 경찰은 뒤늦게 가해 의경을 형사처벌하고 지휘책임자를 문책했으며, 의경들에게 인권교육을 시키고, 경찰관과 의경을 1:1로 형제 결연을 맺도록 하는 대책을 마련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문제를 잊어버렸다.

하지만 지난 2년간 아무 것도 달라진 것은 없었다. 여전히 의경의 구타가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경찰의 대책이나 인권단체의 대응조차도 2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이번에도 경찰은 책임자 문책, 의경의 정신교육과 상담, 구타사고 예방 특별교육과정 신설 등 여러 대책을 쏟아냈다. 인권단체들도 인권전문가가 상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하고 있다. 이러한 대책에도 불구하고 의경의 구타문제가 근절되지 않을 거라는 나의 비관은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

우리는 먼저 경찰 안에 흐르고 있는 구타에 대한 인식과 의경을 움직이는 조직논리에 주목해야 한다. 나는 그 동안 경찰 인권교육의 과정에서 의경의 구타문제에 대한 미묘한 인식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일부 경찰은 구타가 근절돼야 할 악습인 것은 맞지만 인권활동가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너무 과장하는 것 아니냐며 반론을 제기했다. 20대의 팔팔한 젊은이들을 통솔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구타나 일차려를 묵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오히려 젊은 시절의 에피소드로 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인식이었다. 이러한 인식이 무의식적으로 구타를 방임하는 토대가 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현재 경찰은 의경의 존재 의미나 활용 목적에 비추어 볼 때 ‘사고하는’ 의경이 아니라 지휘에 ‘맹목적으로 복종하는’ 의경을 원하고 있다. 구타가 근절되기 위해서는 의경 개개인이 인권의식을 갖추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각종 시위진압 업무를 일사불란하게 수행해야 하는 의경의 의식과 구타를 용납하지 않는 의경의 인권의식은 서로 양립하기 어렵다. 이 경우, 의경 개개인의 인권의식은 부수적이거나 오히려 업무수행에 저해가 되는 것으로 취급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해결 방향은 분명해진다. 의경들 개개인이 모두 인권의식으로 무장하게 하는 데 대책의 초점이 맞춰져야 하고, 나아가 징병제에 따라 입대한 젊은이들을 강제로 시위진압 업무에 동원하는 의경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하는 것이다. (김철준님은 다산인권센터 운영위원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14일 ~ 7월 21일)

1. 산업연수생 사수 쫓기대회?  
고용허가제·산업연수제 병행 골자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환경노동위 통과...이주노동자 인권 현실 외면(7.14)/ ‘외국인근로자고용법’, 국회 법사위 통과(7.15)/ 한나라당 박상규 의원 망언...“고용허가제, 목사들이 불법체류자 뜯어먹으려는 의도”(7.16)/ 사회단체들, 박상규 의원 즉각 사퇴 촉구 시위 잇따라(7.17)/ 대전 외국인이주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성명, “산업연수생제 완전 폐지하라”(7.18)
2. 군대 갔다오면 사람... 앓, 실수! 송장 된다  
군 시절 구타로 정신병 앓던 20대 자살(7.13)/ 군의관이 간호장교 성추행(7.15)/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군가협)와 천주교인권위, 전·의경 구타·사망 근본 대책 촉구(7.16)/ 지난달 18일 상근예비역이 고참의 학대로 자살한 사실 뒤늦게 알려져(7.17)
3. 새만금, 끝나지 않은 이야기  
법원, 새만금 간척사업 잠정 중단 결정...사업백지화 가능성 내포(7.15)/ 법원, “새만금 임시 보강공사는 허용 검토”(7.16)/ 김영진 농림부장관, 새만금 중단 결정에 항의사의 표명(7.16)/ 새만금 본안소송...사업경제성, 수질오염 문제 공방(7.18)/ 새만금 보강공사 범위 논란...농림부 “4공구 끝내야”, 환경단체 “유실 발미 완공 속셈”(7.20)
4. 정보인권 사수가 죄?  
전교조 원영만 위원장, 네이스반대 연가투쟁 관련 경찰에 자진 출두(7.15)/ ‘업무방해’ 혐의로 원영만 위원장에 구속 영장 발부(7.16)/ 원영만 위원장 구속...89년 운영규 위원장 이후 처음(7.17)/ 전교조, “노정부 지지 철회”(7.18)/ 전교조, 정부 규탄집회 열고 위원장 석방 촉구(7.20)
5. 기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건대생 2명 구속(7.14)/ 노동부, ‘근골격계 예방 대책’ 내놔...질환범위 좁게 규정해 본래 취지 무색(7.14)/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6명 구속(7.14)/ 금속노조 산별교섭 첫 타결...“임금삭감 없는 주5일제” 합의(7.15)/ “장애인 실질적 교육권 확보” 위한 장애인 교육권연대 출범(7.15)/ 인권위, 민간인학살 통합특별법 제정 권고(7.16)

(☞1면에서 이어짐) 있지만, 법적으로는 어쩔할 길이 없다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그러나 상황이 절망적이지만은 않다. 삼화산업노조 안지훈 씨는 “지나해에는 광양지역에서 삼화노조 혼자 싸웠는데 지금은 태금산업노조가 함께 공동투쟁본부를 구성했고, 최근 다른 포스코 하청업체 노동자들도 원청과 하청 노동자 사이의 불평등 문제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중요한 결실”이라며 변화에 대한 기대를 내비쳤다.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높은 진료비로 '집안 휘청' 여전

###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총 진료비가 500만원 이상인 환자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본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사돼 의료의 공공성이 여전히 확보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아래 보건 의료노조, 위원장 윤영규)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12개 병원 500만 원 이상 고액진료비를 낸 환자 25명에 대한 '진료비 부담내역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본인부담률은 4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병원이 44.2%, 민간병원이 40.4%, 공공의료기관인 지방공사의료원의 경우에도 24%에 달했다. 환자부담에 대한 법정급여액이 20%인 점에 비춰볼 때, 지방공사의료원을 제외한 나머지 병원들의 경우 절반 가까이를 환자가 지불하고 있는 셈이다.

또 보험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급여 항목'에 대한 조사 결과, 종합병원 입원환자가 2인실에서 한 달간 입원했을 경우 병실료와 식대료만 195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치료와 관련한 필수 항목인 수술료, 마취료, MRI, 초음파 등까지 포함하면 환자 부담은 이를 훨씬 넘어선다.

이는 정부가 의료의 공공성을 밝힌 체 개인 부담만을 가중시키고 있는데 원인이 있다. 지난해 정부는 환자 본인부담금에 대한 보상 기준을 '월 100만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의 50%를 보상하던 것'에서 '월 120만원이 넘는 경우'로 변경, 환자들의 부담을 더욱 가중시켰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수술료, 마취료 등 비급여 항목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급여항목으로 전

환해야 한다는 게 보건의료노조의 주장이다. 정부가 보험혜택의 범위를 확대하고, 환자 부담률을 최소 25% 이하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최근 보건복지부도 환자본인부담금을 300만원 이내로 제한하는 '본인부

담상한제'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가 실질적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보험혜택 항목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병실료, 수술료, 식대 등이 모두 비급여 항목으로 돼 있는 상황에서 '본인부담상한제'의 혜택을 볼 수 있는 환자는 월 946만원 이상을 납부하는 소수에 한정된다. 보건 의료노조 양건모 의료개혁위원장은 "보험급여 항목의 확대는 물론 본인 부담 상한액을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낮춰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종식)

##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

### 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사측, 조합원 악선전까지

22일,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노동부 특별근로감독이 시작됐다. 노동부 서울서부 지방노동사무소(아래 서부사무소) 감독관 7명이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25일까지 4일간 실시된다.

청구성심병원 노조는 한 때 180명에 달했던 조합원이 19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지난 7년간 극심한 노조탄압에 시달려왔다. 이 과정에서 조합원 9명이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으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지난 7월 집단 산재를 신청했고, 노동건강연대·민주노총 등 13개 단체가 대책위를 구성한 바 있다. <본지 2003년 7월 8일자>

이날 병원 앞에서 개최된 '청구성심 병원에 대한 철저한 특별근로감독 실시 및 책임자 처벌 촉구대회'에서 대책위는 "이번 특별근로감독을 통해 일 상적으로 자행된 조합원에 대한 감시와 통제, 욕설과 폭행, 집단 따돌림, 업무 트집잡기, 승진 차별 등 숨겨진 부당노동행위와 인권탄압 실태가 반드시 밝혀져야 한다"고 요구했다.

하지만 이번 특별근로감독이 제대로 이뤄질지 걱정하는 목소리도 많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지부장 직무대행은

"98년에도 서부사무소의 특별근로감독이 있었지만, 감독관이 노조원들과 면담조차 하지 않는 등 허술하게 진행됐다"며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노무법인 참터 김태영 노무사도 "서부사무소는 98년 식칼테러 이후 계속된 부당노동행위를 막지 않아 조합원들의 정신질환까지 불러오는 업무태만을 저질러온 셈"이라며, 병원 측에 면죄부를 주는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우려했다. 김 노무사는 2000년 롯데호텔 성희롱 특별근로감독의 경우처럼, 관할 지방노동사무소가 아니라 다른 지역 감독관으로 구성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게다가 이날 병원 안에서 열린 대책위와 근로감독관의 면담 자리에 그동안 청구성심병원을 담당해온 감독관이 참석해 대책위 측으로부터 "조사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항의를 받았다. 서부사무소 측은 "사건 경과를 잘 알고 있는 담당 감독관이 특별감독관에게 상황을 설명해 주기 위해 간 것일 뿐 조사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해명했다.

이렇게 특별근로감독까지 시작되는 와중에도 사측은 조합원들에 대한 악선전을 멈추지 않고 있는 것 (2면에 계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일률적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는 "입장없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 관련해 법무부가 법 개정작업에 착수하자,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했다. 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을 규정하고 있는 법 조항은 출입국관리법 제38조 1항(아래 지문조항).

법무부는 이 지문조항의 1호를 삭제해 등록외국인에 대한 지문날인제도의 폐지를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지난 3일 법제처에 제출했다. 지문조항 1호는 '1년 이상 체류하는 20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외국인등록을 필한 자'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침해 논란이 있는 지문날인제도를 등록외국인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폐지하였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또 인권위는 지문조항 2~4호까지 대폭 손질해, 강제되지 않음을 받거나 다른 법률을 위반해 수사를 받고 있는 외국인만을 지문날인 대상으로 명확히 규정하라고 주문했다. 현 지문조항 2~4호는 △대한민국의 안전이나 이익 △신원이 확실하지 않은 자 등 추상적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 자의적 해석을 가능케 하고 있어 '입법의 명확성 원칙'에 반한다는 것이 인권위의 입장이다.

명확성의 원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모든 입법에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원리다. 이처럼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해 인권위가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한 것은 외국인에 대해 일률적 혹은 자의적으로 지문날인을 강제하는 것은 인권침해이므로, 부득이하게 지문날인이 필요한 외국인을 '명확히' 특정하라는 주문으로 해석돼야 한다.

이에 따르면 만17세 이상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강제되고 있는 내국인 지문날인제도 역시 당연히 인권침해다. 인권위도 결정문에서 "외국인의 지문날인제도(는)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프라이버시권 등과 관련되어" 있고, "외국인에 대해 지문날인이라는 불이익을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위는 이러한

해석에 동의하지 않음으로써, 스스로 이번 결정의 빛을 바꿨다. 인권위 법제개선담당관실 장영아 씨는 "이번 결정은 (지문날인제도의 인권침해성이 아니라) 법치국가의 원리인 명확성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며, "현재 인권위는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해 아무런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외국인 지문날인제도에 대해서는 명확성의 원칙을 요구한 인권위가 내국인 지문날인제도 자체에 대해 입장이 없다는 모순된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다.

##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에도 표명'마저 거절

### 동성애자 인권문제 꺼안는 교회 변화 절실

지난 4월말 자살한 동성애자 윤현석 씨의 죽음과 관련, 기독교청년단체들과 동성애자인권연대로부터 공식 사과를 요구받아온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길자연 목사, 아래 한기총)가 끝내 이들의 요구를 거절했다.

이들 단체들은 지난 4월초 '동성애는 창조질서에 대한 도전이며 가정 붕괴와 에이즈 등을 초래한다'는 내용의 한기총 성명서가 가톨릭신자였던 윤현석 씨의 죽음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다고 보고, 한기총의 사과를 요구해왔다. 지난달 23일과 이달 9일 한기총 관계자와 2차례 만남을 갖고 유감이라도 표명해 줄 것을 요구했지만, 한기총을 이를 거부했다. 단체들은 또 동성애 관련 공개 토론회를 열어 상호이해를 높이지는 제안도 했지만, 한기총은 이마저도 '공개토론회를 할 만큼 한기총 내에 입장 정리가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를 들어 거절했다.

이에 22일 한기연 등 4개 기독교청년단체와 동성애자인권연대는 한기총이 자리한 종로5가 기독교연합회관 앞에서 항의집회를 열고,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입장을 고수하며 유감 표명마저 거절한 한기총의 각성을 촉구했다. 단체들은 한기총의 태도 변화를 기다리는 것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보고, 동성애자 인권문제를 꺼안는 교회의 변화를 위해 지속적인 활동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한기연 김바울 대표는 "윤현석 씨의 죽음 이후 한기총 대응 활동을 전개해 오면서 동성애자 인권문제에 관심을 갖는 기독교인들이 증가했다"며 "넓어진 인식의 지반을 바탕으로 교계 내에서 동성애자 문제를 더욱 공론화하는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우리의 이러한 활동이 지금도 신앙과 자신의 성적 정체성 사이에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자신이 기독교 신자이기도 한 동성애자인권연대 정을 대표 역시 "동성애자들이 정체성 문제로 고민하다 마지막으로 신앙에 의지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교회가 이들을 오히려 밀어내고 있는 형국"이라며 교회의 변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기총 김청 흥보국장은 "한기총이 발표한 성명서는 청소년유해매체심의기준에서 '동성애'를 삭제토록 권고한 국가인권위를 대상으로 한 것이지, 동성애자를 정죄하려는 뜻은 없었다"면서도 공식 사과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국장은 또 "향후 동성애에 관한 신학적 정립과 선교대책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지만, 성명에서 밝힌 원론적 입장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말해 동성애를 죄악으로 규정하는 입장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밝혔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 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책임 회피 급급

"2년 전에 '이동권'이 누구의 이름이나 고 문던 시민들이 이제 고개를 끄덕이며 서명을 합니다. 그러나 정부나 서울시의 정책은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버스를 탑니다."

2001년 처음 '버스타기'가 시작된 지 꼭 2년째 되는 23일, 이날도 어김없이 '장애인 버스 타기'는 서울 해화동 로터리에서 광화문까지 진행됐다.

2001년 1월 오이도역 장애인 추락 참사를 겪으면서 출범한 이동권연대는 2001년 7월 23일 '장애인이동권쟁취를 위한 시청 앞 천막농성'을 시도 하면서 처음으로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시청까지 '버스타기'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24번째 '버스타기' 행사를 함께 한 박경석 공동대표는 "지난 2년 동안 지하철 철로 점거도 하고 종로거리에서 온몸에 사다리와 사슬을 묶고 행진하고, 한 달 넘게 단식도 했다"며 고단한 투쟁 경과를 밝혔다. 그간 몇몇 지하철에 엘리베이터가 생기고 저상버스 도입이 발표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지만 여전히 법률적으로나 정책적으로 장애인 이동권 보장이 허술하고 관계부처 역시 책임 회피에만 급급하다며 그는 분노했다.

2001년 오이도역 추락 참사 후에도 2002년 발산역 리프트 추락 참사, 2003년 송내역 승강장 추락 참사 등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이 목숨을 내걸고 이동하고 있지만, 이런 장애인의 이동권은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방치돼 있다는 것이다.

더욱이 최근의 법원 결정도 장애인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2001년 9월의 장애인들이 헌법 제10조, 제11조

등을 근거로 '이동의 권리가 제한되어 차별을 받았다'며 국가 책임을 묻는 손해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법원(서울지법 제8민사부)은 지난 4일 이들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편의시설의 설치, 관리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는 장애인들의 사회활동 참여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국가가 구현해 주어야 할 사회적 기본권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며 "아울러 이런 사회적 기본권의 구현은 국

가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채정과정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결,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박 대표는 "법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단지 여러 사회적 기본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동권은 절대적인 권리"라며, 이동 때문에 교육이며 취업에서 배제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장애인의 상황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지난 2년 동안 거리 시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 '버스타기' 운동이 앞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권리를 이해 못하는 법원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본다. (고근예)

경찰이 한총련 11기 대의원 중 일부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일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가 민가협에 의해 발표됐다. 조사는 전체 수배자 158명 가운데 30명을 선정, '일대일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된 7년 차 장기 수배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에 대한 탈퇴 회유와 협박과 함께 △동네 통장에게 "저 집 아들이 집에 있는지, 가끔씩 오는지 확인하라"고 지시 △경찰인 수배자의 아버지에게 시달서 요구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수배자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밝혔다. 민가협 측은 "총무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전에도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이버시까지

가 의 입법과정이나 정책결정과정, 무엇보다도 예산채정과정 등 사정을 고려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판결, 이동권을 외면하고 있는 정부에 면죄부를 부여했다.

박 대표는 "법원이 장애인의 이동권을 단지 여러 사회적 기본권 중 하나에 '불과'하다고 했지만, 우리에게 이동권은 절대적인 권리"라며, 이동 때문에 교육이며 취업에서 배제되고 죽음으로 내몰리는 장애인의 상황을 무시한 법원의 결정을 비난했다.

지난 2년 동안 거리 시민들의 인식에 변화를 가져 온 '버스타기' 운동이 앞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정부와 권리를 이해 못하는 법원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기대해 본다. (고근예)

## 젊음을 가둔 또 하나의 '감옥'

### 한총련 수배자, "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사라져 버렸다"

경찰이 한총련 11기 대의원 중 일부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일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가 민가협에 의해 발표됐다. 조사는 전체 수배자 158명 가운데 30명을 선정, '일대일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된 7년 차 장기 수배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에 대한 탈퇴 회유와 협박과 함께 △동네 통장에게 "저 집 아들이 집에 있는지, 가끔씩 오는지 확인하라"고 지시 △경찰인 수배자의 아버지에게 시달서 요구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수배자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밝혔다. 민가협 측은 "총무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전에도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이버시까지

경찰이 한총련 11기 대의원 중 일부를 소환한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23일 한총련 수배자 인권실태가 민가협에 의해 발표됐다. 조사는 전체 수배자 158명 가운데 30명을 선정, '일대일 대면조사' 방식으로 진행됐고 김영삼정권 시절 수배된 7년 차 장기 수배자까지 대상에 포함됐다.

조사결과에 의하면 경찰은 수배자에 대한 탈퇴 회유와 협박과 함께 △동네 통장에게 "저 집 아들이 집에 있는지, 가끔씩 오는지 확인하라"고 지시 △경찰인 수배자의 아버지에게 시달서 요구 △혼자 사는 여동생의 집을 영장 없이 수색하는 등 수배자 가족들까지 괴롭혔다고 밝혔다. 민가협 측은 "총무는 '법원의 체포영장 발부 전에도 불구속 수사를 미끼로 한 경찰의 회유와 협박이 계속됐고 이것은 수배 중에도 계속됐다'며 "이는 수배자의 양심의 자유를 침해함과 동시에 한총련과 직접 관계없는 가족의 프라이버시까지

참해했다"고 비판했다. 수배가 시작되어 생활공간이 학생회실 한편으로 한정되면 문제가 더욱 심각해진다. 체포의 위험 때문에 응답자의 50%는 병원에 한 번도 가본 경험이 없고, 도감청이나 위치 추적 때문에 핸드폰, 이메일은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가설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생리 중단에도 씻을 공간을 찾지 못해 점 △숙웃이나 생리대가 필요할 때 쉽게 구하기 힘든 점 △아무도 없는 학교 안에 혼자 있어야 할 때 느끼는 두려움 등 이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이런 차단된 생활 때문에 수배자들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의심하게 되는 습관을 가지게 되거나 △문을 잠그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거나 △형사들에게 체포되거나 총에 맞아 죽는 악몽을 꾸는 등 심리적 고립과 불안 상태에 놓인다.

수배로 친구들과 연락하기 힘들어진 한 2년차 수배자는 "순식간에 가족, 친구 등 모든 관계가 끊겨 (2면에 계속)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①

##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게 이중 감옥

재소자를 장기간 징벌방에 가두는 연속 징벌은 자살까지 부르는 반인권적 행위다. 이러한 연속 금지징벌의 문제점을 총 5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주>

지난 6월 청송 제2교도소에서 출감했다는 한 출소자가 6개월 동안 연속징벌을 당했다며 이에 대한 상담을 의뢰해왔다. 연속 징벌이란 최대 2개월로 제한된 금지 징벌을 수 차례 연이어 부과하는 것을 의미한다. 금지 징벌이 부과되면 수용자는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접견 등 외부와의 소통이 완전히 차단된 가운데, 독서·운동·작업 등 일상 생활도 모조리 '스톱' 상태에 들어간다. 이에 따라서 금지 징벌은 '감옥 안의 감옥'으로 불릴 만큼 매우 고통스러운 형벌로 수용자들에게 공포의 대상이 돼 왔으며, 특히 연속징벌은 그 가혹성과 잔혹성 때문에 울분과 고통을 참지 못해 자살하는 재소자를 양산해 왔다.

현 행형법에 의하면, 소내에서 폭력 및 자해행위를 하거나 작업, 교육 등을 거부하는 등의 행위를 하는 경우 수용자에게 징벌이 부과된다. 법에서는 징벌의 종류로 △경고 △1월 이내의 신문 및 도서열람의 제한 △2월 이내의 신청에 의한 작업의 정지 △작업상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삭감 △2월 이내의 금지 등을 명시해 놓고 있지만, 일선 교도소의 징벌은 금지 징벌밖에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실례로 2001년 7월부터 2002년 6월까지 1년 동안 교도소 재소자들에게 부과된 징벌 가운데 94.2%(전체 12,511건 가운데 11,416건)는 모두 1-2개월의 금지였다. 즉, 금지 징벌이 재소자에게 미칠 정신적·신체적 고통에 대한 고려 없이 너무나 쉽게 부과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교도관들은 "그러면 거친 '문제수'들을 어떻게 관리하겠느냐"며 금지 징벌의 정당성을 주장한다.

거기에 법무부는 한술 더 떠 행형법 등 현행 규정에는 '연속 징벌'이라는 개념은 별도로 없지만 징벌요건(행형법 46조 3항)에 해당할 경우 연속 징벌도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징벌은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거듭하여 부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행형법 46조 3항의 "동일한 행위가 아니"라는 문구가 오히려 징벌을 거듭 부과할 수 있는 명분으로 해석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일선 교도소는 법무부의 비호하에 관행적으로, 그리고 '합법적'으로 연속 징벌을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인권단체들은 연속 징벌이 그 잔혹성에 비춰볼 때 '사실상 고문'에 해당한다며 연속 징벌의 폐지를 요구해왔다. 즉, 법무부식의 법 해석은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지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지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 놓은 입법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해석이라는 것이다.

현재 연속징벌을 부과 받은 수용자의 수가 얼마 만큼인지, 그리고 그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통계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 6월 인권운동사랑방이 연속징벌의 현황을 공개하며 법무부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무부는 "연속징벌에 대한 자료는 현재 보유, 관리하고 있지 않은 자료"라고 밝혔다. 또한 국가인권위 역시 "연속 징벌로 인한 진정 건수를 따로 보관하지 않고 있다"고 밝혀 그 정확한 수치는 가능할 수 없다. 다만 "거의 모든

시설의 징벌방마다 5-6명 정도가 연속 징벌을 받고 있으며, 이들의 상태는 매우 심각하다"고 회고한 바 있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곽노현 방송대교수의 말을 빌어 연속 징벌자의 수가 무시할 수 없는 수치임을 미루어 짐작할 뿐이다. (유해정)

(이면에서 이어짐) 나는 그들 속에서 갑자기 사라져버린 '셈'이라고 서글픔을 토로했다.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 20대인 이들은 졸업 및 사회진출 문제에 대한 불안감을 공통적으로 가지게 된다. 졸업에 필수적인 교생실습을 나가지 못하는 등 사회에 나갈 어떠한 사전 준비작업도 할 수 없는 것. 그럼에도 이들이 수배 생활을 지속하는 이유는 무엇보다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지키고 싶기 때문이다. 2년째 고통받고 있는 한 수배자는 "수배생활을 하기도 구속되어 집행유예라도 받으면 더 많은 활동을 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자수하는 것이 악법을 인정하는 행위이므로, 수배를 선택함으로써 국가보안법에 대한 불복종을 표시하고 싶다"고 밝혔다.

유영업 한총련 정치수배해제 모임 대표는 "수배자들의 고통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약속해 온 수배해제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며 "수배해제의 폭 또한 누구는 되고 누구는 안 되는 식이 아니라 전면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준)

## 만화 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게시물 삭제 요구는 공안탄압”

### 민주노총, 북한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운영 재개

민주노총 '열린마당'에 게시된 북한 관련 동영상에 대한 공안 탄압과 관련, 24일 '인터넷 국가검열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인터넷 공안탄압 중단과 표현의 자유 보장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이 끝난 직후, 민주노총은 북한 관련 동영상 삭제하지 않은 채로 지난 15일 내부논의를 위해서 잠정적으로 폐쇄했던 '열린마당'의 운영을 재개했다.

지난 12일 민주노총 자유게시판 열린마당에 '선군시대'라는 이름으로 '수령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올라오자, 보수언론들은 마치 민주노총이 김일성 찬양물을 게시한 것처럼 보도하며 '색깔공세'를 퍼부었다. 15일에는 서울시경 정보과가 민주노총에 담당자를 구속하겠다고 연락했고, 이튿날 서울시경 보안과가 해당게시물의 삭제여부 확인과 접속기록을 요청하는 수사협조 공문을 방문 접수했다. 현재까지 본격적인 수사는 진행되고 있지 않은 상태다. 한편, 이 게시물이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자, 16일 정보통신윤리위원회도 기다렸다는 듯이 이전의 다른 게시물 491건에 대한 삭제를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공대위는 "인터넷에서의 자유로운 토론을 방해하는 붉은 덧칠을 즉각 중단하라"며 구시대적인 공안탄압과 그 근거가 되고 있는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공대위는 또 "위험적인 검열기구인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시정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것이며, 정보통신부 장관이 삭제 명령을 내린다면 전기통신사업법 53조에 대한 위헌소송을 다시금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에 따르면, 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유통되는 정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권고를 따르지 않을 경우 정보통신부 장관이 해당 정보의 삭제를 명령할 수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지난해 6월 정보통신부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담고 있는 이 법 제53조에 위헌결정이 내려졌지만, 정보통신부는 장관의 삭제명령권을 그대로 두고 '불온통신'을 '불법통신'으로만 바꾼 채 개정안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인터넷상

에서의 자유로운 토론과 비판을 존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하고 열린마당을 다시 열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표현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검열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임을 밝혔다.

민주노총 최세진 정보통신부장은 열린마당의 잠정 폐쇄 결정과 관련해 "총과업을 앞두고 논점이 분산되는 것을 우려해 잠정적으로 폐쇄했다"며 "하지만 내부논의를 통해 부당한 공안탄압에 대해 수세적으로 대응한 것이라는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게시판 운영을 재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진보네트워킹센터 장여경 정책국장은 "이번 사건은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온 전기통신사업법과 국가보안법이 상징적으로 결합된 사건"이라며, 검열기구와 악법을 폐지하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클릭! 인권정보자료

### 전쟁의 폭력을 기억하라 -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

평화권 모임 지음 / 2003년 7월 / 176쪽

이라크 민중이 겪고 있는 전쟁의 고통과 미국의 전쟁범죄를 고발한 자료집이 발간됐다. 지난 3월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평화를 권리로 확보하기 위한 상시적인 활동이 필요하다고 보고 '평화권 모임'을 결성, 현재까지 평화와 인권의 만남을 모색하고 있다.

자료집에는 △국제인도법의 내용 △미국의 전쟁범죄 △일지로 보는 민간인 학살과 피해 △전쟁이 가져다주는 공포와 전쟁의 부당성을 알리는 이라크인들의 목소리 △전쟁이 끝난 후에도 이라크 민중들이 겪어야 할 지속적인 고통 등이 담겨있다. 특히 전쟁이 아동의 권리에 미치는 영향과 공중보건체계의 파괴와 대량살상 무기에 따른 피해 사례가 잘 정리돼 있다. 현재 이라크의 5세미만 아동 중 최소 50만 명이 영양 실조와 저체중 상태이고, 91년 걸프전 이후 연합군에 의한 체계적인 공격으로 식수가 오염되는 등 공중보건상태가 극도의 위험으로 치닫고 있다.

자료집에 소개된 글들은 각종 외신보도와 국외 인권·평화단체들의 자료들을 참고·정리한 것으로 이라크의 실상을 깊이 있게 인식하고, 이라크 전쟁을 '이라크인의 시선'으로 볼 수 있도록 안내한다. 자료집을 통해 우리는 미국의 침략행위가 △비군사 목표물에 대한 공격 △민간인 학살 △생명권과 환경·문화권에 대한 파괴 등의 전쟁범죄로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 전쟁의 한가운데 놓여 있는 이라크 민중의 삶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어 왔음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 © 자료 문의 : 인권운동사랑방 (02-741-5363) [최은아]

## 건설일용노동자에게는 높디높은 산재보험 문턱

### 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

24일 11시 산재보험개혁공대위(아래 공대위)는 산업재해보상보험(아래 산재보험)으로 인해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차별을 당하고 있다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공대위는 "산재보험 적용에서 공사금액과 면적, 사업주의 면허소지 등에 따라 건설일용노동자를 제외하는 것은 평등권에 반하는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업 면허를 소지한 업자가 행하는 모든 공사에 산재보험이 적용되게 되었지만, 여전히 무면허 업자가 행하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나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인 공사에는 산재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있다. 공대위는 일용직 건설노동자 대부분이 건설업 면허가 없는, 2천만원 미만의 공사장에서 일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이날 인권위 진정은 지난 5월 29일 건설노동자 이종만 씨(42세)의 자살이 계기가 됐다. 이 씨는 올 1월 작업 중 허리를 다쳐 추간관 제거 수술을 받은 후, 다시 '요추 추간관 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 씨가 일한 사업장의 공사 금액이 2천만원 미만이었다. 산재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고통에다 경제적 어려움까지 겹쳐 고통 받던 이씨는 결국 경위를 알리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씨의 부인 문숙희 씨는 "다치고 나서 수술비 외에도 병원비도 많이 들었고, 다시 수술을 해야 하는 것 때문에 혼자서 회사와 병원, 그리고 노동부를 찾아다니다 모두 (산재보험) 적용이 안 된다고 하나씩 실망했던 것 같다"며 눈물을 지었다. 이 씨가 사용하던 방에는 그의 고통을 짐작할 수 있는 파스와 진통제, 찜질기, 전기치료제 등이 쌓여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현미향 사무국장은 "사회보장이 필요한 영세사업장의 저소득, 비정규직 건설노동자들은 여전히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태"라며 "이런 허술한 사회보장 제도의

문제를 밝혀, 인권위가 차별적 법률을 개선하도록 권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도 "건설산업연구원에서도 밝혔듯이 대부분의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이 2천만원 미만 공사를 하는 무면허 영세사업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지만, 이들 노동자들은 산재보험에서 제외되고 있다"며 "이들 노동자들이 산재보험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재해 사실을 노동자가 증명해야 하는 '사전승인제도' 역시 산재보험 제도의 큰 문제라는 것이 공대위의 설명이다. 업무상 발생한 재해임을 증명

하기 위해 재해 당사자가 회사의 날인, 병원 의사의 소견서, 재해경위서, 목격자의 진술서 등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근로복지공단과 병원,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복지공단의 사전승인을 받아야만 치료·요양 등의 비용을 지급받게 된다.

휴먼 산재연구소 윤성봉 소장은 "특히 질병의 경우 노동자가 업무와의 관계를 밝히기에는 매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다친 노동자가 자신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사실을 미리 알아서 증인 등 객관적 자료를 충분히 준비한 후에 근로복지공단에 찾아가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이런 사전승인제도가 노동자에게는 적절한 치료와 재활서비스의 권리를 제한하는 장벽인 한편, 사업주의 산업재해 은폐를 부추린다고 주장하며 폐지를 요구하고 있다. [고근예]

## 명동성당 집회, 사전신고 없이는 안된다?

### 강남성모병원 지부장, 집시법 위반으로 실형 선고

최근 법원이 명동성당 들머리에서의 집회를 문제삼아 노조 지부장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6일 서울지법(판사 노재관)은 사전신고 없이 명동성당에서 집회를 진행한 것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 위반이라며 강남성모병원 한용문 지부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한 지부장을 법정 구속했다. 한 지부장은 이튿날 항고했다.

강남성모병원 지부가 소속돼 있는 가톨릭 중앙의료원 노조는 지난해 9월부터 이사장인 정진석 대주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요구하며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석 달 가량 농성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런데 검찰이 파업과 관련해 1심 재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2심 재판을 기다리던 한 지부장을 집시법 위반으로 추가 기소해, 결국 실형 선고를 받기에 이른 것.

강남성모병원 황인덕 부지부장은 "2선으로 물러나 지부활동을 정리하고 있던 한용문 지부장을 지난해 집회를 빌미로 법정 구속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명동성당에서 사전신고를 하지 않은 집회와 농성이 수 차례 진행돼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독 한 지부장에게만 실형을 선고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전국보건의료노조 김성주 선전국장은 "재단을 상대로 집회를 진행한 조합원만을 집시법 위반의 잣대를 들이대 문제삼는 것은 편파적"이라고 주장했다. 한상희 교수(건국대 법학과)도 "명동성당에서의 집회를 집시법을 들이대 실형을 선고한 것은 지나치게 편협한 행태"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로 그간 사회적 약자들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최후의 의지처가 되어왔던 명동성당 고유의 역할이 훼손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인권운동사랑방 박래군 상임활동가는 "이번 판결은 민주화 운동과 인권운동이 지켜온 민주화의 성역이 공권력에 의해 침탈당한 것을 의미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강력 비판했다.

현재 한용문 지부장은 서울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며, 지난해 파업과 관련한 2심 재판이 8월 22일 열릴 예정이다. [박종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7월 26일(토)  
제 238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인한다”

### 인권단체들,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 비판

25일 대검 공안부는 올해 11기 한총련의 대의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일괄적인 수배조치를 하지는 않을 것임을 밝혔다. 또 한총련 관련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152명 가운데 79명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수배해제 조치를 단행했다.

검찰은 이날 '11기 한총련의 이적성에 대한 혐의를 두고 내사는 계속'하되, 일괄 수배조치는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이는 "변화를 선언한 한총련이 조속한 시일 내 이적단체의 굴레에서 벗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취해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해 발전적 해소와 새 조직 건설을 준비하고 있는 11기 한총련이 '이적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지 않은 채 자유로운 활동 공간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6개 인권단체들은 이날 검찰 발표와 관련한 공동성명을 내고 "지난 6년 동안 새로운 기수의 한총련이 출범할 때마다 관행적으로 이적단체로 규정하고 소환장을 발부해오던 방침을 수정한 전향적 조치"라며 일단 환영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단체들은 대검이 '한총련의 이적성에 변화가 없다'고 판단하고 내사 지속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다.

11기 한총련 정재욱 의장도 특별 성명을 통해 "한총련 대의원에 대한 일괄 수배 관행을 종식하기로 한 것은 사실상 한총련의 합법적 활동을 보장하는 것"이라며 큰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이적단체 규정의 적용 불가 방침을 함께 밝히지 않은 것은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또 검찰이 수배자나 내사 대상자 전원에 대한 '불기소 처분'을 밝히지 않고, 선별

적인 '불구속 수사' 방침을 내놓은 것 역시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날 검찰은 부총학생회장 또는 단과대학 학생회장급 당연직 대의원으로서는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기로 하고, 한총련 의장과 지역총련 의장, 총학생회장 등 중앙위원 이상

핵심 간부에 해당하는 나머지 73명은 △수사기관에 자수하고 '반성'하거나 △건강상의 이유로 수감생활이 어려울 경우 불구속 수사 등 최대한의 '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들은 "불기소"를 원칙으로 한총련 활동 과정에서 수배된 모든 이들에 대한 전면적 수배해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총련 합법화 범사회인 대책위' 강위원 집행국장도 "전반적으로는 환영할 만한 조치지만,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낙관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배경내)

### 〈논평〉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

"인터넷에서의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검열의 요구에 응하지 않겠다." 민주노총이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랐던 김일성 주석 찬양 게시물 사건으로 게시판 운영을 잠정 중단한 지 9일만에 운영을 재개하면서 밝힌 입장이다. 우리는 보수언론의 색깔 공세와 국정원, 경찰청,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합작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인권의 원칙에 충실한 태도를 견지한 민주노총에 절대적인 지지를 보낸다.

21세기를 훌쩍 넘어선 오늘날까지 한국 사회에는 여전히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이중적인 잣대가 생명력을 갖고 있다. 민주노총 게시판에 '김일성 게시물'이라고 매도한 조선일보의 게시판에도, 이번 사건을 처음 보도했던 중앙일보의 게시판에도 비슷한 게시물이 올랐지만, 이에 대한 삭제요구나 수사방침이 내려졌다는 소리는 듣지 못했다. 반면에 기껏 맑스의 『자본론』을 갖고 있었다는 이유로 얼마전 대학생 2명을 구속하더니,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에 홈페이지 게시물에 대해서는 삭제도 하고 수사도 하겠다는 것이 당국의 방침이다.

일찍이 미국 연방대법원 홉스 판사는 사상의 자유란 "우리가 동의하는 사상의 자유가 아니라, 우리가 증오하는 사상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라고 일갈한 바 있다. 하나의 사상만이 허용되는 사회는 민주주의 사회일 수 없다. 단 인종주의와 전쟁과 소수자에 대한 폭력을 선동하는 표현행위만이 제한을 받게 된다. 우리 사회에서 그토록 신주단지 모시듯 하는 국가안보와 관련해서도 "명백하고도 현존하는 위협"이 없는 한, 사상과 표현의 자유는 제한될 수 없다는 것이 인권의 상식이자 철칙이지 않는가.

그것이 맑스의 사회주의 사상이든, 주체사상이든, 김일성·김정일 부자의 업적을 찬양하는 게시물이든 관계없이, 토론하고 국민들이 판단케 하라. 국가가 미리 사상을 제단하고, 의사표현의 길에 견고한 바리케이드를 치는 반인권적 관행을 이제는 끝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인터넷에 대한 국가 검열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해체는 빠르면 빠를수록 좋다는 게 우리의 확신이다.

## 파업은 끝났지만 탄압은 계속된다

###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인권탄압 혐의 단식농성

철도 구조조정과 관련한 노정합의 파기와 대량징계에 항의하는 철도 노동자와 가족 등 30여명이 25일 오전 10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7층 인권상담센터에서 무기한 단식농성에 돌입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구속 수감돼 있는 철도노조 천환규 위원장 등 7명도 옥중 단식을 시작했다.

이에 앞서 철도노조는 업무복귀 서약서 강요 등 반인권적 노조탄압에 항의하는 진정서를 접수했다. 철도노조는 진정서를 통해 경찰이 △수배 조합원을 찾는다면 수색영장 없이 가정집을 무단 침입하여 주거의 자유를 침해하고 △6월 28일 파업 선포 2시간만에 집회를 강제 해산하고 영장없이 불법 연행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했으며 △연행된 조합원에게 업무복귀 서약서를 요구하며 거부하면 입건하겠다고 위협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동안 노동자들의 집단적인 노무거부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함으로써 사실상 강제노동을 강요하는 관행이 있어 왔던 점을 지적하며, 법원과 헌법재판소에 시정 의견 제출을 요청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 4일간의 파업을 철회하고 업무에 복귀했음에도 현재 지도부 14명이 구속되고 조합원 1045명이 고소고발 당했으며, 3차 업무복귀명령 시한을 넘긴 8600여명이 중징계를 앞두고 있는 상태다. 지금까지 세 차례의 징계위가 열려 68명이나 해고(파면과 해임)되는 등 대량 징계가 현실화되고 있다.

철도노조에 따르면, 파업이 진행중일 당시 '선 복귀·후 협상' 방침을 고수하던 철도청은 막상 노조가 파업을 철회하고 교섭을 요청하자, "우선 불법파업에 대해 사과하고, 각급 쟁의대책위원회 해체 및 불법쟁의행위의 중지를 선언"할 것을 요구하며 지금까지 사실상 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특히 지난해 발전노조의 경우처럼, '파업 불참 서약서'가 철도 조합원에게도 강요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철도노조 서울 기

관차 승무지부 김상현 교선부장은 "철도청은 복귀한 조합원에 대해 '앞으로 어떤 불법파업에도 동참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강요하는 등 노동조합을 무력화시키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철도노조 가족대책위 서예란 대표도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남편들이 스스로 파업을 철회했는데도, 철도청은 법원 판결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7월 조합비의 2/3를 불법적으로 압류했다"며 "이 때문에 조합비에서 생계비를 보조받는 해고자 가족들은 심각한 생계 위협에 처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농성 돌입과 함께 인권위 측이 농성단의 퇴거를 요청하는 공문을 농성자들에게 건네 거센 항의를 받았다. 공문에서 인권위는 철도노조의 사무공간 점거에 유감을 표시하며 "불법 점거농성을 즉각 중단하고, 불응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는 철도노조에 책임이 있다"고 경고했다. 철도노조 김응전 사무처장은 "지난달 28일, 파업 시작 2시간만에 이루어진 경찰력 투입을 보면서 우리는 노무현 정권에 대한 환상을 버렸다"며 "만약 경찰력이 투입된다면 인권의 마지막 보루라는 인권위의 반인권성 또한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권위 측은 "업무 지장과 다른 민원인의 불편을 고려해 경찰에 시설물 보호 요청을 한 것은 사실이나 경찰력 투입 요청은 결정된 바 없다"고 밝혔다. (강성준)

### “국제형사재판소의 힘, 시민사회에 달렸다”

#### 로마규정 비준국들, 서둘러 이행입법 마련해야

이달 1일 국제형사재판소(ICC)의 설립 1주년을 맞이한 가운데, 25일 '국제형사재판소의 활동과 시민사회의 역할'을 주제로 한 특별강연이 국가인권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렸다. 연사는 현재 구유고전범재판소 검찰국 상소담당관인 중국인 주웬키(Zhu Wen-Qi) 씨. 이날 강연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아래 민변)과 아시아법률지원센터(ALRC)의 주최로 지난 24일부터 열린 '국제형사재판소와 동북아시아' 워크숍의 한 행사로 진행됐다.

주웬키 씨는 "시민사회가 ICC의 설립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ICC를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엇보다 각 정부에 ICC의 근거 규정인 로마규정의 비준을 촉구하는 역할을 시민사회의 첫 번째 과제로 꼽았다. '국가주권은 국제평화의 필요성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각국 정부를 설득, 현재 90여개국에 불과한 비준국 수를 늘려 ICC가 보편적 국제기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민변의 김기연 간사는 "ICC가 전쟁범죄를 사법적으로 억제하는 기능이 있는 만큼, 현재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 동북아의 평화와 긴장 해소를 위해서도 미비준국인 일본과 중국이 로마규정을 비준하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며 시민사회의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주웬키 씨는 이어 "시민사회가 ICC의 역할과 중요성을 널리 알림으로써 각국 정부가 로마규정을 비준하게끔 국제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나아가 ICC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 전쟁범죄와 반인도적 범죄를 예방하는 데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강연 후 이어진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한국과 몽골처럼 로마규정을 이미 비준한 나라에서는 이행입법을 마련해야 ICC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행입법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ICC 당사국들이 관할범죄들을 국내에서 처벌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와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아시아법률지원센터 산지와 리아나게(Sanjeewa Liyanage) 씨는 폐막에 앞서 "중국측 인사가 최초로 참여하고 이행입법에 관한 활발한 논의가 이루어진 매우 의미있는 워크숍이었다"며 앞으로 ICC와 시민사회 앞에 놓인 도전 과제들을 해결하는 데 지혜를 모아 나가자고 강조했다. (김명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빠빠지게 일했더니 나가라뇨?”

### 31일 고용허가제법 통과 예정...10만명 강제추방 위기

“몇 년 동안 고생하며 기술도 배웠고, 한국말이며 문화도 다 배웠어요. 그런데 왜 우리보고 나가라고 하는 겁니까? 일손이 필요하면 우리를 먼저 합법화 해줘야지, 왜 내쫓나요? 너무 억울해요.” 한국에 온 지 6년이 됐다는 나담 씨(방글라데시)의 호소에는 한국에서 추방 위기에 놓인 이주노동자의 절절함이 배어있었다.

인권유린으로 악명 높은 산업연수생 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31일 국회 통과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26일 민주노동당 산하 ‘평등노동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과 시민, 학생 2백여명은 ‘법 제정 반대’ 집회를 가졌다. 참석자들은 “인권침해의 대명사인 산업연수생제가 폐지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노동3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고용허가제 역시 반대한다”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비자를 달라”고 요구했다.

특히 ‘외국인근로자고용법’에 따르면, 올 3월 31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4년 미만 체류한 이주노동자는 일단 출국했다 재입국해야 하고(출국전 기간 합산, 5년간 취업가능), 4년 이상 된 이주노동자는 모두 강제 추방된다. 이주노동자 단체들이 추정하는 4년 이상 국내 체류자는 약 10만명에 이른다.

나담 씨는 “고용허가제가 통과되면 한국에서 일한 지 4년이 넘는 나 같은 이주노동자들은 모두 자기 나라로 추방당하게 된다”며 “사람사냥이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이주노동자가 필요 없다면 당연히 돌아가야겠지만, 한국은 우리 일손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왜 일하던 사람한테

는 허가를 안 내주고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이겠다는 거죠?”라고 되물었다. 이주노동자지부 조합원 사멸 씨(네팔) 역시 “고용허가제도는 한국의 NGO와 노동단체들이 모두 없어야 한다고 주장해 온 산업연수생제도를 그대로 둔 나쁜 법”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인간답게, 노동자답게 일

2003년 7월 29일(화)

제 238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하는 것”이라며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8살 된 아들 예나와 함께 집회에 참석한 수히도 씨(방글라데시)도 “아들과 아내는 한국에 온 지 3년이 안 됐지만, 5년이 넘는 나는 이 법이 통과 되면 한국을 떠나야 한다”며 가족과의 생이별을 걱정했다.

이날 집회에 참석한 민주노동당 김혁비정규사업부장은 “고용허가제로 3년간 고용이 보장된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해 자본가 뜻대로 노동자를 부릴 수 있게 한다”며 “고용허가제는 노예노동의 속쇄에 불과하다”고 비난했다. [고근예]

## 청구성심병원 노조탄압 재조사하기로

### 편파 조사 물의...서울노동청 주관 특별근로감독 재 실시

지난 22일 시작됐던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조사 중 감독관의 편파적인 발언 등 공정성 문제로 결국 중단됐다. 감독을 주관한 서울서부지방노동사무소는 지난 98년 진행된 특별근로감독에서 노조원들과 면담도 하지 않고 조사를 끝내 문제가 된 바 있다.

청구성심노조 이명 교섭위원에 의하면, 23일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조사 자리에서 장모 근로감독관은 “부원장과 행정부원장을 만나보니 모진 사람은 아니고, 순박하고 여린 사람”이며, “경찰로 일하는 한 친구는 간, 쓸개를 냉동고에 넣어두고 출근한다고 말할 정도로 스트레스가 심한데, 그러지 않으면 직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으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말했다. 또 “별 것도 아닌 것이 괜히 감정 싸움이 되어 지금에 이른 것이니 병원을 이해해야 한다”는 발언도 했다는 것. 이 교섭위원은 “조사시간 1시간 40분 중 진술 시간은 20분 정도였고, 나머지 시간에는 조사하러 나온 사람이 마치 병원 직원처럼 우리를 설득하려 해 중간에 퇴장해야 했다”며 조사 과정의 편파성을 질타했다. 이에 대해 문제가 된 장모 감독관은 “조사 분위기가 너무 경직됐고, 조합원들이 정신적으로 불편해 할까봐 마음가짐을 편하게 가지라는 뜻이었다”고 해명했다.

결국 근로감독관이 7명이나 투입된 이번 특별근로감독은 조합원 3명의 진술만 듣고 관리자나 비조합원에 대한 대면 조사도 이뤄지지 않아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 노조탄압의 사실여부조차 규명하기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특별근로감독이 부실하게 진행되자, 25일 청구성심 공대위 대표들은 서울지방노동청 조주현 청장과의 면담을 통해, 서부사무소 주관으로 진행되던 특별근로감독을 중단하고 감독관을 전원 교체하여 서울지방노동청이 재조사한다는 약속을 받아 냈다.

한편 조합원들의 집단산재 인정 여부는 지난 25일 비공개로 열렸던 ‘자문의 협의회’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주 내 발표될 전망이다. (강성준)

## 학부모까지 동원한 교장의 여교사 탄압

### 연가집회 참가 트집...‘제2 보성초 사건’ 될까 우려

“제2의 보성초 사건 만들려고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것 같다.” 지난달 네이스(NEIS) 관련 연가집회 참가를 이유로 학교장이 학부모까지 동원해 두 여교사를 탄압하고 있는 서울 초등학교 사건에 대해, 한 교사는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 사건에는 보수 학부모단체와 교육단체까지 결합돼 있어 우려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지난달 21일 이 학교 2학년 담임 박모 교사(41)와 이모 교사(42)는 학부모 5명을 명예교사로 위촉한 뒤 연가집회에 참석했다. 그러나 학교측은 명예교사의 수업을 중단시킨 뒤, 이들을 교장실로 불러 “교사가 아이들을 내팽개쳐 두고 연가를 나가면 항의를 해야지 수업을 해주는 게 말이 되냐”며 감압적인 분위기를 행사했다는 게 두 교사의 주장이다. 당시 교장실에는 학부모 최모 씨(학교운영위원장)를 비롯, 학교단체장을 맡고 있는 학부모들이 다수 배석했다고 한다.

그때부터 이 학교 ‘간부 학부모’들은 대책위원회까지 구성하며 두 교사에게 연가집회에 참가한 것을 공개 사과할 것을 요구해 왔다. 또 지난 10일과 11일 두 차례에 걸쳐 두 교사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 다른 학부모들에게 배포하기도 했다. 이들 간부 학부모들은 모두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아래 학사모) 회원으로 확인됐다.

교장의 지원이 없다면 학부모들이 이렇게까지 교사 탄압에 앞장서기는 힘들다는 게 전교조 서울지부의 생각이다. 이들이 교장실을 상시적인 대책회의 장소로 활용했을 뿐 아니라, 이들이 배포한 유인물 역시 학교 등사실에서 인쇄되었다는 것.

더구나 이 학교 김모 교장은 교장단 회의를 통해 직접 작성한 사건 경위서를 전달,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이 두 교사 등 4명을 교원노조법 및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도록 도왔다. 교육공동체시민연합은 지난달 14일 이상주 전 교육부총리를 필두로 ‘안티 전교조’를 표방하며 보수세력들이 대거 결집해 창립한 단체다.

사태가 악화되자, 두 교사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부모들이 나서 교장의 편향성을 지적하며 학교의 정상화에 노력해 달라는 호소문을 배포했으나 허사였다. 김 교장은 방학을 앞둔 지난 18일, “전교조 소속 몇몇 교사들에 의해 학습권이 침해되는 것을 학교장의 힘만으로 막을 수 없으니, 학부모님들이 관심을 가져달라”는 내용의 ‘선동성’ 가정통신문까지 돌렸다. 각 교실을 돌아다니며 담임교사들을 설득해 가정통신문을 회수하려던 박 교사는 서러움에 북받쳐 울다 결국 의식을 잃고 쓰러져 병원으로 실려갔다. 일주일이 넘게 입원해 있던 박 교사는 지난 26일 겨우 안정을 되찾아 퇴원했다.

전교조 정상용 초등서부지회장은 “이번 사건은 평소 교장의 독단을 바로잡으려고 애쓰던 두 여교사를 학교장이 연가집회 참가를 트집잡아 탄압하려는 과정에서 일어난 것”이라고 규정했다.

이와 함께 중등학교에 비해 교장이 더 큰 제왕적 권력을 휘두르고 있는 초등학교의 특수성도 이 사건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정 지회장은 “초등학교는 여교사가 많고 같은 교대 출신의 선후배 관계로 얽혀있어(남성) 교장의 가부장적 권위의식이 매우 강하다”며 “대개의 교장들은 교사들의 입바른 소리를 견디지 못하고, ‘버릇없다’는 식으로 대응하는 수준”이라고 말했다.

전교조 서울지부는 서울시교육청에 김 교장의 행정적 책임을 물을 것을 요구하는 동시에, 교사들에 대한 고발이 철회되지 않을 시 법적 대응도 함께 벌여나갈 방침이다. (배경내)

## 교장단과 학사모의 ‘전교조 탄압’ 이중주

초등학교 사건이 이 지경까지 이르게 된 데는 교장과 학사모의 긴밀한 유착관계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학사모 김형진 교육부장은 본지와와의 통화에서 “이 학교 회원들의 요청으로 전국 학사모 대표가 학교를 방문할 계획이었으나, 교장의 만류로 방문 계획이 취소됐다”고 말했다. 개입 사실은 부정했지만, 회원들을 통해 학사모의 개입이 요청된 사실은 스스로 인정한 셈. 학사모는 지난해 4월 창립된 이래 지속적인 전교조 반대 운동을 펼쳐왔다. 김재석 진보교육연구소 소장은 <진보교육> 16호(2003. 7)에 실린 글을 통해 “학사모가 지난 1년동안 한 일이라곤 전교조를 스톱킨한 것밖에 없다”고 잘라 말한다. 대표적으로 지난해 학사모는 전교조 서울지부와 서울시 교육청이 체결한 ‘합법적’ 단체협약에 대한 무효소송을 제기하기까지 했다.

학사모가 사회적 주목을 받기 시작한 것은 올 초 충남 보성초 서교장 자살 사건부터였다. 이후 학사모는 네이스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철회 요구, 전교조 연가집회 참가교사에 대한 퇴출운동 전개 발표 등 기자회견을 연이어 개최하면서 보수언론의 주목을 받아왔다.

최후에 서울시 교육위원회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지금까지 학사모가 학교장 앞으로 발송한 협조요청 공문은 확인된 것만 해도 5건. 올 3월말과 4월초에는 두 차례에 걸쳐 ‘학사모 회원 추천’을 의뢰해 약 180여개 학교에서 201명의 회원을 추천받기도 했다. 심지어 지난 5월 11일 열린 전국교장결의대회에서는 학교장들로부터 자원봉사 학부모까지 ‘추천’(?)받아 자원봉사까지 펼쳐 교장단과 학사모의 긴밀한 유대관계를 과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최 교육위원은 “교장들이 교단 대립의 틈새를 학사모에 제공해 교사들을 자극하고 있다”면서 “임의단체인 교장단 회비까지 학교운영비로 내고 있는 교장들이, 교장단이 끼고 돌지 않으면 열혈도 못 가 쓰러질 조직인 학사모를 키워주고 전교조를 탄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고 꼬집었다.

학사모는 늘 ‘전교조가 학생 인권과 학습권을 볼모로 투쟁한다’며 비난한다. 그러나 이들에게선 학생의 교육권 향상을 위해 사용돼야 할 학교운영비를 사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교장단에 대한 비판이나 학생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는 네이스에 대한 근본적 반성을 촉구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배경내)



### ● 박영희의 인권이야기 ● 장애여성에게 절박한 쉼터

가족 여러 명이 상담소 문을 열고 들어서는 것을 보며 우린 조용히 긴 한숨을 몰아쉬었다. 오랜 세월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렸는지 눈에 시름이 가득 담긴 어머니, 분노로 충혈된 눈을 가진 남동생, 걱정과 혼란스러움이 담긴 눈의 오빠. 이들을 따라 들어서는 미자(가명, 35세, 정신지체 2급) 씨는 불안과 두려움으로 마치 죄인처럼 우리 눈치를 살폈다.

이럴 때 장애여성 성폭력 상담원들은 신속하게 판단해야 한다. 먼저 가족들과 피해 여성을 분리시킨 다음, 안정된 공간에서 피해 여성이 충분히 신뢰할 수 있는 상담원과 상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난 가족들의 상담을 맡았다.

사건은 온 가족이 직장을 나간 사이 빌라 위층에 살고 있는 60대 남성이 미자 씨가 늘 혼자 있다는 것을 알고 낮잠을 자고 있는 사이 침입해 성폭력을 한 것이었다.

미자 씨는 가족들이 알면 자신이 혼날까봐 말을 안 한다고 한다. 낮에는 늘 혼자 집에 있어야 하는 상황에서 가해자가 몇 차례나 방문할 때마다 집안의 모든 문을 잠그고 화장실 안에서 종일 두려움에 떨며 지낸 적도 있었다. 가족들이 알게 된 것은 가해자가 술에 취해 동네 이웃에게 자신의 여전한 '남성스러움'을 자랑한 것 때문이었다.

어머니는 두 아들 앞에서 이 모든 일이 자신의 죄 많은 운명 탓이라고, 그저 미안하고 죄스러울 뿐이라며 연신 눈물을 흘렸다. 오빠는 더 크게 일을 벌여봐야 집안 창피고, 번거롭기만 하니 합의가 되면 사건화하지 말자는 입장이었다. 반면 남동생은 우리 집을 얼마나 무시했으면 이럴 수가 있겠냐며 가해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법적으로 안 되면 혼자서라도 복수를 하겠다고 크게 분노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피해 장애여성에게 가족들이 2차, 3차의 가해를 가하게 된다. 문제의 근원이 장애여성이 되고, 결국 가족들이 그녀에게 원망을 돌리게 된다. 그렇지만 우리 현실에서는 그녀를 어쩔 수 없이 이런 불안정한 가정으로 돌려보낼 수밖에 없다. 무엇보다 가해자와 아래위층에 살고 있는 상황인데, 그녀가 그러한 공간으로 가야 한다는 것부터가 심적으로 2차 가해가 되는 것이었다.

평생 장애를 가진 딸 때문에 눈물의 세월이었던 어머니의 아픔도, 성장하면서 심적 부담으로 힘들었다는 형제들의 심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렇지만 이런 일은 미자 씨의 잘못도 집안의 수치도 아니기 때문에 가해자의 처벌은 물론이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자 씨의 치유여야 한다고 설명해주었다. 미자 씨의 치유를 위해 가족들이 가정의 안정을 회복해야 하고 그녀를 원망하거나 분노를 표현해서는 안 된다고도 말했다. 가족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불안한 눈빛으로 우리를 돌아보며 가족들을 따라나가는 미자 씨를 바라보며 다시 한 번 장애여성 쉼터의 필요성을 절감한다. 미자 씨와 같은 장애여성들이 당분간만이라도 안정을 찾고 치유될 수 있는 쉼터가 만들어지기를 간절히, 또 간절히 소망한다.

(박영희님은 장애여성공감 대표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1일 ~ 7월 28일)

1. 한총련 율아맨 포승줄, 이제는 풀어야  
한총련 대의원 200여명 수배해제키로...법무부 "다음달 초순까지 검찰 조사 뒤 일괄 해제"(7.21) / 한총련 수배자 가족들 상경, 법무부 앞 포승줄 시위(7.21) / 경찰, "11기 한총련 소환·처벌 최소화"...44명 소환, 선별입건 방침 밝혀(7.22) / "한총련 이적규정 철회"...한총련 정치수배 해제 및 합법화 촉구대회 열려(7.23) / 한총련 수배해제 말로만...수배자 잇따른 체포 속 농성 경원대 20명 강제 연행(7.25) / 대검, 11기 한총련 일괄수배 양기로 하고 기존 수배자 79명 선별 불구속수사 방침 밝혀...인권단체들, 선별 방침 비판(7.25)

2. 사회안전망, 구멍 송송  
초등학교 5학년 투신 자살...아버지 학대 두려워(7.20) / 보건의료노조 조사결과, 총 진료비 중 환자 부담률 절반 가까이 이르러(7.22) / "잇단 생활고 자살은 사회적 타살"...참여연대 토론회, "빈곤층 양산 속 사회안전망 부실이 원인"(7.23) / 아들 카드 빚 '멍에' 부부 음독(7.24) / 건설일용노동자에겐 높다높은 산재보험 문턱...산재보험 공대위, 국가인권위에 차별 진정(7.24) / 30대 주부, 경매로 집 넘어가자 자살(7.25)

3. 핵폐기장 문제, 끝없는 평행선?  
"부안 핵폐기장 철회" 격렬시위...주민 60여명, 전경 17명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7.22) / 가라앉지 않는 "핵폐기장 반대"...부안 주민 이틀째 집회, 참가자 20명 체포영장 발부(7.23) / 부안 위도 핵폐기장터 확정...군민대책위 강한 반발(7.24) / "핵폐기장 철회" 1만여명 시위...전북도청 앞 장대비속 거센 항의(7.25)

4. 기타  
'새만금 살리기' 대통령 결단 촉구...3대 종단 대표·삼보 일배 성직자 공동회견(7.21) /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시작...대책위, '병원 면죄부 줄까' 우려(7.22) / 부대장 비난했다고 담뱃불로 사병 지저(7.22) / "미, 북한 불가침 보장 검토"...워싱턴포스트 "다자회담 수용 땀 핵 위기 해소방안 제시"(7.22) / 한기총, 동성애자 죽음에 '에도 표명'까지 거절(7.22) / 비정규직 보호 법제화 표류...정부, '노사정위 논의 제자리' 핑계로 사실상 손바(7.23) / 훈련소 구타 후유증 국가배상 판결(7.23) / 2주년 맞은 장애인 '버스타기' 운동...시민 인식 변했지만, 정부는 제자리(7.23) / 서해교전 참전군인 비난 글, 추모회원의 자작곡(7.24) / "게시물 삭제요구는 공안탄압"...민주노총, 북한 관련 게시물 삭제 않고 게시판 다시 열려(7.24) / 반전모금 교사 파면...학생들에 배지 판매 이유(7.25) / 일, '자위대 이라크 파병법' 날치기 통과(7.25) / 철도노조, 인권위에서 대량징계·인권탄압 항의 단식농성 돌입(7.25)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7월 30일(수)

제 238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안기부 옛터를 '기억의 공간'으로

### 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

최근 서울시가 남산에 자리잡은 옛 안기부 본관을 유스호스텔로 개조하기로 확정하고 민간 사업자 선정에 들어가기로 해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중요한 역사적 현장이 사라지는 것에 대한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

옛 안기부 건물은 96년 서울시에 인수된 이후 전체 27개 건물 중 23개동이 철거되고 지금은 4개 건물만 남아 있는 상태다. 이 중 본관건물은 서울시정개발연구원으로 최근까지 사용되었다. 서울시는 이 본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꾸미기로 하고, 나머지 3개 건물도 입주한 기관을 이전시킨 후 녹지로 복원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와 같은 서울시의 계획에 대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측은 "수많은 이들이 그곳에서 고문의 고통으로 신음했고, 정신과 육체가 파괴되었으며, 때로는 죽음에 이르렀다. 그곳은 고문과 조작과 왜곡으로 인권을 유린하고 우리 현대사를 비틀어놓은 역사의 현장"이라며 "이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그 역사의 현장이 생생히 보존되어 과거를 반성하는 살아있는 역사기념관으로 시민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민주화운동 자료관 추진위원회' 문종석 사무국장도 "그곳은 수십 년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상징적 공간이다. 이름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는 기억의 공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많은 돈을 들여서 다른 곳에 만드는 것보다 현장을 있는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서울시의 계획은 어처구니없는 판단"이라며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남산의 안기부 옛터는 유신헌법이 공포된 1972년 중앙정보부 남산 분청

사가 설치된 이후, 1981년 국가안전기획부로 이름이 바뀌고 1995년 서초구 내곡동 통합신청사로 이전하기까지 인권유린의 산실이었다.

이곳에서 잔혹한 인권유린과 함께 조작된 사건들로는 △유럽거점간첩단 사건(73) △인민혁명당재건위 사건(74) △구미유학생 사건(85) △남매

## 무차별 연행에다 '한총련 탈퇴서' 강요까지

### 경찰, 수배자 자진 출두 앞서 함부로 연행...탈퇴 협박도

대검의 한총련 수배자 선별 불구속 수사 방침에도 불구하고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고 있다.

지난 25일, 대검은 한총련 관련 수배자 152명 중 다른 형사법 위반 사실이 없는 79명만을 '불구속 수사'하고, 총학생회장 이상 핵심 간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치'를 취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대검 발표와는 달리 일선 경찰의 무차별 연행은 계속되고 있다. 대검 기준에 따르면 불구속 수사 대상인 2002년 경원대 부총학생회장 박정훈 씨가 26일 학내로 들어온 경찰에 의해 체포됐다. 더구나 박씨는 "한총련 탈퇴서를 안 쓰면 구속된다", "수배해제 조치도 나왔는데 쉽게 가자"는 등 협박과 회유를 받고 "그동안의 행동을 반성하고 한총련을 탈퇴한다"는 내용의 탈퇴서를 쓰고 나서야 27일 풀려났다. 전남대 모 수배자도 '주거지 불명확'과 '구속 경험'을 이유로 불구속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통보를 받기도 했다.

이에 대해 한총련 수배해제 모임 유영업 대표는 "대검은 전향서 개념의 기

간첩 사건(93) △구국전위 사건(94) 등이 대표적이다. 이 중 '유럽거점간첩단사건'의 최종길 교수의 죽음과 '인혁당재건위사건'의 조작이 고문에 의해 이뤄졌음이 지난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에 의해 밝혀진바 있다. 이 사건들은 안기부 옛터에서 자행됐던 수많은 고문과 조작사건들 중 알려진 소수의 사건에 불과하다.

속칭 '남산'으로 통했던 그곳은 민주화운동 세력뿐 아니라 일반 국민들에게까지 공포의 대상이었다. 감시와 불법체포, 이어지는 고문이라는 방식으로 재생산된 공포는 (☞2면에 계속)

존 탈퇴서 제출을 전제하지 않았는데 일선에서는 탈퇴서를 강요하고 있다. 또 자진출두하면 선처하겠다는 대검 방침대로 출두를 기다려야 할 경찰이 무분별한 연행을 계속하고 있어 수배자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당국을 비판했다.

'최대한의 관용조치' 대상인 총학생회장 이상 수배자의 경우도 발표 내용과는 다른 대우를 받고 있다. 29일, 지난해 효성가톨릭대 총학생회장 이정아 씨는 임시로 기거하던 집 앞에서 연행돼 경북도경 보안수사대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98년 한총련 간부로 6년째 수배중인 송용한 씨도 담당 검사로부터 "사전구속영장이 발부돼 있어 구속을 면할 수 없다"는 통보를 받았다. 게다가 다른 법 위반 사실이 없는 단과대 학생회장 출신 수배자가 불구속 수사 대상 79명 리스트에서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기도 했다.

이에 한총련 수배자 모임과 가족모임은 29일 정오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관련 사회단체와 함께 비상대책위를 결성하고, 8월초까지 한총련 관련 모든 수배자의 전면 수배해제를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김성준)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

“국제법상 국가가 외국인의 입국을 허가할 일반적 의무는 존재하지 않고, 외국인의 입국 허용 여부는 당해 국가가 자유 재량으로 정할 사항이다. 미국 시민권을 가진 유승준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입국의 자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입국금지로 인한 기본권 침해는 없다.”

가수 유승준 씨의 입국을 거부한 법무부를 상대로 제기된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는 28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법 39조 2항에 따라, 진정의 내용이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유씨는 지난해 1월 미국 시민권을 획득해 국내 병역의 의무가 소멸됐으며, 이에 대한 병역기피 논란이 일면서 같은 해 2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입국이 불허됐다.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는 해석은 일면 국제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다. 시민·정치적 권리에관한국제규약 12조에 따르면, 한 국가 내에서의 거주·이동과 다른 나라로의 출국은 내·외국인의 구별 없이 모든 사람의 권리로 인정되고 있지만, 입국의 자유는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에 대해서만 인정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인권위 김원숙 조사관은 “(한 국가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거부 권한은 국제관습법상 인정되는 원칙”이라고 밝혔다. 국제법을 전공한 인천대 노영돈 교수도 “문제가 되는 외국인에 대해 인도적 견지에서 제한적으로 입국을 허용해 줄 여지는 있겠지만, 입국을 허가하는 것은 국가의 재량 행위로 인권의 문제가 아니”라며 인권위의 결정을 지지했다.

국가 재량권 무한정 허용은 안돼

그러나 이번 인권위의 결정이 인권적으로 전혀 문제없는 것이라고 말하기 어렵다. 출입국의 허가 여부가 아무리 국가의 재량권에 속하는 문제라 할지라도, 인권보장을 위해 국가의 재

량권을 제한하려는 시도는 이미 국제법 안에서도 도입되고 있다. 아동권리협약 10조는 가족의 재결합을 위해 아동 또는 그 부모에게 출국은 물론 입국할 권리를 보장해야 할 국가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권위는 이번 입국거부 조치에 대해 국가 재량권의 정당한 행사였는지에 대한 판단을 했어야 했다.

또한 인권위가 국가 재량권이라는 일반원칙 외에는 별다른 설명 없이 유씨에 대한 입국거부 조치를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은 ‘출입국의 문제에 대해서는 인권의 잣대를 들이댈 수 없다’는 위험한 관념을 유포시키기에 충분하다. 출입국에 대한 국가의 재량권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며, 인권의 원칙에 따라 필요한 경우 제한되어야 마땅함에도 말이다.

만약 출입국의 문제에 대해 아무런 조건 없이 국가의 재량권을 인정한다면 △99년 프랑스 실업자운동가 야기통 씨 등 해외 진보인사에 대해 법무부가 별다른 이유 없이 입국을 불허한 경우나 △독일 송두울 교수 등 해외 민주인사들에 대해 국가이익에 저해된다는 추상적인 이유로 계속 입국을 불허하는 경우에 대해 인권위는 어떠한 권고도 할 수 없게 된다.

결국 이번 결정을 통해 인권위가 썼은 물 버리려다 아끼까지 버리는 우를 범한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권위는 비록 유씨의 입국거부 조치가 인권침해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더라도, 국가가 과도하게 자신의 재량권을 행사하지는 않았는지 분명히 밝혔어야 했다. ‘병역의 의무를 지겠다’는 스스로의 공언을 저버린 유씨의 행동은 도덕적으로 비난받아 마땅하지만, 보복적 성격이 강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것 또한 정당하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의 본질 외면한 결정

또한 유씨의 입국을 둘러싼 문제의 발단은 인권침해적 군대제도 자체에

있다는 점도 지적되었어야 한다. 사실 징병제 아래서 잦은 구타 등 열악한 처우와 병영환경은 징집대상 남성들의 항상적이고 광범한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이것이 병역기피 현상의 원인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고위층의 아들이나 남성 연예인 등이 언론의 조명을 받았을 때 징집대상 남성들의 집중포화가 쏟아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이치다. 유 씨의 경우도 그러한 예의 전형일 것이다.

이러한 병역기피 현상은 징병제에 대한 근본적 검토, 군내 인권수준의 개선 등을 통해서만 극복될 수 있다. 하지만 국가의 조치는 오히려 병역기피를 명분으로 유 씨를 단죄함으로써 군대제도에 대한 남성들의 불만을 일시적으로 무마하는 데 그쳤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인권위는 결국 문제의 본질을 꿰뚫어 이에 대한 인권적 처방을 내리지 못했다는 비난을 면키 어려울 것이다. (범용)

(31면에서 이어짐) 그것 자체로 인권 침해였다. 이러한 직·간접적 인권침해를 통해 독재정권을 수호하고 연장시키는 것이 그 터에 위치한 기관의 목적이었다.

한편 외국의 경우, 폴란드의 아우슈비츠 기념관을 비롯해 중국의 남경대학살 기념관, 히로시마의 평화기념관 등이 그 현장에 위치하고 있다. 특히, 독일의 슈타지박물관은 구동독의 정보기관이었던 슈타지(STASI) 터에 박물관을 세워서 현재 독일정부와 민간단체가 함께 관리하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아픈 역사의 현장에 위치해 과거사를 그대로 전시하며 소중한 역사적 교훈을 남기는 교육장으로 활용되고 있다.

서울시의 결정에 대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용태 이사는 개인적인 의견임을 전제로 하여 “인권단체들과 뜻을 모아 대응책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종철 홍보과장 또한 “내부 논의중이지만, 원칙적으로 기념공간으로 마련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주위의 의견을 모아나가는 작업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말해 안기부 옛터의 보존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시사했다. (김명수)

<기고> 네이스(NEIS)의 현장에서 - 김재홍 (서울 -고 교사)

#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

국무총리실 산하 교육정보화위원회로 네이스(NEIS) 문제 해결의 공이 넘어가 있는 사이, 일선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의사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네이스가 폭력적으로 관철되고 있다. 학교의 네이스 시행 결정과 관련해 담임 사표서를 던진 한 교사의 고민을 들어본다. <편집자주>

서울에 있는 실업계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교사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는 이른바 명문(?) 학교입니다. 실업계에서 손꼽히는, 특히 이쪽 지역에서는 외형적으로나 내용적으로나 타 학교 선생님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학교지요.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최근저는 한 학기 동안 정든 아이들 곁을 떠나기로 하고 담임 사표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무슨 사연이냐구요?

현재 교육행정정보시스템, 즉 네이스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는 걸 아실 겁니다. 네이스는 ‘인권과 효율성 가운데 무엇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만, 일부 언론에서는 이를 일부 교직원단체간의 힘겨루기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분명히 밝혔듯이, 네이스는 인권의 문제입니다. 그런데도 교육부는 단위 학교에 책임을 전가하고 교사들의 갈등을 부추겨 왔습니다.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와 관련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 선생님들과 네이스는 ‘학생 인권’의 문제이며, 따라서 이는 다수결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는 의견을 나누기도 하였습니다.

교육부가 단위 학교로 책임을 떠넘긴 후, 저희 학교에서도 네이스의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회의가 열렸습니다. 회의가 열리던 날, 다른 교육 일정과 겹쳐 저는 부득이하게 그 회의에 참가하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틀 날 회의 결과를 들어보니, 투표에 부친 결과 네이스 29표, 수기 25표, CS 14표, 기권 4표, 무효 1표가 나와 네이스로 사용하기로 결정됐다고 합니다. 어이가 없었습니다.

교사들끼리 투표로 결정하다니...

네이스 문제가 지금 상황까지 오게 된

것은 바로 네이스가 인권침해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선 네이스를 사용할지 여부부터 물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 네이스를 찬성하는 결과가 나왔다면 그 다음에 어떠한 절차와 방법으로 시행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하고, 반대로 사용에 반대하는 결론이 나왔을 때는 다른 어떤 방법을 사용할지를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를 도외시키고 네이스와 CS, 수기를 병렬적으로 늘어놓은 다음, 다수결로 결정한 것은 심각한 절차상의 문제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네이스 사용 여부부터 물어보아야

너무 어이가 없었지만, 회의에 참석하지 못했던 제가 뒤늦게 이를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 일단 네이스 사용 결정에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네이스로 결정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교사들의 다수결’로만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당사자인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렇지 않고 불과 29표의 찬성표를 가지고 -기권과 무효표를 빼더라도 네이스 반대표가 39표로 더 많았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동의 없이 네이스를 강행하는 것은 정보인권에 대한 커다란 침해인 것입니다.

그래서 네이스를 시행하기 전에 가정통신문을 보내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은 후 시행하자고 학교장에게 건의를 했지만, 거절당했습니다. 현재 네이스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되어 있고, 교육부장관을 포함한 교육부 담당 관리와 교육감들이 고발되어 있으며 졸업생들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저는 제 설명이 부족하였다고 판단하고 다시 한번 건의를 하였습니다. ‘특기적성교육’뿐만 아니라 지난해 ‘헌혈’ 때도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나,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인권침해 판정이 난 네이스를 시행하려면 최소한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서를 받아야 교사가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부담을 없

앨 수 있지 않겠느냐, 나아가 동의서를 받아든 학생과 보호자는 우리 학교가 학생들의 인권을 존중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 건의조차 거부당했습니다.

학생·보호자 등의 요구에 콧방귀

이런 와중에 담임 42명 중 네이스를 인증하지 않은 담임은 ‘너 하나뿐’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교사에게 담임은 ‘교직 생활의 꽃’입니다. 아이들과 함께 하고 어우러지는 생활이 교직의 근본적 목적이니까요. 그러나 아무리 담임 역할이 중요하다고는 하지만 네이스의 시행이 분명 학생의 인권을 침해하는 사안일진데, 학생과 보호자의 동의조차 없이 담임으로서 학생들의 정보 인권을 인터넷에 띄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중간에 학생들을 버린다는 자책과 비판을 받을지언정, 학생의 정보인권을 침해할 수 없다는 핑계로 담임을 그만두기로 했습니다.

끝까지 담임의 직을 지키면서 네이스 인증을 거부해 학교 전체에서 네이스로 인해 학생의 정보 인권이 침해되는 것을 막았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겁하고 용기가 없어 도망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부끄러운 뿐입니다.

인권 침해하느니 담임 그만두기로

담임 교체가 확정된 후 아이들에게 이메일로 보낸 글을 마지막으로 부끄러운 이야기를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핑계

미안하다. 사람이 살아간다는 게 각자의 생각, 관점에 따라 많이 다른 것 같구나.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되지는 않는 것 같다. 물론 내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각이 잘못됐다고 단정할 수 없는 거구. 사람은 항상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 가면서 살아가는 것 아니겠니? 그렇다고 내가 너희들과 영 못 보는 것도 아니구. 삼겹살파티 약속 지키지 못해 미안하구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부인의 분노는 내일 우리의 절망 말바꾸기, 기습처리, 폭력진압으로 얼룩진 핵폐기장

"17년동안 어떤 정권도 해결 못한 일을 마침내 당신이 해내는 것 같아 흡족하십니까? 저는 지금 당신에게서 박정희의 개발독재를 보고 전두환의 피문은 군화를 씩니다."

부안 핵폐기장 반대 투쟁에 나선 문규현 신부(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가 최근의 '부안사태'와 관련해 30일 노무현 대통령에게 공개서한을 보냈다. 문 신부는 "대통령은 투명하게 국민들을 설득하라고 하지만 투명해져야 하는 것은 당신이요, 당신의 관료들이며, 핵산업체와 핵전문가들"이라며 "어떤 추악한 음모를 꾸미고 있길래 그토록 다급하게 밀어붙이고, 무엇이 있길래 엄청난 공권력으로 엄호하며 부안을 한순간에 찢어 놓느냐"고 되물었다.

그는 "우리를 폭력과 엄포, 거짓과 술수로 다스리려 하지만 우리는 결코 속지 않을 것"이라고 다짐하고 "핵공포 없는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사발한 어머니와 그 어머니의 볼에 흘러내리는 눈물을 닦아주던 아이의 손, 소 팔아 마련한 200만원을 활동기금으로 내놓은 가난한 할머니, 응급실에 실려와 치료를 받자마자 다시 싸우러 나가던 아낙네... 이들의 가슴속에 넘치는 생존과 평화에 대한 열망이 당신을 구하고 나라를 구할 것"이라며 가슴 절절한 편지를 보냈다. (편지 전문 www.cham-sori.net)

십수년의 논란... 순식간에 '부안' 결정 주민 의사를 무시한 핵폐기장 선정과정, 밝히지 않고 있는 부지 적합 조사결과와 선정 위원, 시위대를 향한 경찰의 폭력·강경 진압 등 부안 핵폐

기장 선정과정에서 발생한 문제들은 '부안사태'로까지 불려지며 반환경, 반인권, 반민주라는 최악의 오명을 뒤집어 쓴 채 강행되고 있다.

핵폐기장 선정 문제는 비단 울 한해 영광, 고창, 울진, 영덕, 신시도, 부안 등만 들쭉서 놓은 것이 아니다. 정부는 지난 10여년 동안 안면도(90), 양양(92-93), 굴업도(94-94) 등을 거론하며 핵폐기장 부지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왔지만 지역주민과 환경단체의 강한 반발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했다.

십수년간 난항을 겪어 오던 핵폐기장 부지 선정 문제는 지난 14일 부안군(군수 김종규)의 기습적 유치 신청, 24일 산자부의 전격 선정으로 '순식간'에 끝났다. 단 열흘만의 일이었다. 부안군 주민들은 "단 한 차례의 공청회도 없

2003년 7월 31일(목)

제 238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이, 어제까지 유치 신청을 안 한다던 군수가 하루아침에 신청을 해 버렸다"며 분노하고 있다. 김종규 부안 군수는 유치 신청 기자회견을 하는 11일 바로 전까지만 해도 "절대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않겠다"고 밝혔었다.

하루 아침에 빼앗긴 삶의 터전

군민을 무시한 군수의 말 바꾸기와 정부의 강행처리에 지역주민과 환경·사회단체는 격렬히 저항하고 있다.

'핵폐기장 백지화 핵발전소 추방 범부안군민대책위' 이현민 투쟁위원장은 "7만 군민이 사는 부안에서 1만 이상이 모이는 집회를 일주일에 2차례나 벌일 정도로 전 군민이 핵폐기장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며 부안의 상황을 설명했다. 부안군 '위도'가 부지로 선정된 이후 연일 시위를 벌이고 있는 부안 군민들은 위도에 핵폐기장이 들어설 경우, 관광과 어업으로 생계를 이어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될 것이라며 부지 선정을 반대하고 있다. (☞2면에 계속)

## 만화 사랑방

이동수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②

## 0.9평 징벌방에 1년 내내 갇혀 있기도

"여름에 들어가서 한 겨울에야 징벌방에서 나왔습니다. 동상이 하도 심하게 걸려서 발바닥까지 썩어 들어가는데... 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우리에 갇힌 짐승이었을 뿐이었죠." 지난 6월 출소한 박모 씨. 그는 5년6개월 동안의 징역 기간 내내 징벌방에서만 2년을 살았다고 했다. 박 씨의 징벌 중 절반은 연속 징벌이었다. 2000년도의 4개월과 2001년도의 5개월 동안, 그는 단 하루도 징벌방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최초 동료 수용자를 폭행했다는 이유로 두 달, 징벌방 내에서 옆방의 수용자와 통방했다는 이유로 다시 두 달, 징벌방 내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또 한 달. 운동도, 편지도, 접견도 모두 금지된 그곳에서 그는 '반성'이 아닌 '미움'과 '열망'을 키우며 하루하루를 버텼다고 했다.

행형법에 따르면 규율위반 등에 대한 금지 징벌은 최장 2개월을 넘지 못한다. 정신과 신체건강에 대한 금지 징벌의 위험성을 감안해서 금지 기간의 상한선을 설정해놓았다는 것이 일반적인 법해석이다. 또한 행형법은 동일한 행위에 대해서는 징벌이 거듭 부과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들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2개월 이상 징벌방에 갇혀 지내는 일은 불가능하다. 하지만, 동일한 행위가 아닌 상이한 행위로 각각 부과 받은 금지 징벌이 연이어 집행될 경우, 금지 징벌 기간은 2개월을 넘어 일명 '연속 징벌'이 된다. 대부분, 징벌을 받고 있던 수용자가 소란 혹은 자해를 했다는 이유로 또 다시 금지 징벌이 부과되는 양상으로 연속 징벌이 집행되곤 한다.

곽노현 교수(방송대 법대)는 "0.9평 징벌방에서 면벽수도 외에 모든 활동을 금지해 놓은 상황에서 두 달이런 긴 세월동안 아무런 감정의 폭발 없이 암전히 지낼 것을 기대하는 건 상식적으로 무리"라고 지적한다. 곽 교수는 "실제로 이런 상황에서는 완전히 기가 죽어

고분고분한 사람보다는 가끔 화도 내고 억지도 부리는 사람이 더 인간적이고 사회복귀도 잘 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 아니냐"며 "하지만 일단 인내의 한계점에서 분노와 좌절을 터트리면 바로 쇠사슬과 금속수갑이 들어오고 금지 2개월이 추가돼 연속징벌이 집행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비판한다.

지난해 연속 징벌을 받던 수용자가 울분을 참지 못해 스스로 세상을 등진 사건은 알려진 것만 해도 2건이다. 2001년 5월 29일 대전교도소 입소 후 2002년 5월 30일 청송교도소에서 자살한 고모 씨는 1년의 기간 동안 2개월 금지 징벌만 6번을 받았다. 1년의 수형기간 중 55일을 제외한 전 기간을 징벌방에서 산 것이다.

부산교도소에 자살한 배모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난해 4월 출소를 불과 8개월 앞둔 상황에서 자살을 선택했던 그는 자살 당시 징벌방에 3개월째 수감 중이었으며, 100시간이 넘게 손목과 발목에 수갑과 사슬 등의 계구를 착용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의 시련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그는 징벌방 내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이유로 4개월간의 금치를 더 추가 받아 10개월 연속으로 징벌방 살아가 예정돼 있었다. 징역 5년형을 선고받아 복역중이던 그는 4년여의 기간 동안 금지 징벌 횟수만 열다섯 번, 징벌방 생활만 2년 넘게 경험하던 끝에 죽음을 선택했던 것이다.

'행벌을 통한 반성의 유도'라는 이유로 집행되고 있는 연속 징벌은 이처럼 수용자들을 '죽음'으로 내몰 수 있는 위험성이 높은 만큼, 연속 징벌을 명시적으로 금지할 수 있는 법제도의 개정이 절실하다. (유해정)

(이면에서 이어짐) 원전 핵폐기장이 있는 앞바다에 과연 누가 관광을 오고, 그곳에서 잡은 물고기를 누가 사먹겠냐는 호소인 것이다.

30일 서울로 상경한 80여명의 부안

군민들은 핵폐기장 철화와 경찰의 폭력진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청와대 앞에서 갖고 경찰청을 향의 방문했다. 이들은 31일에도 한국수력원자력(주)과 각 정당을 향의 방문할 계획이며, 다음달에는 대규모 집회를 잡는 등 한 판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

부안군민 분노에 폭력진압 나선 정부

지난 22일 진행된 핵폐기장 유치 반대 부안군민대회에 참석한 시위대를 폭력적으로 진압한 경찰과 시위대에 대한 엄중 대처를 표방한 정부를 두고 사회각계의 비난이 빗발쳤다. 천주교인권위원회, 인권운동사랑방 등도 31일 성명을 내고 "경찰청 산하 1기동대 1001-1003 중대는 전국의 큰 집회에 투입되는 시위 진압 전문 부대로 악명이 높다"며 대부분 농·어민이고 아이들까지 참여한 대중집회에 이들 시위진압부대를 투입하여 과잉 진압한 책임자의 사과와 처벌을 요구할 계획이다.

전국적 대응 필요 공감

한편, 30일 부안사태와 관련하여 환경운동연합, 녹색연합, 여성단체연합 등 환경사회단체들은 간담회를 갖고 부안사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아 나섰다. 이현민 부안군대책위 투쟁위원장은 부안 핵폐기장 반대 싸움은 부안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폭력의 문제, 민주적 절차의 문제인 동시에 환경과 생존의 문제로, 전국적 대응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것이다.

반핵국민행동의 양이원영 사무국장은 "현재 나오고 있는 핵폐기물 처리는 기존 핵발전소의 임시보관소에 저장하는 방법으로도 2020년까지 문제가 없다"며 그럼에도 핵폐기물 처리 시설을 무리하게 지으려는 정부의 의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핵폐기장 문제는 단순히 폐기물처리장을 하나 더 짓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핵발전소의 확충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이날 모인 단체들은 현시점에서 '핵'문제에 대한 판단이 앞으로 다가올 사회와 패러다임에 대한 선택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 공감하고, 일차적으로 부안사태 해결이라는 현안에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2003년 8월

(제2389호 ~ 제2408호)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1일(금)

제 238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특집> '진보의련'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①

##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

지난달 보건의료단체로는 처음으로 이적단체 판결을 받은 '진보의련' 사건의 항소심 첫 공판이 31일 열렸다. 21세기에도 계속 출몰하고 있는 국가보안법이라는 악령의 본질을 이 사건을 통해 3회에 걸쳐 파헤쳐 본다. 사건 분석에 사법연수원생 오종열, 김해경 씨의 도움을 받았다. <편집자주>

"국가보안법이 죽은 조직 살려냈다."

지난 6월 4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이적단체로 규정된 '진보와 연대를 위한 보건의료연합'(아래 진보의련) 사건을 두고 하는 말이다.

당시 서울지방법원 제21형사부(황찬현 부장판사)는 이적단체 구성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던 제주대 의대 이상이 교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전 보건소장 권정기 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자격정지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의료 공공성 주장에 '이적' 철폐

진보의련은 경희대 의과대학 출신 선배들이 각종 무료 치료 활동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등 단체 활동을 펼쳐오다 95년 2월 정식 결성한 단체다. 현직 의사, 간호사, 약사 등 의료인을 회원으로 한 진보의련은 △공공의료 강화 △의료보험 통합 △의료보험료 인상 반대 △의료보험 본인부담 인하 등 지금도 많은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하는 내용과 같은 목소리를 내왔고, 국민이면 누구나 아플 때 치료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 "보건의료의 사회화"를 주장하기도 했다. 이는 1999년 국회에서 통과된 '보건의료기본법'의

제정 취지와도 일치하는 주장이다.

그러나 진보의련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외부강사 초청 세미나 등 내부 학습을 진행하고, 보건의료와 관련된 문제에 대해 일정한 목소리를 내는 것 이외에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내지 못했다. 그러던 가운데 모임을 주도했던 이상이 씨가 민주당의 전문위원과 대학교수로 재직하게 되면서 사실상 활동을 접게 되었고, 이후 권정기 씨도 보건소 등 지역사회에서의 공공의료활동에 집중해 왔다. 이후 진보의련은 2001년 6월 권정기 씨의 제안에 따라 해체를 결의하고 8월 사무실 폐쇄에 이어 2002년 1월 25일 공식적으로 해체되기에 이른다.

이런 조직에 '이적단체'라는 국가보안법의 철폐가 내려지자,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의료를 국가가 책임져야 하며 국민이 의료의 주인이 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적을 이롭게 한다면,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 우리도 이적단체"라며 법원의 판결을 강력 비판한 바 있다.

검찰 수사, 곳곳 무리수

진보의련 사건이 얼마나 짜맞추기 식이였는지는 검찰 수사과정만 들여다 봐도 쉽게 드러난다. 검찰은 사무실마저 이미 폐쇄된 이후인 2001년 10월, 진보의련 관련자 8명을 긴급 체포하고 그 중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영장 청구는 모두 기각됐다. 검찰이 다시 2명에 대한 영장을 신청하였지만, 이마저도 기각됐다. 결국 2002년 1월 검찰은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만을 불구속 기소하기에 이른다.

'이적단체 구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의 재판이 불구속 상태에서 진행된 경우는 극히 이례적이다.

사건 관련자들은 수사과정에 있어서의 불법성도 지적한다. 당시 연행됐다 풀려난 라영찬 씨(한의사)는 "최초 연행된 직후, 수사기관은 이미 대외적으로 공개된 자료 외에 내부문건 등을 상당수 확보하고 있었을 뿐 아니라, 회원들끼리 주고받은 이메일 내용까지 알고 있었다"며 1995년 창립 이후부터 회원들에 대한 미행과 감시, 불법 도청, 이메일 해킹 등이 이루어져 왔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럼에도 이후 검찰이 마치 적법한 압수수색을 통해 얻어낸 증거물처럼 위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실제 재판과정에서 쟁점화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권 말기 '색깔' 사냥의 희생양

사건 관련자들과 사건 대책위는 진보의련이 정권 말기에 습관적으로 반복돼온 이른바 '색깔 사냥'의 희생양이었다고 분석한다. 김대중 정부 말기였던 당시, 이회창 후보의 당선이 예상되던 시점에서 '보험틀기용'이 아니었다는 것이다. 라영찬 씨도 "사회지도층이라 할 수 있는 의사계층에도 이적단체가 있음을 대외적으로 광고함으로써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처럼 진보의련 사건은 구속영장조차 수 차례 기각되는 등 초기부터 무리한 짜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1심 재판부는 이들의 '주장' 자체를 문제삼아 유죄판결을 내렸다. 지금까지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로 유죄판결을 받은 사건이 항소심에서 뒤집힌 사례는 없다. 7월 31일부터 시작된 항소심 재판을 통해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는 최초의 선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배경내)



# 이달의 인권 (2003년 7월)

## 흐름과 쟁점

### 1. 대한민국 군대의 현주소

군내 구타와 가혹행위로 인한 자살이 잇따르고 성추행 사건들이 밝혀지면서, '군 인권'의 문제가 뜨겁게 달아올랐다. 외박을 나온 의경이 고참 구타를 견디다 못해 목숨을 끊었고(7/6), 고참의 성추행에 괴로워하던 이등병이 복귀를 앞두고 자살을 택했다(7/10). 또 중령이 이등병을 성추행하고, 군의관이 간호장교를 성추행한 사건까지 밝혀지면서 군내 가혹행위나 성추행 문제가 군 전반에 걸친 문제임이 드러나기도 했다(7/13~15). 이에 국방부는 군 내부에 공익신고 센터를 활용해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하고 정신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등 일련의 대책을 내놓았지만, 이러한 대책으로는 군내 인권의 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7/14). 또 구타와 자살 사고가 특히 많이 발생하는 전·의경 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이 '군·경 의문사 진상규명과 폭력근절을 위한 가족협의회'와 천주교인권위원회 공동으로 개최되기도 했다(7/16).

### 2. 젊음 가둔 창살, 부분 철거

새 정부 하에서도 한총련 수배자 24명이 잇달아 연행되자, 한총련 가족들과 수배자들은 연세대에서 전면 수배해제를 촉구하는 노상 감옥시위에 들어갔다(7/7). 이어 가족모임은 포승줄로 몸을 묶은 채 법무부 앞에서 수배해제를 촉구했다(7/21). 이러한 상황에서 경찰은 올해 11기 한총련 대의원 가운데 44명을 소환, 입건할 계획이라고 밝혀 11기 한총련에도 '이적' 오가미가 씌워질지 모른다는 우려가 깊어졌다(7/22). 다행히 대검은 11기 한총련에 대한 일괄수배 조치가 없을 것이라 발표했다. 하지만 한총련 수배자 152명 중 79명을 선별해 불구속 수사하고, 나머지 73명에 대해서는 '최대한의 관용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혀 '전원 불기소 처분'을 주장해 왔던 인권단체들의 비판을 받았다(7/25). 더구나 대검의 발표 이후에도 경원대 박정훈 씨가 학내에서 연행되는 등 무차별 연행과 탈퇴서 강요가 계속됐다(7/26~29).

### 3. 질주하는 '노조탄압' 기관차

철도구조관련법 철회를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했던 철도노조에 대해 정부는 '선 복귀, 후 협상'과 강경대응 방침을 굽히지 않았다(7/1). 철도노조가 시민불편을 최소화하고 협상에 임하기 위해 파업을 철화하였지만(7/1), 그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은 협상이 아닌 대량 징계와 강경 탄압이었다. 민변도 정부의 강경 대응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천명했지만(7/5), 정부는 천환규 위원장 등 노조간부 6명을 구속하고 3명을 불구속하는 것으로 화답했다(7/14). 철도청 역시 징계위원회를 열어 천환규 위원장을 포함해 모두 103명을 중징계 처리했다(7/25). 철도청은 앞으로도 파업 참가 노조원 8천6백여명을 중징계할 계획이다. 그 사이 현장에서는 파업 불참 서약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도 광범위하게 자행됐다. 이에 철도노조는 대량징계와 인권탄압에 항의하며 국가인권위에서 단식농성에 들어갔다(7/25).

### 4. 전교조 때리기, 네이스 보듬기

네이스 강행 철회를 위한 연가집회와 관련해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가운데, 윤덕홍 교육부총리는 전교조 집행부에 대한 사법처리 방침을 거듭 확인했다(7/4). 교육부는 또 문제 항목에 대한 수정 없이 네이스를 강행해 우려를 낳았다(7/7). 이에 43개 정보인권단체는 '네이스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 공대위'를 발족하고, 네이스 선택을 강요한 학교장과 장학사를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7/8). 그러나 원영만 위원장이 결국 구속되자(7/17), 전교조는 정부 규탄집회를 열고 위원장 석방을 촉구했다(7/20).

### 논평

- 노동인권에 대한 '글로벌 스탠더드'의 폭력(7.5)
- 시위진압과 전·의경의 연이은 사망(7.12)
- '정보인권'을 지키고자 한 죄(7.19)
- '김일성 게시물'도 허용돼야 하는 이유(7.26)

### 인권이야기

- 이창호 - 지옥의 묵시록, 삼청교육(7.8)
- 이주영 - 인간적인 병원을 향한 투쟁(7.15)
- 김철준 - 의경 구타와 악순환 끊으려면(7.22)
- 박영희 - 장애여성에게 절박한 쉼터(7.29)

### 인권정보자료

- 「더 나은 세계는 가능하다」(7.4)
- 「준법서약제 폐지운동 1998~2003 자료모음」(7.11)
- 「지방 위의 꾸마라 아저씨」(7.17)
- 「미국의 전쟁범죄와 전쟁의 재앙」(7.25)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외국인보호소 인권문제, 포괄적 대안 내놓아야(7.10)
- 잘못된 수사관행, 검찰과 맞선 인권위에 격려를(7.16)
- 일률적인 지문날인제도 외국인에게는 제한 요구, 내국인에게는 '입장 없다'?(7.23)
- 국가 재량권 행사에도 인권적 처방 내놔야 - 유승준 씨 입국거부 관련 인권위 결정의 문제점(7.30)

### 특별 기고

- 김혜진 - 파견법 5년, 눈물의 역사(7.4)
- 김재홍 - 고백 : 한 학기만에 담임 그만둔 부끄러운 사연(7.30)

### 캠페인 -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 ① 합법적(?) 연속 징벌, 재소자에게 이중 감옥(7.24)
- ② 0.9평 징벌방에 1년 내내 갇혀있기도(7.31)

### 성명서

- 이창에 국가보안법도 역사의 폐기장으로 직면해야 한다(7.9)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2일(토)

제 239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청구성심병원 집단산재 인정

### 근로복지공단, 5명 산재 인정...3명 유보는 납득 안돼

근로복지공단이 청구성심병원 조합원들의 '집단 산재'를 인정했다.

1일 근로복지공단은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에게 업무상 스트레스에 따른 산재를 인정한다는 결과를 통보했다. 반면 나머지 조합원 3명에 대해서는 특진(추가 진료)이 필요하다며 결정을 유보했다. 지난달 7일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9명은 7년에 걸쳐 진행된 사측의 노조탄압을 스트레스의 원인으로 지목하며 집단 산재 신청을 낸 바 있다. 이 중 1명은 최근 집안 사정으로 신청을 포기했다.

이번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대해 보건의료노조 최경숙 조직국장은 "부분적 이기는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집단 산재를 인정한 것은 병원 측이 그동안 노조탄압과 인권유린을 자행해 왔다는 사실을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며 "이번 집단 산재 인정이 다른 노조탄압 사업장에도 좋은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와 함께 최 조직국장은 산재인정뿐만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근로복지공단이 동일한 노동 환경 하에서 작업해 온 3명에 대해 산재 인정을 유보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 조직국장은 "오랜 기간 이들의 치료를 담당해 온 주치의가 '우울과 불안'을 동반한 적응장애'라는 진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근로복지공단의 판단 근거를 제공한 자문의협의회가 주치의의 진단서를 인정하지 않은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실제로 자문의협의회는 이번 산재 조사과정에서 조합원 8명을 한 자리에

불러놓고 한 사람당 채 5분도 면담을 진행하지 않고서 자문의협의회 의견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의료단체연합 변해진 기획부장

은 "자문의협의회가 작업장 환경과 환자들을 면밀히 관찰하지 않고 판단을 내린 것은 문제가 있다"며 "향후 특진 의사를 선정하는 과정에는 공대위와 조합원들이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병원측은 최근 노조원들이 전문의 진단서를 첨부해 병가를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무단결근이라 응수하며 임금 지급 요구마저 거부한 채 해고사유가 된다고 답하는 등 비상식적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김명수]

## 〈논평〉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파업을 강제로 중지시키는 '긴급조치' 발표가 검토되고 있다고 한다. 지난 30일 정부는 국무총리 주재로 국정현안 정책조정회의를 열고 현대자동차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행히 이튿날 청와대가 이 방침을 재검토하기로 했으나, 아직까지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을 완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사측의 교섭 회피나 위장 직장폐쇄, 무당해고와 노조탄압에는 모르쇠로, 거북이 걸음으로 일관해온 정부가 노동자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선택한 파업에 대해서는 이리도 신속히 '강제 중지'를 검토하고 나서다니 놀라울 따름이다. 현행 노동관계법의 긴급조정 조항은 '직권중재' 조항과 함께 헌법에 보장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침해해온 대표적 독소조항이다. 다만 63년 도입된 이래 두 차례의 발동만 있었기에 사회적 지탄의 대상에서 잠시 떨어져 있었을 뿐이었다. 그럼에도 정부가 사문화되다시피 한 '긴급조정권'이라는 구시대적 명령'을 다시금 불러내고자 한다는 사실은 우려를 넘어 분노마저 자아낸다.

정부는 현대차 파업이 장기화되면서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낳고 있다며 그 필요성을 설득한다. 하지만 지금 파업을 장기화시키고 있는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 '정당한 요구를 내걸고 있는 노조'가 아니라 바로 '과다한 욕심으로 현대차에 부당한 압박을 가하고 있는 전경련'에 있다. 현대차에서 '노동조건의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이 합의될 경우 다른 사업장에서도 같은 요구가 거세어질 것이다. 바로 이것이 바로 전경련이 현대차의 노사합의를 방해하는 이유다. 경제가 그리도 걱정된다면 전경련의 압박부터 중지시키고 볼 일이다. 긴급조정권이 설령 발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검토가 있었다는 것만으로 이미 정부의 '부당한 조정'은 시작된 것에 다름없다. 이러한 정부의 태도는 파업 자체를 백안시하는 이데올로기를 유포하고 파업 중단을 촉구하는 여론몰이를 낳아 결국 노조의 주장을 위축시킬 수 있기에 그러하다.

지난 5월 정부는 국가기간산업 노동자들에게 업무복귀를 명령하고 강제노동을 시킬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검토한 바 있다. 또 최근에는 여야 국회의원들이 전산시설 노동자들의 파업을 원천봉쇄하는 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이렇듯 초헌법적 발상으로 노동자들의 정당한 기본권을 제한하여 재계의 비위를 맞추려는 일련의 행위는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특집> '진보의력'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

1심 재판부는 이상이 씨와 권정기 씨에 대해 '이적단체 구성'과 '이적표현물 제작'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진보의력 사건에 대한 1심 재판부의 판결은 '정권안보법'이라 불리는 국가보안법, 특히 이 법 7조가 얼마나 자의적으로 적용되고 집행될 수 있는지, 그를 통해 사회구성원들의 다른 목소리를 어떻게 억압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준다.

건강권 옹호가 국가변란 선전·선동?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구성'(7조 3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단체성을 갖추어야 하고 △국가변란을 선전, 선동할 목적을 갖고 있었음이 입증되어야 하며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에서 사건 변호를 맡은 이상희 변호사는 항소이유서를 통해 진보의력은 이러한 구성요건을 전혀 충족시키지 않는다고 반박한다.

먼저 '단체성'과 관련해 이 변호사는 "진보의력은 우리 사회의 보건의료정책을 고민하고 그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만든 느슨한 서클 모임에 불과할 뿐, 정해진 강령이나 조직노선도 없고 지휘통솔체계도 갖추지 아니한 구성원간에 대등한 관계를 유지한 토론모임에 불과하다"며 "단체"로 보기 힘들다고 말한다. 99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이적단체는 "계속적이고 독자적인 결합체이어야 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는 최소한의 통솔체제를 갖추고 있어야 하며, 강령·규약을 채택하고 구체적인 기구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다.

또한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을 옹호하는 보건의료단체의 활동을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것이라 볼 수는 없다. 이 변호사는 또 "원심에서 이적성 판단의 근거로 열거한 문건들은 진보의력 준비 과정에서 이루어진 사회과학 학습자료였을 뿐, 진보의력의 입장이 아니었다"고 지적한다. 더구나 이들의 이적성 여부를 감정했던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연구소'는 과거 민주노동당마저 용공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만큼 편향이

심한 기관이다. 과거 대학교재인 『한국사회의 이해』를 이적표현물로 몰아넣은 적도 있지만, 이 책은 1심과 2심 모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러한 공안기관의 감정결과를 토대로 이적성을 판단한 것은 문제가 있다.

나아가 진보의력은 사회적 약자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제도적 개혁방안에 관한 토론을 진행하였을 뿐인데, 헌법에 보장된 건강권을 주장하고 개혁방안을 토론한 것이 국가의 존립과 안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위협이 된다고 한다면, 이는 헌법 자체를 부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외부인 작성 문건까지 증거로 둔갑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제작 등'(7조 5항)으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이적표현물의 제작이나 소지 등의 행위가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줄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여야 하고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이들은 보건의료정책을 연구하기 위해 이들 자료를 소지하고 있었을 뿐 국가변란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 더구나 1심 재판부가 이적표현물로 인정한 문건들 가운데에는 진보의력이 아닌 '외부인'이 작성한 문건까지 포함돼 있어 이를 이유로 유죄로 인정한 것은 납득되기 힘들다.

지난 31일 열린 항소심 1차 공판에서 피고인측은 이와 같은 1심 판결의 부당성을 집중 제기했다. "이적단체의 인정은 ... 유추해석이나 확대해석을 금지하는 죄형법정주의의 기본정신에 비추어서 그 구성요건을 엄격히 제한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99년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르면, 항소심 재판부는 결코 이들에게 국가보안법 유죄를 선고할 수 없을 것이다. (배경내)

그들에게 근로기준법은 없다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 비공식 여성노동자 삶 다뤄

비공식 여성노동자의 삶을 다룬 다큐멘터리 <나도 노동자이고 싶다>의 시사회가 지난달 29일 100여명의 관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영상미디어센터에서 열렸다. 작품은 서울여성노조가 제작하고 김태일 감독이 연출했다.

비공식 노동자란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이유로 부당하고, 최저임금, 산업재해 등의 문제에 있어서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법외 노동자를 말한다. 작품은 이들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의 육아문제, 저임금, 불합리하게 강요되는 실적주의와 그로 인한 고용불안 등 비공식 영역에서 일하는 여성노동자들이 겪는 이중고를 인터뷰를 통해 고발하고 있다.

첫 화면에 등장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14조.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그러나 작품에 등장하는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분명 사용자와의 임금에 의한 종속관계 하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로서의 법적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현실에 놓여있다. 프리랜서, 특수고용직 등의 알쏭달쏭한 말로 포장되어 '노동자가 아니다'고 판단되고 있는 것.

'비공식 여성노동자'라는 명칭은 낯설지만, 실제 이러한 상황에 놓인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우리 주위에 너무나 많다. 의료봉제, 가내수공업, 청소용역, 텔레마케팅 등 30여분의 길지 않은 영화 속에서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은 생활 곳곳에 등장한다. 서울여성노조 김혜선 위원장은 "특히 여성의 경우, 결혼 후 공식영역에서 퇴출당한 후 다시 공식영역에 진입하지 못하고 비공식 노동자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공식 영역의 여성노동자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고 말한다.

작품은 노동자들이 확보해온 근대적 권리들을 퇴행시킨다는 점에서 비공식 노동의 증가는 반동적이라고 말한다. 또 비공식 여성노동자들이 노동자로 인정받고, 노동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강창원)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5일(화)

제 239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18세 청소년에게도 선거권을!

청소년 10명, "18세 선거권 박탈은 위헌" 헌법소원

현행 선거법에 의해 참정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만 18, 19세 청소년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4일 이경훈(18) 씨 외 청소년 10명은 '18세의 참정권을 박탈하는 선거연령 제한은 평등권 침해이고 위헌'이라며 헌법소원 심판청구서를 제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헌법재판소 정문에서 18세도 선거를 할 수 있음을 상징하는 '주민등록증'과 '기표도장'을 이용한 퍼포먼스와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 이경훈(18) 씨는 "작년 대선에 관심이 많았는데, 투표권이 없는 걸 알고 황당했다"며 "18세가 되면 군대갈 의무는 있는데 투표할 권리는 없다. 청소년은 시민사회의 구성원이자 정치무능력자가 아니"라며 현행 선거법의 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선거연령의 하향화는 전 세계적 추세이며, 1998년 중앙선거위치가 조사한 119개국 중 82%인 98개국에서 선거연령은 18세 이하였다"며 한국의 정치적 후진성을 비판했다. 이러한 후진성은 청소년을 훈육과 통제 대상으로만 생각하고, 청소년의 인권과 정치·사회 참여권을 보호하는 방안 마련은 방기해 온 데 원인이 있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한 '18세 선거연령 인하를 위한 대학생 모임'도 "정치적 청소년에게 유해한 공간? 18세 접근금지?", "독일에선 19세 국회의원, 한국에선 19세 정치무능력자?"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통해서 비상식적인 선거연령 제한을 비꼬았다.

또한 이들은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군에 입대한 18세 남성과 곧바로

취업한 18세 국민의 경우 국방의 의무와 납세의 의무를 지고 있는 상황을 들며, "의무"를 요구할 때는 18세를 성인으로 취급하고, 그에 상응하는 '권리'가 요구될 때에는 18세를 미성년으로 취급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이중적인 태도"라고 꼬집었다.

한편, 같은 날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개최된 '대한민국 청소년의회' 첫 정기의회에서 청소년 의원들도 선거연령을

만19세로 하향 조정하는 최근 선관위의 개혁안을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18세 이하로 낮아져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그 동안 헌법재판소는 "선거권의 연령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입법자의 재량"이라며 만20세 선거권을 규정한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15조 1항에 대해 모두 3차례나 합헌 판결을 내린 바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힘든 상태다. 또 지난 2001년 민주당이 선거연령을 19세로 낮추는 선거법 개정안을 확정하고서도 후속 입법조치를 취하지 선거연령 인하가 무산된 바 있다. 이번 헌법소원과 선관위의 개혁안 마련을 계기로 청소년의 참정권이 확대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명수)

"손배·가압류, 이렇게 좋은 걸 왜 관둬?"

철도청, 97억여원 손배·조합비 가압류...노조도 손배 청구

'손배소송과 가압류'의 남용을 자제시키겠다는 정부가 앞장서 손배·가압류를 노조에게 들이밀고 있다.

지난 2일 철도청은 6월 28일부터 4일간 진행된 철도노조 파업과 관련, 97억5천850만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앞서 지난달 25일에는 조합비 67%를 법원의 결정 없이 임의로 압류해 버렸다. 이에 4일 철도노조는 정부가 4·20 노정합의를 위반한 채 철도기본법과 철도공사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해 노조와 조합원이 피해를 입었고, 노조를 집단이기주의로 몰아 정신적 피해까지 입혔다며 정부를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지법에 냈다. 법원의 결정 없이 이뤄진 철도청의 조합비 가압류와 관련해서는 지난달 28일 김세호 철도청장을 행정협의회로 고소해 놓은 상태이다.

철도노조는 "노동조합에 대한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비이성적인 방식이라며

자제와 철회를 주장했던 정부가 철도노조를 상대로 97억원의 손배소송을 제기한 것은 스스로의 약속과 방침을 저버린 것"이라고 비난했다.

올 1월 두산중공업 고 배달호 씨의 죽음을 계기로 사측의 손배소송과 가압류가 신종 노동탄압수단으로 사회적 지탄을 받자, 정부는 3월 노동관계 장관회의를 통해 '손배소송과 가압류를 자제시키고, 법·제도적으로 제한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하기로 한 바 있다.

또 당시 권기홍 노동부장관은 "폭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쟁의의 불법성만을 이유로 종전처럼 관련자들을 구속하거나 공권력을 투입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지만, 현재 철도파업으로 구속된 조합원만 14명에 이르고, 철도청의 징계 방침에 따라 파업참가자 8천6백여명에 대한 징계도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금까지 4차례에 걸쳐 파면 58, 해임 21, 정직·감봉 54 등 133명에 대한 징계가 내려졌다. (고근예)



○ 손상열의 인권이야기 ○

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

누구도 주목하지 않는 전쟁이 지금 진행중이다. 라이베리아 내전으로 불리는 저 아프리카 소국의 전쟁이 그것이다. 최근 휴전협정이 무산되면서 이 나라의 수도 몬로비아에서는 정부군과 반군간의 군사적 충돌로 수백 명의 시민이 사망하고, 민간인 수천 명이 난민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전쟁에 대해 언론은 '거대 군벌간의 정쟁(政爭)' 정도로 묘사한다. 민간인의 손목을 도끼로 끊어버리는 것으로 악명 높은 독재자 찰스 테일러와 반군(LURD)의 정권 장악을 위한 충돌이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군벌전쟁' 정도의 묘사로 과연 아프리카에서 일반화된 내전의 원인을 다 설명했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래도 이런 내전의 근본 원인을 아프리카를 몰락시킨 식민통치와 세계화에서 찾아야 한다는 설명이 내겐 더 타당하게 들린다.

식민통치와 세계화는 아프리카를 어떻게 몰락시켰을까? 아프리카는 광물, 보석, 목재, 석유, 이 네 가지의 천연자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그러나 과거 식민통치의 영향으로 동아시아와 같은 유연하고 값싼 노동력과 기업가층은 풍부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같은 조건은 7, 80년대에 세계화라는 광풍이 몰아치는 상황에서, 자국의 노동력을 동원하면서 급변하는 세계경제 환경에 대처하기에는 약점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7, 80년대에 동아시아가 초국적 자본의 신흥시장으로 포섭되어 나갔던 것과는 달리, 아프리카가 철저하게 세계화로부터 배제되게 된 건 이런 이유 때문이다.

결국 몰락하여 가난한 지역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식은 천연자원을 장악함으로써, 이 자원의 채굴권에 관심 있는 초국적 기업과 연계 맺는 길밖에 없게 된다. 아프리카에서 여러 군벌들이 등장하고 분쟁에 분쟁을 거듭하는 데에는 이처럼 자원을 둘러싼 상충되는 이해가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초국적 기업과 군벌들의 결합으로 형성된 약탈경제는 이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을 더욱 격화시킬 수밖에 없다. '드 비어스' 같은 초국적 자원기업들은 다이아몬드, 광물, 목재 등의 천연자원을 반군을 통해 밀거래로 헐값에 구입하고, 현금을 손에 쥔 반군은 수백만 달러를 무기와 보급물자를 구입하는 데 사용하게 된다. 정부군은 같은 일을 다만 합법적인 방식으로 수행할 뿐이다. 초국적 기업에게 채굴권을 주는 방식으로 천연자원 채굴권을 양도해 주고, 거기에서 얻는 수익을 내전에 쓰일 무기구매에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

정기적으로 무기와 현금을 손에 쥐는 무장집단의 지도자들과 초국적 기업이 평화를 추구할 동기를 느낄 리 만무하다. 오히려 분쟁과 전쟁의 지속은 그들의 이익에 유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아프리카에서 약탈경제와 전쟁은 이렇게 짝을 이룬다.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벌어지고 있는 분쟁을 세계화가 낳은 전형적인 전쟁양상이라 부르는 것이리라.

(손상열 님은 평화인권연대 활동가입니다.)

주간인권흐름

(2003년 7월 28일 ~ 8월 4일)

1. 사전에 막고, 사후에 치고!

정부, 현대자동차 파업에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키로... 노동계, "재벌 편에서 노동계 제압하려는 것" 강력 비판(7.30) / 정부, 철도노조 파업 관련 97억여원 손해배상 청구소송(8.2) / "정부, 노정합의 일방적 파기해놓고 허위 사실 유포"...철도노조, 10억원 손해배상 청구(8.4)

2. 죽음의 행진 멈추려면...

의료비 본인부담률 OECD 회원국 중 2번째...41.3%로 회원국 평균 10~20%보다 훨씬 높아(7.29) / '빛 압박' 시달리던 일가족 음독자살(7.29) / 막노동으로 생계 유지하던 장애인 자살(7.29) / 카드 빚에 시달리던 30대, 노모와 아들 살해 뒤 자해(7.30) / 주식 실패 비판 30대 주부, 자녀 2명 살해 뒤 자살(7.31) / "실질적·빈곤층 부분 급여 실시"...양대노총·참여연대·여연, 빈곤 해소 10대 과제 제시(7.31)

3. 고용허가제...제도화된 정기적 추방

산업연수제와의 병행 실시를 골자로 하는 외국인 고용허가제 법안 국회통과...4년이상 체류 이주노동자 10만명 가량 강제 추방 위기(7.31) / "산업연수제 철폐"...평등노조 이주지부, 노동비자 쟁취 집회 열어(7.31) / 정부, 9부터 불법체류자 대대적 단속 방침 밝혀(8.2)

4. 기타

일, "민주국은 일본과 관계없는 독립국가" 발뺌...전후보 상 피하러 역사왜곡(7.28) / 유니세프 보고서, "어린이 하루 3천명 인신매매"(7.29) / 안기부 엠티를 '기억의 공간'으로...서울시 유스호스텔로 개조 계획, 역사 현장 사라질까 우려(7.30) / 일 우익, 총련 사무실에 총격...화염병 공격·폭발물 설치(7.31) / 일본군 위안부·징용자 국적 포기서 제출...정부 무관심에 항의(7.31) / "노동현장 감시의 눈길 번뜩"...CCTV 설치·하드디스크 검사·인터넷 점검(7.31) / 학생 아닌 청소년도 '학생할인'(7.31) / 상반기 월급 못받은 노동자 급증...지난해 3.26배(7.31) / 청구성심병원 조합원 5명 집단산재 인정...3명은 유보(8.1)

[알림] 인권이야기 필진 교체

'인권이야기'가 오늘부터 새로운 필자들로 찾아갑니다.

- 손상열 (평화인권연대 활동가)
- 최은아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
- 김선미 (청소년의 힘 회원)
- 박하순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 사회진보연대 집행위원장)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6일(수)

제 2392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원폭 재앙이 낳은 고통의 대물림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정부 대책마련 촉구 인권위 진정

58년 전의 역사가 남긴 고통의 굴레 속에 갇혀 잊혀져 왔던 원폭2세환우들의 인권문제가 오랜 강요된 침묵의 터널을 뚫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일본 히로시마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둔 5일, 건강세상네트워크와 아시아평화인권연대 등 9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들의 인권문제에 대한 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원폭2세환우(愚友)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1945년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투하됐던 원자폭탄은 당시 수십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을 뿐 아니라, 간신히 살아남아 고국으로 돌아온 생존자들에게도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이라는 고통을 안겨줬다. 더욱 비극적인 것은 이들의 2세 자녀들 가운데서도 혈액장애, 성장발육 장애, 정신질환 등 원폭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는 사람들이 나타났다. 원폭이라는 재앙이 대를 이어 피해자들을 양산하고 있는 것.

공대위는 "인간다운 삶은 물론 생명 자체를 위협받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은 58년 전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그 후 58년 동안의 한국정부의 외면이 얼마나 잔혹한 것이었는지를 온몸으로 증거하고 있다"며 "오랜 세월 질병과 빈곤과 싸우다 소리없이 죽어야 했던 원폭피해자들의 고통이 후손들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현실이 묵과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의 시급한 의료·생계지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대물림되는 원폭의 재앙

이날 기자회견에는 원폭2세환우인 김

형률 씨도 멀리 부산에서 아픈 몸을 이끌고 참석해 관심을 모았다. 몸무게 37kg의 갇마른 체구에 폐기능의 70%가 손상된 김형률 씨는 현재 '면역글로블린M의 증가를 동반한 면역글로블린 결핍증'이라는 질병을 앓고 있다. 선천적인 면역체계의 결핍으로 유년시절을 갖은 병치레로 보내고 지금까지 모두 15차례나 폐렴이 재발하는 등 고통에 찬 삶을 버텨온 김 씨는 자신의 병이 1945년 히로시마에서 피폭된 어머니에 의한 모체유전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함께 태어난 일란성 쌍둥이 동생이 태어난 지 1년6개월만에 죽은 것도 같은 이유 때문이라는 게 그의 주장이다.

현재 김 씨와 같은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들은 적게는 수천, 많게는 수만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지난 90년부터 그 이듬해까지 진행됐던 보건사회연구원 조사에서 조사대상 1,932명의 원폭피해자 1세 중 41.4%가 1명 이상의 자녀가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답했고, 4자녀 이상이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다고 대답한 사람도 무려 23.6%에 달했다.

낙인과 차별에 대한 공포가 말문 막아

그럼에도 그 동안 원폭피해자 1세는 물론 원폭2세환우들조차 이 문제를 공개적으로 꺼내놓지 (☞2면에 계속)

방사능 피해 유전, 드러나는 증거들

방사능 피해의 유전성은 최근까지는 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되지는 못했다.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된 직후 피폭자들을 대상으로 실시됐던 미국의 건강영향조사 결과가 아직까지 공개되지 않고 있고, 그렇다고 다른 요인을 배제한 채 인간을 상대로 추가 실험을 할 수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2차대전 중 핵실험과 방사능무기의 저장·장착 등의 과정에서 피폭된 미군이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피폭자들, 86년 체르노빌 발전소 폭발사건의 피해자들의 2세들 가운데 선천성 기형이나 면역 결핍, 호르몬 이상 등의 치명적인 질병이 발견되면서 방사능 피해의 유전성에 대한 의혹은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3백톤이 넘는 열화학우라늄탄이 실전에서 사용됐던 91년 걸프전의 참전군인들과 그 자녀들에게서 발견된 '걸프전 증후군'(Gulf War Syndrome)은 이러한 의혹을 더욱 증폭시켰다. 많은 과학자들도 방사능으로 유전변이가 생겨 기형아가 발생하고, 염색체가 변형돼 발암율이 높아지며, 방사능이 골수에 자리잡아 백혈병 등의 혈액질환이 나타나는 것이라는 설명을 제시해 왔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해 5월 영국 리체스터대학교와 미국 국립생물학실험실의 생화학자들로 구성된 연구팀이 '강한 방사능에 노출되었을 때 나타나는 돌연변이가 3대까지 유전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미국 과학아카데미 회보(PNAS)에 발표해 큰 충격을 줬다. 당시 연구팀은 높은 강도의 방사선을 쬐인 수컷 쥐들을 정상적인 암컷 쥐와 교배한 결과 3세대에 걸쳐 정상보다 높은 비율로 DNA 돌연변이가 발생했음을 발견했다고 보고했다. 연구팀의 리처드 새틀로 수석연구원은 "인간에게 나타나는 돌연변이는 쥐의 경우보다 훨씬 복잡하기 때문에 암이나 신경계 교란 같은 질환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해 원폭후유증이 대물림되고 있다는 그동안의 주장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했다. (배경내)



# “교도관 방해로 소송 못하면 시효 중지”

## 유득형 씨 사건 대법 판결...가혹행위 불인정 한계 드러내

교도소측의 방해로 수용자가 제때 소송을 하지 못했다면 이 기간에는 시효가 적용될 수 없다는 최초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또한 같은 판결에서 교도소 내 계구를 사용할 때 행정법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은 적법 여부를 따지는 절대적 판단기준이 될 수 없다는 획기적 판단이 나와 그동안 두 규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서 자행돼 왔던 인권침해에 빨간불이 켜질 전망이다.

대법원은 지난 7월 25일 청송교도소와 청송보호감호소를 출소한 유득형(51) 씨가 “수감 중 교도관으로부터 과도한 계구 사용과 가혹행위, 집필권 침해로 인한 소송 방해, 집필권 침해 등 부당한 처우를 받았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유 씨의 승소를 인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소송 방해한 뒤 시효 주장 허용 안돼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유 씨가 소멸시효 내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아 손해배상청구 사건의 시효가 경과했다’는 피고(법무부)의 주장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의 권리행사를 현저히 방해한 피고(법무부)가 소멸시효의 주장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권리남용으로서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유 씨가 불법행위를 당한 날로부터 민사상 시효인 3년을 경과한 후 소를 제기한 것은 명백한 사실이지만, 이는 교도관들의 권리방해로 인한 것이었으므로 그 기간에 대해서는 시효가 배제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정은 수많은 수용자가 집필권 등의 방해로 제때 소송을 내지 못하고 있는 현실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시행령·규칙만으로 기본권 제한 못해

계구사용과 관련해서도 대법원은 “법률의 구체적 위임에 의하지 아니한 행정법 시행령이나 계호근무준칙 등의 규정은 위법성 판단을 함에 있어 참고자료가 될 수는 있겠으나 그 자체로써 수형자 또는 피보호감호자의 권리 내지 자유를 제한하는 근거가 되거나 그 제

한조치의 위법여부를 판단하는 법적 기준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현 행정법은 계구사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채 계구의 종류별 사용요건 및 사용절차, 계구의 모양 및 사용방법 등을 각각 시행령과 준칙 등에 위임하고 있다. 이에 대해 박찬은 변호사는 “계구사용은 인권침해의 위험성 때문에 사용요건 등을 매우 구체적으로 규정해 그 남용을 방지해야 하는데, 현 행정법은 이에 대해 매우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계구 남용에 대한 인권침해가 계속돼 왔다”며 “이번 판결이 ‘행정제도의 법률화’를 이룰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아울러 정당한 사유 없이 집견 도중 집견을 방해하는 행위 역시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즉, 소장으로부터 면회의 허가를 얻은 이상 그 대화 내용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자유로이 접견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중단시킨 교도관의 조치는 집견권을 침해한 것이라는 해석이다.

가혹행위 외면 납득 안가

하지만 교도관들에 의한 가혹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요구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유 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을 담당한 이상희 변호사는 “대법원 역시 유 씨의 온몸에 뚜렷이 남은 쇠사슬 등의 상흔을 외면하고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이에 대한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감을 표시했다.

유 씨는 지난 92년과 96년 ‘청송’에 두 차례 수감돼 99년 1월 보호감호까지 받는 동안 △소송 제기를 위한 집필권 침해 △손해배상청구사건의 시효(3년) 경과 여부 △6개월간 계속된 계구 사용 △집견 도중 가혹행위에 대해 언급했다는 이유로 집견을 중단한 부분에 대한 집견권 침해 △다른 재소자로부터 폭행당한 사건에서의 교도관 과실 △교도관의 가혹행위 등에 관한 기본권 침해에 대해 지난 99년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유 씨는

1심과 2심에서 고문 및 가혹행위를 제외한 모든 사안에 대해 기본권 침해를 인정받은 바 있다. (김명수)

(☞1면에서 이어짐) 못했던 것은 사회적 낙인과 결혼, 취업 등에서의 차별에 대한 두려움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또 원폭피해자들을 ‘한반도 해방을 위해 어쩔 수 없었던 평화의 제물’로 간주했던 사회 인식, 한반도에 배치된 미국의 핵무기를 북한의 남침을 막아내는 ‘평화 지킴이’로 믿으면서 핵에 의한 피해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못하도록 해왔던 냉전적 핵 인식, 그리고 미·일 정부와의 외교관계 악화를 우려한 한국정부의 외면 역시 이들의 존재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만드는 사회적 압력으로 작용했다.

한국정부도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해

공대위는 당시 원폭이라는 잔혹한 살상무기의 표적이 된 원폭피해자들은 결코 ‘평화의 제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한다. “일제 식민지 착취의 희생자이자 신흥 강국으로 떠오르고 있던 소련을 견제하고자 했던 미국의 전후 세계지배 구상의 희생자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피폭으로 인한 고통의 대물림 역시 일본과 미국 정부가 책임져야 할 몫이다.

그러나 공대위는 “이들의 역사적·사회적 고통을 오로지 피해자 개인과 그 가족의 몫으로만 전가시켜 온 한국정부에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1965년 한일기본협정을 체결할 당시 한국 정부가 원폭피해자 문제를 거론조차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심각한 질병으로 정상적인 삶을 꾸려나갈 수 없는 원폭후유증 환자들의 상태를 방지함으로써 그들의 건강권과 인간답게 살 권리를 침해해 왔다는 것이다. 공대위가 이날 국가인권위 진정을 통해 한국정부의 대책마련을 정책권고해 줄 것을 요구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향후 공대위는 전국에 흩어져 존재를 드러내지 않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을 조직화하고 이들의 인권실태를 조사해 나가면서 정부의 법적·제도적·외교적 노력을 강하게 촉구해나갈 계획이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7일(목)  
제 2393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특집> ‘진보의력’ 사건을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③ <끝>

# 전 국민을 일어서 기게 만든다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혐의 당사자가 치르는 연행과 구속의 고통으로 국한되지 않는다. ‘빨갱이’ 낙인이 찍힌 당사자는 사건이 종결된 후에도 당시 기억이 족쇄가 되어 수시로 자신을 ‘검열’하게 되며, 일반 국민들도 국가보안법이 ‘빨갱이’로부터 사회를 보호하는데 필수적이라는 암묵적인 메시지를 받게 된다. 공안당국은 이런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자신들의 존재 의의를 과시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을 자의적으로 적용하여 반대자들을 탄압해 왔다.

‘자기검열’이라는 족쇄

“연행된 후에는 인터넷에 간단한 글을 써도 익명으로 써야 안심이 되고 사회주의·자본·노동 같은 말은 당시 기억 때문에 입에도 올리지 못하게 됐다.” 2001년 10월, 진보의력 가입혐의로 연행됐다 풀려난 김미혜 씨의 말이다. 사건 이후, 한동안 사회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그녀는 “국민을 일어서 기게 만드는 국가보안법이 제 할 일을 잘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씩씩하게 웃었다.

94년 이적표현물 제작 혐의로 기소된 경상대 교양교재 ‘한국사회의 이해’의 저자 장상환 교수도 “사건 이후, 동료 교수들이 끊임없이 자기 검열을 할 수밖에 없어, 원고를 완성한 상태에서 출판을 보류하기도 했다”며 “94년 개정판 이후 7년이 지난 2001년에야 교재의 개정판을 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국보 칼날 어디든 겨눈다

진보의력 사건을 통해 공안당국은 의료계에도 ‘빨갱이들이 숨어있다’는 공포심을 자극하면서, 어디든 국가보안

법의 칼날이 적용될 수 있다는 일종의 경고를 했다. 3년 전 “북한의 전위조직이자 지하혁명당”이라는 꼬리표를 달아야 했던 소위 2차 민족민주혁명당(아래 민혁당) 사건의 경우는 ‘교육계’에 대한 경고가 됐다. 이화외고 과학교사 박정훈 씨는 민혁당 조직원으로 고등학생들에게 주체사상을 전파했다는 혐의를 받아 구속됐다. 박 씨는 “당시 공안당국과 언론은 ‘주사파 조직이 고등학교까지 손을 뻗었다’는 식으로 여론을 호도했다”고 기억했다. 그는 “공안당국에게 사망선고로 받아들여졌을 ‘6.15 선언’과 예산이 결정되는 9월 정기국회 사이에 사건이 터졌다”며 “자신들의 입지가 줄어들 때마다 사건을 기획, 조작하는 것이 공안당국의 생리”라고 말했다. 결국 박 씨는 노동신문 사설을 인터넷에서 다운받았다는 ‘이적표현물 소지’ 혐의만 인정돼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지만, 이 사건을 통해 공안당국은 ‘교육계에도 빨갱이들이 숨어있다’는 식의 공포를 충분히 자극할 수 있었다. 수사 과정에서 국정원이 고3 여고생까지 참고인으로 소환해 주체사상 교육을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한 것 역시 그러한 공포를 자극하는 주요 기제였던 셈이다.

‘빨갱이 낙인’, 기득권 입지 강화에 특효

또한 국가보안법에 의한 ‘빨갱이’ 낙인은 자연히 사회의 모순을 그대로 유지하고자 하는 기득권 세력들의 입지를 강화해주는 기반으로 작용하게 된다. 이번 진보의력 판결이 나온 뒤에도 그간 진보적 보건의료단체들이 주장해온 공공의료 강화 주장에 빨갱이 낙인을 찍으려는 시도가 있었다. 의약분업 문제 등 보건의료정책에서 진보적 목소리와 대립해 온 이익단체들이 판결에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힌 것.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적색사상에 젖어있는 좌파인사들이 주로 해온 현재의 의약분업을 전면 재개편하여 새 틀을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의사협회도 “우리나라 (☞2면에 계속)

## 만화사랑방



이동수

젊다는게 무슨 죄인가?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③

#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

"체벌, 암실수용 및 잔인하거나 비인간적이거나 굴욕적인 모든 처우나 징벌은 규율위반에 대한 징벌로서 완전히 금지되어야 한다." 행정시설과 관련해 UN이 정한 <피구금지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이 징벌과 관련해 천명하고 있는 원칙이다.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는 <피구금지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의 세계적 실현을 위해 Penal Reform International이 만든 'Making Standards Work'(MSW)에 의해 꼼꼼히 따져볼 수 있다. MSW는 △징벌의 상태와 지속기간 △반복의 정도 △수용자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건강 상태 및 이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징벌이 위 원칙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그리고 한발 더 나아가 MSW는 "반복되는 금지가 위법하다"고 규정한다. '금치가 매우 빈번하게 구금시설의 교도관에 의해 수용자를 다루는 손쉽고 효과적인 수단으로서 인지되고 사용돼왔으며, 금치는 피구금자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행정 당국은 이러한 경향을 저지해야 할 법적인 의무를 가진다'는 것이다. <피구금지처우에 관한 UN기본원칙> 역시 동일한 선상 위에서 금지 징벌의 폐지를 촉구한다. "징벌로서의 금지 폐지 또는 사용의 제한에 대한 노력이 행해져야 하고 장려되어야 한다"(7조)는 것이다. 이러한 국제원칙들에 비추면 우리의 연속 징벌은 그 기간의 장기성, 금지징벌 시 부과되는 모든 일상활동의 금지 등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 등으로 '잔인하거나 비인도적인, 모욕적인 처우'란 비판을 모면하기 어렵다.

한편, 이런 국제원칙들에 비추어 외국은 금지징벌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취하고 있을까? 우리 역시 연속 징벌이 '규정'이 아닌 '관행'이듯, 외국 형법에서도 연속 징벌에 관한 명시적 규정을 찾기가 쉽지 않다. 다만 금지징벌 기간과 금지징벌 시 부과되는 기본권 제한 등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인

데, 뉴질랜드는 금지기간이 최장 15일로 한정되었으며, 캐나다는 30일 이내에서 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캐나다의 경우 이러한 법규정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금지기간이 보통 2-3일을 넘지 않고 있다. 독일과 프랑스 역시 금지징벌은 매우 중대한 사안에 한정하여 엄격히 부과되며, 그 기간은 각각 4주와 45일을 넘지 못한다. 물론 프랑스에서는 금지 중인 수용자에게도 운동시간을 보장하는 등 외국의 경우는 연속 징벌의 존재여부를 떠나 우리나라의 금지 징벌과 비교가 어려운 상태다. (유해정)

(▶▶면에서 이어짐) 보건의료체계는 자유민주주의적 시장경제를 원칙으로 해

야 하며 이에 반하는 정책과 주의를 철저히 반대한다"며 재판부 판결을 이용해 의료 공공성 강화 주장을 공격했다.

폐지 주장마저 금지 대상?

이렇듯 국가보안법의 폐해는 곳곳에서 발견되지만, 국가보안법의 폐지를 주장하는 목소리에조차 재갈을 물리는 것이 바로 국가보안법이다. 지난 5월 13일 대법원(주심 대법관 박재윤)이 국가보안법 폐지주장을 담은 현수막을 내거는 것조차 금지하는 판결을 내놓은 것이 대표적.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과격하고 선동적인 문구로 표현되어 게재된 현수막을 불특정 다수의 시민들이 통행하는 장소에 게시하고자 하는 것은...억제의 필요성과 공익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이창호 교수(경상대 법대)는 "재판부가 수호하고자 하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 질서의 핵심은 표현의 자유인데, 주장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재판부의 자기 모순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강성준)

## 성적소수자 지원센터 문열어

### 관련 DB구축·전문 연구활동으로 정책 대안 생산

'성적소수자의 인권보호와 소통을 통한 문화생산'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한국 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아래 센터)'가 6일 문을 열었다. 이미 지난해 5월부터 문화행사, 토론회 등의 연대활동을 벌이며 준비기간을 가졌던 센터는 지난달 29일에 '성적소수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인터넷을 통해 개통한 상태다.

센터의 한재윤 공동대표는 "성적소수자와 관련된 법률개정이나 정부의 정책발표에 대해 당사자들이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센터의 출범 이유를 소개했다. 한 부대표는 "그 동안은 동성애 관련 사건이 발생하면 시위나 성명 등의 대응을 벌여 왔었는데, 물론 이러한 활동도 중요하지만 장기적인 정책 제시나 대응 역시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를 위해서는 성적소수자와 관련한 자료를 데이터베이스화 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게 한 부대표의 설명이다. 그는 "성적소수자 관련 자료가 흩어져 있어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게 현실"이라며, "누구나 손쉽게 접할 수 있도록 인터넷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또 전문적인 연구활동을 통해 축적된 성과물은 성적소수자의 인권 보장의 디딤돌로 작용할 것이라며 축적된 정보와 연구결과를 가지고 정책적인 대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 부대표는 사회적 편견을 바꿔 나가는 데에 문화적 활동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적소수자를 차별하는 법이 폐지되고, 보호법이 마련된다고 해도 사회가 순식간에 이들의 정체성을 인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성적소수자가 이 사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토대를 마련을 위해서는 인권보장과 함께 문화를 형성해야 한다는 것이 한 부대표의 지적이다. 그래서 이름도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이다. 활동가뿐만 아니라 모든 성적소수자들이 함께 할 수 있는 대중적 공간이자, 지원센터로의 전망을 밝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의 활동이 기대된다. (박종식)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8일(금)

제 239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해외민주인사 묶인 발 풀자

### 귀국보장·명예회복 추진위 출범... '반성문' 강요 중단 촉구

"세월이 흐를수록 고향산천이 더욱 그리웁습니다. 고향의 흙 냄새를 실컷 한번 맡아보고 싶습니다."

정부로부터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고향의 한통련 의장. 7일 기독교회관에서 열린 '해외민주인사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범국민추진위원회(아래 추진위)' 결성식에서 곽 의장은 일본으로부터 보내온 영상메시지를 통해 이렇게 말했다.

민주화를위한반호사모임 등 14개 단체가 참가하고 있는 추진위가 이날 발족함에 따라 해외 거주 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과 귀국보장을 위한 활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될 전망이다. 추진위가 현재까지 집계한 바에 따르면 유럽, 일본 등 세계 각지에서 입국을 거부당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는 64명.

추진위 공동대표를 맡은 강정구 교수(동국대 사학)는 "87년 이후 정치적 민주화는 진전됐지만 역사의 민주화는 초보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그 단적인 예가 해외민주인사들이 귀국하지 못하는 현실"이라고 지적하고 "국내 반독재 투쟁인사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명예회복의 성과가 있는 데 반해, 해외라는 더 열악한 상황에서 활동한 인사들에 대해서는 명예회복은커녕 입국조차 허가되지 않고 있는 것은 '형평성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날 결성식에서는 입국의 조건으로 강요되고 있는 반성문 형태의 준법서약에 대한 집중 비판도 이뤄졌다. 곽 의장은 "(귀국하려면) 반성문을 쓰라고 하는데, 반성문을 쓰는 것은 미래의 민주화 운동에 큰 해가 되는 것이냐? 그것만은 못하겠다"고 단호한 의지를 밝혔다. 독일에 있는 송두울

교수도 서신 메시지를 통해서 "준법서약서 폐지가 한국국적의 해외동포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최근의 유권해석은 민주와 통일을 이룩하는 긴 투쟁을 국내와 해외로 나누어 보려는 태도이고, 이것은 양심과 사상의 자유를 보편적인 인권으로 보지 않으려는 구시대적인 발상"이라고 비판했다.

추진위는 귀국 허가만으로는 완전한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아 이들 해외민주인사들의 명예회복까지 동

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

그리스, 이란 등의 민주인사들이 10년 정도 독일에 머물다 귀국하는 것을 지켜보면서도 33년 동안이나 끝내 조국 땅을 밟지 못했다는 김성수 재독귀향촉진회 상임위원은 "대한민국은 잔인한 나라라 하지 않을 수 없다"고 영상메시지에서 털어놓았다. 김 의원은 "세월이 흐르다 보니 죽고 병에 시달리는 사람이 많다"며 귀국보장의 시급성을 강조했다. 대부분의 해외민주인사들의 여생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이 사안이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추진위는 한가위를 즈음한 9월 18일~20일을 1차 귀국 추진시기로 잡고 해외민주인사의 현황 파악과 법률적 대응, 정부 관련기관과의 교섭 등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김명수) <관련기사 2면>

클릭! 인권정보자료

### 한국인 원폭피해자의 잊혀진 이야기 - 『한국의 히로시마』

펴낸 곳: 역사비평사/ 지은이: 이치바 준코/ 옮긴이: 이제수/ 2003년 8월/ 352쪽

한국인 원폭피해자가 살아왔던 20세기 백년동안의 역사를 기록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역사 속에서 잊혀진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지난한 삶을 재조명했을 뿐 아니라 일본정부를 향해 벌여온 이들의 피어린 투쟁 기록도 담고 있다. '한국의 히로시마'는 합천을 가리킨다. 오랫동안 한국인 원폭피해자 지원운동을 해왔던 저자는 당시 조선인 피폭자의 절반 가까이가 합천 출신이라는 사실을 품고 이를 풀어나간다. 그 과정에서 일제 강점기 합천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왜 일본으로 건너갈 수밖에 없었는지, 일본에서 어떤 삶을 영위했고 피폭 후에는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파헤친다.

피폭 후 일본에 남은 제일 조선인은 식민통치 기간과 마찬가지로 일본인과 동일한 구호를 받을 수 없었으며 일본정부에 의해 이루어진 피폭자 원호 대책에서도 배제되었다. 귀국한 한국인 역시 65년 한일기본협정을 명분으로 내세운 일본정부로부터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했다. 그러나 67년 한국원폭피해자협회 결성을 시작으로 36년에 걸친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의 끈질긴 투쟁은 일본정부의 강고한 빚장을 조금씩 열어 나가게 만든다. 2001년 6월 오사카 지방재판소는 '피폭자원호법의 평등 적용'을 요구한 곽기훈 씨 재판에서 일본을 떠난 제외 피폭자들에게도 피폭자 수당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피폭자는 어디에 있더라도 피폭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들에 대한 일본 정부의 법적 책임을 분명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게 된 것이다.

전체 피폭자 중 열의 하나는 제일 조선인이었다고 한다. 잊혀진 존재로 살아온 이들의 권리찾기는 평화를 싹틔우는 작은 씨앗이 될 것이다. (최은아)



# '네이스 반대' 시위 나선 부산의 청소년들

##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행동으로 네이스 문제 알려야죠"

'거짓 정보에 속지 말고 우리끼리 공부하세요!' '대화는 즐겨도 괜찮지만, 절대 학교·이름·연락처 말하지 말 것!' '대화가 지겹다 싶으면 마스크를 써버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청소년들이 만든 행동지침이다.

지난 7월 29일부터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네이스 강행처리 반대'를 외치며 부산교육청 앞에서 1인 시위에 나선 이들은 '청소년을 위한 희망네트워크 작은숲'(아래 작은숲) 청소년들. 작은숲은 <부산 청소년의 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부산지역(준)> 등 부산지역의 10개 청소년 동아리들이 함께 하고 있는 네트워크다. 네이스 반대 1인 시위는 지난달 초에 꾸러진 작은숲 '네이스 기획팀'에 의해 진행되고 있다.

앞서의 1인 시위 행동지침은 교육청 앞에서 하는 '학생 시위'인 만큼, 피켓의 내용이 틀렸다고 거짓 정보를 흘리거나 은근슬쩍 접근해서 정보를 캐내려는 교육청 직원과 '어느 학교인지 확인하라'는 교육감의 엄포 등에 대응하기 위한 나름의 자구책인 셈이다.

방학인데도 이어지는 보충수업에서 물레 빠져나와야 하는 어려움과 '학생인데 왜 나서냐'는 곱지 않은 시선에 불구하고 네이스 반대 목소리를 내는 데 이들은 당당하다. 내부 논의를 통해 네이스 '시정' 주장에서 '철폐'로 의견을 모았다는 이들은 "시정을 요구하게 되면 청소년들의 동의없이 정보를 수집한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부산 청소년의 힘 회원 박정훈(고3) 씨는 "정보수집 자체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네이스 철폐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나아가 박정훈 씨는 네이스 문제가 자기정보통제와 관련된 정보인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네이스 강행'의 문제는 청소년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지 않는 어른들의 잘못된 시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며 "(정보의 주체인) 학생들의 동의를 전혀 묻지 않고 네이스를 실시하는 것은 학교 안에서 학생들의 어떠한 정치적

권리도 인정하지 않는 데 그 본질적 원인이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이 참여하고 결정할 수 있는 권리, 모일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도 폭넓게 알려 나가야 한다는 게 이들의 생각이다.

1인 시위에 참여했던 전국중고등학생연합 부산지역(준) 김동현(고3) 회

원은 "평소 알고 지내던 친구가 '네이스를 반대한다'고 나서면, 주변에서도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학생의 권리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네이스 문제에 학생들이 나서야 하는 이유를 설명했다. 그는 "학교에서 가까운 친구에게 전달을 하면 이것이 반을 바꾸고, 결국엔 학교를 바꾸는 원동력이 될 것"이라며 희망을 나타냈다.

지난 2일 네이스 반대 거리캠페인까지 벌인 이들은 부산지역뿐 아니라 네이스 문제와 관련한 '전국적인 학생 네트워크'의 결성도 구상하고 있다. (고근에)

## 냉전 족쇄에 '뉘인 발' 누구인가

현재 '친북인사', '반국가단체의 성원'이라는 냉전시대의 낙인이 찍힌 채 입국이 불허되고 있는 해외민주인사들은 1백여 명에 이른다. 이들은 군사독재의 광풍이 몰아치던 1970년대부터 해외에서 반독재 민주화운동과 통일운동에 헌신해 왔을 뿐만 아니라, 국내 민주화운동 지원활동과 양심수 석방운동에도 힘을 보태왔다. 하지만 이들의 석방운동 대상이었던 사람들이 대통령과 국회의원까지 지낸 지금까지, 북한 동포와 일본 조총련계 동포들조차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지금까지, 그들의 발은 여전히 냉전과 분단, 그리고 '겨울 공화국'의 역사가 만들어낸 무거운 족쇄에 묶여있다.

대표적인 예가 '제일한국민주통일연합'(의장 곽동의, 아래 한동련)과 산하단체인 '제일한국청년동맹'(한청)의 핵심 인사들. 한동련의 전신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아래 한민통)이 '반국가단체'라는 게 그 이유다. 73년 민단 계열의 제일 한국인들이 모여 결성한 한민통은 의장으로 내정됐던 김대중 씨가 결성식을 일주일 앞두고 중앙정보부에 의해 납치되자, 김대중 구출운동과 반독재 투쟁에 앞장서 왔다. 그러나 박정희 정권은 78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를 한민통의 지령을 받은 간첩으로 조작, 한민통에 법원이 발부한 '반국가단체'라는 꼬리표를 달아줌으로써 그들의 반독재 투쟁을 탄압했다. 현재 당국은 한동련이 이름만 바꿔 달았을 뿐 한민통과 같은 단체라는 이유로, 그리고 그들의 방북 경력을 이유로 '굴종의 서약'이나 다른 없는 '준범서약서'를 제출하거나 국정원의 조사과정을 거치지 않는 한 입국을 불허하고 있다.

미국과 유럽 등지의 해외 유학생들과 60년대 중반 이후 박 정권의 '인력수출 정책'의 일환으로 광부나 간호사로 독일에 파견됐던 동포들 가운데도 '반체제·친북 인사'라는 주홍글씨를 단 채 여권발급을 거부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 1967년 고 윤이상 선생과 물리학자 정구명 박사 등 재독 유학생과 현지 교수들을 간첩으로 몰아 사형까지 구형했던 '동백림 사건'을 비롯, 잇따른 조작 간첩사건에도 굴하지 않고 이들은 반독재 투쟁의 불씨를 지펴왔다. 광주의 진실을 앞장서 알린 것도 이들이었고, 남북한 학문교류와 90년 '조국통일 범민족연합'의 결성 등 통일운동의 역사에도 이들의 굵직한 발자국이 남아있다. 그러나 이들에게 부여된 주홍글씨는 아직도 지워지지 않고 있다.

이들 민주화운동 관련자 이외에 일본의 '조선적' 동포들 역시 '국적 전환(한국국적 취득)을 하지 않는 한 임시 여권을 발급해줄 수 없다'는 한국정부의 또 다른 '전향 요구'에 가로막혀 있다. 이들이 지금껏 조선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반한·친북' 성향의 표정에 다른 아니라는 냉전적 사고, 그리고 인간의 양심을 국가의 필요에 따라 개조할 수 있다는 국가권력의 오만이 이들의 자유로운 왕래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는 것이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9일(토)

제 239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신문지 방망이'에 유죄 말되나

### 촛불집회 첫 구속자,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선고받아

촛불집회와 관련해 최초로 구속되었던 전현욱 씨가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8일 오전 풀려났다. 이날 서울지법 제22형사부(재판장 김삼균)는 지난 6월 7일 '미대사관 촛불 인간띠잇기 대회' 참석 도중 진압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 구속된 전 씨에게 집시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전 씨는 선고 후 법원을 나오면서 "밖에서 많은 분들이 고생하셨는데 나오게 돼 흥분하다"면서도, 선고 결과에 대해서는 "모든 사람들이 무죄라고 판단하고 있었는데, 재판부가 꺾어 맞춰 유죄를 선고한 점이 없지 않다"고 평가했다.

'고 신효순·심미선 살인사건 범국민대책위'(아래 범대위) 채희병 사무국장도 형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지적하며 "특히 3월 12일 기자회견조차 집시법 위반으로 본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말했다. 재판부가 집시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3월 12일의 기자회견은 경찰력의 남용과 인권유린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조사까지 진행된 바 있고, 결국 남부경찰서장이 전보 조치되고 연행자들에게 사과까지 했던 사건이다.

재판부는 또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과 관련해 △피해자 김모 경찰에게 큰 멍 1개와 작은 멍 2개가 발견됐고 △피가 맺힐 정도로 5~7cm의 상처가 났으며 △나중에 딱지가 나 떨어지기까지 하였다는 이유를 들어 "이 정도의 상처는 법률상 신체의 완전성을 해하는 상해에 해당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채 사무국장은 "당시 경찰의 과잉진압으로 인해 심하게 다친 사람이 부지기수네, 가벼운 초과상

을 가지고 치상이라니 상식에 어긋나는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당시 전 씨가 '불상의 도구'로 방패를 든 의경의 손목을 내리쳐 진치 2주의 상해를 입혔다며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를 적용하였으나, 그 '불상의 도구'가 다름 아닌 신문지로 밝혀져 이 사건은 소위 '신문지 방망이' 사건으

로 불려져 왔다. 그럼에도 이날 재판부가 경찰의 과잉진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가벼운 초과상을 이유로 유죄를 선고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구나 검찰은 이미 사면복권된 전 씨를 '집행유예기간인 자'로 적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주거지가 분명하고 다음달 군 입대가 예정돼 있었는데도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강행하는 등 수사과정에서부터 물의를 빚어왔다. 또한 1차 공판에서 판사가 '사회주의자냐?', '무슨 책을 읽느냐?' 등 혐의사실과 관계없는 질문을 해 문제가 되기도 했다. (김명수)

<논평>

##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철밥통을 약속받은" 귀족 노동자들, "대기업 노조의 집단이기주의". 익숙한 이야기다. 노동자들이 파업을 통해 자신들의 의사를 표현하려 할 때면, 때를 놓칠까 무섭게 이 같은 선동들이 전파를 타고 지면을 채운다. 이번 표적은 최근 파업을 끝낸 현대차 노동자들. "올해 현대차 노동자 평균 연봉 5천만 원 이상". 보수 언론들은 자극적인 수치로 이성을 마비시킨다. 의례 생산직 노동자는 적은 임금을 받아야 당연하다는 이 사회의 천박한 의식을 교묘하게 비집고 들어온다. 매일 잔업에, 특근에, 철야까지 설 틈 없이 끝낼 정도가 되어야 그 돈을 받게 된다는 사실은 부러 외면한다. 불로소득자에게 관대한 언론이, 세금 때먹기를 밥먹듯이 하는 재벌이, 땀흘려 일한 대가를 갚아주는 노동자를 불온시하는 세상은 뭔가 한참 잘못됐다.

게다가 청년 실업과 비정규직의 증가, 저임금 문제까지 정규직 노동자 탓이라고 몰아붙이고 있다. 말은 바로 하자. 비정규직이라 이름만 달리해 똑같은 일 시키면서도 임금 적게 주고 수시로 해고하며 노동자를 물건 취급하는 것은 자본의 장기 아니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 분열시키고 이간시켜 득보는 것 역시 그들이 아니던가. 짐짓 비정규직 노동자 위하는 척 사탕발림 해대는 모습은 가증스럽다. 그들의 속내란 기존의 정규직 노동자까지 쉽게 해고하고 임금과 노동조건도 비정규직에 맞춰 하향화시키는 데 있다. '노조와의 공동 결정' 없이 정리해고나 희망퇴직을 실시하지 않기로 한 현대차 노사 합의에 대해 경영권 침해라고 거품을 무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현대차 노동자의 정당한 파업권 행사를 기득권자의 이기주의인 양 오도하는 언론의 입방아에 찹주며 산업자원부가 들고 나온 '사용자의 대항권 강화' 방안은 이러한 자본의 탐욕을 충실히 대변한다.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 중 대체근로 허용 등을 "사용자의 권리"라며 정당화한다. 노동자의 상태를 자본주의 초기로 되돌리려는 사용자의 '이권'을 '인권'인 양 왜곡하고 있다.

시대는 앞으로 나아가야 한다.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여론 공세는 노동자에게 비참한 생활을 강요하는 적대 정책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 영화로 돌아온 99년 시애틀의 함성

## 반세계화의 상징 담은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오는 9월 멕시코 칸쿤에서 열리는 WTO 제5차 각료회의에 대응하여 신유주의의 핵심 추진기구인 WTO의 행보를 막기 위한 국내외의 움직임이 활발하다. 반신자유주의 운동이 국제연대의 중요성에 깊이 공감하게 된 토대에는 반세계화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잡은 99년 시애틀 투쟁이 있다. WTO 제3차 각료회의를 저지시켰던 이 시애틀 투쟁은 국제적인 미디어 네트워크 형성에 분기점이 된 사건이기도 하다.

현재 세계 80여개국에 존재하는 독립 미디어센터(Indimedia Center, 이하 IMC)는 시애틀 투쟁기간 동안 주류 미디어의 왜곡 보도에 맞서, 당시 현장에 집결한 자율적 주체들의 건강한 의지를 드러내고 경찰들의 폭력을 알리는 데 혁혁한 공로를 세웠다. 제4회 서울노동영화제의 상영작이기도 한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 Showdown in Seattle>은 당시 현장을 담은 수많은 비디오 활동가들의 촬영분을 바탕으로 투쟁 기간동안 인터넷, 위성방송을 통해 매일 송출했던 다섯 개의 시리즈를 60분으로 압축하여 재편집한 작품이다.

<세계를 뒤흔든 5일, 시애틀 투쟁>은 크게 7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WTO의 전주)에서는 활동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인간을 배제하고 이윤 증식을 위한 초국가적 논리를 강제하는 WTO의 폐해를 지적한다. 99년 시애틀의 현장을 기록한 [민중의 단결]에서는 WTO로 인한 억압적 질서를 직접 경험하고 있는 제3세계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려주는 것은 물론, 최루탄과 고무총알 등을 이용해 시위를 폭력 진압하는 무력 경찰들의 지나친 실상을 포착한다.

[자유로운 미디어를 쟁취하다. IMC-시애틀]에서는 독자적인 미디어 망을 구축해 시애틀의 현장과 발빠르게 호흡하며 대항 언론의 구실을 특목히 하고 있는 IMC의 사무실을 찾는다. IMC의 독특한 운영 방식과 철학 등을 제시하면서 그들의 활동이 매체의 진보적인 활용, 미디어 활동가들의 자발적 의지, 효율적인 네트워크 등을 통해 가능했음을 보여준다. (IMC 외부)에서는 갖가지 행태로 연일 계속된 경찰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고, [시애틀 점령]에서는 12월 1일 철강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을 집중 보도하면서 충만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당시의 열기를 전한다. 특히 노동자, 환경운동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활동가들이 WTO가 공공의 책임을 확신하고 연대의 장을 형성하는 모습은 시애틀 투쟁의 의의를 시사한다. [저항하는 포로들]에서는 농민들을 소외시키며 유전자 조작 식품을 유통

을 보여준다. (IMC 외부)에서는 갖가지 행태로 연일 계속된 경찰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고, [시애틀 점령]에서는 12월 1일 철강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을 집중 보도하면서 충만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당시의 열기를 전한다. 특히 노동자, 환경운동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활동가들이 WTO가 공공의 책임을 확신하고 연대의 장을 형성하는 모습은 시애틀 투쟁의 의의를 시사한다. [저항하는 포로들]에서는 농민들을 소외시키며 유전자 조작 식품을 유통

을 보여준다. (IMC 외부)에서는 갖가지 행태로 연일 계속된 경찰 탄압의 실상을 보여주고, [시애틀 점령]에서는 12월 1일 철강 노동자들의 집회 현장을 집중 보도하면서 충만한 에너지로 가득했던 당시의 열기를 전한다. 특히 노동자, 환경운동가 등 각기 다른 분야의 활동가들이 WTO가 공공의 책임을 확신하고 연대의 장을 형성하는 모습은 시애틀 투쟁의 의의를 시사한다. [저항하는 포로들]에서는 농민들을 소외시키며 유전자 조작 식품을 유통

### '정치적 음모' 아닌 '성매매' 문제다

#### 양길승 실장 파문, 성상납·접대문화 반성 계기 돼야

최근 양길승 청와대 제1부속실장 사건을 단지 고위 정치권의 비리 문제나 '정치적 음모'의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안되고, 정치권과 성매매 산업의 유착 또는 만연한 성상납의 문제로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성매매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는 7일 발표한 논평에서 이 같이 주장하면서, 이번 사건이 정치세력과 성산업 간의 유착을 근절시키는 계기로 작용할 수 있도록 언론도 이와 같은 시각으로 다루어줄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번 사건을 '정치적 음모'로만 바라보는 청와대의 태도에 대한 비판도 제기됐다. 한소리회는 "양 실장 사건은 몰래 카메라를 누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찍었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성매매 행위로 조사를 받고 있는 범죄자에 의해 정치권의 실세가 향응을 제공받고 청탁을 받은, 정치권과 (성매매) 범죄자의 유착비리 문제"라면서 "성을 매매하는 업소의 주인에게 향응을 제공받은 정치권의 실세가 경질되는 상황을 안타깝게 여기는 사회라면, 우리 사회에서 여성을 성적 상품으로 매매하는 행위는 근절할 수 없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한소리회 조진경 사무국장은 "우근민 제주지사의 성희롱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최근 부산지역의 한 신부의 유아 성희롱 의혹이 제기됐을 때도 늘 정치적 음모론을 제기해 사건의 본질을 희석시키려는 시도가 있어왔다"면서 "여성상납하고 '여성을 끼고 노는' 접대문화를 당연시하는 풍토에 대한 근본적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사무국장은 "양 실장이 접대여성을 돌려보냈다는 말도 믿기 힘들지만,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문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그 여성이 업소주인에게 2차를 강요당했을 때 왜 거부할 수 없었는지를 파헤치고, 주인이 지역 유지에다 그 업소가 대통령의 측근까지 드나들 정도일 때 그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성매매를 강요당한다 해도 어디에도 호소할 수 없는 처지가 된다는 점을 조명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말했다.

여성주의 저널 <알다>의 조이여울 편집장도 "양 실장 사건을 단지 '향응'이라고만 표현하는 것은 남성 접대문화에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성매매를 너무나 당연시하기 때문"이라면서 "성매매나 성매매가 기본이 되어있는 접대문화 자체에 문제제기하지 않고 단지 남성들 사이의 '거래'나 '부정부패'의 문제로만 접근하는 태도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조 편집장은 또 "이번 사건에서 업주와 검찰의 유착관계까지 드러난 만큼 그러한 유착관계를 끊어내고 성매매에 관한 잘못된 검찰의 인식을 바꾸는 것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배경내)

시킨 결정적인 주체로 WTO를 지목하고 시애틀을 찾은 활동가들, 다국적기업에 의해 제3세계 국가의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현실에 주목하여 투쟁에 참여한 이들의 주장에 귀를 기울이며, WTO가 전세계적으로 총체적인 난국을 가져오는 지배 체제임을 드러낸다. 마지막 (민주주의의 참모습)에서는 세대와 활동영역을 넘어서 '너무 많은 사람을 열 받게' 한 WTO의 회의를 실질적으로 저지시키고 WTO 내부의 동요를 자극한 시애틀 투쟁을 돌아본다.

'위험을 느낀 체제의 반격'인 경찰의 폭력 앞에서 V자를 그리며 승리했노라 화답하는 한 활동가 모습이 오는 9월 칸쿤에서 재현되기를 기대해 본다.

◎ 문의: 노동자뉴스제작단 [이진영]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12일(화)

제 2396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평화 위한 불복종, 왜 탄압하나

### 각계 단체들, "전쟁훈련 반대 시위 탄압 안된다"

지난 7일 대학생들의 포천 영평사격장 시위와 관련해 시위 참가 학생과 기자 등 13명이 결국 구속된 가운데, 11일 한총련이 당시 시위와 이후 사태에 관한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낮 연세대 학생회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재욱 한총련 의장은 당시 시위가 매우 평화적이었음을 강조하면서 스트라이커부대의 훈련 의미를 상기시켰다. 또한 정부의 과도한 강경탄압과 보수언론과 한나라당의 이념 공세를 강력 규탄했다.

"맨 몸의 평화시위였을 뿐이다"

정 의장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포천 영평사격장 진입시위는 미군의 군사훈련에 반대한 비폭력적이고 상징적인 시위였고, 스트라이커 부대의 훈련이 갖는 전쟁의 의미를 알려내고자 했던 평화적인 시위였다"며 당시 시위의 진상을 올바르게 볼 것을 촉구했다. "12명의 대학생은 태극기를 두르고 아무런 위협적인 소지품 없이 선전물만을 들고 사격장에 진입해 플래카드를 펴고 구호를 외쳤으며 소형 성조기를 불태운 후, 이어 멈춰서 있는 탱크 위에 올라가 구호를 외쳤"을 뿐이라는 것이다.

또한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 부대가 긴장이 고조되는 현 시점에 첫 해외 훈련지로 한국을 택한 것과 '한국지형 익히기'를 목적으로 한 현지훈련을 실시한 것은 명백한 대북 군사위협이며 한반도 전쟁계획의 노골적인 표현"이라며 미군의 대변자 역할을 하면서 한총련 합법화와 이번 사건을 연계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는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을 규탄하는 한편, 미군의 말 한마디에 전면적인 한총련 탄압에 나선 정부

에 대해서도 비상식적 탄압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정 의장은 "이제 단체로 탄압을 받아왔기 때문에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가 보장되지 않아 부득불 취한 행태가 기습적인 점거시위였지만 상대방을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폭력을 행사하기 위한 방식은 아니"였다고 하며 시위 점거시위의 배경을 설명했다. 실제 한총련의 이름으로는 어떠한 집회 신고도 허가되지 않고 있다.

기자회견에 함께 한 오종렬 전국연합 상임의장은 "언론의 보도를 보고 학생들이 무서운 범죄를 저지른 줄 알았는데, 진상은 돌맹이 하나 들지 않은 평화적인 시위였다"며 "왜 폭력 과격 시위로 낙인찍히고 매도당해야 하는가?"라며 언론의 보도태도를 문제삼았다. 권오현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회장도 "전쟁을 억제·방지하는 효과와는 관계없는 신속기동부대인 스트라이커부대가 훈련하는 것에 대해 막상 정 부나 언론은 아무 말 없었다"고 꼬집고 이러한 상황에서 "학생들이 뛰어든 것"이라는 메시지를 맨몸으로 말하고자 한 것"이라며 이번 사건을 사법 처리하는 것도, 합법화 논의를 중단하는 것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한총련 합법화 중단 안 된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총련에 대한 여론몰이에 대해서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들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동당과 개혁국민정당도 일부 언론과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단체들이 한총련에 대한 강경 탄압을 주문하는 것에 우려를 표했고, 민중연대와

통일연대, 범민련 남측본부 등 사회단체들도 한나라당을 비롯한 보수우익세력을 규탄하는 성명을 통해 한총련 합법화를 재검토하겠다는 이야기가 불거져 나오는 것에 우려를 표했다.

"더 큰 재앙 막기 위한 불복종 허용돼야"

평화인권연대 손상열 활동가는 "정부가 행하는 행동이나 군사작전이 큰 범죄를 저지르거나 큰 재앙을 야기할 때,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무기를 파괴하는 것은 시민불복종의 관점에서 봐야 한다"며 "영국에서 여성들이 가정용 망치로 동티모르에 수출되어 학살을 자행하는 전투기를 부숴지만, 무죄로 판결받은 사례가 있다"고 소개했다. 이어 손 활동가는 "부대 진입시위가 실정법으로는 범법행위지만, 그 범법행위가 더 큰 범죄를 막을 수 있을 때에는 정당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그는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안보에 대한 결정 권리는 시민과 민중에게 있어야 한다"면서 "한반도에서의 전쟁 위협이 시민의 안보를 해치는 만큼 안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보장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현실에서 그러한 것들이 감히 이야기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권리의 시야를 좁히고 있다"고 덧붙였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서미숙 활동가도 이번 여론몰이에 대해 "한반도의 긴장을 증폭시키는 훈련과 공안탄압을 통해 8.15를 즈음한 반전평화세력의 집결을 최소화하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며 "보수언론들이 한총련을 과격하고 폭력적인 집단인 양 매도하는 것은 보수우익들에게도 현 시점이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연행된 시위자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지난 9일 의정부경찰서 앞에서 항의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9명 가운데 5명에 대한 구속이 확정됐고 3명은 영장이 기각됐다. 1명은 구속 여부가 미확정된 상태다. (김명수)



### ○ 최은아의 인권이야기 ○ '영혼의 집'을 꿈꾸며

민약 당신의 꿈이 목수라면, 무엇부터 시작하시겠어요? 목수를 양성하는 마땅한 직업학교도 없는 상황에서 당신이 목수 일을 배울 수 있는 방법은 많지 않을 겁니다. 현역 목수에게 개인교습을 받거나, 인터넷을 뒤져가며 동호회를 찾거나, 관련 서적을 뒤져보는 것이 아마 할 수 있는 일의 전부 아닐까요. 다행히 손재주가 있어 혼자 힘으로 목수 일을 할 수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나무 재질의 특성을 파악하여 재질에 따라 쓰임새를 정하는 일, 다양한 연장을 적당한 용도에 따라 다루는 일 등은 인터넷의 단편적인 지식으로는 찾을 수 없습니다. 산중 도인을 통해 면면히 내려오는 비법도 아닌 목수 일이 이렇게 어려워져야 우리 사회는 당분간 목수를 배출해 내기 어려울지도 모를 일이지요.

그런데 이런 과정이 목수 지원자에게만 해당될까요? 민약 '목수 되기'라는 방법이 체계적으로 정리되어 있다면 훨씬 짧은 시간과 노력으로 많은 사람이 목수의 꿈을 이룰 수 있을 겁니다. 이렇듯 우리 사회에서 자료는 무슨 일을 시작하는 데 기본적으로 필수적인 듯 보이지만, 필요한 만큼 각 분야에서 체계적으로 정리·축적·가공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권운동도 예외는 아닙니다. 빈약한 재정, 딸리는 일손, 자료에 대한 척박한 인식 탓에 자료는 여전히 사무실에서 뒤편은 '애물단지' 아닌가요? 그럼에도 애타게 자료를 찾고자 하는 사람에게 자료는 마치 '생명수' 같습니다. 예를 들어 감옥 안의 부당한 처우에 맞서 싸우는 수용자에 「감옥법령자료집」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유일한 힘입니다. 왜냐하면 감옥 안에서 자신을 옹호하는 온갖 장치를 알고 있어야 부당한 처우에 당당히 저항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럼에도 인권에 관한 자료는 여전히 일반인에게 접근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자료를 찾는 많은 사람들의 공통적인 호소는 자신에게 필요한 자료가 없다는 것, 자료를 찾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 왜 그럴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국가기록문서는 일반인에게 접근 자체가 어렵고, 각 분야에서 자료 축적이 미흡한 것은 그 동안 자료를 모으고 정리하는 일에 인력과 재정을 투입하지 않았던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삶 그 자체가 '기록'이라는 축적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역사'일 텐데, 우리는 그동안 자료를 너무 흘려버려 창고에 처박아두지 않으면 버리는 것을 당연시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이전 사람이 일구어 놓은 성과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를 모으는 일부터 시작합니다.

자료에는 무형의 축적물뿐만 아니라 유형의 구조물도 포함되기에 최근 옛 안기부 건물을 허물고 그곳에 유스호스텔을 짓겠다는 서울시의 계획에 저는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재판에서 이길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불살라지는 느낌이었을까요. 고대 이집트 사람에게 자료를 모아놓는 도서관이란 '영혼의 집'으로 불렸다고 해요. 도서관이란 기억을 저장하고 지혜를 키우는 곳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잇는 공간으로 이해한 고대 이집트인의 명민함이 그렇습니다.

(최은아 님은 인권운동사랑방 상임활동가입니다.)

###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4일 ~ 8월 11일)

1. 지겨운 납량특집...한총련 마녀사냥 제방송  
법정학원 통일선봉대, 목포·광주 등 전국에서 지구당 현관 때며 '한나라당 해체' 시위 (8.2~4)/ 대학생 30여명, '미 스트라이커(신속기동여단) 부대 철수' 요구하며 을지로 미 공병단에 페인트병 투척...6명 연행 (8.7)/ 대학생 12명, 포천 미군 훈련장 진입 '한반도 전쟁위협 중단' 시위...〈민중의 소리〉 객원기자 포함해 전원 연행 (8.7)/ 주한 미8군사령부, 한총련 "법이 허용하는 한 강력한 조치로 처벌" 요구 (8.8)/ 노무현 대통령 "동맹국 상호간의 예의를 손상하는 유감스러운 일" (8.8)/ 고건 총리, "국외과 국민정서에 반하는 중대한 이적행위, 배후세력 색출할 것" (8.9)/ 대학생 80명, 훈련장 진입시위 연행학생 석방 요구하며 호송버스 앞에 드러누워 시위하다 연행 (8.9)/ 통일연대·민가협 등, 주한 미 대사 공개면담 요구와 공개질의, "맨몸에 태극기만 두른 학생들이 누구의 안전을 어떻게 위협했다는 말인가?" (8.9)/ 훈련장 진입시위 대학생·기자 등 13명 결국 구속 (8.9)/ 한나라당, 한총련 합법화 논의 중단 촉구 (8.10)/ 문재인 민정수석, "한총련 자기혁신 필요, 합법화 조치는 변함없다" (8.11)

#### 2. 현대차 타고 '사용자 대항권' 뽐뽐...

현대차, 공장 합병·이전·정리해고·희망퇴직 등 고용안정과 직결되는 부분 노사 공동 결정기로 합의 (8.5)/ 전경련, 현대차 합의 비판...「헌법상 재산권 보장 취지와 주주경영권 본질 침해」 (8.5)/ 산자부, 정리해고 요건 완화,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 노조의 부당노동행위제도 신설 등 '사측 대항권' 추진 (8.6)/ 민주노총 "대항권 추진은 노조활동 무력화 기도" (8.7)/ 대한상의 설문조사, 대항권 강화에 동의하는 기업이 73.9% (8.10)/ 현대차 চে양기 부사장, "안정적 노사관계 확립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 (8.11)

#### 3. 끝나지 않은 역사

전민특위, 유엔 인권소위에서 미군 민간인학살 국제적 관심 촉구 (8.4)/ 원폭2세환우 공대위 출범해 정부 대책 마련 촉구...인권위에 진정서 제출 (8.5)/ 위안부 할머니들, 사죄·배상 촉구 방일 출정식...현지에서 대만 위안부 할머니들과 연대투쟁 (8.6)/ 일, 이르면 9월부터 재한 원폭피해자 1천여명에게 원호수당 지급하기로 (8.10)

#### 4. 기타

남문중 교사·학부모, 학생들에게 반전 배지 판매 이유로 전교조 교사 파면한 교장·교감 퇴진 서명운동 시작 (8.4)/ 경남김해 H시내버스 운전기사 감시 CCTV 설치 발각돼...기사들 "동의없는 몰카 설치는 인권침해" 반발 (8.9)/ 양길승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 몰래카메라 사건 SBS 압수수색...기자들 "언론탄압이자 공권력 남용" 몸싸움 저지로 비디오테이프 확보 무산 (8.9)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13일(수)

제 2397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일본 피폭자 수당, 2세는 외면

### 한국 피해자에 건강수당 지급기로...한·일 모두 2세는 혜택 못받아

일본이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원폭피해자들에게도 건강관리수당 등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했으나, 같은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2세들은 이 같은 혜택을 전혀 받을 수 없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최근 일본정부는 '피폭자 건강수첩'을 소지한 한국 거주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자국의 '원폭 피폭자에 대한 원호에 관한 법률'(아래 피폭자원호법)을 적용, 빠르면 9월부터 건강관리수당 등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대한적십자사와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간 일본에 거주할 동안에만 무료 진료와 원호수당의 혜택을 받을 수 있었던 한국인 원폭피해자들이 한국에서도 월 35만원 가량의 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됐다.

일본에 체류중인 원폭피해자들에게만 교부되어 오던 '피폭자 건강수첩'이 재외 한국인에게도 교부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부터다. 71년 무료 치료를 받기 위해 일본에 밀입국한 원폭피해자 1세 손진두 씨가 일본정부를 상대로 '피폭자 건강수첩'을 받아내기 위한 힘겨운 법정 싸움을 시작, 1심과 2심을 거쳐 78년 최고재판소에서 모두 승소함에 따라 일본에 들어온 한국인도 건강수첩을 받을 수 있게끔 방침이 변경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거주지를 일본 국외로 옮긴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제한 요건을 뒤 한국으로 귀국한 이후에는 건강수첩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했다. 그러던 가운데 2001년과 2002년 곡귀훈 씨가 일본 정부를 상대로 국외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들에게도 원호수당을 제공할 것을 요구한 법정 투쟁에서 연이어 승소함에 따라, 일본

정부가 해외 거주 피폭자들에게도 수당이 지급되도록 방침을 바꾼 것.

그러나 △이미 건강수첩을 교부받은 피해자 1세는 등록된 원폭피해자(2천여명) 가운데서도 절반 정도에 불과하고 △피해자들이 고령에다 원폭후유증에 따른 심각한 질환으로 까다로운 심사와정을 거친 후 다시 일본까지 가서 건강수첩을 교부받기에는 어려움이 크며 △지급되는 돈이 생활지원금은 아예 제외된 '최소액'의 건강관리수당에 불과해 치료와 생계 부담을 덜기에는 매우 부족하고 △국내에 지정병원 수가 매우 적고(2002년 9월 현재 20곳) 전문치료기관은 아예 없어 치료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기는 힘들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한·일 2세들은 아무 혜택 없어

이 외에도 같은 원폭후유증으로 고통받으면서 '질병과 빈곤의 악순환'의 고리 속에 놓여있는 원폭2세환우들은 아무런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에서 이번 결정은 커다란 한계를 갖는다.

## 건대생 2명, 이적표현물 제작 등으로 끝내 기소

### 검찰 중세시대 이적표현물 잣대로 생각 옳아매

국가보안법위반 등의 혐의로 지난달 14일 구속됐던 건국대 학생 김종곤 씨와 김용찬 씨가 지난 6일 기소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지검 김재욱, 허상구 담당검사는 서울지법에 제출한 공소장에서 두 학생이 △'4.30 청년학생문화제 메이데이' 자료집 제작·배포·소지 △'2002 하계 반신자유주의 선봉대' 자료집 인터

현재 일본은 자국 원폭2세들에게도 피폭자 건강수첩을 교부하지 않은 채 단지 무료 건강진단의 혜택만을 제공하고 있을 뿐이어서, 일본의 피폭자2세회도 피폭자원호법의 확대 적용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달 24일 평생을 괴롭혀 온 폐렴증세로 또다시 병원에 실려간 뒤 아직까지도 입원 중인 원폭2세환우 김형철 씨는 "몸이 아파도 치료비 부담으로 맘껏 애틀 수도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에게 제공되는 혜택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2년에 한번 2만원 상당의 형식적인 무료 건강진단을 받을 수 있는 게 전부다.

지난 5일 발족한 '원폭2세환우 문제 해결을 위한 공동대책위'의 이광수 공동집행위원장(아시아평화인권연대 공동대표)은 "한국정부가 적극 나서 원폭2세들의 건강과 생활 전반에 관한 실태부터 조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본정부의 배상 책임을 촉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평양전쟁피해자보상추진협의회' 김은식 사무국장은 "의학의 발달로 방사능피해의 유전성이 점차 입증되어가고 있는 만큼, 국내에서 원폭후유증을 앓고 있는 원폭2세환우들에 대한 유전성 관련 조사가 이뤄져 원폭2세들도 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배경내)

넷 홈페이지 게재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자료집 제작·배포 △〈새로운 학생운동을 위한 진지구축〉표현물 제작·소지, △〈비정규직 운동의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노동해방투사의 임무〉등의 표현물 인터넷 클럽 안 게재·반포 등 국가보안법 7조의 1항(교우·찬양)과 5항(이적표현물 제작·배포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2면에 계속)



[연재]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흠 교수를 찾아

## 준비된 자세 미흡...반년 넘은 공석, 졸속 인선 결과

올 1월 곽노현 교수의 사임으로 반년 넘게 비어있던 인권위원 자리가 드디어 채워졌다. 지난 1일 김만흠 가톨릭대 아·태지역연구원 교수(정치학)가 신임 인권위원으로 임명된 것. 앞서 김 위원은 민주당의 추천을 받아 지난 달 15일 국회에서 선출된 바 있다.

하지만 이번에도 재연된 밀실 인선으로 김 위원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와 의견개진의 권리는 철저히 무시됐다. 이에 11일 김 위원을 직접 찾아가 그의 인권 철학과 포부를 들어봤다.

한국정치학회 상임이사, 민주개혁국민연합 정책위원장 등 그의 이력에서 알 수 있듯이, 김 위원은 지금까지 '인권'이 아니라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갖고 활동해 왔다. 김 위원은 한국정치가 '상대방을 죽여야 내가 사는 시스템'이라고 보고 '우리 사회 내부의 공동체 질서'에 대해 고민해 왔다.

"10명이 모여 있는데 9명이 나머지 1명을 죽여버리라고 했을 때, 사람들에게 '이것이 민주주의와 맞는 것인가' 물으면 모두가 아니라고 한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는 그와 유사한 현상들이 많이 있다.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전혀 처벌의 대상이 아닌데, 다수나 감자의 힘에 의해 처벌의 대상으로 되어 버린다. 이제는 '어떻게 더불어 살아갈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은 공존을 의미하며, 공존에는 반드시 상대방, 특히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 집단에 대한 인정을 필요로 한다. 그런 의미에서 '더불어 사는 공동의 질서'라는 김 위원의 화두는 분명 인권의 원리와 맥이 닿아 있다. 이후 김 위원의 적극적인 인권옹호 활동이 기대되는 대목이다.

공존의 논리 설파, 소수자 인정 기대

하지만 한국사회의 인권현실을 바라보는 김 위원의 눈은 아직 예리하지 못했다. 김 위원은 사회적 약자·소수자

의 문제, 국가보안법을 포함한 사상·이념의 제약 문제, 과거청산의 문제 등 기본적인 인권문제를 나열할 뿐, 자신의 관점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할 인권 사안을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못했다. 노동권·건강권·환경권 등 인권상황의 전반적인 후퇴를 물고 올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해, 김 위원은 인권위가 입장을 내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에 대해 심도 깊은 고민을 한 적은 없는 듯 했다.

또한 김 위원은 인권사안을 해결하는 데안 부분에서 절충적이고 타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김 위원은 국가보안법 문제에 대해 "어느 하나가 옳고 틀렸다는 식이 아니라, 서로간의 입장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아래, 어떤 방식으로 공존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분명 국가보안법 피해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되지만, 국가보안법 폐지 여부에 대해서는 끝내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다. 최소한 '국가보안법이 반인권적이다'라는 기준을 제시하는 것도 의미 있다고 이야기하는 수준이었다.

절충적, 타협적 태도 아쉬워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고자 하는 김 위원의 태도에는 진실성이 있었지만, 인권위원으로서 충분히 고민한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다. 이는 급박하게 이루어진 인선과정과도 무관하지 않다. 김 위원은 국회 표결 일주일 전, 민주당 쪽으로부터 전화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인권위원직을 수락했다고 했다.

하지만 11명의 인권위원 중 법조계 출신이 7명이나 되는 현실 속에서 인권위가 엄격한 법률적 사고로 적극적인 인권옹호 활동을 벌이고 있지 못한 한계를 극복하는 데 김만흠 신임 인권위원의 일정한 역할이 기대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전향적인 판단을 하는 데 기여할 수 있으면 한다"라는 김 위원의 포부가 현실화될지 바란다. (범용)

(☞1면에서 이어짐) 한편, 애초 구속 사유 중 하나로 알려졌던 <자본론>, <맑스를 위하여>, <신좌파의 상상력> 등의 책은 공소장의 이적표현물 목록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이적표현물로 지목된 위 자료집과 표현물은 사회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등의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발췌, 편집하거나 그대로 게재한 것이어서 법 적용의 형평성이 여전히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피고측 조영선 변호사는 "여전히 '빨간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리면서 국가보안법 폐지 논의에 반론을 제기할 의도로 무리하게 기소를 한 것 같다"며 "접견을 갈 때마다 검찰 수사를 받느라 접견을 못할 만큼 매일 수사를 진행하고, 구속기간을 10일이나 연장해 마지막날 공소를 제기한 것으로 봐서도 검찰이 기소에 많은 부담을 갖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가 신청을 받아들일지는 회의적이지만, 국가보안법 7조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할 계획이며, 만약 기각되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헌법률심판제청이란 계류중인 사건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 위헌소지가 있을 때, 그 법률의 위헌여부를 당해 재판부가 헌법재판소에 의뢰해 판단을 요청하는 제도이다.

조 변호사는 "국보법 7조 3항(이적단체 구성)이 냉전시대의 유물이라면, 7조의 1항과 5항은 중세시대의 유물"이라며 "우리 사회는 냉전 시대보다 더 이전 시대에 있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인 폭력 행위를 처벌할 수는 있지만 생각 자체를 처벌할 수는 없으며, 국가가 국민들의 생각을 관리하겠다는 것은 매우 전체주의적인 발상"이라는 것이다.

사회진보연대 박하순 집행위원장도 "검찰이 낡아빠진 국가보안법을 들이밀며 이런 식으로 마녀사냥을 한다면, 그 학생들뿐만 아니라 동일한 내용을 인터넷에 게재하고 있는 사회진보연대와 민주노총, 나아가 모든 국민을 다 기소해야 할 것"이라며 검찰과 국가보안법을 강력 규탄했다.

한편, 김용찬 씨와 김중곤 씨의 첫 공판은 각각 오는 21일 14시 서울지법 가동 425호와 27일 14시 서울지법 가동 519호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명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14일(목)

제 2398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교원노조법 재탕 안돼"

## 노동3권 부정 공무원노조법에 각계 1만인 반대 선언

노동부가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아래 정부안)을 입법 예고한 가운데, 13일 전국민중연대, 민주노총 등 노동·사회단체 소속 1만 명이 정부안 반대를 선언했다.

선언자들은 "공무원 노조는 부정부패와 청탁뇌물로 찌든 공직사회에 새바람을 불어일으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라며 "공무원들이 권력에 맞서 개혁의 주체로 서기 위해서는 완전한 노동기본권이 필수적인 전제"라고 밝혔다.

지난 6월 22일 입법 예고된 정부안은 △단체행동 금지 △단체교섭권은 허용하되 예산, 법령 관련 부분에 대한 단체협약 효력 불인정 △5급 이상 또는 관리·운영 업무 종사자의 가입 제외 △복수노조의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교섭내용을 노동조합 또는 조합원 근무조건으로 한정 △정부측 교섭 주체 각 헌법기관과 자치단체장으로 제한 등의 까다로운 조건을 부과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공무원노조 이만형 정책국장은 "이번 입법 시도는 당사자인 공무원을 배제한 채 사용자인 정부가 일방적으로 노사관계의 틀을 만든다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며 "이렇게 되면 노조는 이름만 노조이지 유명무실해진다"고 단언했다.

노조설립과 관련해 공무원 노조는 정부안처럼 따로 특별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기존 노동조합법을 개정해 공무원에게 온전한 노동3권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노동조합 결성 주체를 규정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는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 있는데, 지난해 10월 한나라당 이부영 의원

이 이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법외노조로부터 시작해 합법화를 쟁취했으나 단체행동권은 부정당한 교원노조의 교훈을 배워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반대 선언자들은 "이미 교원노조법의 갖가지 폐단으로 실질적인 노동조건 개선은 물론 교육정책 참여의 사회적 역할마저도 불법으로 매도당하는 등 특별법 형태의 교원노조법이 노조활동을 오히려 억압해 왔다"고 강조했다. 전교조 이을재 정책교섭국장은 "교원노조법에 따라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으니 교육부 관계자들이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지 않으며, 단체협약 의제도 교육개혁과 직결되는 교육정책은 제외되고 임금과 수당 문제 등에 한정된다"고 현 상황을 설명했다. 단체협약 내용 또한 "추진한다", "노력

한다", "시도교육청에 권고한다"는 식의 유보적인 약속으로 채워지기 일쑤라는 것. 게다가 교육부와 합의한 내용도 기획예산처가 예산 핑계로 반대하면 지켜지지 않는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이런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연가투쟁이라도 벌이면 불법집단행동이라는 매도가 쏟아지게 된다. 이 정책교섭국장은 "법률은 한 번 만들어지면 개정하기 힘들다"며, "공무원 노조가 전교조의 선례를 반면교사로 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2001년 유엔 사회권위원회는 사회권 보장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제출한 2차 보고서를 심의한 후 채택한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교원 및 공무원들의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참여할 권리, 단체교섭권, 파업권이 법과 실제 모두에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권고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3차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요구한 바 있어, 현재 법제처 심의중인 정부안이 어떤 내용으로 결정될지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강성준)

- 다음 인권하루소식은 19일자로 찾아옵니다. -

# 만화사랑방

이동수





**“평화전염병이 퍼져 나가으면 좋겠어요”**  
**공민영**  
 마음으로 느끼고, 몸으로 체험하는 어린이 인권캠프

사람들이 자신의 인권을 알고 이를 행사할 수 있을 때에만 인권은 비로소 권리일 수 있다. 그렇다면 한국의 어린이들은 얼마 만큼 자신의 권리에 대해서 알고 있을까. 자신의 인권을 몸소 체험하면서 보고 느끼는 자리인 '인권과 친구하기 2003'이 인권운동사랑방 주최로 지난 10일에서 12일까지 조치원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올해로 5회째를 맞은 어린이 인권캠프에는 초등학교 4·5·6학년 어린이 26명과 선생님 12명이 함께 했다. 먼저 어린이들은 5명씩 모둠을 짜서 자신들이 캠프기간 동안 불릴 이름을 만들었다. 이것은 언니·오빠·형·동생의 호칭으로 생기는 위계질서를 없애려고 마련한 대안적인 방법이다. 그리고 스스로 캠프기간 동안 지킬 규칙을 정하게 하여 책임감을 가질 수 있게 하였다.

또 질문을 통해 아동권리협약을 쉽게 알아보는 '널 알려줘', 인권이 침해되는 상황을 찾아보고 역할극을 통해서 인권이 보장되는 이야기로 재구성하는 '인권광고', 그 밖에도 '인권빙고'와 '이웃나라 놀이' 등이 올해 준비된 어린이 인권캠프의 프로그램이다.

캠프의 하이라이트인 인권체험놀이는 구체적인 사안을 가지고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가장 흥미진진했다. 정보인권에 관한 기초정보를 주는 인권체험놀이 '내 허락 없이는'에서 아이들은 자신의 정보인권지수를 점검하였다. 커다란 발바닥 모양의 발판을 질문의 대답에 따라 앞뒤로 이동하면서, 아이들은 검사를 받기 위한 일기를 써야 하는 일, 보여주고 싶지 않은 성적표가 게시되는 일 등 자신의 사생활이 침해된 경험들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전쟁의 참상에 무감각해진 감수성을 일깨우는 '평화 바이러스'에서는 아이들이 즐겨하는 전쟁관련 전자오락게임의 음향을 듣고 그 제목을 맞춘 후 실제 전쟁 사진을 보고 이야기를 나누었다. 처음에 게임의 제목을 맞추

면서 신나하던 아이들은 전쟁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의 사진을 보고 난 후, 하나 같이 전쟁이 일어나면 안 된다고 입모아 얘기했다. 캠프에 참가한 꿈나무 모듬의 '버터왕자'는 "전쟁에서 사람들이 죽고 다치는 모습을 보니 안타까워요. 요즘 게임에도 전쟁 게임이 너무나 늘어나고 있거든요. 평화전염병이 빨리 퍼져 나갔으면 좋겠어요"라고 소감을 말했다.

인권활동과 인권체험놀이를 경험해본 아이들이 직접 준비한 인권 잔치는 캠프의 성과를 한 눈으로 확인해볼 수 있는 자리였다. 아이들은 왕따

당하는 아이와 친구가 되고, 이주노동자와 이웃이 된 광고를 직접 제작해 차별 없는 세상을 바라는 마음을 표현했다. 또 자신들의 의견을 존중받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은 인권광고도 있었다.

'속과 마음'(사람다운 사람이 되자는 뜻에서 아이들이 붙인 이름) 모듬이 제시한 내년 인권캠프의 모습은 인권 캠프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고민해야 할 문제가 아닌가 싶다. '2004년 어린이 인권캠프 장소는 백두산, 참가비는 형편에 따라!' 방학이면 쏟아지는 다른 캠프들처럼 인권캠프 또한 일정한 경제수준 이상의 부모들이 아이들의 교양상식을 채우기 위해 고르는 수많은 선택사항 중 한 가지가 되는 것은 아닌지, 항상 경계하고 조심해야 할 일이다. (현민) (대학생, 어린이 인권캠프 교사)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④

**법무부는 성큼, 되레 인권위는 뒷전**

일선에 더 이상 연속 징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지난 5월 안동교도소에서 징벌을 부과받은 재소자가 자살한 사건이 발생한 이후, 지난 6월경 강금실 법무부장관의 지시로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을 금지하라'는 지침이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러한 법무부의 조치는 뒤늦은 감이 있지만 매우 환영할 만하다. 하지만 연속 징벌이 행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 징벌을 뿌리 뽑기 위해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 시점에서 정부의 법 개정을 추동하기 위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의 역할도 무척이나 중요하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속 징벌 문제에 있어 고루한 법적 기준만을 내세우고 있다. 인권위는 지난 2월 '징벌 종료 후 금지 이상에 해당하는 다른 징벌을 다시 집행할 때에는 그 이전에 반드시 정신과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칙의 개정을 법무부에 권고한 바 있다. 현행 행정법이 연속징벌을 금지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연속징벌을 금지하라고 말하긴 어렵지만, 그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이에 가급적 제동을 걸 수 있도록 정신과 진료를 반드시 거치도록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인권위의 결정은 인권위가 각 인권사안에 대해 '인권의 시각'이 아닌 '법률적 관점'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드러낸다. 연속 징벌이 수용자의 정신적·육체적 건강을 중대하게 위협하는 반인권적인 관행이라는 점을 인지했다면, 이 제도가 합법적 제도인지 아닌지 여부를 떠나 '가혹성의 완화'라는 방법 대신 '연속 징벌'의 폐지를 권고했어야 했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러한 인권위의 입장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당시 인권위원회는 종합적인 징벌관련 대책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계획은 취소됐으며, 지금도 '법무부에서 징벌과 관련한 개정안을 마련 중이므로 이를 지켜보겠다. 국가인권위 차원의 별다른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오랜 인권 침해 관행에 대한 변화의 조짐이 보이는 만큼, 법무부와 인권위의 적극적인 자세가 절실하다. (유혜정)

**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

한국정부,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보고서 심의회의 열려

한국정부의 '모든 형태의 인종차별 철폐에 관한 국제협약'(아래 인종차별철폐협약) 이행상황을 평가하기 위한 심의회의가 지난 8일 오후와 11일 오전에 걸쳐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다.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정의용 대사는 모두발언에서 한국정부는 국가인권위가 설립되었고, 고용허가제 도입으로 그동안 문제됐던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문제가 대부분 해결될 것이며,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점 등을 특히 강조하면서 이주노동자와 외국아동, 난민 등에 대한 국내의 정책과 제도들을 소개했다.

이어 1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인종차별철폐위원회(아래 위원회) 위원들은 △협약의 국내법적 지위 △더반 세계인종차별철폐회의의 후속조치 △국가인권위의 권한과 위원 임명절차 △산업연수생 제도 존속 이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 △불법체류자의 합법화 문제 △혼혈아동에 대한 인종적 편견 △난민 또는 난민 신청인에 대한 처우 △정부보고서 제출시 민간단체와 사전 협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을 질문했다. 또 위원회는 정부보고서에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중적인 차별 양상에 관한 정보가 없음을 지적하면서 여성 이주노동자와 국제인신매매 피해여성 등에 관한 정보를 요구하였고, 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에도 불구하고 인종차별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 처벌하는 국내법이 여전히 존재하지 않는 점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한국정부, 형식적 보고와 답변 일관

그러나 한국정부는 위원들의 질문 목적이나 배경을 인식하지 못한 채 현실에 대한 평가 없이 관련 법률과 정책만 나열했고, 정부보고서에 이미 서술한 내용을 반복하는 수준의 답변을 내놓는 데 그쳤다. 특히 산업연수생 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본래 폐지하려고 했으나 국내 협상과정에서 폐지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며 매우 무성의한 답변을 내놓았다. 또 이주노동자 권리협약의 비준에 관한 질

문에 대해서는 이주노동자를 국내에 받아들인 지가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비준은 시기상조라고 답하였고, 이주노동자의 단결권에 대해서는 인종을 이유로 단결권에 제약을 가하는 제도나 관행은 없다고 답변했다.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중적 차별의 문제에 대해서도 자세한 국내 현황에 대한 언급 없이 위원회의 우려를 국내정책에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간단히 답하는 정도에 그쳤다.

심의회의를 지켜본 파스 로마나 이성훈 사무국장은 "정부가 법률만능주의에 빠져있으며 국내 법률과 제도의 실제 시행 상황을 평가하며 건설적인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자 하는 심의회의의 본래 목적을 망각한 채 형식적인 태도로만 일관했다"고 평가했다.

위원회가 한국상황에 만족했다?

정부의 답변이 끝난 뒤 위원들은 계속 침묵을 지켰고, 한국담당관인 첸유안 당 위원장의 형식적인 감사 멘트로 회의는 끝났다. 위원회가 정부의 답변에 추가적인 코멘트나 질문을 던지고 거듭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아무런 추가 질문이 없었던 것은 매우 이례적이었다. 심의회의가 끝난 후 정부대표단은 완벽한 정부 답변에 위원회가 압도되었다며 자축하는 분위기였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위원들의 침묵이 의미하는 바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다. 우선 첸유안 당 위원은 "정부대표단이 준비한 답변서를 고개를 숙인 채 그대로 읽고 있는 것을 보며 만약 추가 질문을 던져도 실질적인 답변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되지 않았다. 위원회가 이번에 던진 질문들은 대부분 지난 회의 때 똑같이 질문했던 내용들이므로 질문을 반복할 필요는 없다. 이번 심의회의 때 한국정부가 제대로 답변을 제공하지 못한 이슈들은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라가반 바수데반 필라이 위원도 "한국 정부의 협약 이행상황에 대한 위원회의 공식 입장은 최종견해를 통해 발표될 것이며, 최종견해를 작성하는 과정

에서 좀 더 많은 질의와 평가가 진행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회의를 지켜본 '인종차별철폐를 위한국제운동'(IMADAR)의 재클린 바 이그라이브 씨는 "18년 동안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라오스정부 문제를 시급히 논의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위원회가 한국문제를 다소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종견해를 통해 좀더 적극적인 우려 표명과 권고가 나올 것이라 예상되지만, 한국정부의 답변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리에서 바로 코멘트나 추가 질문을 하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쉽다"며 위원회의 무성의한 태도를 꼬집었다. 한국정부에 대한 위원회의 최종견해는 오는 22일 발표될 예정이다.

국내 민간단체의 적극적 참여 필요

한편 첸유안 당 위원은 위원회가 한국의 협약 이행상황을 제대로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국내 민간단체들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위원회에 꾸준히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이 협약에 가입한 지 20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국내 민간단체들도 협약의 국내 이행에 그다지 관심을 두지 않았고 위원회의 심의를 돕기 위한 반박보고서 제출도 이번이 처음이었기 때문이다. 첸유안 당 위원은 "사실 위원회 위원들이 한국내 인종차별 문제에 익숙하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심의회의를 돕기 위한 반박보고서뿐 아니라 위원들이 한국내의 문제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해주었다면 한다"고 말했다.

반인종주의정보센터(ARIS)의 안기 플로레스 씨 역시 "개인통보제도, 조기경보조치, 긴급절차 등 협약 내 제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인종차별의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민간단체들이 협약의 내용을 충분히 파악하고 사건을 발굴, 위원회에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며 협약에 대한 국내 민간단체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제네바: 김기연, 민변 활동가)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19일(화)

제 2399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주5일제 빌미 노동기준 대폭 악화

### 임금·노동조건 후퇴시킨 정부안, 국회 통과 앞뒤

98년 이후 7년간 끌어온 주5일제 협상이 노동자들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노동계의 극심한 반발이 예상된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국회에서 열렸던 주5일제 도입 노사정 협의회가 휴가일수·도입시기 등의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고 재계가 그 동안의 태도와는 달리 정부안을 지지하고 나서자, 여야 3당 총무들이 18~19일 국회 환경노동위와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안을 강행 처리하기로 한 것.

정부안의 골자는 △사용자의 연월차 사용 촉구에도 불구하고 휴가 미사용 시 사용자의 보상무 면제 △생리휴가 무급화 △15일~25일 한도로 연월차 유급휴가 통합 △연장·야간·휴일 근로 시 임금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 휴가제 도입 △기존 단협 및 취업규칙 갱신노력 의무 명시 등 주당 노동시간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을 대폭 개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정부안, 노동조건 대폭 개악

이에 대해 민주노총 김태연 정책실장은 "한국은 연간 노동시간이 2500시간에 이르러 OECD 최장이라는 오명을 안고 있다"며 "주5일제 도입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면서도 경제성장에 헌신해 온 노동자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지는 것이므로 휴일과 임금을 줄이면 그 취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이 '법 시행으로 인해 기존 임금 수준과 통상임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한다'는 선언을 부칙에 추가하도록

한 데 대해 김 정책실장은 "기존 근로시간 단축분은 기본급으로 보전하고 단축되는 연월차 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되까지 매년 총액 임금 기준으로 보전하도록 명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조직 노동자들 더 큰 악화 우려

김 정책실장은 또 "새롭게 도입되는 선택적 보상휴가제 역시 노사간 합의를 필요로 한다는 내용을 삽입한다고는 하지만, 교섭력이 없는 미조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에게는 (2면에 계속)

## '시장에 내맡긴 전력'이 부른 재앙

### 미·캐나다 정전사태, 우리 전력구조 타산지석 삼아야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과 캐나다에서 발생한 대규모 정전사태를 국내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다.

미국과 캐나다의 국경인 나이아가라 폭포 지역에서 뉴욕·뉴저지·오하이오·미시간, 캐나다의 온타리오 등으로 번진 이번 정전은 5천만 명 이상의 사람들에게 피해를 준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의 정확한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국전력노동조합(아래 전력노조)은 이러한 정전사태는 '예고된 재앙'이라고 주장한다.

전력노조 이경호 대외협력국장은 "과거에는 전력을 소유한 주 정부, 협동조합 등이 전력 수급과 관련해 강력한 규제를 받으며 요금이나 공급규정을 지켜야 했지만,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라 이러한 기업 규제가 완화됐다"고 설명하고,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이번 같은 대형 사고를 불러온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력산업이 분할, 사유화되고 경쟁체제가 도입되면서 기업에서는 전력 공급량에 맞춰 시설을 확충하거나 유지·보수를 하지 않게 되고, 특히 시설의 통합적 관리가 불가능한 상황에서 대형 사고는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게 전력노조의 지적인 것이다. 나

아가 이 국장은 "기업이 공급 가능한 전력량을 조작해서 (사고를 방지하고) 요금인상을 유도하기란 너무나 쉽다"며 이번의 사태에서도 공급량 조작 의혹을 제기했다.

이번 사태가 전력산업 구조개편에 따른 사유화와 규제완화가 원인을 제공한 것인 만큼, 전력노조는 "미국과 캐나다의 사례를 타산지석 삼아 한국전력에서 배전 부문을 분할, 민영화하려는 우리 전력산업 구조개편 방침을 전면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현재 정부는 발전과 배전 부문을 각각 떼어내 경쟁체제를 도입한다는 전력산업 구조개편 계획에 따라 2001년 이미 발전부문을 6개 회사로 분할했고, 배전 부문도 2004년 6개 회사로 분할할 계획에 있다.

'국가기간산업 사유화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박석운 집행위원장은 "정전사태의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력산업이 통합적 관리가 되지 않으면서 일어난 사고임에는 분명하다"며 "이는 분할 관리방식의 전력산업 구조개편의 문제를 드러낸 것으로,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분할, 사유화도 파멸적 상황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근애)

## 선미의 인권이야기

### 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

내 방 한켠에는 'UN 아동권리조약' 포스터가 걸려있다. "13조. 우리는 말과 글과 예술 등을 통해 여러 가지 것을 알고 우리 생각을 말할 권리가 있다." "31조. 우리에게는 쉬고 놀 수 있는 권리가 있다." 대한민국 정부가 자국의 아동에게 보장하겠다고 약속한 이 조항들을 보면서 나는 반성 섞인 분노를 하게 된다. 왜 이제까지 이러한 권리가 나에게 보장되어 있는지도 모른 채 기본적인 권리를 빼앗기며 살아왔는가! 그리고 한 가지 의문을 품게 된다. 과연 대한민국 청소년 중에 이러한 권리가 자신에게 보장되어 있음을 아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

지금 시대에 '인권'이라는 것은 매우 중요한 가치로 손꼽힌다. 제도권 교육에서도 '인권'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복지국가의 탄생 배경이나 시민사회의 발전을 이야기할 때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인권'이다. 하지만 정작 학교에서는 우리 청소년이 누려야 할 인권에 대해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인권교육 후에 있을 학생들의 반발이 두려운 것일까? 아니, 어쩌면 인권의 사각지대로 이미 인식되어 있는 학교의 특성 상 못 가르치는 것일 수도 있다. 수세미가 나오는 학교 급식과 야간 타율학습이 아직도 개선되지 않고 있는 학교 현실에서 "어른이 아동에게 해 주어야 하는 것이 있을 때, 그 어른은 최선의 것을 해주어야 한다"라는 내용을 가르치는 것이 모순이라는 것을 커리큘럼을 짜는 사람도 알고 있겠지!

이러한 인권교육의 부재는 청소년들을 인권에 대해 무지하게 만들고, 어떤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지도 모르는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현실에 대한 비판 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청소년들이 느끼는 전반적인 사회환경도 인권에 대한 인식을 흐리게 만든다. 어렸을 때부터 학교에서는 경쟁에 노출되어 1등을 할 것을 강요받고, 미디어에 의해서는 명문대에 진학한 후 좋은 직장에 취업해서 출세하는 것이 성공하는 것이라고 주입받는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청소년들은 스스로 '여가의 권리'를 포기하고, 그것은 성공을 위한 당연한 대가라고 여긴다. 약속감시의 사회 속에서 좀 더 나은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청소년에게 '인권'이라는 단어는 껍데기가 되어버린다.

학교와 사회는 '인권'을 짓밟고 있다. 청소년들은 그 속에서 불만은 갖지만, 그것을 정당한 요구로 만들지 못한 채 스스로 인권을 포기하고 점점 비인간화 되어간다. 이런 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인권교육이 절실하다. 교육은 청소년이 스스로의 자각을 통해 인권을 쟁취할 수 있는 기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권을 모르는 것은 인권을 탄압받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된다. 아무리 훌륭한 권리를 명문화하여 인정한다 하더라도 권리의 주체들이 그 내용을 모른다면 쓰레기가 될 뿐이다. 그래서 UN아동권리조약도 "모든 어른과 청소년은 이 조약에 대해 알아야 한다. 우리는 우리의 권리에 대해 배울 권리가 있고 어른들도 역시 이 권리들에 대해 배워야 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는 것일 게다. '인권 알기'는 '인권 쟁취'의 첫걸음입니다.

(선미 님은 청소년의 힘 회원입니다.)

(1면에서 이어짐) 강제적 변형근로제 역할을 해 노동조건 악화를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여성노동자 임금 하락폭 더 심해

한편 공휴일 축소와 연월차 휴가 축소를 인해 실제 늘어나는 휴일은 남성의 경우 12일이지만, 여성의 경우는 생리휴가 무급화까지 감안하면 시행 전과 똑같다는 것이 민주노총의 계산이다. 이에 대해 불안정노동철폐연대 구미영 정책부장은 "주5일제 도입이 아니라 근로기준법 개악"이라고 혹평했다.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은 여성의 임금을 보전해온 생리휴가가 무급화된 데다가 초과 근로 할증률마저 25%로 하락해 여성 노동자의 임금 하락이 예상된다.

또 구 정책부장은 "도입 시기가 사업장 규모에 따라 6단계로 나뉘지면서 20인 미만 사업장은 2010년에야 주5일제가 도입되는데, 실제로 지켜질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전망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의 경우도 89년 적용 범위가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제한되었는데, 4인 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끊임없는 전면 적용 요구에도 불구하고 지금껏 사소한 몇 개 조항만을 적용받고 있을 뿐이다. 이에 따라 4인 이하 사업장 노동자들은 아직도 해고제한, 퇴직금, 시간외·야간수당, 연월차, 생리휴가 관련 규정을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이미 도입된 사업장 조건마저 후퇴할 수도

또 정부안은 근로기준법 부칙에 '기존 단협과 취업규칙을 개정될 법 수준으로 갱신하도록 노력할 의무'를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법률원 강문대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단협을 통해 주5일제를 쟁취한 사무금융노련, 현대자동차, 금속노조 등의 단협 효력이 무력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근로기준법 제2조는 '이 법에서 정한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정부안은 그 취지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정책실장도 "역사적으로 노동시간은 투쟁을 통해 단축되어 왔는데, 이 조항은 이런 시도 자체를 봉쇄하려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18일 공동기자회견을 통해 △정부안의 졸속 처리 반대와 전면 수정 △당사자간 지속적인 제논의 통한 합의 후 처리 입장을 밝혔다. 또 양대 노총은 이날부터 국회 앞 노숙농성에 돌입, 오는 20일까지 1만 명 규모의 농성투쟁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또 19일 오전에는 한국노총이, 오후에는 민주노총이 시한부 총파업을 벌여 정부안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정부안이 강행 처리되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사업장 단위 임단협을 통해 '임금·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 노동제'를 관철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준)

◎ 오늘 <주간인권흐름> 쉽니다 ◎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20일(수)  
제 2400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 “수지김 사건, 형사처벌까지 가자” ‘반인도적 범죄’ 공소시효 배제 입법 서둘러야

안기부의 조작에 의해 간첩누명을 쓴 고 김옥분 씨(수지김)의 가족에게 국가가 손해배상을 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온 가운데, 반인도적 국가범죄를 형사처벌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에서도 공소시효를 배제하기 위한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14일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재판장 지대운 부장판사)는 김옥분 씨의 유족 10명이 국가와 김옥분 씨의 남편이자 살해범인 윤태식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42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망인(김옥분)이 북한 공작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진실을 은폐, 조작함으로써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간첩의 가족이라는 멍에를 씌우고 법적 절차에 호소하여 망인의 원한을 풀어줄 기회를 박탈했다”며 피고에게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피고측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에 대해 “피고 대한민국이 홍콩살인사건에 대하여 진실을 은폐, 조작하다가 이제 와서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지 못했던 원고들에게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허용될 수 없다”면서 “소멸시효는 원고들이 홍콩살인사건의 진실을 알게 된 2001. 11. 13부터 그 기간이 개시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국가권력에 의해 사건이 조직적으로 은폐된 경우, 국가가 소멸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치 못함을 못박은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은 19일 성명을 통해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을 크게 환영하면서도 “범죄행위를 자행한

국가공무원들에 대해서는 형사소송법상의 공소시효가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아무런 처벌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만큼, 반인도적 범죄와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적 범죄행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수지김 사건을 비롯해 과거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의 처벌이 공소시효에 가로막혔던 선례가 많았기 때문이다. 삼청교육대, 이근안 고문경감 사건 등 국가권력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가 배제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활발히 형성되었던 2002년 1월, 민변등 6개 인권단체와 정당은 수지김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자인 장세동 전 안기부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수지김 사건이 국가권력의

조직적 지원 하에 일어난 반인도적 범죄이고, 민간인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국제관습법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는 헌법 6조에 의해 우리도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시효부작용의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같은 해 6월 서울지검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렸다. 반면, 김옥분 씨를 살해한 윤태식 씨의 경우는 올해 5월 징역 15년 6월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윤 씨를 제외한 가해자들은 모두 지금까지 자유롭게 활보하고 있다.

박찬운 변호사는 “이번 판결이 진실이 은폐되었다가 뒤늦게 밝혀진 민사사건에 대해서는 획기적인 청신호라고 할 수 있겠지만, 형사사건에까지 이번 판결의 범리를 연장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면서 “관련자를 처벌하기 위해서는 반인도적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배제 입법이 하루빨리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국 교수(서울대 법대) 역시 “현재의 법률 (☞2면에 계속)

## 국민연금 뿌리부터 흔들린다

### ‘보험료 올리고 연금액 내리는’ 정부 개정안 비판 고조

정부가 ‘노후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의 뿌리를 뒤흔드는 방향으로 관련법 개정안을 내놓아 노동계와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민연금은 국민들이 소득의 일부를 적립해 노후에 생존권을 위협받지 않고 인간다운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국가가 보장해야 할 사회보장정책의 하나다.

보건복지부가 19일 입법 예고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보험료는 더 내고 연금액은 덜 받는다’ 내용을 뼈대로 하고 있다. 개정 법률안은 현재 소득의 9% 수준인 보험료를 오는 2010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려 2030년에는 15.90%까지 인상하도록 했다. 반면 국민연금

가입기간 40년을 기준으로 해 현재 소득의 60% 수준인 연금수급액은 내년부터 55%로 줄고 오는 2008년부터는 50%로 더 낮아진다.

국민연금 발전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예를 들어 가입 기간 40년을 다 채우고 월 평균소득이 136만원인 사람의 경우, 연금수급액은 81만원에서 67만원으로 14만원이 준다. 국민연금 평균 가입자에 해당하는 20년 가입 평균 소득자가 받는 연금액은 월 34만원이 된다.

정부는 현행 연금 급여율과 보험료를 그대로 유지할 때 2036년에 수급자가, 2047년에 재정 고갈을 맞게 된다며 재정 합리화 방안으로 (☞2면에 계속)

## 국가인권위, ‘정보화사회 인권’ 토론회 열어 “정부 정보화정책부터 개인정보 보호해야”

19일 오후 2시, 국가인권위원회(아래 인권위) 주최로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11층 배움터에서 열렸다. 인권위는 “정보화 사회에서의 프라이버시권 보호와 정보인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정보화의 순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향후 추진될 정부의 정보화정책에 정보인권이 충분히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 이번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지난 5월 12일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네이스)에서 개인정보영역을 삭제하라는 인권위 권고가 발표되고, 인권위 결정에 따르겠다고 공언했던 교육부가 예초 약속을 뒤집은 뒤 처음으로 열린 ‘정보인권’ 관련 토론회였기에 남다른 관심을 모았다. 또한 최근 추진되고 있는 전자정부사업에 대한 인권지침 마련에 중요한 방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모으기도 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발제자들은 모두 현재 전자정부라는 이름 하에 추진되고 있는 정부의 정보화 정책이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제대로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발제를 맡은 이인호 교수(중앙대 법대)는 “전자정부법상에 존재하는 개인정보보호의 원칙은 선언에 불과할 뿐 이를 구체화하는 규정이 없고, 대신 행정정보 공동이용의 원칙에 보다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은우 변호사도 “현재 수사범죄와 예방활동에서는 법원 또는 법관이 발부한 사전영장에 의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나, 정보통신망에서는 전혀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들은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으로 △프라이버시 보호를 위한 국가적인 검토와 토론 △정보화사회에서의 인권침해를 독립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 형태의 기구 설치 등을 제안했다. 하지만, 행

정자치부 정국환 행정정보기획관은 “우선 정보인권 침해요소가 있는 사항과 관련해서는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부터 개정해보고, 향후 필요하다면 독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자”고 제안해 타 발제자와는 사뭇 다른 시각을 갖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이인호 교수는 “위치정보보호및 이용등에관한법률’ 제정과 관련해 정보통신부 내에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방지하려는 부서와 위치정보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부서 사이에 충돌이 빚어지고 있는 것처럼, 한 정부기관 내에서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정보화정책을 추진하는 활동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활동을 함께 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독립적인 프라이버시 기구의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전자정부사업과 정보인권에 관한 개괄적인 점검이 이루어지긴 하였지만, 최근 가장 큰 현안이 되고 있는 네이스 문제와 관련한 대응방향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가 이뤄지지 못해 커다란 아쉬움을 남겼다. 토론회 개최 취지에서 밝힌 바와 같이, 인권위가 정보인권 보장을 위한 우선적인 활동으로 네이스 문제에 지속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박김형준)

(☞1면 ‘수지김 사건’에서 이어짐) 하에서는 검사가 ‘공소권 없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만큼, 특별법이 제정돼 반인도적 국가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지김 사건은 1987년 1월 윤태식 씨가 아내 김옥분 씨를 살해한 뒤, 간첩인 아내와 북한대사관에 의해 납북될 뻔했다 탈출했다는 허위주장을 펴면서 본격화됐다. 당시 안기부는 이 주장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장세동 당시 안기부장의 지시 아래 김옥분 씨를 간첩으로, 윤태식을 반공투사로 조작·예곡했다. 피해자 김옥분 씨가 간첩으로 낙인찍힌 뒤, 그 가족들은 반공이데올로기

가 팽배한 상황에서 간첩의 가족이라는 이유로 직장에서 해고되고 정신이상 발생하여 사망하고 이혼을 강요당하고 학교에서 따돌림당하는 등 엄청난 피해를 입었다. (김명수)

(☞1면 ‘국민연금’에서 이어짐) 이번 개정안을 내놓았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민주노총·한국노총·참여연대 등은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개정안은 국민연금의 노후 소득보장 기능을 사실상 포기한 것”이라며 “이번 방안을 전면 폐기하고 가입자의 입장에서 새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마련하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민주노총 오건호 정책부장은 “국민연금액이 줄어들면 사적 생명보험 시장이 확대되고, 노동자와 서민들의 노후생활에 대한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평소 체계는 낮아진 국민연금액은 기업연금과 사적 연금으로 보충할 수 있다며 공적연금의 약화를 통해 사적 연금 시장의 확대를 꾀해왔다.

또한 노동계와 사회단체들은 “정부 개정안은 재정고갈 위기를 지나치게 부풀리고, 연금재정을 오로지 가입자의 보험료로만 메우려 한다”며 “무리하게 보험료를 인상할 게 아니라, 국가가 국민연금을 살리기 위해 세제 개혁, 국고 지원 등 적극적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독일, 스위스, 스웨덴 등의 국고지원금은 연금 급여 지출비의 약 20%에 달하는데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 최저 소득 등급의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지원과 국민연금관리공단 관리운영비 지원을 제외하면 지원이 전무한 상태다.

한편, 국민연금기금 운용위원회의 개편 내용도 이번 개정안의 문제로 지적되었다. 현재는 형식적으로나마 과반수가 넘는 가입자 위원을 개정법안은 총 위원 9인 중 4인으로 줄였고 이들과마저도 ‘금융전문가’로 한정했다.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김명명 교수는 “위원을 금융전문가로 한정할 때 국민연금 기금을 투자 수익률을 기준으로 운영하게 돼 국민연금의 기본 목적이 위태로워질 것”이라며 가입자의 대표성이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주영)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쉽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자진 출두 한총련수배자 구속

### 수해해제모임 유영업 대표...탈퇴서·비활동각서 강요도 잇따라

검찰에 자진 출두한 한총련 수배자가 결국 구속돼, 지난 달 대검이 밝힌 수배해제 방침이 최소한의 유의미성마저 잃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한총련 관련 정치수배해제를 위한 모임'(아래 수배자모임) 대표 유영업 씨(97년 한총련 의장 권한대행)는 광주지검 목포지청에 자진 출두했으나, 이적단체 가입·이적표현물 발간 등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이에 앞서 18일 수배자모임은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총학생회장 등 핵심간부 수배자들까지 포함해 20일부터 9월초까지 출두 투쟁을 벌이던 시기와 방식은 지역과 학교별로 판단하도록 했다. 수배자모임 송용한 씨(5기 한총련 지역간부)는 "이는 위협을 감수하고 서라도 전원 수배해제와 한총련 합법화 여론을 형성하고자 했던 것"이라며 자진 출두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20일에는 유 씨와 함께 5기 한총련 간부 송승훈 씨와 이현주 씨 등 김영삼 정권 시절에 수배된 7년차 장기수배자들이 관할 지검에 자진 출두했다.

유 씨의 구속에 대해 송용한 씨는 "자신들이 발표한 수배해제 조치의 취지를 검찰 스스로 물거품으로 만들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유 씨가 수배자모임의 대표이고 최장기 수배자로서 상징성을 갖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발표 취지에 충실하게 처리됐어야 옳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5일 대검의 방침에는 유 씨처럼 불구속 수사 대상에서 배제된 수배자들도 자진 출두하면 '최대한의 관용조치'가 약속돼 있었다. 21일 검찰에 출두할 예정이었던 송 씨는 "유 씨를 즉각 석방하지 않으면 수배해제 조치의 유의미성 판단과 자진 출두 등

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민가협 측은 아 총무도 "이런 상황이 지속되면 다른 수배자들이 어떻게 자진 출두할 수 있겠느냐?"고 반문하며 "97년에 이미 사전구속영장이 나와 있었다고 해도 대검 발표의 취지에 맞게 조사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구속취소 조치를 통해 조속히 신병을 풀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아직 출두하지 않은 수배자들에 대한 검거와 수사 과정에서의 탈퇴서 강요도 여전하다. 지난 12일 경상대 수배자 이호중 씨(2002년 총학생회장)는 경남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자진 출두한 뒤 조사 받고 다음 날 불구속으로 풀려났다. 하지만, 이 씨는 "수사관이 불기소 처분을 미끼로 한총련 탈퇴서를 쓰도록 회유했으나 쓰지 않았다"고 밝혔다. 16일에는 지난해 국민대 총학생회장 한모 씨가 용산 미군기지 앞에서

2003년 8월 21일(목)  
제 2401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열린 '미국반대 한총련 탄압 중지 인권 피앗기' 행사 참석 중 연행돼 18일 구속됐다. 한 씨도 한총련 탈퇴서를 강요 받았으나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18일 학교 앞에서 연행된 한국의국어대 강길수(2002년 부총학생회장) 씨의 경우는 불구속 수사 대상이었지만, 앞으로 한총련 관련 활동을 하지 않겠다는 '비활동각서'를 강요받았다. 강 씨는 "대검 발표와 다르다고 항의했더니,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라는 궁색한 답변이 나와 어이가 없었다"며 "이름만 다르지 탈퇴서와 다를 바 없다는 판단으로 각서를 쓰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처럼 '양심'을 꺾는 탈퇴서 강요가 계속되자, "기존 전향서 개념의 탈퇴서 제출을 전제하지 않는다"던 대검 발표의 진의가 의심받고 있다. (강성준)

### 근로기준법 개악 코 앞

주5일제 도입을 빌미로 노동조건을 더욱 후퇴시키는 '근로기준법 개악안'이 20일 오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 2면에 계속)

## 만화사랑방

이동수



## <인권하루소식 캠페인>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⑤ <끝> '야만의 징벌', 법으로 명확히 금지해야

연속 징벌 폐지는 과연 현실화될 것인가? 전망은 그리 어둡지 않다. 법무부가 최근 일선 교도소에 '연속 징벌 금지' 지침을 전달한 이후 징벌규칙을 손보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9월내로 새로운 징벌규칙을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민간단체와 법조인과 함께 이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이 논의에는 법무부 관계자 4인과 이상희 변호사, 이호중 교수(경희대 법학)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인권단체들도 징벌제도 개혁에 의지를 불태우고 있다. 광주인권운동센터를 비롯한 7개 인권단체들은 지난 6일 '계구 및 징벌제도에 관한 의견서'를 법무

부에 전달, 금지 징벌 시 부과되는 과도한 기본권 제한의 개선과 연속 징벌의 폐지를 촉구했다. 홍콩에 위치한 '아시아인권위원회'도 한국의 연속 징벌 제도가 매우 심각한 인권침해라며, 한 국정부가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조만간 '연속 징벌 폐지' 국제캠페인에 나설 계획이다. 이처럼 각계에서 더 이상 연속 징벌을 좌시할 수 없다는 분위기가 형성된 만큼, 연속 징벌의 최후 역시 그리 멀지 않은 듯 보인다.

그렇다면 연속 징벌 폐지는 어떠한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는가? 무엇보다 연속 징벌이 행정법상의 허점에서 비롯된 현장의 '관행'이었던 만큼, 연속

징벌 자체를 법으로 명확히 금지하는 것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 나아가 현행 금지 징벌의 반인도성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병행돼야 한다.

우선 금지 징벌에 수반되는 기본권 제한을 한정해야 한다. 금지 징벌을 받게 되면 징벌방에 수감돼 서신, 접견 등 외부와의 교동이 완전히 차단되는 것은 물론 독서, 운동 등 일상생활 역시 모두 금지된다. 이는 과도한 기본권의 제한이다. 수용자의 권리 행사를 위한 집필과 면회, 도서 등의 열람은 제한되어서는 안되며, 적당한 운동은 환자의 건강, 나아가 생명과 직결된 것인 만큼 어떠한 경우라도 제한될 수 없다.

폐쇄적인 징벌방 환경의 변화도 필수적이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의 우석균 기획실장(의사)은 "장기간의 격리와 열악한 징벌방 환경은 수용자의 감각능력에 장애를 초래해 정신병을 초래할 위험성이 매우 높고, 신체적인 건강 악화를 불러온다"고 지적한다.

징벌요건의 대대적 정비도 절실하다. 현 규칙은 자살 또는 자해를 시도한 경우를 비롯해 △허가 없이 잠을 자거나 △청소를 소홀히 하거나 △임의로 필기 용구를 사용하였을 경우까지도 모두 금지 징벌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수용질서 유지라는 미명하에 과도하게 수용자의 일상생활을 통제하고 있는 것이다.

징벌은 '교정'을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선택되어야 하며, 징벌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다.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그 기본선을 무너뜨리는 징벌은 '금수의 세계'에나 어울리는 법이다. 가혹한 기본권 제한을 동반한 연속 징벌을 뿌리뽑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제도적 개혁이 뒤따라야 한다. (유해정)

(☞면에서 이어짐) 법안심사소위는 시행시지만 1년 늦추고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

이 개악안이 21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 회의를 통과하고 법제사법위까지 통과하게 되면, 별도의 본회의 소집이 없는 한 오는 28일 국회에서 통과될 전망이다. 이에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오는 23일 전국 동시다발 집회와 함께 국회 본회의 처리에 대비해 27일 이후 국회 앞 노숙농성 등 총력투쟁에 돌입할 방침이다. (배경내)

## 철창에 갇힌 '장애인이동권 투쟁'

###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광화문역 선로 시위 관련 구속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현 인권운동연구소 객원연구원) 씨가 20일 구속됐다.

이에 앞서 19일 김형렬 검사는 김 씨에 대해 철도법 위반과 전차교통방해죄(형법 제186조)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일 서울지법 319호실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서 김 씨는 변론요지서를 통해 "지하철 운영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 이동권의 현실과 그 절박함을 사회적으로 알리려고 했던 것"임을 강조했지만, 결국 구속됐다. 변호인 김철준 변호사는 "장애인 이동권 보장 요구가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이동권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온 인권운동가를 과연 구속까지 해야 했었나 의문이 든다"고 말했다.

지난 5월 28일 장애인이동권연대 소속 장애인 이광섭 씨는 지하철 발산역과 송내역에서 연이어 발생한 리프트 추락사고에 항의, 서울시와 철도청의 사과와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광화문역 선로에서 약 20여분간 시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김도현 씨는 휠체어 장애인인 이 씨가 선로에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왔으며, 약 5분 동안 선로 위에 머문 후 곧바로 승강장으로 올라왔다. 그 후 6월 중순부터 김 씨는 종로경찰서로부터 출두요구서를 받고 3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아왔다. 장애인이동권연대에 따르면, 조사과정에서 김·경은 김 씨에게 선로 점거에 대한 '사전 공모' 혐의를 덧씌우기 위해 짜맞추기식의 무리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또 "시위를 하는데 왜 장애인들을 대동하고 나왔냐?", "장애인들을 이용해 장애인 문제와 관련 없는 다른 주장을 펼치려고 한 것은 아니냐?"라는 질문을 하는 등 목숨까지 내걸고 투쟁하는 장애인들을 철저히 대상화하고, 장애인 이동권 운동을 시해와 동정 차원으로 폄하하기도 했다.

이번 구속 결정에 대해 장애인이동권연대 박경석 공동대표는 "장애인 이동권 운동에 대한 탄압이자, 함께 투쟁해 온 장애인과 비장애인을 분열시키는 비열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김 씨는 예바다대학생연대회의 활동과 노들장애인야학 사무국장을 거쳐 지난 2월부터는 장애인운동의 이론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인권운동사랑방 부설 인권운동연구소에서 객원연구원으로 활동해 왔다. (최은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반핵투쟁, 불안 넘어 전국으로

### 환경사회단체들, 핵폐기장 선정 철회 비상대책위 발족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선정 철회를 요구하는 부안 주민들의 시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21일 서울에서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아래 비대위)가 발족됐다.

전국민중연대, 환경운동연합 등 43개 환경사회단체가 참여한 비대위는 발족 선언문에서 "노무현 정부는 핵폐기장 선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 확보를 위한 노력에 부정적인 태도로 일관하면서, 절차적 문제에 저항하는 부안지역 주민의 정당한 투쟁을 폭도로 매도·조작·과장하는 등의 도적인 긴장을 부추기고 있다"며 "핵정책의 문제는 부안 주민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발족 취지를 밝혔다.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도 "핵 위험이 부안에 국한된 것이 아닌데다가 부안 주민들의 투쟁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데도 그 동안 적극적으로 함께 하지 못해 부끄러웠다"며 "이번 비대위 출범을 계기로 부안의 투쟁을 전국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자"고 말했다.

비대위는 앞으로의 활동계획으로 △전국 동시다발 거리 홍보전 △국회 토론회와 간담회 △매월 1회 청와대 앞 항의집회 △부안군민 상경투쟁 지원 △청와대·국회·관련부처 장관 면담 등을 내놓았다. 가짜는 24일 탑골공원에서 위도항우회와 함께 촛불시위와 추석 귀향 선전전을 벌일 예정이다.

범부안군민대책위 고영두 대외협력위원장은 비대위 발족을 크게 환영하며 "핵폐기장 지지 투쟁이 우리 나라 에너지 정책 전반에 대한 재검토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오랫동안 대안 에너지 연구를

해온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이필렬 교수(방송통신대 교양과정부)는 "근본적으로 핵폐기물 문제는 핵에너지 정책이 바뀌어야 풀 수 있다"고 전제하고 "원자력 발전은 유럽처럼 서서히 줄여나가고, 그 대신에 태양열이나 풍력처럼 재생 가능한 에너지를 개발하고 동시에 에너지 소비 효율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노무현 대통령은 주민들의 시위와 관련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모색해가되 자유로운 의사표현

을 가로막는 극단적 행동이 계속돼 대화를 못하게 되면 정부 방침대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고대외협력위원장은 "핵폐기장 선정 자체를 백지화한 상태에서 논의를 시작해야지 제대로 된 대화가 될 것"이라며 "현재 대화 시도조차 하지 않고 구속·수배를 양산하고 있는 것은 바로 정부"라고 비판했다. 그에 따르면, 지난 한달 남짓의 투쟁 결과 주민 7명이 구속됐고 30여명이 불구속 수사 중이며 대책위 김종성 집행위원장 등 5명이 수배 중이다. 비대위 결성식에 참석한 문규현 신부도 "노 대통령과 고영구 국정원장은 89년에 영광 핵발전소 11·12호기 건설 반대 100인 선언에 참여해 반핵 입장을 분명히 한 적 있다"고 꼬집었다.

한편 부안 주민들의 (2면에 계속)

클릭! 인권정보자료

### 사회적 약자 보듬는 형사절차 - 『형사절차와 취약계층』

지은이: 조국 외 3인/ 펴낸이: 사람생각/ 2003년/ 345쪽

우리 나라 형사절차와 관행이 권리를 쉽게 침해받는 사람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으며 그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책이 무엇인지를 제시한 단행본이 출간됐다. 이 책은 우리 사회의 취약집단인 '성폭력범죄 피해여성, 정신장애인, 아동, 외국인노동자' 등에 초점을 맞춰 이들이 현행 형사절차에 놓여있는 상황을 검토한 후 비교법과 국제인권법에 기초하여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조국 교수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남성 중심적인 편견이 피해여성을 '의사(擬似) 피고인'으로 취급받게 하고, 결과적으로 성폭력 피해여성을 이중의 폭력 앞에 노출시키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이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에 근거하여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인격과 프라이버시가 보호되도록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의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정규원 교수는 정신장애인이 형사절차에서 부딪히는 문제를 검토한 후, 정신보건법에 규정된 정신장애인의 강제입원의 오·남용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최병각 교수는 아동에게 성인과 구별되는 형사절차상의 법적 지위와 권리 및 이익을 보장해야 한다는 시각에서 △범죄소년에 대한 형사절차의 축소 △우범소년에 대한 보호절차의 축소 △미결구금의 최소화 △변호인 조력의 보장 등을 주장하고 있으며, 김성근 변호사는 외국인노동자들이 수사와 재판단계에서 겪는 언어소통의 문제, 법체계와 문화의 차이, 변호인 선임에서의 곤란함, 강제출국 조치의 문제 등을 지적하고 있다.

형사절차에서 사회적 약자들의 실질적인 평등을 이루기 위해 이 책이 제안하고 있는 적극적인 조치들을 시급히 검토하고 현실화해야 할 때다. (최은아)

## '생각'까지 짚고 캐내고 처벌하려 하나

### 건대생 1심 공판 시작·서울지법 앞 항의집회도 열려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국가보안법 철폐하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끝내 기소된 건국대 김용찬 씨의 1심 공판을 앞두고 열린 항의 집회에서는 반인권·반민주 악법인 국가보안법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21일 1시 서초동 서울지법 앞에서는 '학우석방과 국가보안법 철폐를 위한 건국대 대책위원회'(아래 대책위)를 비롯한 학생들과 사회단체들이 함께 항의 집회를 개최했다. 사회진보연대 이현대 조직국장은 "사회진보연대 홈페이지에서도 자료를 내려 받았는데, 사회진보연대도 이적단체로 규정해야 되지 않나?"며 공안당국을 꼬집고 국가보안법은 '머리를 엑스레이로 찍거나 독심술이 필요한 법'이라고 비꼬았다. 성신여대 신지선 부총학생회장도 "발상 자체가 말이 안 된다. 머리 속을 규제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잘 모르겠다"는 말로 국가보안법을 공격했다.

대책위의 임세호 씨는 "공안검찰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무슨 생각으로 검찰이 됐는지 모르겠다"며 28일 열린 김종근 씨 1심 공판 때 공안검찰에게 '공부 좀 해서 제대로 알라'는 취지로 '공산당 선언', 10권을 기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대 부설 공안문제 연구소에는 '좌익 판정 기준이 도대체 무엇인지, 왜 우익판정은 없는지' 끝장토론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서 열린 재판에서 조영선 담당 변호사는 "피고가 제작한 표현물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공산당 선언』, 『지식인을 위한 변명』과 같은 책과 사회단체 홈페이지에 게재된 내용을 인용했을 뿐"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 표현물들이 과연 위험한가? 행위가 위험했으면 했지, 표현 자체가 어떻게 위험할 수 있는가"라며 행위가 아닌 생각을 처벌하는 국가보안법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변호사는 이날 "사상의 자유는 절대적 권리이며 국가가 국민의 머리 속을 관리할 수 없다"면서 재판부에 국가보안법 7조 1항과 5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한편, 피고 심문 중 검사는 "~한 생각을 했죠?"라고 물어 변호사의 의의 제기를 받은 판사로부터 "생각까지 물어보지 말라"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국가보안법의 법리를 제대로 이해한 검사라 할 수 있다.

또한, 검찰이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한 글을 문제삼자 변호사는 "이적표현물도 아니거나 사이트에 올리는 행위를 소지·배포로 볼 수 있나?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다"라고 받아쳤다. 이에 대해 진보네트워킹센터 이은희 활동가는 "인터넷 게시판에 올렸다는

것만으로 소지·배포로 보는 것은 인터넷의 특성을 전혀 무시한 처사"라며 공안 사건을 만들려는 검찰의 억지주장을 비판했다. (김명수)

(1면에서 이어짐) 저지 투쟁은 점점 거세어지고 있다. 매일 저녁 촛불시위와 5일 1500여대의 차량시위, 7일 부안군 이장의 과반수의 사퇴 선언, 13일 군민 2만여명의 총파업, 13일과 17일 고속도로 점거투쟁에 이어 21일에는 대규모 해상시위가 또다시 열렸다. 향후 부안 군민들은 고속도로·철도·댐·교양 송전선로 점거 투쟁과 함께 10월 전북에서 열리는 전국체전 저지 투쟁에 돌입하는 등 완강한 투쟁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준)

열번째 반딧불이

## "미국의 테러가 전세계 테러 부른다"

### 츨스키의 미 군사패권주의 비판, <파워 앤 테러>

지난 19일 바그다드 주재 유엔 사무소가 대규모 폭탄테러의 공격을 받았다. 이번 사건으로 세르히우 비에이라 데 벨루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을 비롯해 24명의 사망자가 발생했고, 세계는 또다시 테러 공포에 휩싸였다. 거듭되는 테러의 고리를 끊는 해법은 무엇인가? 미국의 진보적 학자 노암 촨스키의 해답은 단순 명쾌하다. "(미국이) 테러를 멈추는 것이다."

이달 27일, 28일로 예정된 반딧불이에서 상영할 <파워 앤 테러>에서는 평화를 빙자한 미국의 대테러 음모를 명쾌하게 지적하는 그의 목소리를 확인할 수 있다. 9.11 테러 이후 미국이 대테러전을 천명하며 응징의 칼날을 갈고 있을 때, 촨스키 교수는 미국 전역을 돌면서 미국이 지난 반세기 동안 약소국에 저지른 '테러 행위'를 국민들에게 일깨웠다. 감독 존 준커만은 그의 강연과 독점 인터뷰를 편집해 영상으로 쓴 촨스키의 저서를 발간한 셈이다.

2001년 9.11 테러가 일어나자 전세계 언론들은 경악과 흥분을 감추지 않았다. 하지만 그건 남미나 중동에서 이미 그리고 익히 경험한 사건들이라고 촨스키 교수는 지적한다. "테러는 분명 끔찍한 일이다. 그러나 인류는 베트남 전쟁을 비롯해 수많은 테러를 경험했으며 그 가해자는 바로 미국이었다"는 것이 이 영화에서 촨스키 교수가 일관되게 꼬집고 있는 점이다.

촨스키 교수는 베트남전을 계기로 반전운동을 시작했고 이후 그의 지성을 총동원해 미국의 군사패권주의를 신랄하게 비판해 왔다. 그는 미국이 2차 대전의 승전국이라는 것이 미국의 군사주의를 도덕적으로 위장해 주고 있다고 주장한다. 독일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공격은 패전국이었던 이들보다 더 악랄했으며, 한국전쟁에서 북조선을 폭격할 때 더 이상 파괴할 것이 없어야 자 댐까지 폭격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는 것이다.

한 사람의 강연과 인터뷰만으로 묶인 영화라서 좀 밋밋하지 않겠느냐는 염려는 하지 않아도 된다. 미국의 군사패권주의에 대한 명쾌한 그의 분석을 듣고 있노라면 복잡한 국제정치 질서를 꿰뚫어보는 통찰을 갖게 되기도 한다. 무엇보다도 촨스키 교수는 전세계 테러에 대한 가해자와 피해자를 명확히 밝혀 냈으로써 평화의 방향이 어디를 향해있는지 제시해준다. (김정아)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개인별 신분등록제도 입법예고

### 법무부 내주 입법예고...소수자·정보인권 등한시 한계

22일 법무부가 현행 호주제를 대신할 개인별 신분등록제도의 도입을 골자로 한 민법 개정안을 곧 입법예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양성평등과 관련해 진일보한 부분이 있지만, 소수자 가족의 인권과, 국가에 의한 개인통제, 개인의 정보인권에 관해서는 여전히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법무부 입법예고안은 △개인별 신분등록을 기본으로 개인의 신분변동사항과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을 기록하고 △자녀가 원칙적으로는 아버지의 성을 따르되 부부 합의하에 어머니 성으로 결정할 수 있고 형제자매는 같은 성과 본을 따라야 하며 △재혼할 경우 친아버지의 성 대신 새 아버지나 어머니 성으로 변경이 가능하도록 해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상당히 진일보한 법안이다.

현행 호주제 하에서는 남성 우선의 승계순위가 법으로 정해져 있어 가정의 비민주성과 남아선호사상을 온존시키고 혼인한 여성의 부가입적을 강제해 여성을 가족의 구성원으로만 머물게 하는 성차별을 강제했다. 또한 호주제는 여성의 혼외자녀의 경우 남편의 동의를 얻어야 입적할 수가 있는 등 전근대적인 성차별의 온상이었다. 나아가 개인 신상에 관한 방대한 사항을 모두 호적에 기록, 사생활이 국가에 의해 지나치게 관리·통제되도록 하는 등 많은 인권침해를 양산해 왔다.

이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진 입법예고에 대해 그 동안 호주제 폐지를 요구해 왔던 진영에서는 대체로 환영하는 가운데, 한계도 지적되고 있다. 우선 개인별 신분등록제를 채택하면서도 부모·배우자·자녀의 신상이 모두 기록되어 일인가족, 모자가족(미혼

모), 동성가족 등 소수자에 대한 인권 침해의 우려가 여전하다. 박김수진 한국동성애자연학 간사는 "기준점이 개인인 획기적인 안이기는 하지만, 결국 가족 구성원을 함께 표기함으로써 정상가족과 비정상가족을 나누어 소수자들의 인권을 온전하게 반영하지는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노동당 여성위원회 최현숙 위원장은 "개인별로 등록되는 것은 상당히 진전된 내용"이라면서도 "출생자녀의 성 선택 시 원칙적으로 아버지 성을 택하도록 하고, 예외조항으로 부부 합의에 의해 어머니 성을 쓰기로 한 것은 확 열어 짓하지 못한 미흡함이 있다"고 지적했다.

지문날인반대연대 윤현식 활동가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도로 가는 것은 올바른 방향이지만, 국가가 가족에 관한 사항과 여러 가지 개인정보를 과도하게 축적해 온 현실에는 손을 대지 못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2면에 계속)

## 〈논평〉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

지난해 인권사회단체 등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혀 국회에서 테러방지법안 심의가 중단되었을 때 한나라당 소속의 국회 정보위원장인 김덕규 의원은 월드컵 이후에도 이 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런 그의 불타는 의지가 1년여만에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는 "전 세계적인 테러방지 움직임에 동참하고 외국과의 원활한 정보협력 등을 위해 테러방지법은 꼭 필요하다"는 김 의원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아울러 국정원이 추진했던 법안과는 달리 전혀 인권침해 소지가 없도록 법안을 만들겠다는 그의 공언도 믿을 수 없다.

9.11 테러를 계기로 만들어진 패트리엇법에 따라 정보기관에 강력한 수사권을 부여한 미국사회에서는 기본권 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일상적인 감시체제가 강화되어 보수적인 단체들마저 비판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훨씬 이전부터 테러방지법을 운영해온 아일랜드나 인도에서도 테러 용의자의 1%만이 기소되어 사실상은 이 법이 국민감시체제의 강화에 목적이 있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테러방지법은 그 외양을 어떻게 치장하든 필연적으로 국가권력의 강화와 인권침해의 일상화를 낳게 된다. 더욱이 전 국민적인 저항에 의해 무산된 법률을 재추진하는 것인 만큼 법안 성안 과정에서부터 공개적으로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마땅할 터이다. 그런데도 국회 정보위가 공개적 의견 수렴 과정 없이 다시 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 법률의 졸속 통과를 의심하게 만들기에 충분하다. 또 이 법 없이도 월드컵을 무사히 치러낸 나라에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추진해야 할 그 어떤 새로운 이유도 찾아볼 수 없다.

그러잖아도 국가보안법을 비롯한 과거 독재시대의 법률들이 국민의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국가권력의 무제한적 남용을 낳고 있어 정비가 절실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이들 법률을 국제인권기준에 맞게 정비하는 일에는 신경을 쓰지 않은 채 테러방지법부터 만들려는 김 의원의 저의를 우리는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명분으로도 테러방지법의 재추진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

## "선로 점거, 고심 끝 마지막 호소였다"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 구속 규탄 기자회견 열려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광화문역 선로 점거시위와 관련해 인권운동가 김도현 씨가 구속된 가운데, 22일 서울지검 정문 앞에서는 김씨를 구속한 검찰 규탄 기자회견이 열렸다.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인권센터 박숙경 팀장은 "당시 시위는 발산역과 송내역 등에서 연이어 발생한 장애인 추락 참사에 대한 사과와 대책 마련을 촉구한 것이었다"며 "시설미비와 관리 소홀로 인해 '대중교통'인 지하철을 이용하다 죽거나 다쳐도 그 책임을 혼자 떠안게 되는 현실과 잇따른 면담 요청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대화도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고심 끝에 벌인 선로 점거시위였다"고 설명했다.

민중복지연대 유희선 사무국장은 "검찰은 김도현 동지에게 사전 공모와 배후주동 혐의를 덮어씌우기 위해 짜맞추기식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면서 "나를 포함한 비장애인들은 장애인들의 꺾이지 않는 투쟁 의지와 장애인권 문제의 심각함을 통해 각성돼 왔으므로, 장애인들이야말로 배후주동세력인 셈"이라고 강조했다.

노들장애인아카데미 박경석 교장도 "이동권 투쟁이 벌어지면 경찰은 장애인은 놔두고 비장애인은 잡아가는 수법으로 투쟁을 무력화시키려 했다"며 "장애해방은 장애인 혼자서 이룰 수 없고 장애인, 비장애인이 함께 투쟁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동권연대도 성명을 통해 "김도현 동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동권연대 전체에 대한 비열한 정치적 탄압"으로 규정했다.

이에 대해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지검 김형렬 검사는 기자회견 후 이뤄진 대표단과의 면담에서 "나도 장애인 문제에 대해 가슴아파하고 있다"면서도 "이번 구속 건이 장애인 운동도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한다는 하나의 경고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에 당시 선로 점거에 나섰던 이동권연대 이광섭 씨가 "내가 당시 선로 점거투쟁의 주범이니 나를 구속하라"고 요구하자, 김 검사는 "구치소 시설이 열악해 장애인을 수감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다"고 답해 실소를 자아냈다. 그러자 이 씨는 "앞으로 법 테두리 바깥의 운동만 하겠다"는 역설적인 경교로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 수밖에 없는 장애인 이동권 요구의 절박함을 드러냈다.

한편, 현재 종로 경찰서에 임시 구금되어 있는 김도현 씨는 "이번 구속 건이 장애인 이동권 운동 활성화에 작은 계기라도 되었으면 한다"면서도

"현안이 많은데 이 사건 때문에 차질이 생기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걱정도 잊지 않았다. 그는 다음 주 초 구치소로 옮겨질 전망이다. (강성준)

(☞1면에서 이어짐) 호적과 세대별 주민등록표가 별 차이가 없는 만큼, 같은 정보를 서로 다른 부처가 다루면서 국민에 대한 감시통제가 강화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부분적이거나 진일보한 법무부 입법예고안이 국회에서 후퇴될 것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았다. (김명수)

## "사는 사람 내쫓고 주거환경개선이라뇨?" 대전 용두동 철거민 길거리 농성 400일째 맞아

"터무니없는 보상금 주면서 주민 내쫓고 개발에 따른 이익은 고스란히 공기업인 주택공사가 독점해버리는 것이 바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겁니다." 대전지역철거민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김규복 목사(빈들교회)는 1년이 넘게 대전 용두동 철거민들이 맞서 싸워오고 있는 소위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는 '개발사업'의 본질을 이렇게 꼬집었다.

용두동 철거민들의 노숙농성이 23일로 꼬박 400일째를 맞는다. 지난해 7월 18일 마지막 남은 집들마저 모두 철거된 뒤, 주민들은 중구청 앞 비닐웁막에 의지해 1년이 넘는 세월을 거리에서 버텼다. 2천만원도 채 안 되는 토지 보상금으로 평당 350만원이 훨씬 웃도는 아파트에 입주한다는 것은 이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저소득층을 위한 다년 주거환경개선사업이 가난한 이들을 삶터에서 내쫓고 오갈 데 없는 철거민으로 만든 사이, 주택공사는 건설원가보다 평당 1백만원이 넘는 돈을 얹어 아파트를 분양해 이익을 챙기고 있다. 또 개발지구에 파리를 튼 '똥다방'들은 분양권 매매를 통해 배를 불렀다.

처음 농성을 시작할 때는 모두 42가구가 참여했지만, 지금은 29가구만이 남아 있다. 그래도 다른 철거투쟁에 비해서는 비교적 오랫동안 많은 이들이 버텨내고 있다는 게 주위의 평이다. 그러던 가운데 지난 19일, 대다수 60세가 넘는 고령의 철거민들 가운데서 비교적 건강하던 차세순 씨(64)가 뇌출혈로 쓰러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다. 병원에서는 아무래도 회생이 어려울 거라고 한다. 2001년부터 계속되어 온 오랜 철거투쟁과 무책임하고 때로는 비열하기까지 한 당국의 태도가 이들의 몸과 마음을 짓어 놓았기 때문일까.

그래도 '보상금 더 받아내려고 저런다'는 일부의 따가운 시선에도, 달겨드는 모기때와 칼바람에도 굴하지 않고 이들이 1년이 넘게 버틸 수 있었던 힘은 바로 어이없는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 나왔다. 이들의 요구는 소박하다. '정주권을 보장하라!' 주민을 위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겠다는 것, 즉 '복지'가 이 사업의 목적이라면, 주민들이 삶을 잃지 않도록 '현금' 보상이 아니라 '현물' 보상이 되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보상금 주면서 돈이 안되면 떠나라는 식으로 주민들을 내몰 것이 아니라, 적어도 같은 평수의 집은 특별 공급해야 하지 않겠냐는 것이다.

김 목사는 말한다. "동일한 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는 곳이 대전에도 서너 곳 있고, 전국적으로는 수십 곳에 달합니다. 그래서 주택공사가 선례를 남겨서는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두동 주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더 버티는 것 같습니다." 주거환경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주민'은 내쫓고 '투기업자'들만 불러들이는 개발사업은 이제는 끝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소망이다. (배경내)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아픔의 현장에 '인권의 집' 짓자

### 인권단체들, 남산 안기부 엠티 보존 대책기구 결성기로

남산 안기부 엠티를 인권기념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인권단체들의 움직임이 본격화됐다.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유가협 등 18개 인권단체들은 25일 남산 옛 안기부 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안기부 건물을 유스호스텔로 사용한다는 방침을 유보하고 보다 나은 공간으로 만들기 위한 대화와 토론에 나설 것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남산 안기부는 독재권력의 상징이며, 그렇게도 모진 고문을 당하고도 끝내, 민주항쟁을 성공시킨 역사와 결합된 소중한 역사의 현장"이라면서 "남산 안기부 엠티를 민주주의와 인권을 기념하는 기념공원으로 보존하자"고 주장했다. 이들은 베트남의 타이거 감옥, 캄보디아의 푸얼슬랭 박물관, 영국의 고문박물관 등의 외국 사례를 들며 "역사적인 기념공간은 상징성이 높은 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학생들이 찾아와 공부하고, 시민들이 찾아와 토론하고, 해외 관광객들이 찾아와 우리의 역사를 배울 수 있는 명소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참석자들도 한결같이 '기억의 공간'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민가협 서경순 운영위원은 "나는 세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하며 '밤의 대통령'이라 불리었던 남산의 권력이 자행한 정치공작과 인권침해는 이루 헤아릴 수 없다"면서 "다시는 우리 역사에 국가권력에 의한 폭력, 살인의 대명사인 고문이 자행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곳 남산에서 자행된 고문의 역사를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이곳에서 직접 고문을 당한 민주인사들도 참석했다. 민

주화운동기념사업회 김용태 상임이사는 "10여년 만이다. 세 차례 여기 끌려 왔었다"며 말문을 연 뒤, "이곳은 고문의 현장, 인권을 유린하는 장소였다. 앞으로 이러한 아픔의 역사가 없도록 민주·인권·평화·통일의 공원이 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이 사안과 관련해 지난 24일 이명박 서울시장은 최열 환경운동연합

2003년 8월 26일(화)

제 2404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공동대표와의 면담에서 25일 이후 사회원로들과 면담을 하기로 한 한편, 남산이 녹지로 묶인 상태라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을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가협 측은 아 총무는 이에 대해 "녹지를 유지하면서도 충분히 인권기념공원을 건립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인권단체들은 향후 △사회원로의 서울시장 면담과 성명 발표 △사회단체와 공동대책기구 구성 △중앙정보부와 안기부 피해자 증언대회 개최 △국회, 청와대 등에 의견서 전달 △공청회 개최 등의 사업을 추진해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인권기념공원으로 만들기 위한 장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김명수)

## 청구성심병원 특별근로감독 다시 시작

### 부당노동행위 확인 집중...이사장 처벌까지 이어질까 주목

직장내 집단 따돌림 등 극심한 노조 탄압으로 사회적 물의를 빚고 있는 청구성심병원(이사장 김학중)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25일부터 다시 시작됐다. 이번 특감은 서울지방노동청 주관으로 총괄팀장인 시민석 근로감독과장을 포함, 모두 9명의 근로감독관이 투입돼 9월 3일까지 진행된다.

청구성심병원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은 지난달 22일부터 25일까지 관할 서부지방노동사무소에서 시행된 바 있다. 하지만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는 청구성심 공대위 측의 문제제기에 따라 서부사무소 주관으로 진행되던 특감이 중단되고, 감독관을 전원 교체해 서울지방노동청이 재조사하게 됐다.

특감 실무 반장인 서부사무소 박정환 근로감독과장은 "일부 서부사무소 근로감독관이 투입되기는 하지만 지난 특감 당시 공정성 문제를 일으켰던 감독관들은 제외돼 공정성 시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갈등의 원

인이 된 노사관계 영역에 감독관 3명을 집중 투입해 사측의 부당노동행위 사실 확인 작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감 결과는 관례상 늦어도 다음달 말에는 나올 전망이다.

청구성심노조 최윤경 직무대행은 "서울지청에서 특감이 제시행되는 것은 투쟁의 소중한 성과지만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는 불투명하다"며 "조합원 정신질환의 원인이 된 노동탄압이 사라져 노동자들이 안전한 직장에서 일하려면 근본적으로 김학중 이사장 구속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구성심 공대위는 특감 첫날인 25일 이사장 구속을 촉구하는 병원 앞 집회를 시작으로 특감이 진행되는 10일간 병원 앞 농성과 1인 시위를 이어갈 계획이다.

한편 노조탄압 스트레스로 인한 정신질환을 이유로 집단산재인정 신청을 했다 추가 진료가 필요하다는 유보 판정을 받았던 조합원 3명의 최종 판정 결과는 빠르면 이달 말 나올 예정이다. (김성준)

## ● 박하순의 인권이야기 ● '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

98년 IMF 경제위기가 한창이던 어느 날 자정 무렵, 서울역 지하도에서 말로만 들던 노숙자들을 직접 보게 되었다. 그들은 분리수거도 되지 않은 채 부패해 가고 있는 거대한 쓰레기더미 같이 보였다. 국가와 사회는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나는 저 사람들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안쓰러움, 분노, 자괴감의 복잡한 감정이 일었던 기억이 있다.

그 노숙자들이 아직 여전한지 하지만, 지금의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실직비관 50대 회사원 아파트에서 추락사', '카드 빚 비관 30대 자살', '남편 빚에 시달리다 자살', '사업부진·생활고 비관 30대 주부 목매 자살' 등 생활고로 인한 자살 소식들이 7, 8월 내내 계속해서 들려오고 있다. 카드 빚에 시달리던 30대 주부가 자녀 3명을 아파트에서 떨어뜨린 후 자신도 몸을 던져 자살한 사건에 이르러서는 현 체제와 생존권의 관련성을 심각하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00년 생활고, 사업 실패에 따른 자살은 786건이었지만, 2001년 844건, 2002년 968건 등 해마다 큰 폭으로 늘었다고 한다. 그래서 자살 원인별 순위가 예년에는 비관, 병고, 가정불화, 정신이상, 빈곤이던 것이 올해는 빈곤으로 인한 자살이 3위로 올라섰다.

빈곤으로 인한 자살의 증가는 비단 한국만의 문제는 아니다. '잃어버린 10년'을 겪고 있는 일본의 예는 더욱 심각하다. 일본 경찰청 집계 따르면, 경제·생활 문제로 자살한 사람은 전체 자살의 약 25%나 되고, 일본 자본주의의 과잉 축적 위기에다 아시아 금융위기까지 겹쳐 불황이 더욱 심해진 지난 98년을 기점으로 갑자기 급증해 그전까지 2~3천명 선에 이르던 것이 98년에는 단번에 6천명 선을 넘어섰다고 한다. 지난해 경제·생활문제로 자살한 일본인은 전년보다 1,095명이 늘어난 7,940명으로, 경찰의 자살자 집계는 시작된 지난 1978년 이후 처음으로 7천명 대를 넘어섰다. 전체 인구로 보면 한국의 3배 정도인 일본에서 경제·생활문제로 인한 자살인구는 한국의 10배에 이르고 있다. 적절한 비교는 아니지만, 이 수치는 9.11 테러로 인해 미국 무역센터가 붕괴되면서 죽은 사람의 두 배에 이르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으로 인한 이라크인 인명 손실의 수배에 이른다.

한편 이와 같은 자살통계는 현재 세계자본주의의 위기와 이를 극복하겠다고 나선 신자유주의 체제 아래서의 세계 각국 민중들의 고통에 찬 삶의 모습 중 극히 일부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다. 기아임금, 살인적인 노동강도와 장시간 노동, 중대 재해, 실업, 그리고 인간적인 모멸로 고통받는(여성)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빚에 쫓돌리는 소농과 빈민들, 그리고 사무직 노동자들은 얼마나 많을 것인가. 영양결핍, 질병에 신음하는 아이들과 노인들은 얼마나 많을 것이며, 경제적 문제로 가정불화를 겪고 이혼하는 부부와 이로 인해 고통을 받는 아이들은 또 얼마나 많을 것인가!

생존의 경계 안에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힘겹게 버티며 살아가는 이들 중 일부에게 체제는 어느 순간 말 그대로의 의미에서 생존권을 박탈한다. 생활고로 인한 자살 또는

## 주간인권흐름

(2003년 8월 18일 ~ 8월 25일)

1. '되로 주고 말로 받는' 주5일제  
민주노총·한국노총, 주5일근무제 관련 정부 '근로기준법 개악안' 반대 국회 앞 농성 돌입...주당 노동시간 4시간 줄이는 대신 노동조건 대폭 개악(8.18) / 국회 환경노동위 법안심사소위,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주5일근무제 내년 7월 실시를 뼈대로 한 근로기준법 개악안 통과시켜(8.20) / 근로기준법 개악안, 국회 환경노동위 전체회의에서도 정부안 그대로 통과...28일경 국회 본회의 통과 예정(8.21)

2. 대법관 제청 파동, '사법개혁' 변죽만 울릴까  
최종영 대법원장, "애초안대로 대법관 후보 제청할 것"(8.18) / 대법원, '전국 판사와의 대화' 개최...문흥수 부장판사, 절차적 정당성에 의문 제기하며 중간 퇴장(8.18) / 전효숙 서울고법 부장판사, 첫 여성 헌법재판관으로 지명(8.19) / 참여연대·민변 등, 대법관 인선 재고와 사법 개혁 촉구(8.19) / 대법원이 서명 법관들 요구 상당 부분 수용, 개혁 추진 약속하는 선에서 '제청 파문' 일단락(8.19)

3. 보험료 Up↑ 연금액 Down↓  
보건복지부, 보험료를 크게 올리고 연금지급액 낮추는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노후 생계보장이라는 국민연금 제도 뿌리부터 흔들려(8.18) / 노동계와 사회단체, 연금지급을 가입자 보험료로만 떼우려는 정부안은 사적 생명보험 시장만 확대하고 노동자·서민의 노후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며 새로운 국민연금법 개정안 마련 촉구(8.19)

4. '테러'가 부른 테러의 악순환  
바그다드 주재 유엔사무소에 차량폭탄 테러 발생...세르지오 비에이라 드 멜로 유엔인권고등판무관 사망 등 피해규모 커(8.19) / <파이낸셜타임스>, '대미 성전' 위해 이라크로 들어가는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크게 늘고 있다고 보도(8.19) /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의 동생 집에서 폭발물 터져 최소 2명 부상(8.19) / 국제엠네스티, 9·11테러 이후 미국이 23개월 동안 벌인 '테러와의 전쟁'에 대한 조사보고서 폐쇄...테러 용의자들에 대한 미국의 부당한 처우에 깊은 우려 표명(8.19) / 영국 <비비시방송>, 이라크 저항세력한테 유엔이 미국과 영국의 폭탄격으로 비쳤기 때문에 자살 폭탄공격의 표적이 되었을 것이라 분석(8.20) / 미, 자신의 통제권 유지한 채 더 많은 나라의 파병과 자금 지원을 촉구하는 안보리 결의안 추진키로(8.21)

'체제살인'이 일어나는 순간이다.  
한국에서의 빈곤의 상징이 7-80년대에는 판자촌과 달동네였다면, 90년대에는 노숙자였다가 2000년대는 생활고로 인한 자살 또는 체제살인으로 그 모습을 바꿔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인당 국민소득이 2만달러에 달할 2010년대 한국에서의 빈곤은 어떤 모습을 띠게 될까?

(박하순님은 노동조합기업경영연구소 소장입니다.)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2003년 8월 27일(수)

제 2405 호

발행처 : 인권운동사랑방

편집인 : 배경내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① 원진레이온 투쟁

## '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

오는 9월 7일 (인권하루소식)이 창간 10주년을 맞는다. 하루소식은 앞으로 10회에 걸쳐 지난 10년간 우리 사회에 주요한 '인권의 화두'를 던졌던 대표적 사건 10가지를 골라 그 의미와 영향을 되짚어본다. <편집자주>

1988년 시작된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직업병 인정' 투쟁은 우리 사회에 직업병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기한 동시에 경제발전이라는 구호 아래 짓밟힌 노동자의 권리, 건강하게 일할 권리에 비로소 주목하도록 만든 사건이었다. 원진레이온은 '직업병의 대명사'에서 '산재 투쟁 역사의 증거'가 되고 있다.

구조적 문제로서의 직업병 인식 계기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원진레이온 사건은 산업재해가 비민주적인 결구물이란 인식을 가져다준 사건이었다"고 설명한다. 그는 "88년 원진레이온 사건 이전에도 개별적으로 재해로 인해 사람들이 죽어갔지만, 개별적인 희생이나 비극으로 끝났을 뿐 그 죽음이 사회에 알려지지도 않았고 알려려고 하지도 않았다"며 "87년 민주화 운동이라는 시대적 영향도 있었지만, 원진레이온 노동자들의 조직적인 직업병 문제 제기는 산재를 구조적인 문제로 인식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고 말한다.

1959년 설립된 원진레이온은 일본 동양레이온이 폐기처분한 기계를 1966년 들여와 조업을 시작했다. 이 기계는 인조견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이황화탄소를 대량으로 배출, 30년 가까이 원진 노동자들을 소리없이 죽음으로 몰아넣었다. 개별적으로 회사를 상대로 직업병을 주장하거나 청와대에 진

정서를 넣는 일이 있었지만, 이러한 주장이 별다른 결과를 가지오지 못하면서 집단적 행동의 필요성을 느낀 노동자들은 88년 7월 '원진레이온직업병 피해자및가족협의회'를 구성, 조직적인 직업병 인정 투쟁에 나서게 된다.

"산업쓰레기로 주저앉을 수 없다"

'산업역군'이라며 경제발전의 주역으로 칭송되다 일순간 '산업쓰레기'로 버려져 온 노동자들은 망가진 몸을 추스르며 대항하기 시작했다. 원진 노동자들과 함께 사회단체들도 원진직업병대책위원회를 결성, 직업병 인정 투쟁을 지원했다. 사회적 여론에 힘입어 88년 35명의 노동자가 직업병 인정을 받은 데 이어, 90년에는 111명의 노동자가 추가로 직업병 인정을 받았다. 91년 직업병 인정을 받지 못한 채 사망한 김봉환 씨 시신을 두고 1백37일간 농성을 벌인 끝에 김 씨의 '직업병 인정'을 받아내고 직업병에 대한 조사와 종합대책 등에 관한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93년 12월 원진레이온 회사가 문을 닫은 이후, 원진 노동자들은 재취업, 원진직업병관리재단 설립, 직업병 전문병원 설립 등을 위해 97년까지 싸움을 이어갔고, 마침내 99년 구리시에 원진녹색병원이 문을 열게 됐다.

한편 원진레이온의 '죽음의 기계'는 95년 중국의 나전모방에서 수입, 국내 외 노동인권단체로부터 일본, 한국에 이은 끔찍한 직업병의 역사를 되풀이 한다는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고통 계속돼도 재활시스템까지 발전

원진산업재해자협회에 따르면, 지금까지 원진직업병 환자로 밝혀진 사람

은 총 824명, 그 중 68명이 사망했다. 원진직업병은 뇌졸중으로 인한 전신마비, 언어불능, 장기손상 등의 합병증을 불러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원진레이온 방사과에서 근무했던 이용윤 씨(57, 72년~85년 근무)는 7년 전부터 휠체어 생활을 하고 있다. 원진 녹색병원에서 만난 부인 유영례 씨(57)는 "아픈 지 18년이나 됐다. 처음에는 지팡이를 짚고 걸어 다녔는데, 이제는 걷지도 못하고 눈도 잘 보이지 않나 봐"라며 말을 못하는 남편을 대신해 설명했다. 유 씨 역시 원진직업병 피해자이면서 증증환자인 남편을 돌보고 있다. 유씨는 "나도 4년 일했는데, 그때 이따금씩 청소하던 젊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기도 했어. 뭐, 그때 죽은 사람은 보상도 못 받았지. 나중에 88년 이후에 사람들이 싸우면서 산재인정이라도 된 거지"라고 회상했다.

옆 침대에서 치료중인 원진직업병 환자 이수남(60) 씨의 부인 윤정순(57)씨도 "이렇게 아플 줄 알았으면 누가 일했게..."라며 연신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을 바라본다. 원진직업병 환자들은 우울증, 극심한 감정 변화로 계속 울고 웃는다는 게 간호사의 설명이다.

원진녹색병원 양길승 원진종합센터장은 "시급한 치료를 필요로 하는 환자뿐 아니라 만성 산재환자의 삶의 질을 높이고 지속적인 치료를 위해 오는 9월 20일 개원하는 녹색병원(서울)에 요양병상을 마련하게 됐다"며 "직업병 인정에서 병원 설립까지 이어져 온 원진레이온 투쟁은 직업병 환자에 대한 관리, 치료, 재활까지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특히 의미가 있다고 지적했다.

'제2의 원진레이온' 계속될 수 있다

노동건강연대 전수경 사무국장은 "지금 금은 '과로사'가 일반적인 용어로 쓰이지만, 이것은 5~6년 전부터 과로사 관련 소송이 제기되고 (2면에 계속)

## 반핵투쟁 주체로 나선 부안의 학생들 부안 초중고생 등교거부 속속·반핵 청소년모임도 결성 체비

여름방학이 끝나고 전국의 초·중·고 학교들이 하나둘 개학을 맞이하고 있는 요즘, 부안의 학교들은 학생들이 개학을 맞이하고 있다. 학생들이 학교로 가는 대신 길거리로 나섰다. 길고 무덥던 여름 내내 핵폐기장 부지 선정 전면 백지화를 위해 싸워왔던 부안 주민들의 투쟁의 대열 속으로 학생들도 직접 뛰어 들고 있는 것이다.

등교거부 이틀째를 맞은 26일 오전 10시, 300여명의 학생과 학부모들이 참여한 가운데 핵폐기장 백지화를 위한 학생학부모대회가 부안 수협 앞 반핵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청소년이 직접 사회를 맡은 이 대회에서는 핵폐기장 반대를 위해 등교거부를 선택한 학생과 학부모들을 위한 다양한 공연이 펼쳐졌다. 이에 앞서 25일에는 부안 핵폐기장 건설계획 백지화를 위한 등교거부 선포식이 같은 장소에서 진행됐다. 각 학교 별 깃발을 앞세워 선포식에 참가한 학

생, 학부모의 숫자는 총 5천여명. 이중 2천여명이 초·중·고 학생들이었다.

부안지역의 각 학교 운영위원회와 학부모 총회, 학생회장단 회의 등을 거쳐 결정된 핵폐기장 부지선정 철회를 위한 무기한 등교거부운동은 대부분의 학교가 개학을 시작한 지난 25일부터 시작돼 이제 3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부안 교육청에 따르면, 25일에는 전체 46개 초·중·고 학생 9천여명 중 약 30개 학교 4천여명의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였고, 이로 인해 초등학교 총 26개교 중 7개 학교가 휴업에 들어가야 했다. 26일 등교거부투쟁의 여파는 더욱 확산되어갔다. 격포초등학교의 경우 전체 재적수 207명 중 200명의 학생이 등교하지 않았고, 백산고등학교에서는 전체 266명 학생 중 176명이 등교를 거부했다. 진학을 코앞에 둔 3학년들의 출석을 제외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등교거부에 동참하고 있는 것.

## 한나라당, 국민 기본권 거꾸로 돌리려나

### 집회금지구역 300미터 확대 집시법 개악안 제출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현행 100미터에서 300미터 확대하는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된 것으로 밝혀져 가뜩이나 제한되고 있는 표현의 자유가 더욱 후퇴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박승국 의원(대구 북구갑) 등 한나라당 의원 11명은 지난 22일 국회의사당을 비롯해 각급 법원, 대사관 등의 청사 또는 저택 주변의 집회금지구역 경계를 300미터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제출한 의안에서 "현행 100미터 규정 하에서는 시위자들의 긴급습격이 가능하고 경찰 경계 등 시위 제한의 실효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300미터 개정을 통해서 집회 또는 시위 주변지역 입주자들을 격렬·과격시위의 소음 공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하려는 것"이라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제출이 한나라당

사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를 원천 봉쇄하겠다는 폼수에서 나온 것이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김승환 교수(전북대 법학,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공동대표)는 "현행 100미터 규정도 집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로 인해 대기업들이 자사 빌딩에 대사관을 유치해 집회를 통한 표현의 자유를 제약하는 방법으로 악용되어왔다. 300미터는 이를 더욱 개악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도형 변호사도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 발전의 척도인데, 한나라당의 이번 법안은 시대에 역행하는 처사"라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신장시켜야 할 의무가 있는 국회의원이 헌법에 반하여 기본권을 해치려는 것은 월권"이라며 신랄하게 비판했다.

한나라당이 기본권 신장에는 등돌린 채 오히려 기본권을 후퇴시키는 개악을 끝내 추진할지 지켜볼 일이다. [김명수]

"3학년이라 등교거부에 동참하지 못해 동생들에게 미안하다"며 말문을 연 부안여중의 한 중3 여학생은 "단순히 학교에 나오지 않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왜 등교거부를 하고 있는지 생각하고, 좀더 적극적으로 집회나 부모님들의 투쟁에 참여하는 게 필요한 것 같다"며 "이번 등교거부를 통해 학생들이 보다 적극적으로 핵폐기장 반대투쟁을 함께 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전했다.

현재 부안대책위는 등교거부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위해 학교수업을 대신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교육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으며, 오는 29일까지 매일 오전 10시 부안예술회관에서 학생과 학부모를 위한 대회가 계속될 예정이다.

또 학생회와 각 학교 학생대표들을 중심으로 반핵대책위 청소년 모임을 결성하기 위한 준비작업도 한창이다. 이번 등교거부 투쟁을 통해 부안의 학생들은 스스로 반핵투쟁의 주체로 당당히 나서고 있는 것이다. [양승훈]

### 네이스(NEIS) 반대 촛불집회

- 때 : 8월 27일(수) 늦은 6시
- 곳 : 명동성당 들머리

(이면에서 이어짐) 산재로 인정받으려는 싸움이 계속돼 왔기 때문"이라며 산업재해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를 설명했다. 그는 최근 청구성심병원 노동자들이 산재로 인정받게 된 사례를 들며 "육체적으로 잘리고 부러지는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총체적 인격체로서 노동자의 건강문제를 바라봐야 하고 이러한 각성의 시작이 원진레이온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정부가 산업재해를 사회보장 차원에서 접근하지 않고 기업이 할 일을 대신해준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산재인정을 받는 데 아직도 어려움이 많다"고 주장했다. 사전승인제도 등의 문제는 원진레이온 때나 지금이나 남아 있는 문제라는 것. '장시간 휴식 없는 노동'이라는 산재 발생의 근본 원인을 제거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산재를 회피하려는 기업과 정부의 태도가 변화되지 않고서는 제2, 제3의 '원진레이온'은 계속될 것이다. [고근예]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장애여성 성매매 본격 대응 나선다

###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 발족·긴급전화 개설

"성매매 산업에 유입돼 있는 여성장애인들을 보시면 ☎02-364-8297 (빨리구출)로 연락주세요."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는 여성장애인의 성매매를 근절하기 위해 여성인권단체들이 공동 대응을 구성했다. 성매매근절을위한소리회, 여성장애인 성폭력상담소 등 7개 여성인권단체들은 27일 오전 11시 성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여성장애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연대'(아래 근절연대) 발족식을 갖고, 여성장애인 성매매 긴급전화를 함께 개통시켰다.

근절연대는 "최근 성매매 업소 업주들이 '말 잘 듣고, 다루기 쉬운' 여성장애인을 성산업에 끌어들이는 경향이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성매매된 이들 여성장애인들은 대개 비장애 여성보다 더 참혹한 인권유린을 당하고 있지만,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데다 업소 종업원 명부에조차 기록되어 있지 않아 그 사실이 철저히 은폐되고 있는 실정이다. 더구나 가정과 사회의 폭력과 차별을 견디다 결국 성매매 산업으로 유입된 여성장애인의 경우는 업주가 폭력과 폭언을 행사하더라도 '자신을 받아주고 고용시켜 준' 업주와 공간에 오히려 감사하며 살아가는 비극적인 경우조차 있다.

이에 여성인권단체들은 스스로 성매매 현실에서 벗어나는 것이 불가능한 여성장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생각으로 근절연대를 결성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올 1월 경기도 성남시 중동에 위치한 성매매 집결지에서 2명의 장애 여성을 긴급 구출하게 된 사건은 이들 단체들이 여성장애인 성매매 피해 경험

의 특수성과 심각성을 자각하고 이 문제에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된다는 결심을 하도록 만드는 결정적인 계기가 됐다. 당시 발견된 지체장애 여성과 정신지체 여성은 온 몸에 화상과 멍투성이였을 뿐만 아니라, 24시간 감시 하에 성매매를 강요당하면서 풍과 오줌을 강제로 먹었던 경험까지 있는 것으로 드러나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성매매근절을위한소리회 조진경 사무국장은 "이들 여성장애인들은 대부분 나갈 곳이나 재취업할 곳이 없기 때문에 한번 유입되면 도망을 가거나

스스로 그만두는 경우가 거의 없다. 따라서 여성장애인의 성매매 유입에 대해 알 수 있는 방법은 주변 사람들의 신고밖에 없다"면서 향후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역을 중심으로 여성장애인 성매매 긴급전화의 존재를 널리 알리기 위한 홍보 활동을 벌여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절연대는 향후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에 △여성장애인 성매매 전문상담소와 보호시설 설치 △성매매 방지법안 내 여성장애인 특화조항 삽입 △탈성매매와 사회 참여 지원 등을 촉구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향후 전국에 있는 12개 여성장애인 상담소를 통해 여성장애인 쉼터 현황을 파악하는 한편, 성매매된 여성장애인의 구출, 의료·법률 지원, 법제도 정비 등의 활동도 계획하고 있다. (배경내)

## 네이스 반대 하반기 투쟁 닷 올랐다

### 장대빛속 수요 촛불집회 활활...전국 공대위도 결성되

네이스(NEIS) 하반기 투쟁의 닷이 올랐다. 참교육학부모회, 전교조, 청소년의힘 등 48개 인권교육시민단체가 속한 'NEIS 반대와 정보인권 수호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국 공대위 구성과 하반기 투쟁 사업계획을 밝혔다.

진보네트워크센터 이종희 소장은 "전교조 연가투쟁과 인권단체들의 단식농성투쟁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난 18일 전국 각지의 네이스 반대 공대위와 연대 모임이 전국 공대위를 구성, 공동 대응을 결의했다"고 밝혔다.

공대위는 하반기 주요 사업으로 △네이스 문제 완전 해결을 위한 백만인 서명 운동 △매주 수요일 촛불 집회 △프라이버시 보호 원칙 확립을 위한 정책 토론회 △네이스 강행 학교 앞 일인시위와 선전전 △네이스 강행 학교장 고발 등을 내놓았다.

이어 이날 저녁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학부모, 학생 등 1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촛불집회가 열렸다. 인권운동사랑방 허혜영 상임활동가는 "촛불집회는 단지 네이스 반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체 국민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특히 차별, 조기등교, 학생자치활동 제한 등 반인권적이고 비민주적인 학교 내 제도와 관행에 맞서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청소년의 힘' 선미 씨는 "나 같은 청소년들은 자기 개인정보가 집적되고 전 송되는데도 그에 대한 결정권을 갖고 있지 못하다"며 "하나의 인격이 아니라 많은 번호 중에 하나로 취급되기 일쑤"라며 반인권적 학교 상황을 질타했다.

촛불집회는 향후 매주 수요일 저녁 6시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진행되며, 100만인 서명, 길거리 특강, 정보인권교육 등의 프로그램으로 이뤄진다. (강성준)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② 5·18 특별법 제정

## 빛고를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

80년 5월 빛고를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이며 정권을 찬탈한 전두환·노태우 일당을 어떠한 형태로든 심판하고 처벌해야 한다는 민중들의 지고한 열원은 이미 역사적 사건이 됐다. 95년 민중들의 학살자 처벌 투쟁이 그 열원을 현실로 바꾸었기 때문이다.

내란필벌, 역사 바로 세우기

95년 7월 검찰은 5·18 학살자들에게 공소시효 만료 직전 사법적 면죄부를 부여함으로써 더 이상의 처벌을 불가능하게 만들려 했다. '통치행위론', '성공 쿠데타론' 등 해묵은 형법이론을 근거로 전·노 일당을 불기소 처분했던 것. 그러나 이날은 역설적이게도 15년 동안 쌓여왔던 민중들의 분노가 한순간에 폭발하면서 학살자 처벌 투쟁이 각계각층으로 확산되기 시작한 날이기도 하다.

검찰의 불기소 직후 5·18 관련 단체 회원들은 명동성당 천막농성에 돌입했다. 전국연합 등 사회단체들의 규탄 성명도 연일 이어졌다. 법계와 학계는 검찰의 논리를 반박하는 이론적 근거를 생산해냈고, 노동자·농민·학생들은 주말마다 국민대회를 열었다. 천주교, 기독교, 불교도 '학살자 처벌'에 한 목소리를 냈고, 여기에는 전국유림들과 서울시의회도 함께 했다.

각계각층의 참여 속에 형성된 거대한 5·18 투쟁의 흐름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이 '5·18 특별법' 제정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결국 그 해 12월 5·18 특별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이듬해 1월 전·노 일당이 기소됨으로써, '성공한 내란이라도 반드시 처벌돼야 한다'는 역사적 선례를 남기게 됐다.

단죄, 그러나 미흡한 진상규명

97년 4월 대법원은 전·노 일당에 군사반란, 내란, 내란목적 살인죄를 적용해 단죄함으로써 과거 국가범죄에 대한 최초의 처벌을 마무리했다. 그러나 검찰수사와 재판에만 맡겨진 5·18 진상규명의 과업은 총체적인 진상규명과 보상에 기법사업에 치우쳐

다. 당시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판결 내용에 대해 "5·18 학살에 대해서는 소홀히 다루어졌고, 이에 따라 광주 현장에서 몇 명이 죽었으며, 어떻게 죽었는지 실제적 진실은 거의 밝혀지지 않았다"고 평한 바 있다. △발포명령 등 학살의 지휘체계 △미국의 개입 여부 △희생자의 정확한 수 등은 여전히 규명되어야 할 과제로 남게 됐다.

5·18의 원인과 구조에 대한 미흡한 진상규명은 재발방지에 관한 국민적 합의를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필연적으로 불철저한 책임자 처벌로 이어졌다.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1년이 지나지 않아 전·노 사면이 이루어진 것은 이를 반증한다. 사실 사건 자체의 단죄에만 초점을 맞춘 검찰수사와 재판으로는 총체적인 진상규명이 애초부터 불가능했다. 이런 이유로 95년 당시 마련된 '5·18 특별법 범국민 단일안'은 군사반란과 내란의 과정에서 발생한 다양한 인권침해의 진실을 총체적으로 밝혀내기 위해 각계로 구성된 '진실규명 국민위원회' 설치를 제안한 바 있으나, 이는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박제화'되는 역사, 반복되는 한계

△진상규명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피해배상 △정신계승 등 5·18 문제 해결을 위한 5대 원칙은 투쟁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됐고, 이후 과거 국가범죄의 재발방지를 위한 투쟁의 원칙으로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지게 됐다. 이 중 진상규명은 모든 문제에 선행하는 출발점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5·18 투쟁은 미흡한 진상규명과 불철저한 처벌의 문제를 뒤로하고, 명예회복과 피해배상, 기념사업으로 중심을 이동해 버렸다. 이에 대한 여수지 역사연구소 이영일 소장의 비판은 날카롭다. "5·18 투쟁은 70년대 민주주의 운동이 노동·농민운동 등 계급운동으로, 교육·환경운동 등 부문운동으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는 물꼬를 텅다는 점에서 분명 성과가 있다. 하지만 진상규명보다는 보상과 기념사업에 치우쳐

개별적인 민원처리 수준으로 격하되는 양상을 보여왔고, 5·18 정신을 살아있는 역사로 생산하지 못하고 박물관 속에서 박제화하는 현상을 초래했다."

광주인권운동센터 최완욱 사무국장은 "5·18 투쟁의 가장 큰 문제점은 (피해) 당사자 중심으로 운동이 진행됐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경험적으로 피해 당사자들은 개별보상의 유혹 앞에서 '총체적인 진실규명을 통한 재발 방지'라는 과거청산의 대의를 내팽개치는 경향이 있었다. 거창 신원리 학살사건, 제주 4·3사건이 그러했으며, 최근 의문사와 민주화운동 명예회복 문제에서도 동일한 양상이 나타났다.

의문사위 염규홍 보고서팀장은 "개별 보상은 국가의 범죄로 피해를 입은 당사자를 다시 그 국가가 심사하는 격"이라며, "심사과정에서 국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은 채 돈으로 피해당사자를 유혹할 수 있다"라며 단호히 반대했다. 그 대안으로 염 보고서팀장은 '진상규명 우선' 원칙과 '집단배상에 이은 개별보상' 수순을 제안했다. 개별보상 신청에 앞서 국가가 먼저 철저한 진상규명을 통해 자신의 잘못을 시인하고 누구에게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배상할 것인가를 정해 집행하자는 취지다.

5·18 정신을 오늘의 역사로

이영일 소장은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학살자들을 재처벌하진 못하겠지만, 그들이 적어도 당당하고 떳떳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진상보고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라며 5·18 진상의 종합적인 재규명을 제안했다. 전·노 재판 직후 방승태 곡노현 교수가 제안했던 '진실정의위원회' 등과 맥이 닿는다.

한편, 최완욱 사무국장은 "현재의 한국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하고 어떠한 민주주의가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광주를 '인권의 도시'라고 부를 때 과거(5·18의 이미지)에 의존하지 말고 오늘의 인권 문제가 무엇인지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라고 제안했다. (범용)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 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평화적 생존권 파업, 대화로 풀라

### 5개 사회단체들, 경찰력 투입 철회·대화 복귀 촉구

현재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본부 주변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다. 화물연대 지도부 16인에 대한 구속영장과 민주노총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이 이미 발부돼 있는 상황에서 경찰력이 언제 들이닥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화물연대의 지도부는 긴장감과 절박감 속에서도, 민주노총마저 '파업을 위한 파업을 선포하는 집단'으로 매도하며 노동운동 전체에 대한 공격적인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현 정권에 맞서 힘겨운 싸움을 이어나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8일째를 맞은 28일 오전 11시, 민주노총 본부 앞에서는 50개 사회단체 대표 약 15인이 참석한 가운데 '화물연대에 대한 경찰력 투입 반대와 정부의 성의있는 대화를 촉구' 하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각계 대표들은 이 자리를 통해 현 정부의 강경한 노동정책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냄과 동시에, 화물연대와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력 투입 계획을 철회하고 정부와 운송업체에 즉각 대화 테이블로 복귀할 것을 촉구했다.

이어 오후 2시에는 '화물연대 파업사태의 올바른 해결방안 모색을 위한 각계 사회단체 긴급 토론회'가 민주노총 9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토론회에는 윤영삼 교수(부경대 경영학부)와 정호희 운송학연구소 사무처장을 비롯, 각계를 대표하는 6인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사회를 맡은 박석은 전국민중연대 집행위원장은 토론에 앞서 "정부와 사측에 토론회 참가를 요청했으나, '곤란하다' 혹은 '바빠서 안된다'라며 외면해 버렸다"면서, 일체의 대화를 거부하고

있는 정부와 사측의 태도를 규탄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경찰력 투입은 오

히려 사태의 악화를 초래할 뿐이라는 점을 경고하며, 이번 화물사태의 해결을 위해 노사정의 적극적 협의와 물류운송체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김태연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현 정권이 점점 더 노동탄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화물연대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으며, 화물연대는 그 하나의 희생양일" (3면에 계속)

## 화물운송노동자가 핸들을 두 번 놓은 까닭

물류대란으로 나라경제를 위협하고 있는 것은 박탈당한 생존권을 확보하고자 하는 노동자들인가? 합의안을 이행하지 않은 채 교섭 테이블을 외면하는 화주·운송업체인가? 아니면 강경대응 방침을 공공연하게 밝혀 사측의 불성실한 교섭을 부추긴 정부인가?

현행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면, 5톤이상 일반화물차의 경우, 5대 이상을 보유한 회사만이 영업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차량을 1대 보유한 화물운송노동자가 영업을 하려면 '지입 차주'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99년 7월부터 면허제에서 등록제로 바뀌면서 당시 18만대였던 화물차가 현재 34만여대로 늘어나면서 공급과잉이 초래됐다. 이로 인해 '밀바닥으로의 경쟁'이 강제되고, 노동자들의 운송업체와 중간 알선업체에 대한 경제적 종속이 심화될 수밖에 없게 됐다. 이에 따라 노동자들은 만성적인 적자상태에 놓이게 됐다.

빛더미에 올라앉은 노동자들에게 남은 선택은 살인적인 장시간 노동뿐이었다. 지난 3월 윤영삼 부경대 교수가 화물연대 조합원 931명을 대상으로 노동·생활실태를 조사한 결과, 이들의 주당 평균노동시간은 80.7시간으로 전산업·전직종 노동자의 49시간(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의 1.65배에 달했다. 또 한달 평균 15일을 차량에서 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소득 -124만원, 평균 가구부채 3500만원. 그러나 이들은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해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혜택으로부터도 배제되어 왔다. 이처럼 생존권 확보조차 불가능한 상황은 화물노동자로 하여금 지난 5월 처음 핸들을 놓게 만들었고, 5.15 노정합의를 통해 그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수용되는 듯 했다.

언론들이 '화물연대, 또 파업'이라는 선정적 제목으로 보도한 지난 21일의 2차 파업이 일어난 까닭은 5.15 노정합의 이후의 전개양상을 보면 알 수 있다. 정부는 당초 합의와는 달리 '방관적 입장'으로 일관했고, 화주·운송업체들도 불성실한 태도로 일관했다. 현장에서는 개별 업체들의 탄압이 이어졌다. 조합원 탈퇴를 강요하고 불응시 계약해지 및 배차 불이의 조치가 가해졌다. 일례로 대한통운은 교섭 불참과 위수탁 계약서 상에 노조활동 금지조항 삽입을 강요했다. 때문에 교섭이 진행되는 와중에도 현장에서의 투쟁은 끊이지 않았다. 급기야 정부는 7월 22일 당진 지역에 대규모 경찰력을 투입했다. 정부는 자신의 강제력을 화주·운송업체가 합의를 이행케 하고 법제도를 정비하는 데 쓰는 대신, 합의 이행을 요구하는 노동자들 탄압하는 데 동원했던 것이다.

그러는 사이, 지난달 포항에서는 화물연대 조합원 한사람이 대여금 상환 협박과 부채에 시달리다 결국 자살했다. (김명수)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식사실 농성

## '현대판 노예'들의 식사실 함성, 그로부터 8년

"제발 때리지 마세요." "우리는 노예가 아니에요." 1995년 1월, 13명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온 몸을 쇠사슬로 묶고 명동성당에 모였다. 여권압류, 감금노동, 폭행·폭언, 장시간 저임금 노동... 이들 산업연수생들이 폭로한 인권유린 사실은 우리 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안겨줬다. 이주노동자들의 존재와 인권침해 현실을 알렸던 그 사건 이후 8년이 지난 지금, 여전히 산업연수생제도는 사라지지 않고 있지만 이제 그들은 거리에서 "노동비자를 달라", "노동3권 보장하라"며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당당히 말한다.

태생부터 틀러먹은 산업연수생제도

정부는 91년부터 출입국관리법을 적용해 산업연수생으로 받아들였지만, 그것은 연수가 아니라 저임 노동력 착취제도에 불과했다. 이주노동자들은 중소기업협동중앙회(아래 중기협) 산하에 편제되어 있던 인력회사에 상당한 금액의 수수료를 내고 들어와 '연수' 아닌 '중노동'에 시달려야 했고, 낮은 임금 가운데 일부마저 중기협에 보증금으로 맡겨야 했다. 게다가 사업장내 감금, 장시간 노동, 폭행 등은 이주노동자들의 사업장 이탈을 부채질했다. 그렇게 산업연수생제도는 불법체류 이주노동자를 양산하는 제도가 되어버렸다.

외국인이주노동자대책협의회(아래 외노협) 최의팔 상임공동대표는 "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연수생제도는 출발부터 문제였다"며 "1일2교대의 장시간 저임금 노동,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주노동자들이 94년 결성된, 95년 명동성당에서 농성을 벌이게 됐다"고 회상했다. 명동성당 농성에 참여했던 네팔 산업연수생들은 비록 1년여만에 모두 추방당했지만, 이 농성은 이주노동자 인권문제에 대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대응의 필요성을 일깨웠고, 그해 7월 '외국인노동자대책협의회'가 만들어지게 됐다.

사회인식 변해도 꿈쩍않는 연수생제도  
부산외국인노동자인권을위한모임 정

귀순 대표는 "94년, 95년의 이주노동자 투쟁은 그 존재조차 알 수 없었던 이주노동자의 존재를 알리고 인권유린 현실을 고발하는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그후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를 다루는 언론 보도가 늘어나기도 했지만 이주노동자의 숫자도 늘어나 주변에서 이주노동자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면서 이주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차츰 변화하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사업장내 변화'의 속도, 즉 노동자로서의 권리 보장 속도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쫓아가지 못했다. 그는 "정 대표의 지적이다."

계속되는 산업연수생제도의 폐해와 불법체류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착취에 맞서 인권사회단체들은 96년과 97년에 또 다시 명동성당 농성을 진행했다. 외노협 최 대표는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서 97년에 외국인노동자보호법 등을 국회에 제출하고, 범국민적인 서명운동도 했지만, 정부는 연수생제도에서 연수취업제 2+1(연수기간+취업기간), 그리고 1+2로 모양만 바꿨을 뿐 연수생제도의 틀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한다. 연수생제도 폐지와 고용허가제 도입은 이력단체인 중기협 등의 반대로 2002년까지 번번이 논의에만 머물러 있어야 했다.

노예제도는 유지, 노동자성은 부정

마침내 올해 7월, 산업연수생제도와 고용허가제의 병행을 골자로 하는 '외국인근로자고용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현대판 노예제도'라 불리는 산업연수생제도가 유지된 것은 물론이고 새로 도입된 고용허가제 역시 한국에 들어 온 이주노동자들의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지 못하는 한계투성이 법이라는 비난을 받고 있다.

민주노총 평등노조 이주노동자지부 사멸(네팔) 지부장은 "한국에 노동자로 와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은 당연히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아야 하는데, 이번에 도입된 고용허가제는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한다. 그는 "사업장 이전의 자유도 없고, 3년 계

약이라고 하지만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도록 해 노조활동 등 사용자 눈 밖에 나는 일은 할 수 없게 만들어 놨다"며 "말로는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보장하겠다고 하지만 실제 법은 여전히 이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비난했다. 더욱이 제정된 법에 따라 현재 체류중인 40여만명 이주노동자 중 국내에 4년 이상 체류한 10여만명은 올 11월 13일까지 한국을 떠나야 한다. 또 다시 인간사냥이 시작되는 것이다.

사멸 지부장은 이주노동자들이 불법체류자인지 아닌지 그 신분을 따지기 전에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라고 말한다. 피부색이 다르고 말도 다르지만 이 땅에서 이웃을 사귀고 일터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명의 노동자로서 이주노동자를 바라본다면, 자신들의 노동자로서의 정당한 권리를 빼앗고 사냥해서 내쫓는 끔찍한 단속추방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추방위협에도 노동자 권리 말하겠다

'표적 단속'과 '추방'의 위협에도, 이들 이주노동자들은 이제 더 이상 도움받기를 기다리며 앉아 있지 않는다. 집회를 열고 '연수생제도 폐지', '고용허가제가 아닌 노동허가제', '노동비자'를 요구하며, 노동조합을 통해 다른 이주노동자들을 조직한다. 사멸 지부장은 "노동자이면서 그 동안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지금까지의 차별을 해결하기 위해 조합을 만들고 직접 나서서"라고 말한다. 불법 체류자 신분으로 벌이고 있는 활동이 비록 그들의 자유를 위협하고 있긴 해도 사멸 지부장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며 "앞으로 단속추방 저지와 노동비자 쟁취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주노동자의 인권문제는 이제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공동의 문제'가 되었다. 하지만, 정부의 정책이나 제도는 아직도 95년 명동성당의 쇠사슬 농성이 있던 그때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고근예)



<기고>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 - 김기연(민변 활동가)

# 부족한 이해가 낳은 미흡한 권고, 한국정부에 책임있다

지난 22일 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이하 위원회)는 한국정부가 제출한 제 11차, 12차 이행보고서에 대한 심의결과를 담은 최종견해를 발표했다. 이번 최종견해는 지난 8일과 11일 제네바 유엔본부에서 열렸던 한국정부 보고서에 대한 심의회의 결과 나온 것이다.

“법제도 개선됐지만 실효성 의문”

최종견해에서 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 설립 △고용허가제 입법 △영주체류자격(F-5) 신설 △난민지위심사제도의 개선 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단일민족성을 강조하는 한국 사회의 태도와 인종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처벌하는 법률이 없는 점 등에 대해서는 우려를 표명했다.

특히 인종차별 피해자의 진정이나 사법적 대응에 관한 자세한 정보가 보고서에 누락돼 있는 점을 지적하며, 이는 '관련 입법의 부재, 사법구제방법에 대한 인식 부족, 또는 관련당국의 기소 의지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 밖에도 위원회는 △산업연수생·미등록노동자의 다양한 권리들이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 △국내적 구제조치와 협약 제14조에 규정된 개인청원절차에 대한 접근성과 홍보의 부족 △정부의 이행보고서와 최종견해 배포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에 대한 우려를 나타냈다.

결국 대한민국 정부가 법 제정이나 제도 마련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할 만한 진전을 보여주었지만, 이에 비해 인종차별문제에 관한 한국사회의 명확한 인식이 부족하고 인종차별의 현실을 시정할 만한 실효성있는 법제도의 운용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위원회의 전체적인 평가라고 볼 수 있다.

한국현실 제대로 이해했나 의문

이번 최종견해는 한국사회가 그 동안 인종차별문제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주요한 요소였던 '단일민족'이라는 맹목적인 관념에 대해 우려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또한 외국인여성 인신매매 문제를 언급하며 여성이 직면할 수 있는 다중적인 차별의 양상을 제기하고 인종차별문제에 성인지적 관점을 도입해야 한다는 커다란 인식의 틀을 제공하고 있다는 점도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최종견해에 백정(白丁) 문제가 언급돼 있는 데서도 알 수 있듯이, 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 이슈들을 제대로 파악하고 협약의 올바른 이행을 위해 필요한 실질적 사항을 권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했는지는 의문이다.

구체적 차별시정조치 권고했어야

산업연수생제도에 대해서도 심의과정에서는 고용허가제 입법시 산업연수생제도를 폐지하지 않은 이유에 관해 많은 관심을 보였는데도, 최종견해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우려의 표시나 폐지 권고가 누락되어 있다. 또한 위원회의 최종견해에 일반적으로 등장하는 이슈들, 즉 '모든 이주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의 비준 촉구와 난민 신청인에 대한 사회적 처우 개선 등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고, 위원회가 지난 회기까지 관심을 보여왔던 혼혈인에 대한 차별문제, 화교의 정치참여권 문제 등도 누락되어 있어 매우 큰 아쉬움을 남기고 있다.

이번 위원회 회기동안 영국, 이란 등 인종차별문제가 심각한 국가들의 이행보고서 심의가 동시에 이루어졌다는 점, 18년 동안이나 이행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라오스 문제에 대한 대응방안이나 이스라엘에 대한 긴급절차 결정 등 중요한 사안들이 많아 위원회가 한국의 인종차별상황에 대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덜 갖고 심의에 임했다는 점 등의 사정을 감안한다면 하더라도, 우려사항에 대한 적극적인 시정권고를 내놓기보다 관련 정보를 차기 이행보고서에 포함시키라는 정도의 외교적인 문체로 최종견해가 작성되었다는 점은 매우 실망스럽다.

한국정부의 형식적 태도가 문제

이렇듯 위원회가 무성의한 태도를

보인 데에는 심의회의 당시 한국정부가 위원들에게 한국의 상황을 충분히 이해시키지 못하고 형식적인 태도로 일관, 위원들이 제기한 많은 질문들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책임이 큰 몫을 차지하고 있다. 또 구체적인 현실을 제시하지 않고 관련 법조문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친 정부의 보고서도 비판의 대상에서 빗겨날 수 없다.

한국의 민간단체들 역시 그 동안 인종차별협약의 이행에 관해 그다지 관심이 없었고 한국의 상황을 위원회에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못한 점도 반성해야 할 지점으로 남아 있다.

한국정부 앞에 놓인 과제

정부는 이번 최종견해에서 언급된 우려와 권고사항들을 단지 문자 그대로만 인식할 것이 아니라 심의회의에서 제기되었던 위원들의 질문과 논평을 다시 한번 종합적으로 살피고 그 배경과 목적을 잘 파악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정부는 위원회가 긍정적이라고 지적한 사항에 대해 자화자찬하기 보다는 위원회의 우려와 권고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이를 이행해 나갈 구체적인 준비에 착수해야 한다.

특히 위원회가 권고한 바와 같이, 앞으로 이행보고서를 작성함에 있어 민간단체들과 협의함으로써, 이행보고서의 작성과 심의 과정이 한국사회에서의 인종차별 현실을 실제로 점검하고 건설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과정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 (이면에서 이어짐) 뿐"이라며, 정권의 보수적 회기를 막기 위한 사회운동의 강력한 연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에 참가한 한 화물연대 조합원은 화물운송노동자들이 처한 비참한 현실에 분노와 울분을 토하며, "지금 이 대로라면 우리들 화물노동자들에게 미래는 없다. 우리들은 지금 살아남기 위해 싸우고 있는 것"이라며 5.15 노총합의조치 이행하려 하지 않는 현정권의 태도를 맹렬히 비난했다. (양승환)

# 인권하루소식

HUMAN RIGHTS DAILY NEWS

· T) 02-741-5363 · F) 02-741-5364 · 천리안) rights · E-mail)humanrights@sarangbang.or.kr · http://www.sarangbang.or.kr

## 근로기준법 개악 날벼락

### 본회의 통과·저임·미조직 노동자 노동조건 대폭 후퇴

근로기준법(아래 근기법)이 끝내 개악됐다. 29일 국회의원 230명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근기법 개악안이 찬성 141명, 반대 57명, 기권 32명으로 가결됐다. 이에 따라 근기법을 마지막 보루로 삼아온 여성·중소·영세·비정규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더욱 악화될 전망이다.

내년 7월부터 시행되는 개정 근기법은 법정 근로시간을 주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는 대신 △최소 15일 최대 25일 한도내 유급 연월차 휴가 통합 △사용 측구에도 연월차 휴가 미사용시 사용자의 보상의무 면제 △생리휴가 무급화 △연장·야간·휴일근로 시 임금 대신 휴가를 부여할 수 있는 선택적 보상 휴가제 도입 등 노동조건을 대폭 개악하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주5일제로 실제 늘어나는 휴일은 1주 4시간(0.5일)으로 1년 26일, 여기에 공휴일과 연월차 휴가 축소까지 감안하면 12일밖에 안 된다. 그나마 여성의 경우는 생리휴가 무급화까지 겹쳐 개정 전과 다를 바 없다. 게다가 초과근로 할증률마저 25%로 하락해 장시간 노동으로 임금수준을 끌어올려야 했던 저임 노동자들의 고통이 더욱 커졌다. 또 전체 노동자의 56%인 760만명은 2011년까지 '주6일 노동자'로 남아있게 됐고, 선택적 보상 휴가제 도입으로 교섭력이 없는 미조직 노동자들은 야근과 철야를 밥먹듯 해도 대가도 받지 못한 채 작업량이 적을 때 휴가를 강요받게 됐다.

이런 상황인데도 경총은 28일 '법 개정 이전에 주5일제에 관한 단체협상을 타결했던 현대·기아차와 금속노조 소속 기업 등은 단협을 재개정해야 한다'고까지 못박았다. 단협에 따라 9월 1일

부터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시행하게 된 현대자동차 노조 장규호 공보부장은 "근기법은 노동조건 최저 기준일 뿐"이라며 "법개정을 이유로 사측에서 단협 재개정을 요구한다 해도 응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양대노총은 근기법 개악 저지를 위해 28일부터 국회 앞에서 노숙

농성을 벌였으나 개악을 막지 못했다. 29일 국회 앞 결의대회에서 민주노총 단병호 위원장은 "전태일 열사가 자신의 몸으로 근기법을 불태운 이래 노동운동의 역사는 근기법의 확장을 위한 투쟁의 역사였지만, 이번 개악으로 근기법은 노동자 보호법이 아닌 노동조건 통제법이 되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본회의 통과 직후 발표한 성명서에서 "주5일제 도입을 노동조건 후퇴 수단으로 삼으려는 자본의 공세를 막아내지 못한 점을 반성한다"며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 실현을 위해 강력히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강성준)

### <논평>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

성난 목소리가 부안에 메아리친다. 농사 짓고 고기 잡고 장사하는 아줌마, 아저씨들이 촛불을 들었다. 반핵 플래카드 나무꾼다. 평생 살며 핵이라고는 몰랐던, 시위라고는 몰랐던 사람들이 모두 핵 전문가가 됐다. 투사가 됐다. 정부는 말한다. 핵폐기를 처리장은 위험하지 않다고. 부안의 청소년들은 묻는다. 그렇다면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서울이 왜 핵 폐기장을 유지하지 않는 거냐고. 대답이 없다. 위도가 핵 폐기장 최적지라고 발표하고는 그만이다. 군수가 똑똑 신청서 접수하고 단 며칠 지질 조사하고 회의하고 끝이었다.

아니나 다를까, 위도에 활성단층으로 의심할 만한 징후가 발견됐다. 핵폐기장이 설치되기에 위험하단 예기다. 게다가 위도는 천연기념물인 수달이 살고, 희귀멸종 위기종인 상사화가 피고, 상록활엽수림이 아름다운 생태의 보고라 한다. 이마저도 민간에서 발품 팔아 알아낸 사실이다. 안전성과 적합성을 신중히 따졌어야 마땅한 정부는 막무가내 'Go'만 외친다. 부와 권력으로부터 소외돼 온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을 '개발'이란 말로 혹하려 들 뿐이다.

군민들이, 도민들이 촛불을 들고 거리를 메워도 정부는 들은 척만 척이다. 오히려 폭도로 매도하고, 방패와 곤봉을 든 전투경찰들이 주민들을 '환대한다'. 그것이 현 정부의 '대화법'인가.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가로막는 극단적인 행동이 계속돼 대화가 안 된다면 정부 방침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대통령은 말한다. 당혹스럽다. 난데없이 핵 쓰레기를 떠맡게 된 사람들은 어이가 없다. 부안 사람들에게 더 이상 정부는 없다고 말한다.

지역개발이란 미끼를 던지고 주민들을 이간질해서 될 일이 아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개발이 아닌 까닭이다. 전경을 앞세워 주민들 입을 막으려 한들 될 일이 아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에너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다. 핵발전소 계속 지으면서, 가난한 지역 사람들에게 핵 쓰레기 떠맡기려는 일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미 부안 주민들은 자신들의 저항 속에서, 정부가 보장해 주지 않는 민주주의를 발견하고 있다. 핵을 넘어, 대안적 에너지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고 있다. 도리어 정부가 부안 주민들로부터 배워야 한다.



인권하루소식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④ 96년 연세대 사태

# 공포의 이수리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

5,500여명이 검거되고 482명이 구속된 96년 연세대 사태를 당시 언론은 "도심의 난동"이라 명명했다. 96년 전국을 들끓게 했던 "난동"은 왜 누가 일으켰으며, 어떤 문제를 남겼을까?

연대 사태는 공안 기획의 산물

당시 연세대 총학생회장이었던 박병언 씨(31)는 "연세대 사태는 96년초부터 일관된 김영삼 정권의 공안정국 기획의 산물"이라고 주장한다. 그는 그 주장의 근거로 96년 개학부터 개시된 경찰의 강경한 시위 진압에 주목한다. 그렇지 않고서는 3월 29일, 전경들의 폭압적 진압으로 사망한 노수석 씨 사건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초부터 팽팽하게 맞섰던 학생과 당국간의 대결분위는 8월 들어 당국이 8.15행사 불허 방침을 밝히고 한총련 지도부가 장소변경 불가로 맞불을 놓으면서 비등점에 이르렀고, 한총련이 8.15 행사후 해산의사를 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봉쇄 조치를 계속하면서 위기 국면으로 돌입했다. 15일 당국은 "시위 참가 학생 전원을 연행하여 의법조치 하겠다"고 으름장을 냈고, 실제로 밖으로 빠져나가는 학생들을 무차별 연행했다.

당시 총총총련 의장이었던 설중호 씨는 "오죽했으면 학생들이 '집에 가고 싶다'고 외쳤겠냐"고 반문한다. 설 씨는 "아무런 준비 없이 경찰의 봉쇄에 떠밀린 농성을 하다 보니 먹을 것, 마실 것도 부족했고, 여학우들의 경우 생리대마저 부족해 천을 뜯어서 대용하는 형편이었다"고 당시를 회고한다.

박 씨는 특히 농성 3일째인 17일을 잊지 못한다. "경찰측에서 서문을 열테니 빠져나가라는 연락이 와서 학우들이 환성을 지르고, 서로 환한 표정으로 학생식당으로 가서 3일만에 배를 채우려는 데 경찰이 치고 들어왔다"는 것. 이 전격적인 진압작전에 의해 농성 중이던 학생들은 돌로 쪼개져 이과대와 종합관으로 밀려들어갔다.

이과대쪽에 있던 박 씨에 따르면 17일 밤 이후 "직격 최루탄이 창문을 부

수고 조명탄이 하늘을 밝히는 등 공포 분위기에서 안에 갇힌 학생들 중 일부는 '차라리 자살하겠다'고 소동을 부렸고 친구들이 말리는 등 극도로 어수선했다. 최후의 진압작전이 벌어진 20일 종합관 진압작전은 설 씨의 표현에 따르면 "불붙은 바리케이드, 자욱한 연기, 그리고 전경들의 무차별 구타와 욕설" 그 자체였다.

가능한 모든 인권침해 저질러졌다

21일 '속대밭이 된 종합관'으로 일관된 연세대 사태는 그 규모만큼이나 공권력이 국민 개개인에게 지지를 수 있는 모든 인권침해를 망라하고 있다. 검문과 연행, 진압과정에서의 폭행과 폭언, 조사과정에서의 고문과 가혹한 처우, 증거조작에 쓸 연출사진은 물론이고, 그 해 정기국회에서 추미에 의원이 폭로했듯 여학생에 대한 검거와 조사 과정에서 빈번하게 행해졌던 성추행과 성폭언까지... 하나하나 따지는 게 부질없어 보일 만큼 짧은 시간에 압축적으로, 가능한 모든 침해행위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공안광풍 속에 진실은 묻혀졌고, 성추행 혐의로 고발된 전경들은 불기소처분이란 면죄부를 받았다.

'한총련=좌경'이 면죄부 부여

이렇게 된 까닭은 무엇보다도 한총련에 대한 색깔 입히기, 마녀사냥이 먹혀든 데서 찾아야 한다. "한총련은 좌경"이란 말은 그 말을 하는 자와 듣는 이 모두에게 고유한 정치적 효과를 불러일으켰다. 경찰은 한총련이 좌경이고 불온하므로 합부로 다루어도 된다고 말했고, 평범한 국민들은 한총련이 무권리 상태로 방치되는 것은 자업자득이라는 '공감 아닌 공감'을 강요당했다. 사상을 이유로 한 집단이 자신들의 전 존재를 부정당해도 아무도 그들을 지켜주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벌어진 것이다. 한총련을 이해하자고 나서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마저 덧칠될 것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았다.

오늘도 그렇듯 한총련을 매도하는 목소리는 여론이라기보다는 차라리 사상

을 차별하는 구조 위에서 관찰되는 권력의 횡포, 소수자를 향해 퍼부어지는 강자의 폭력이라 불러 마땅했다.

한편으로는 검거자 5,500여명으로 상징되는 사건의 규모 자체도 일정한 역할도 했다. 큰 규모가 필연적으로 인권침해를 불러왔듯, 바로 그 규모의 거대성 자체가 사안이 중대하다는 인상을 심어주어, 경찰이 농성진압과 조사 과정에서 지저른 인권침해를 '사소한 것'들로 치부하게 만들었고, 나아가 "소소한 침해는 불가피했다"는 궤변마저 정당화시켰다. 연대사태가 남긴 큰 문제 중 하나는 '크게 사고 치면 단죄할 수 없다'는 현실적 주장이 사회적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데 있다.

이에 대해 설 씨는 "악한 것은 악한 것이지, 그 규모에 따라 악행이 선별적으로 용인될 수는 없다"고 논박한다. 소소한 것들은 단죄되면서도 크게 사고 쳤다 해서 그냥 넘어간다면, 우리 사회에서 국민을 상대로 큰 악행을 저지르기 쉬운 자들, 곧 공안세력은 사건을 칠 때마다 크게 지지르곤 유혹을 느낄 수밖에 없지 않느냐는 것이다.

공안검찰 공화국으로의 전환

연세대 사태와 관련해 마지막으로 짚고 넘어갈 것은 공안기구들이다. 이전 시대 '사찰정치'의 주역이 정보기관이었다면, 문민시대 '공안정치'의 주역은 검찰이다. 박병언 씨는 "연세대 사태를 기획하고 뒤처리한 주역은 공안검찰"이라 지적한다. 이후 공안검찰은 강릉무 장공비 침투사건을 계기로 정국을 장악하고, 97년 한총련 이적규정을 주도하면서 좌익사범합동수사본부로 확대 개편되면서 전성기를 구가한다.

연세대 사태가 일어난 지 벌써 7년이 지났다. 하지만, 그날 연세대에서 '공권력의 만행'을 경험한 개인들은 '감당할 수 없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 그들에게 있어 "국가가 한 개인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갔을 때의 절망감"이란 떨치기 힘든 '악몽 그 자체'이다. (이광길)

# 이달의 인권 (2003년 8월)

## 흐름과 쟁점

### 1. 근로기준법, 뒤로 뒤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노동계 단일안을 발표했다(8/6). 이어 국회 환경노동위는 노사정협의회를 재가동, 주5일근무제 관련 마지막 협상 중재에 착수했으나(8/8), 결국 휴가일수·도입 시기 등에 대한 이견으로 결렬되면서 주5일근무제 도입이 무산되는 듯 됐다(8/14). 그러나 여야가 총무회담에서 정부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노동계는 총파업을 경고했다. 이에 대해 박용성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파업 할 테면 하라"고 응수했다(8/18). 노동계가 정부안 처리를 저지하기 위한 시한부 총파업에 들어갔으나(8/19),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는 시행시기만 1년 늦춘 채 정부안을 그대로 통과시켰다(8/20). 국회 통과가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양대노총은 서울과 부산, 전주 등 전국 15개 도시에서 '주5일근무제 수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으나(8/2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마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환노위 안대로 통과시켰다(8/26). 결국, 국회 본회의에서 주5일근무제 도입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최종 통과됐다(8/29).

### 2. 부안의 분노, 무더위도 저리 갔다

8월 한 달은 부안의 성난 목소리가 전국에 메아리쳤다. '핵폐기장 백지화 범군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부안 수협 앞에서 1만 군민 촛불기도회를 열었고(8/1), 이어 부안군 변산해수욕장에서는 핵폐기장 설치 철회를 촉구하는 '인간 때 잇기' 퍼포먼스가 열렸다(8/2). 또한, 대책위는 부안-전주간 차량시위를 벌였고(8/5), 두 번째 열린 대규모 촛불집회에서는 '핵폐기장 유치 철회'와 '구속자 석방과 수배 해제'가 촉구됐다(8/9). 고속도로 점거 시위(8/13)에 이어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에서 열린 차량 서행시위로 6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8/17). 한편, 부안의 투쟁을 전국화하기 위한 '부안 핵폐기장 선정 철회 시민사회단체 비상대책위'도 서울에서 결성됐다(8/21). 핵폐기장 설치 철회요구는 학생들의 등교거부로 더욱 확대됐다. 등교거부 첫날, 46개 학교 9천여명중 30개 학교 4천여명의 학생들이 등교거부에 동참했다(8/25). 이후 정부와 범군민 대책위가 공동위원회 구성 등을 뼈대로 한 공동선언문을 채택하려 했으나, 결국 결렬돼 부안 투쟁은 9월까지 이어지게 됐다(8/28).

### 3. 대물림된 원폭의 고통, 외면하는 일 정부

원폭투하 58주년을 하루 앞두고 9개 인권사회단체들이 원폭2세환우 대책위를 결성하고 국가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면서 원폭2세 문제가 본격 제기되기 시작했다(8/5). 다행히 일본정부가 9월부터 한국에 거주하는 원폭피해자에게도 월 35만원 가량의 원호수당을 지급하기로 결정하면서 1세들의 의료비 부담이 경감되게 됐지만, 건강수첩을 받기 위해 연로하고 몸이 불편한 피해자들이 일본을 반드시 방문하도록 해 또다시 비판을 받았다(8/10). 이어 일본정부는 외국 거주 원폭피해자가 현지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의료비중 자기부담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8/27). 그러나 원폭2세환우 문제에 대해서는 끝내 외면했다.

### 4. 16년만에 온 사과, 아직도 오지 않은 처벌

서울지법 민사합의41부는 수지 김(김옥분) 유족에게 국가가 위자료 4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8/14). 이후 국가정보원은 유가족에게 공식 사과하고(8/21), 김 씨의 영혼을 달래는 천도제에도 참석해 거듭 사죄의 뜻을 밝혔다(8/26). 또 손해배상 판결과 관련해서도 항소 포기 의사를 법무부에 냈다. 한편, 법무부는 장세동 씨 등 옛 안기부 책임자들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해 배상액을 물리기로 하고 보유재산 조사 등에 들어갔다고 밝혔다(8/28).

## 논평

- 노동기본권에 대한 '2003 긴급조치'(8.2)
- '귀족 노동자' 선동의 속내(8.9)
- 테러방지법 재추진, 월 노리나(8.23)
- 정부만 모르는 부안의 교훈(8.30)

## 인권이야기

- 손상열-아프리카, 약탈경제와 전쟁의 악순환(8.5)
- 최은아-영혼의 집'을 꿈꾸며(8.12)
- 선미-청소년의 인권 알기, 인권쟁취의 첫걸음(8.19)
- 박하순-체제 살인, 생활고로 인한 자살(8.26)

## 인권정보자료

- 「한국의 히로시마」(8.8)
- 「형사절차와 취약계층」(8.22)

## 국가인권위원회 들여다보기

- 신임 인권위원 김만홍 교수를 찾아(8.13)

## 특집 - '진보의료를 보면 국가보안법이 보인다'

- ① 해묵은 '색깔사냥'의 희생양(8.1)
- ② 건강권 옹호가 국가안전 위협한다?(8.2)
- ③ 전 국민을 알아서 기계 만든다(8.7)

## 기획 - 창간 10주년 기획 '그때 그 사건'

- ① 원진레이온 투쟁-‘산업쓰레기’들의 인간 선언(8.27)
- ② 5·18 특별법 제정-빛고를 광주, 5·18 투쟁의 빛과 그늘(8.28)
- ③ 이주노동자 명동성당 쇠사슬 농성-현대판 노예들의 쇠사슬 합성, 그로부터 8년(8.29)
- ④ 96년 연대사태-공포의 이수리장, 국가폭력이 남긴 오랜 상처(8.30)

## 캠페인 - '죽음을 부르는 연속 징벌, 없애자'

- ③ 국제기준도 "NO! 연속 징벌"(8.7)
- ④ 법무부는 삼금, 되레 인권위는 뒷전(8.14)
- ⑤ '야만의 징벌', 법으로 확실히 뿌리뽑자(8.21)

## 특별기고

- 김기연-법조문 읽을 거면 뭐하러 제네바 갔나(8.14)
- 김기연-유엔 인종차별철폐위원회 '최종견해'가 남긴 교훈(8.29)